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2016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을 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에 이어 아홉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6」은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총 11개 영역의 주요 변화와 주제(issues)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주제는 우리 사회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쟁점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가용한 사회지표와 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통계를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풀이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향(trends) 보고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시계열비교는 물론 국제비교와 인구특성별 집단 비교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에 와있으며, 우리 삶의 질적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는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각 영역별 원고 작성을 맡은 집필자 및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통 계 청 장 유 경 준

목 차

I	인구 Population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24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변미리 서울연구원	36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최윤희 한양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43
II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52
	가족가치관의 변화 한경혜 서울대학교	61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1
III	건강 Health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80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조병희 서울대학교	88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조성현 서울대학교	96
IV	교육 Education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106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김경근 고려대학교	116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4
V	노동 Labor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134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전병유 한신대학교	144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151
VI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164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유경원 상명대학교	173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문성만 전북대학교	181



VII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192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차승은 수원대학교	201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배 영 숭실대학교	208

VIII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218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이영성 서울대학교, 유현지 서울대학교	225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정동재 서울대학교	231

IX 환경 Environment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8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이미숙 창원대학교	247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6

X 안전 Safety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박두용 한성대학교	264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박두용 한성대학교	274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민수홍 경기대학교	281

XI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290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299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김석호 서울대학교,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306

부록 용어해설

표 목차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5	25
표 I-2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30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0	31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5	33
표 I-5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와 비중, 2015	37
표 I-6	베이비붐 세대의 성 및 연령별 인구, 2015	38
표 I-7	시도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와 성비, 2015	39
표 II-1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1985-2015	53
표 II-2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2005-2015	57
표 II-3	분거가족 유형별 비율, 2010-2014	72
표 III-1	2주간 유병률, 2003-2014	81
표 III-2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4	83
표 III-3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4	83
표 III-4	비만율과 신체활동 및 걷기실천율, 2005-2014	84
표 III-5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4	85
표 III-6	의료기관수, 1995-2014	85
표 III-7	간호인력의 보건 의료기관 종별 분포, 2015	101
표 III-8	전문간호사 분야별 자격자수, 2014	103
표 IV-1	지역규모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2010-2015	114
표 IV-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0-2014	115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5	135
표 V-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5	136
표 V-3	청년층의 성별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구성비율, 2015	136
표 V-4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년 대비 증감 취업자수, 2012-2015	137
표 V-5	산업별 남녀 외국인 취업자수, 2015	138
표 V-6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 2015	140
표 V-7	원하청 단계별 월평균 임금, 2013	149
표 V-8	직업중분류별 취업자수와 2008년 대비 증감률, 2015	155
표 V-9	소득 하위 25% 미만 취업자가 70% 이상 종사하고 있는 직종, 2008, 2015	157
표 V-10	소득 상위 25% 이상 취업자가 70% 이상 종사하고 있는 직종, 2008, 2015	158
표 V-11	주요 취업 증가 직종의 평균 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비율, 2008, 2015	158
표 V-12	주요 취업 감소 직종의 평균 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비율, 2008, 2015	159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06-2015	165



표 VI-2	소득계층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가구당 보유액, 2013~2015	176
표 VI-3	연령집단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가구당 보유액, 2013~2015	177
표 VI-4	가계부채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가구의 수와 금융부채 비율, 2014, 2015	179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05~2015	193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1~2014	193
표 VII-3	20대 및 50대 연령층의 토요일 여가활동별 사용시간, 1999, 2014	206
표 VII-4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별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2015	213
표 VIII-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2005~2014	218
표 VIII-2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및 주택가격 비율, 2006~2014	219
표 VIII-3	자동차 등록대수, 1990~2015	221
표 VIII-4	도로연장, 1980~2015	221
표 VIII-5	버스 업체수, 종사자수 및 등록대수와 버스전용차로연장, 2001~2015	222
표 VIII-6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5	223
표 VIII-7	시도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5	224
표 VIII-8	1인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집단별 주거점유형태, 2010	229
표 VIII-9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 혜택	232
표 VIII-1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	232
표 VIII-11	시도별 천연가스 및 전기 자동차 충전소수, 2016	233
표 VIII-12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	234
표 VIII-13	주요 국가의 자동차 환경규제 목표치	234
표 VIII-14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비용 절감 효과	235
표 IX-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0~2013	238
표 IX-2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도시수, 2000~2014	239
표 IX-3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2005~2014	239
표 IX-4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0~2013	241
표 IX-5	조류경보 발령일수, 2000~2014	242
표 IX-6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4	242
표 IX-7	화학물질 배출량, 2000~2014	243
표 IX-8	성별 혈중 중금속 농도, 2007~2014	243
표 IX-9	환경분쟁 원인별 조정건수, 1991~2015	244
표 IX-10	환경예산, 1995~2014	245
표 IX-11	환경보호지출, 2004~2013	245
표 IX-12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2013~2015	249
표 IX-13	환경문제별 위험성 인식, 2013, 2014	250
표 IX-14	친환경 행동별 실천 수준, 2012~2016	250
표 IX-15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대한 의향, 2005~2016	251
표 IX-16	환경오염 및 환경보전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2013~2015	253
표 IX-17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요인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2013~2015	254

표 IX-18	미세먼지 환경기준	256
표 IX-19	PM _{2.5} 로 인한 건강영향	258
표 IX-20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2011-2013	259
표 IX-21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의 변화, 2011-2014	260
표 IX-22	PM _{2.5}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기여율, 2013	260
표 IX-23	미세먼지 삭감을 위한 주요 대책 추진실적	261
표 X-1	주요 강력범죄별 발생건수, 2005-2014	270
표 X-2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과 이유, 2010-2014	271
표 X-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16	273
표 X-4	업종별 산업재해율, 2000-2014	276
표 X-5	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수, 1994-2013	284
표 XI-1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확률의 배경변인별 차이, 2006, 2015	303
표 XI-2	세대별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투표율, 2000-2016	308
표 XI-3	세대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참여율, 2002-2012	309
표 XI-4	세대별 보수적 정치 성향, 2003-2013	310
표 XI-5	세대별 보수정당 후보 지지율, 2002-2012	312



그림 목차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2060	26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5	28
그림 I-3	어머니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5	28
그림 I-4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의 시군구별 분포, 2015	32
그림 I-5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배우자 수, 1990-2015	34
그림 I-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 전망, 2000-2040	38
그림 I-7	생산가능인구와 부양인구 전망, 2000-2040	38
그림 I-8	소비정점인구(45-49세) 전망, 2015-2021	39
그림 I-9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별 고졸 및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 2010	40
그림 I-10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별 관리·전문·사무직 비중, 2010	40
그림 I-11	베이비붐 세대의 성 및 출생연도별 고졸 및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 2010	41
그림 I-12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1960-2060	41
그림 I-13	학교급별 학령인구 전망, 1960-2060	44
그림 I-14	유·초·중등교육 학교급별 학생 및 학교 수, 2000-2015	45
그림 I-15	초·중등교육 학교급별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 2013	45
그림 I-16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비율과 서울대 입학생 비율, 2011-2015	46
그림 I-17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교 수, 1980-2015	46
그림 I-18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원 규모 전망, 2011-2030	47
그림 I-19	임금 분위별 4년제 대학 졸업자 대비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 비율, 2013	47
그림 I-20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 1990-2015	48
그림 I-21	직종요구학력 분포와 실제 취업자의 학력 분포, 1993-2005	49
그림 I-22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과 관리·전문·기술직 비율, 2014	49
그림 II-1	1인가구 비율, 1990-2035	53
그림 II-2	노인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 1990-2015	54
그림 II-3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비율, 1985-2010	55
그림 II-4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구성, 2009-2015	55
그림 II-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5	56
그림 II-6	20-3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5-2010	57
그림 II-7	20-30대 연령층의 성 및 교육수준별 미혼율, 1995-2010	57
그림 II-8	남편의 연령집단별 이혼건수, 2005-2015	58
그림 II-9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14	59
그림 II-10	기혼남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1999-2014	60
그림 II-11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4	62
그림 II-12	미혼자의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4	63
그림 II-13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에 대해 당위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1998-2014	63
그림 II-14	성 및 혼인상태별 동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64
그림 II-15	성 및 연령집단별 동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65

그림 II-16	성별 결혼생활에 대해 부부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66
그림 II-17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생활에 대해 부부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66
그림 II-18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에 있어 자녀출산에 대해 선택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5-2015	67
그림 II-19	성 및 혼인상태별 혼외출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68
그림 II-20	성 및 연령집단별 혼외출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68
그림 II-21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14	69
그림 II-22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해 불허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1998-2014	70
그림 II-23	성 및 교육수준별 이혼에 대해 불허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1998-2014	70
그림 II-24	가족구성원과 분거하는 이유, 2010-2014	72
그림 II-25	가족구성원과의 분거기간, 2010-2014	73
그림 II-26	배우자 분거가족 가구주의 분거기간별 가족관계 만족도, 2014	73
그림 II-27	분거가족 가구주의 성별 가구소득 분포, 2014	74
그림 II-28	분거가족 가구주의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2014	74
그림 II-29	분거가족 가구주의 성별 스트레스 수준, 2014	75
그림 II-30	분거가족 및 비분거가족의 가구소득 분포, 2014	75
그림 II-31	분거가족 및 비분거가족 가구주의 가족관계 만족도, 2014	76
그림 II-32	분거가족 및 비분거가족 가구주의 스트레스 수준, 2014	76
그림 III-1	평균수명, 1970-2014	80
그림 III-2	성별 스트레스인지율, 2005-2014	82
그림 III-3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1990-2015	86
그림 III-4	급성감염병 발생률, 1960-2015	89
그림 III-5	국외유입 감염병의 유입국가별 구성비율, 2015	90
그림 III-6	쯔쯔가무시증 감염자수, 2001-2015	91
그림 III-7	덴기 바이러스 발생지역	92
그림 III-8	덴기열 감염자수, 2001-2015	93
그림 III-9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역	95
그림 III-10	입원환자의 간병인별 구성비율, 2008-2013	97
그림 III-11	주요 국가의 근무조 기준 간호사 1인당 간호 환자수, 2013	97
그림 III-12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수, 2013	98
그림 III-13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간호졸업자수, 2014	99
그림 III-14	간호사 면허자수와 활동 간호사수, 2004-2014	100
그림 III-15	간호조무사 자격자수와 활동 간호조무사수, 2006-2014	100
그림 III-16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수, 2004-2015	101
그림 III-17	보건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구성, 2015	101
그림 III-18	의료기관 소재지별 입원환자 및 병상당 간호사수, 2015	102
그림 III-19	남자 면허간호사수와 간호사 국가시험 남자 합격자 비율, 2004-2016	102
그림 IV-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5	107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5	108
그림 IV-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5	109



그림 IV-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8-2015	109
그림 IV-5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15	110
그림 IV-6	학교급별 교육내용만족도, 2008-2014	111
그림 IV-7	학교급별 교육방법만족도, 2008-2014	112
그림 IV-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0-2015	112
그림 IV-9	OECD 주요 국가의 학급당 학생수, 2014	113
그림 IV-10	PISA 수학 성취도 분포, 2000-2012	114
그림 IV-11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8-2015	117
그림 IV-12	성 및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8-2015	118
그림 IV-13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8, 2015	118
그림 IV-14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2015	119
그림 IV-15	성 및 교육수준별 가족관계 만족도, 2008-2014	120
그림 IV-16	성 및 교육수준별 일자리 만족도, 2009-2015	120
그림 IV-17	성 및 교육수준별 소비생활 만족도, 2009-2015	121
그림 IV-18	성 및 교육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 2009-2015	121
그림 IV-19	주요 국가의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122
그림 IV-20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 2013-2015	125
그림 IV-21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수준별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 2013-2015	125
그림 IV-22	초·중·고 학생의 가정형편별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 2013-2015	126
그림 IV-23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2013-2015	127
그림 IV-24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13-2015	127
그림 IV-25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언어폭력 피해 경험률, 2013-2015	128
그림 IV-26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률, 2013-2015	128
그림 IV-27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따돌림 피해 경험률, 2013-2015	129
그림 IV-28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 2013-2015	129
그림 IV-29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업성취수준별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 2013-2015	130
그림 IV-30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체벌 경험률, 2013-2015	131
그림 IV-31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업성취수준별 체벌 경험률, 2013-2015	131
그림 V-1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고용률 격차, 2015	135
그림 V-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 2015	137
그림 V-3	서비스업종별 남녀 전년 대비 증감 취업자수, 2015	138
그림 V-4	임금근로자의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03-2015	139
그림 V-5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4-2015	140
그림 V-6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1999-2014	141
그림 V-7	정규직 및 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의 전년 대비 증감률, 2007-2015	141
그림 V-8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만족도, 2015	142
그림 V-9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8-2015	142
그림 V-10	제조업 및 건설업의 사업체 규모별 재해율, 2014	142
그림 V-11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00-2015	143
그림 V-12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 2015	145

그림 V-13	1~4인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 간 임금격차, 2004~2015	145
그림 V-14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과 노동조합가입률, 2015	146
그림 V-15	사업체규모별 평균 근속년수, 2015	146
그림 V-16	사업체규모별 이직률, 2014	146
그림 V-17	OECD 주요 국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2012	147
그림 V-18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2001~2013	148
그림 V-1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2009~2014	148
그림 V-20	성별 취업자의 직업대분류별 구성비율, 1993~2015	152
그림 V-21	취업자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율, 2008~2015	154
그림 V-22	성별 취업자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율, 2008~2015	155
그림 V-23	성별 취업자의 직업중분류별 구성비율, 2008~2015	156
그림 V-24	상·중·하위 관리직종 취업자수, 2008, 2015	160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2007~2015	165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06~2015	166
그림 VI-3	OECD 주요 국가의 소득 5분위 배율, 2014	166
그림 VI-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06~2015	167
그림 VI-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6~2015	168
그림 VI-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5	168
그림 VI-7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5	169
그림 VI-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5	170
그림 VI-9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5	170
그림 VI-10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06, 2015	171
그림 VI-11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5	171
그림 VI-12	가구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비율, 2006~2015	171
그림 VI-13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2006~2015	172
그림 VI-14	가계부채 총액, 2012.1/4~2016.2/4	174
그림 VI-15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2.1/4~2016.1/4	174
그림 VI-16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12.1/4~2015.4/4	175
그림 VI-17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 2012.1/4~2015.4/4	175
그림 VI-18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2012. 1/4~2016.1/4	175
그림 VI-19	주요 국가의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의 변화, 1999~2015	176
그림 VI-20	소득계층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13~2015	177
그림 VI-21	소득계층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013~2015	177
그림 VI-22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13~2015	178
그림 VI-23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013~2015	178
그림 VI-24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 신청건수, 2012.1/4~2016.1/4	180
그림 VI-25	1인 청년가구 수와 여성 비율, 2006~2015	182
그림 VI-26	1인 청년가구 가구주의 성별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 비율, 2006~2015	183
그림 VI-27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실질 경상소득, 2006~2015	183
그림 VI-28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구성, 2006, 2015	184



그림 VI-29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5	184
그림 VI-30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가계흑자율, 2006-2015	185
그림 VI-31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식생활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186
그림 VI-32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주거생활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187
그림 VI-33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교통 및 통신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187
그림 VI-34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오락문화 및 교육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188
그림 VI-35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주류지출 대비 담배지출의 비, 2006-2015	189
그림 VII-1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액, 2003-2015	194
그림 VII-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6-2015	194
그림 VII-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5	195
그림 VII-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0-2015	196
그림 VII-5	창작발표활동 참여경험 및 참여의향 비율, 2010-2014	197
그림 VII-6	문화예술교육 경험률과 문화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율, 2010-2014	197
그림 VII-7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5	197
그림 VII-8	스포츠관람률, 2000-2015	198
그림 VII-9	신문 읽는 비율, 2000-2015	199
그림 VII-10	여가만족도, 1990-2015	199
그림 VII-11	성인의 평일과 주말 생활시간배분, 1999, 2014	202
그림 VII-12	취업자의 평일과 주말 여가시간, 1999, 2014	202
그림 VII-13	취업자의 주말 여가활동별 사용시간, 1999, 2014	203
그림 VII-14	성인의 성 및 연령집단별 여가시간, 1999, 2014	204
그림 VII-15	기혼남녀의 일요일 여가활동별 사용시간, 2014	205
그림 VII-16	성인의 연령집단별 TV 및 미디어 시청시간, 1999-2014	205
그림 VII-17	평일 및 주말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 1999, 2014	206
그림 VII-18	사회적 역할 특성별 평일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 1999, 2014	207
그림 VII-19	가구소득수준별 평일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 2014	207
그림 VII-20	성별 성인 스마트폰 이용률, 2012-2016	209
그림 VII-2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1-2015	209
그림 VII-22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3-2015	210
그림 VII-23	유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5	210
그림 VII-24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3-2015	211
그림 VII-25	청소년의 부모 특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4, 2015	211
그림 VII-26	가구소득수준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5	211
그림 VII-27	성인의 직업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4, 2015	212
그림 VII-28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분포, 2015	212
그림 VII-29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의 선호하는 스마트폰 게임종류, 2015	214
그림 VII-30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어려움, 2015	215
그림 VIII-1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종합지수, 1986-2016	219
그림 VIII-2	시도별 주택보급률, 2014	220

그림 VII-3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2006, 2010, 2014	220
그림 VII-4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5	220
그림 VII-5	철도연장, 1990-2014	222
그림 VII-6	자전거도로 노선수와 연장, 2009-2015	222
그림 VII-7	평균 통근시간, 1995-2010	223
그림 VII-8	대중교통만족도, 2007-2014	223
그림 VII-9	인구 및 가구 추계, 1990-2035	226
그림 VII-10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율, 1980-2010	226
그림 VII-11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1990, 2015	226
그림 VII-12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종합지수, 2000-2015	227
그림 VII-13	주택규모별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2010년 대비 2015년	227
그림 VII-14	전월세 거래량 및 월세 거래 비율, 2011-2015	228
그림 VII-15	일반가구의 주거점유형태, 2000-2010	228
그림 VII-16	1인가구의 주거점유형태, 2000-2010	229
그림 VII-17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집단별 아파트 거주 비율, 2010	230
그림 VII-18	1인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집단별 아파트 거주 비율, 2010	230
그림 VII-19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와 비율, 2006-2015	233
그림 VII-20	주요 국가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율, 2014	234
그림 VII-21	가솔린 및 친환경 자동차의 CO ₂ 배출량	235
그림 VII-22	가구 교통비 지출률, 2006-2015	236
그림 IX-1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3	240
그림 IX-2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4	241
그림 IX-3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4	243
그림 IX-4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1995-2014	244
그림 IX-5	한국인과 유럽인의 환경에 대한 이미지, 2014	248
그림 IX-6	거주지역 체감 환경에 대한 만족도, 2010-2016	248
그림 IX-7	우선 순위 정부 정책, 2013-2015	249
그림 IX-8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인식과 원자력 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허용범위, 2012	252
그림 IX-9	생태계 혜택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자연자원 관리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용의, 2015	252
그림 IX-10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2013-2015	253
그림 IX-11	국가발전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2013-2015	254
그림 IX-12	국내 및 해외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 ₁₀) 연평균 농도, 2005-2014	257
그림 IX-13	국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 _{2.5}) 월별 농도, 2015	257
그림 IX-14	수도권 PM _{2.5} 조성, 2011-2013	259
그림 IX-15	PM _{2.5} 배출원별 배출기여도, 2013	260
그림 X-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5	265
그림 X-2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5	265
그림 X-3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5	265
그림 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96-2015	266



그림 X-5	화재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1986-2015	266
그림 X-6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1986-2015	267
그림 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5	267
그림 X-8	OECD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08	268
그림 X-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2000-2014	268
그림 X-10	도시철도 사고 사망자수, 2004-2013	269
그림 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1-2014	269
그림 X-12	주요 국가의 살인범죄율, 1995, 2010	270
그림 X-13	범죄검거율, 2001-2014	270
그림 X-14	범죄피해 경험률, 2008-2014	271
그림 X-15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4	271
그림 X-16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 경험률, 2010	272
그림 X-17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970-2015	272
그림 X-18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5	273
그림 X-19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2013-2015	273
그림 X-20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수, 1972-2014	275
그림 X-21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72-2014	275
그림 X-22	산업재해 도수율과 강도율, 1972-2014	276
그림 X-23	업종별 산업재해 강도율, 2000-2014	277
그림 X-24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 2000-2014	277
그림 X-25	업무상 질병자수와 질병만인율, 1972-2014	278
그림 X-26	5대 업무상 질병별 환자수, 2000-2014	278
그림 X-27	산재보상금 지급액, 1972-2014	279
그림 X-28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972-2014	279
그림 X-29	한국과 유럽 31개국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율, 2013	280
그림 X-30	전체 인구와 61세 이상 노인 인구, 1994-2013	282
그림 X-31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수, 1994-2013	282
그림 X-32	전체 및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수, 1994-2013	283
그림 X-33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수, 1994-2013	283
그림 X-34	범죄유형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수, 1994-2013	283
그림 X-35	교도소 수감자의 연령집단별 인원수, 2005-2014	284
그림 X-36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범죄유형별 여성 비율, 2014	285
그림 X-37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재범률, 2014	285
그림 X-38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구속률, 2014	286
그림 X-39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범죄유형별 구성비율, 2014	286
그림 X-40	성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피해자수와 여성 피해자 비율, 1994-2014	287
그림 X-41	범죄유형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피해자의 성별 구성비율, 2014	287
그림 X-42	성별 61세 이상 노인 흉악범죄피해자수, 2014	287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6	291
그림 XI-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연령집단별 투표율, 2012, 2014, 2016	291

그림 XI-3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02, 2015	292
그림 XI-4	사회단체 참여율, 1999-2015	292
그림 XI-5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1999, 2015	292
그림 XI-6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999-2015	293
그림 XI-7	OECD 주요 국가의 대인신뢰도, 2014	293
그림 XI-8	가족, 지인, 이웃 및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2013-2015	294
그림 XI-9	OECD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07, 2014	294
그림 XI-10	기관신뢰도, 2003-2014	295
그림 XI-11	부패인식지수, 2003-2015	295
그림 XI-12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2013-2015 평균	296
그림 XI-13	자살률, 1997-2014	296
그림 XI-14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 2013	296
그림 XI-15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지출 비율, 2016	297
그림 XI-16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지출 비율, 2000-2016	297
그림 XI-17	공적연금 수급률, 2000-2015	298
그림 XI-18	가구주의 계층귀속의식, 1994-2015	300
그림 XI-19	가구주의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1994-2015	300
그림 XI-20	가구주의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1999-2015	301
그림 XI-21	연령집단별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15	302
그림 XI-22	연령집단별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15	302
그림 XI-23	가구소득수준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확률의 차이, 2015	304
그림 XI-24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1948-2016	307
그림 XI-25	세대별 보수계열 후보 또는 정당 지지율, 2007년 대선-2016년 총선	311

머 리 말

지난 2008년부터 발간되어 온 「한국의 사회동향」이 올해로 아홉 번째 연차 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쳐 가히 기적과도 같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들 중에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이 되었고, 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외국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였다. 대한민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이와 다르다.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성장과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국민들은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절실하다. 삶의 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상황에만 국한해서는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의 동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이 연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공동연구의 성과물이지만 동시에 통계청의 공식보고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계개발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통계청을 비롯한 주요 국가통계 산출기관들이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민간기관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품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에 한해서만 추가로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6」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사회의 주요 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을 개관하는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들을 설명해 주는 주제 논문 2편씩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동향 논문은 해당 영역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주제 논문은 선정된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사실,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수록된 주요 동향 논문들은 전년 보고서와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구성과 내용을 압축한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 구성이나 내용에서 지난 보고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한해 만에 사회의 주요 동향이 크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 주제 논문들은 역동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그 이슈를 가장 잘 집필할 수 있는 집필진을 섭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되살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신종감염병 문제를 다루었으며, 국제비교를 통해 특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문제도 다루었다. 교육 영역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것도 그런 노력의 반영이다. 노동 영역에서는 점증하는 일자리 격차의 문제를,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문제를 다루었다. 늘어나는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패턴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아울러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피로사회의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는 시간빈곤의 문제를, 환경 영역에서 최근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를, 그리고 사회통합 영역에서 흡수저 논란을 반영한 사회이동성의 문제를 다룬 것은 또 다른 예이다.

연례 보고서가 9년차를 맞게 되면서 과거에 다루었던 이슈를 다시 반복해서 다루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간에 새로운 변화의 동향이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주제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몇몇 주제 논문들에서는 과거에 다루었던 문제들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다시 다루기도 한다. 최근 가용해진 시계열 자료들도 적극 활용하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보고서를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로 읽기보다는 기존에 출간된 보고서들과 연계하여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산업재해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2010년 주제 논문인 ‘산업재해의 변화’나 2012년 주제 논문인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을 함께 읽으면 좋고, 가계부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2010년 주제 논문인 ‘가계부채와 부채원인’이나 2014년 주제 논문인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보고서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편집을 맡은 이들이 운문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개념인 경우에는 자세한 해설을 붙여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 인용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별히 금년 보고서는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를 ‘젠더’로 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별 비교분석을 통해 남녀 간 차이나 격차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펴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주요 동향 논문을 집필하고 주제 논문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양대의 김두섭 교수(인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한경혜 교수(가족과 가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조병희 교수(건강 영역 담당), 고려대의 김경근 교수(교육 영역 담당), 서울대의 권현지 교수(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의 박정수 교수(소득과 소비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의 서우석 교수(문화와 여가 영역 담당), 서울대의 장수은 교수(주거와 교통 영역 담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종호 연구위원(환경 영역 담당), 한성대의 박두용 교수(안전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의 한준 교수(사회통합 영역 담당)이다. 이 보고서의 편집은 서울대의 김석호 교수, 통계개발원의 강정희 사무관과 조은숙 주무관,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김대훈 실장과 이상운 팀장이 하였고 연구간사직은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의 김월화 연구원이 맡았다. 이 외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제 논문의 집필을 맡아 주었다.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경준 통계청장과 김경용 통계분석실장, 그리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명구 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이재열**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5. 유인물 형태의 책자와 파일 형태의 책자 간 수치가 상이한 경우, 이는 오류 정정 수치를 파일 형태 책자에 반영함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인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24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변미리 서울연구원	36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43
최 율 한양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출산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의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의 출산력은 2005년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약간씩 상승하고 있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생산가능연령의 인구는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서울의 인구는 약간씩 감소하는 단계로 반전되었으나,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 혼인이주 외국인 배우자의 규모가 2005년 정점에 도달한 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한국 인구의 이러한 감소 전망은 주로 초저출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아울러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 사망률의 최근 동향, 고령화의 추세 및 지역 편차,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국제결혼의 변화 추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과 논의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의 인구 DB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의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5년 현재 5,107만 명으로 세계에서 27위에 해당되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48%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60년에 이르면 2015년 인구보다 711만 명이 줄어든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인구(0-14세)는 각각 2015년 규모의 59.2%와 63.5%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5년의 2.7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60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정도,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남녀 인구가 각각 49.7%와 50.3%, 그리고 2015년에는 남녀 인구가 49.9%와 50.1%씩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인구의 완만한 증가 추세는 사망률의 저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15

	(%)			
	1990	2000	2010	2015
성				
남자	50.2	50.2	49.7	49.9
여자	49.8	49.8	50.3	50.1
연령				
0-14세	25.7	21.0	16.2	13.9
15-64세	69.4	71.7	72.5	72.9
65세 이상	5.0	7.3	11.3	13.2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81.6
읍	8.3	8.1	8.6	9.0
면	17.3	12.2	9.3	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
중학교	18.5	13.6	11.9	-
고등학교	34.0	34.6	31.2	-
대학 이상	14.1	26.1	36.6	-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
유배우	59.1	60.6	57.7	-
사별	7.2	7.4	7.6	-
이혼	0.8	1.9	4.0	-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여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는 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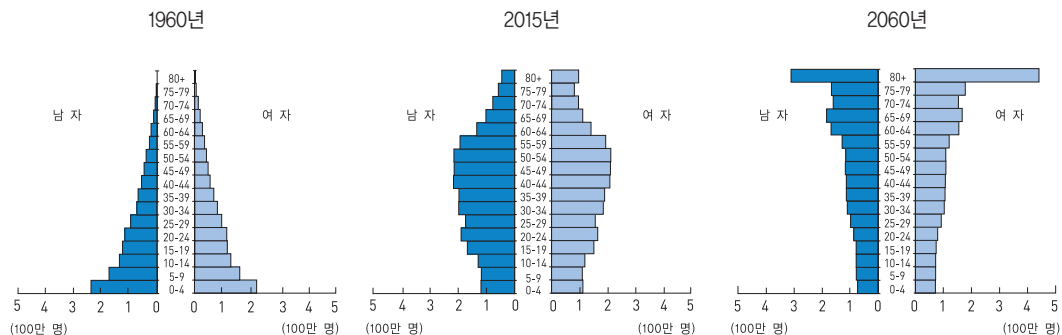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의 연령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형태이었으나 2015년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2060년에는 연령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5년 13.9%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5년 72.9%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6년 이후 감소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2.6배에 해당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 이르러 도시 인구의 비중이 74.4% 수준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82.0%와 81.6%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그 비중이 두 해 모두 90.6%가 된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8%대에서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과 2015년에 9.3%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6세 이상 내국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10년 20.3%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감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206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1.



소 추세를 보이며, 2010년 그 비중이 각각 11.9%와 31.2%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10년의 기간에 14.1%에서 36.6%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1.4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1>에서는 미혼자의 비중이 1990년 이후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혼인상태의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리고 30-39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은 2010년 29.2%에 이르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1.9%, 2010년에 4.0%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45-54세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출산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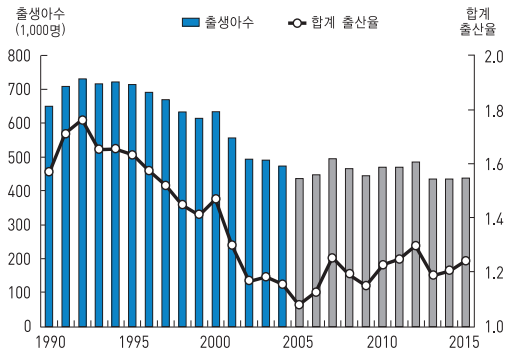
한국 인구의 출산력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제1차 출산력변천에서와는 달리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제도가 사장되고 인구성장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Kim, 2005).

한국 인구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산력 저하가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를 보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산력이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5만 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5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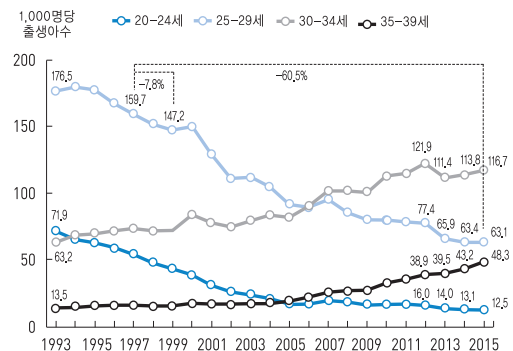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I-2]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년 44.8만 명, 2007년 49.3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09년에 44.5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2년 48.5만 명, 2014년 43.5만 명, 2015년 43.8만 명으로 소폭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 2010년 1.23, 2012년 1.30, 그리고 2015년 1.24로 집계되어, 2005년 1.08로 바닥을 친 후 약간씩이나마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물론,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각각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의 출산 연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

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확대되고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김두섭, 2007). 통계청의 혼인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0.0세에 도달하였다. 여자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2.2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5년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23.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3]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

[그림 I-3] 어머니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5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자 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동안 7.8%, 그리고 2015년까지 무려 60.5%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 인구의 출산수준 저하는 혼인 양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1996년에 각각 43.5만 건과 1,000명당 9.4건의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3년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감소가 지속되었다. 조혼인율은 그 후 황금돼지의 해였던 2007년에 일시적인 오름세가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1,000명당 6.4-6.6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명당 0.6건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명당 3.4건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2015년 현재 각각 1,000명당 5.9건과 2.1건이다.

최근에 이르러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로 인한 미혼율의 증가와 함께 무자녀 가정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추세를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

대 연령집단의 미혼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3.4%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에는 29.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현재 30대 기혼 여성의 10.9%가 출산 경험이 없으며, 이들의 16.5%는 장래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앞으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반동을 지속하고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률 수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률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의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5년 1,000명당 5.4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수 역시 2006년 24.2만 명

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2015년 27.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인구의 사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남녀 인구 모두 60대 및 70대 이상 연령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 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2>를 보면,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기대수명을 비교해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각각 2.9년과 3.1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표 I-2>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 (1,000명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세계 인구	7.8	36	68.3	72.7
선진국	10.0	5	75.1	81.5
개발도상국	7.4	39	67.0	70.7
아시아	7.0	31	69.7	73.6
한국	5.5	3	78.0	84.6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016.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5년 남자 15.0만 명, 여자 12.5만 명이었으며, 1,000명당 사망자수는 각각 5.9명과 4.9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2015년 사망통계에서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40세를 넘으면서 급격하게 벌어지고, 50대에 그 격차가 극대화된다.

사망률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15년에 경기도(5.3만 명), 서울(4.3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사망자가 10.9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9.7%를 차지하였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8.7)와 경상북도(7.8) 및 전라북도(7.4)가 높고, 울산(4.2)과 경기도(4.3) 및 서울(4.3)이 낮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울산과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가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 및 제주도가 가장 낮다.

고령화 추세

저출산과 수명연장의 결과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0

연도	총인구 (100만명)	고령인구 비중(%)		중위 연령 (세)	노년부양 인구비 (%)	고령화 지수 (%)
		65세 이상	80세 이상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15	50.6	13.1	2.8	40.8	17.9	94.1
2020	51.4	15.7	3.7	43.4	22.1	119.1
2040	51.1	32.3	9.4	52.6	57.2	288.6
2060	44.0	40.1	17.2	57.9	80.6	394.0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1.

제기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부양비용이 늘어나고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노년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지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수준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40년대에 이르면 이 국가들을 추월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3〉을 보면, 1960년에는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 비중이 각각 13.1%와 2.8%로 상승하였으며, 2060년에는 각각

40.1%와 17.2%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령인구 내에서도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져 부양비용과 복지수요를 더욱 가중시킨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와 비중의 증가 속도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확연하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60년에 이르면 80세 이상 인구가 755만 명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42.8%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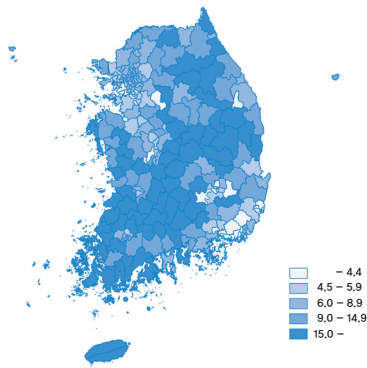
중위연령은 인구의 변천 단계나 고령화 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다. 한국 인구는 1960년 중위연령이 19.0세에 불과한 ‘어린 인구’였으나, 빠른 상승을 거듭하여 2000년대 진입 이전에 ‘나이든 인구’가 되었다. 중위연령은 2016년 현재 41.4세로 추산되며, 2060년에는 무려 57.9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년부양인구비와 고령화지수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15년에는 17.9로 3.3배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2060년에 이르면 80.6수준에 도달하여 15-64세 인구 1.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화지수 역시 1960-2015년의 기간에 13.6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2015년 현재의 4.2배 수준인 394.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편차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면지역 거주

자가 높고 동지역 거주자는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보다 72.2% 증가한 3,159명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충청북도 괴산군(42.1명), 경상북도 문경시(33.9명), 전라남도 장성군(31.1명), 충청남도 서천군(31.0명), 그리고 경상남도 남해군(29.0명)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 I-4]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의 시군구별 분포, 2015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15.

또한, 100세 이상 고령자는 여자가 86.5%에 해당하는 2,73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령자의 90.9%가 배우자와 사별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44.6%,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거주자가 43.1%,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가 6.9%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자의 76.7%가 평생 금주, 79.0%가 평생 금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인구의 이탈과 수도권의 비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15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6%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의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9.3%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9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km²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전국 인구에 대한 비중은 2015년 19.4%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에는 2015년 현재 전국 인구의 49.5%에 해당하는 2,527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그리고 권역별 5대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5

(1,000명)

연도	서울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권역별 5대도시	시(동) 부	군(읍·면) 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4,829	6,996	17,976	24,989
1970	5,433	6,327	8,730	9,239	12,709	18,172	30,882
1980	8,364	10,744	13,298	14,50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18,828	32,308	11,101	43,411
2000	9,895	19,441	21,354	18,759	36,755	9,380	46,136
2005	9,820	20,960	22,767	18,669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18,633	39,823	8,758	48,580
2015	9,904	23,132	25,274	18,860	41,678	9,392	51,069

주: 1)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3) 권역별 5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구를 포함함.
 4) 각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들은 정체상태에 빠지거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가 만들어지고, 청주, 강릉, 진주, 천안 등의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진입한 이후였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

가율은 각각 5.3%와 4.2%에 달하였다.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5년의 기간에 70.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15년 기간에 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7.9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5년 4,16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하며,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에 1,798만 명에서 93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2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현상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제결혼 및 이혼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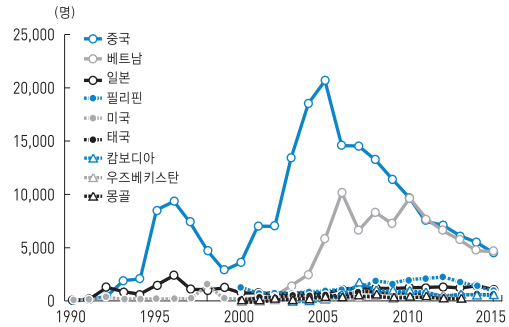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던 한국 사회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어, 1990-2015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혼인의 누적규모는 54.4만 건에 달한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은 이 기간에 약 38.7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1%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같은 기간에 15.7만 건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사반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 추세를 보여 왔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진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 4만 2,356건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015년 21,274건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국제결혼의 비중도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15년에는 7.0%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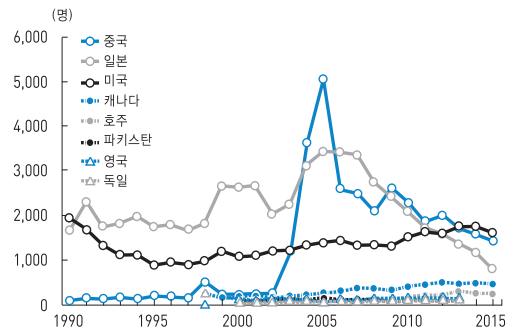
아울러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 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그림 I-5]에서 중국인 여자 배우자와의 결혼건수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된 것은 중국 조선족이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

[그림 I-5]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배우자 수, 1990-2015

1)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김두섭, 「한국인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 201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15.

가 관련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15년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베트남 다음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태국, 캄보디아의 순으로 많다.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 건수는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에 비해 현재 그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다. 외국인 남자 배우자의 출신국적 역시 소수의 국



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일본 국적의 남자와의 결혼이 현저한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15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의 순이었으며, 이들 네 국가가 전체의 65.5%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침체와 아울러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 증가 추세는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대부분은 연령과 교육수준의 격차가 크고, 가족생활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차별 등으

로 인해 이혼할 가능성이 내국인 부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매우 짧은 경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10년에 혼인을 신고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부부의 20%가 48개월 이내에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부부와 내국인 부부의 이혼 확률은 각각 13%와 6%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결혼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주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Kim, Doo-Sub. 2005.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25.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변미리 (서울연구원)

-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경제적 변화기를 공유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2015년 기준 약 711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부터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정점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다.
- 베이비붐 세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의 비율도 높다.
- 베이비붐 세대에서 중등교육 기회의 남녀 차이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대학교육 기회의 남녀 차이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는 100세 시대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사회에 살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과 저출산 현상은 ‘인구절벽’이라는 ‘공포’에 가까운 사회현상이 3-4년 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베이비붐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인해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베이비붐은 단기적으로 큰 규모의 출생아가 인구에 유입되어 인구구조를 젊게 하지만 장기적으

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인구고령화를 빠르게 만든다. 또한 출생아의 급증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구성장은 주택, 교육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50년대 초반 5.6명에서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후반 6.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다(전광희, 2002). 이 시기에 태어난 1955-1963년생을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시기를 기준으로 1955-1974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김용하·임성은, 2011). 이 기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인구의 32.5%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에 따라 이들 세대의 형성원인이나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르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출산율의 상승 시기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60-1970년대까지 경쟁적인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1980년대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형성하면서 경제성장기 한국 사회의 중추세력을 형성한 인구집단이다. 이들 세대는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주택, 소비, 자녀교육 등을 둘러싸고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 어떤 연령집단보다 큰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사회에서 신(新)노년층으로 성장할 세대이며 향후 몇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인구집단이다. 2015년 기준 52-60세 연령집단인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비정점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이 시기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의 인구변화에 매우 중요한 인구 집단이다. 이 글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구조 특히,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시기의 인구구조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고령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기준 약 7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표 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연령집단은 54세인 1961년생으로 90만 5,656명에 달한다. 규모가 가장 작은 연령집단은 59세인 1956년생으로 1961년생에 비해 약 23만 명 적은 67만 9,651명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현재 생산가능연령에 속한다. 그런데 5년 후인 2020년이 되면 1955년생이 65세에 도달하면서 고령화가 시작된다. 이 연령 코호트에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다른 베이

비붐 연령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러나 젊은 코호트일수록 베이비붐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크다. 예를 들어, 1958년생은 베이비붐 세대의 10.6%, 1961년생은 베이비붐 세대의 12.7%를 차지한다.

<표 I-5>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와 비중, 2015

연령(출생연도)	인구 (명)	베이비붐 세대 내 비중 (%)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
52세(1963년생)	810,566	11.4	1.6
53세(1962년생)	839,413	11.8	1.7
54세(1961년생)	905,656	12.7	1.8
55세(1960년생)	891,909	12.5	1.8
56세(1959년생)	800,039	11.3	1.6
57세(1958년생)	754,393	10.6	1.5
58세(1957년생)	737,103	10.4	1.5
59세(1956년생)	679,651	9.6	1.4
60세(1955년생)	691,507	9.7	1.4
합계	7,110,237	100.0	14.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표 I-6>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인구가 제시되어 있다. 베이비붐 세대 전체로 보면, 남성이 355만 1,416명으로 49.9%, 여성이 355만 8,821명으로 50.1%이다. 연령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1955년생부터 1957년생까지 그리고 1959년생부터 1961년생까지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고 1958년생, 1962년생, 1963년생은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2000년 733만 3,814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였으나 2010

〈표 I-6〉 베이비붐 세대의 성 및 연령별 인구, 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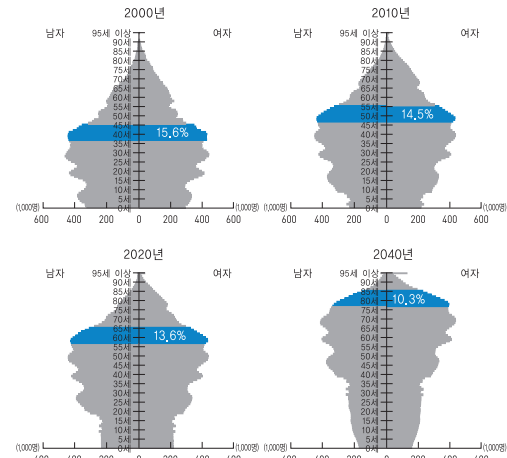
연령(출생연도)	전체	남자	여자
52세(1963년생)	810,566	413,158	397,408
53세(1962년생)	839,413	427,012	412,401
54세(1961년생)	905,656	451,302	454,354
55세(1960년생)	891,909	440,656	451,253
56세(1959년생)	800,039	397,721	402,318
57세(1958년생)	754,393	378,839	375,554
58세(1957년생)	737,103	368,049	369,054
59세(1956년생)	679,651	337,531	342,120
60세(1955년생)	691,507	337,148	354,359
합계	7,110,237	3,551,416	3,558,82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년에는 총인구의 14.5%인 714만 1,110명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이들 인구의 비중은 2020년 13.5%(700만 1,333명), 2040년 10.3%(526만 8,199명)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6).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최연장자가 85세에 이르는 204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1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구집단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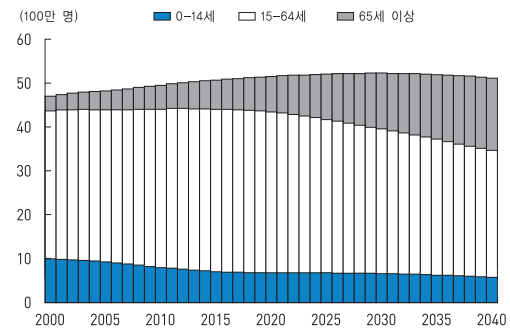
인구절벽이란 넓게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좁게는 소비의 주요 연령대인 40대 중후반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림 I-7]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8년이 되면 감소폭이 커지면서 2020년까지 수십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

[그림 I-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 전망, 2000-204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그림 I-7] 생산가능인구와 부양인구 전망, 200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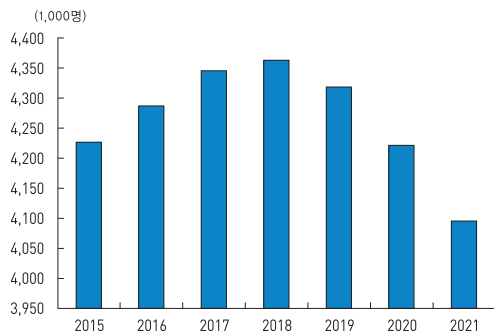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4.

로 예측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72.9%이다. 이 비율은 2020년이 되면 71.1%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63.1%, 2040년에는 56.5%로 10년마다 약 10%가량 줄어들게 된다.



40대 중후반 연령대인 45-49세 인구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곧 한국 사회에 몰아칠 인구절벽 현상의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8]에 나타난 것처럼, 소비정점인구는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이 되면 감소폭이 더욱 커진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앞선 세대보다 뒤에 오는 세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소비정점의 시기가 나타났는데, 한국은 생산인구 감소 시점과 소비정점인구 감소 시점 등을 고려할 때 2020년에 이르면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8] 소비정점인구(45-49세) 전망, 2015-2021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4.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표 I-7>은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인구와 성비를 나타낸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인데, 이 두 지역을 합한 인구 규모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2.0%에 달

<표 I-7> 시도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와 성비, 2015

시도	인구 (명)	베이비붐 세대 내 비중 (%)	성비
전국	7,110,237	100.0	99.8
서울특별시	1,360,092	19.1	92.4
부산광역시	552,168	7.8	91.5
대구광역시	363,149	5.1	96.8
인천광역시	417,996	5.9	102.3
광주광역시	191,637	2.7	98.5
대전광역시	207,429	2.9	99.4
울산광역시	170,005	2.4	105.7
세종특별자치시	21,123	0.3	105.1
경기도	1,629,817	22.9	104.1
강원도	235,290	3.3	102.3
충청북도	224,236	3.2	104.0
충청남도	274,120	3.9	106.0
전라북도	255,029	3.6	101.8
전라남도	256,703	3.6	105.4
경상북도	395,836	5.6	101.8
경상남도	476,116	6.7	102.8
제주특별자치도	79,491	1.1	103.3

주: 1) 성비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인.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한다. 그 다음 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부산과 경상남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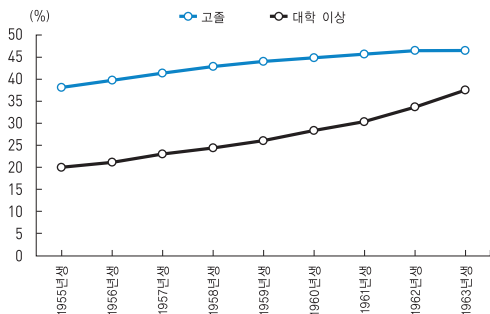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성비는 104.1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서울의 성비는 92.4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부산의 성비는 91.5로 가장 낮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I-9]은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 코호트별 고졸 및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을

나타낸다. 베이비붐 세대 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55년생의 고졸자 비율은 38.3%에 그치지만 1963년생의 경우 46.6%까지 높아져 젊은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다. 이 같은 경향은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대학 이상 학력자 집단은 고졸 학력자 집단에 비해 출생 코호트 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데, 1955년생은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20.2%에 불과하지만 1963년생은 이 비율이 37.6%에 이른다.

[그림 I-9]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별 고졸 및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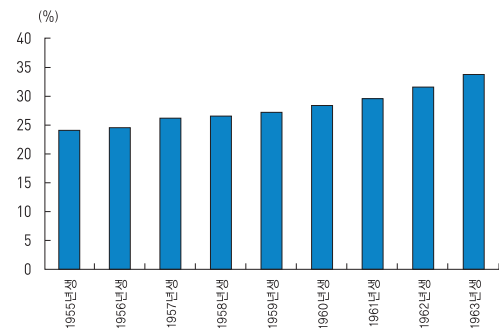


주: 1) 대학 재학, 휴학, 중퇴, 수료 등은 대학 이상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베이비붐 세대 내 출생 코호트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직업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림 I-10]은 베이비붐 세대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비율을 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출생 코호트별로 보면,

1955년생의 관리·전문·사무직 비율은 24.0%에 불과하지만 1963년생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7%에 달해 거의 10%p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젊은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의 비중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림 I-10]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별 관리·전문·사무직 비중,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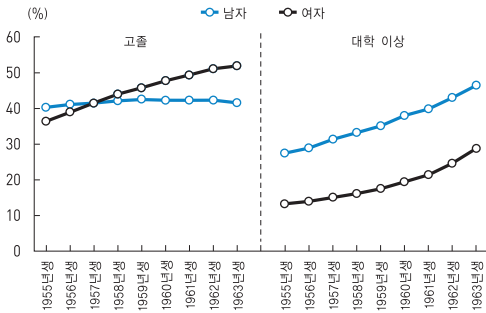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자료,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은 남녀별로 동일하게 향상되었을까? [그림 I-11]은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등교육으로 볼 수 있는 고졸자의 비율을 보면, 1955년생부터 1957년생까지는 남성 고졸자 비율이 더 높지만 1958년생부터는 여성 고졸자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그림 I-11] 베이비붐 세대의 성 및 출생연도별 고졸 및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 2010



주: 1) 대학 재학, 휴학, 중퇴, 수료 등은 대학 이상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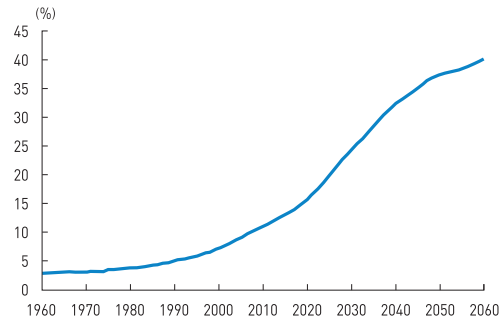
남녀 모두 젊은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높지만 남녀 간 차이는 매우 크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졸 학력자 비율의 경우 1955년생은 남성이 여성보다 3.9%p 더 높지만 1963년생은 여성이 남성보다 10.4%p 더 높다.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의 경우 1955년생은 남성이 27.5%, 여성이 13.2%로 남녀 간 차이가 14.3%p이지만 1963년생은 남성이 46.4%, 여성이 28.7%로 그 차이가 17.7%p에 달한다. 특히, 1955년생부터 1960년생까지 남성의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은 여성보다 거의 2배 높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약하자면,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었지만 고등교육의 기회는 남성에게 많이 주어졌다.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고령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15년 현재 13.2%이다. 이는 한국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이 같은 고령화 수준은 2014년 「장래인구추계」의 13.1%보다 높은 것으로, 이 추세를 따른다면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국은 2025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된다(그림 I-12).

[그림 I-12]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1960-206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이들 세대의 고령인구로의 편입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노인인구 규모보다 크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연령을 지나는 시기에 누렸던 인구보너스 현상인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세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역으로 부양비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한국은 평균 기대수명이 82.2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웃도는 장수국가이다. 남성 79.0세, 여성 85.5세로 60세 여성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약 25년이나 남아있다.

사람들은 유소년기에는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청년기와 장년기에는 소비보다 생산을 많이 하다가 노년기에는 다시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세대 간 전이를 통해 해결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면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전이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계봉오, 2015).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나타날 사회경제적 영향들은 비단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역시 전체 미국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일 중심적’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대’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라 불리면서 1990년 은퇴를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소비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의 성장과 궤적을 같이 하는 세대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대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60% 정도는 자기 집에 살고 과반이 아파트에 살면서 노년기로 나아가고 있다.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고령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그 이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계봉오, 2015. “베이비붐: 한국.” 『인구대사전』.
 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전광희, 2002. “출산력.” 『한국의 인구 I』.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최 율 (한양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6-21세 학령인구는 1980년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학령인구는 1980년 전체 인구의 37.8%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17.5%로 감소하였고 2060년에는 11.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학교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급당 및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은 2023년 이후에도 입학자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학정원과 입학자원의 차이는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학령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 학력수준의 상승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학력별 인구와 실제 공급되는 노동력 간의 수급 부조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소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구변동의 양상이다. 학령인구는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할 적령기 인구를 의미한다. 보통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21세 인구를 지칭한다. 각급 학령인구를 모두 합한 수를 전체 학령인구(6-21세)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교육 수요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개관한 후 이러한 인구변동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교육환경과 경제활동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가 인구변동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노인 부양비용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발전 동력을 잠식하는 핵심적인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김두섭,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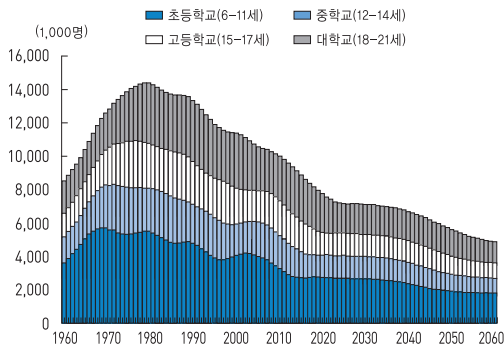
출생률 저하에 대한 우려는 경제활동인구의 양적 감소에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학령인구의 변화 전망

학생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I-13]에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를 제시하였다. 전체 학령인구는 1960년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1980년 1,440만 명으로 최댓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장래인구추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0년의 855만 명에 비해 68.4% 증가한 수치

이다. 이후 전체 학령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5년 887만 명으로 1980년 대비 38.4% 감소하였다. 감소 추세는 2020년 이후 다소 완만하게 변하지만 2060년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 37.8%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5년 17.5%로 낮아졌고 2060년에는 11.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13] 학교급별 학령인구 전망, 1960-206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학령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는 학교급별로 다르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969년을 정점으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중학교 학령인구는 이보다 늦은 1973년에 최댓값을 기록한 후 1980년대 중반까지 등락을 반복하다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학령인구 역시 1977년에 최댓값을 기록하였지만 실제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대학 학령인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전체 학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960년대 50%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대학 학령인구의 비율은 1960년대 대략 20%에서 2015년 30%까지 증가하였다.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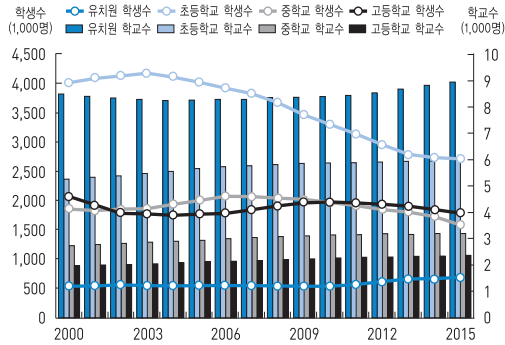
학령인구의 변화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림 I-14]는 2000년 이후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생 및 학교 수 추이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는 2000년대 후반부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유치원 학생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영유아수는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로 유치원 학생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각급 학교의 수는 모두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치원은 5.1%, 초등학교는 13.5%, 중학교는 17.3%, 그리고 고등학교는 19.8% 증가하였다.

학생수의 감소와 학교수의 증가는 학급당 및 교사 1인당 학생수에 영향을 준다. [그림 I-15]에서 보는 것처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및 교사



[그림 I-14] 유·초·중등교육 학교급별 학생 및 학교 수,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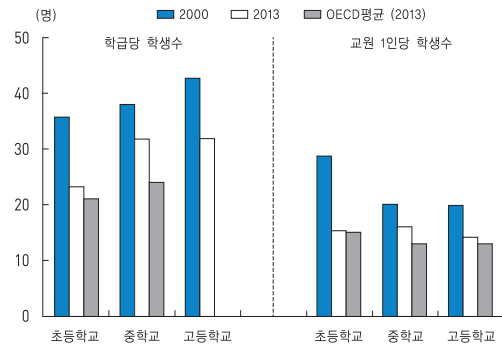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1인당 학생수는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00년 36명에서 2013년 23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29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였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13년에 각각 32명과 16명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각 32명과 14명이다. OECD 국가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013년 기준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4명으로 여전히 한국보다 낮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5명, 중·고등학교 13명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교수의 증가는 교육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를 줄여 학생들 간의 진학경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라 진학경쟁의

[그림 I-15] 초·중등교육 학교급별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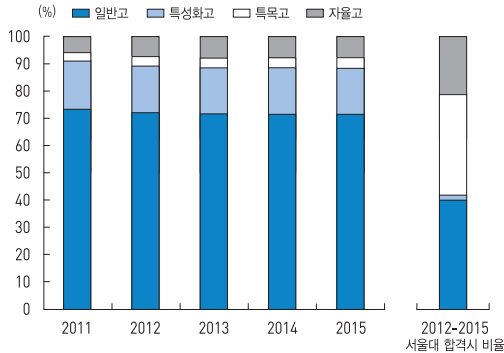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5, 2015.

초점이 주로 대입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자율고는 교육 경쟁의 시작을 대학 입학에서 고등학교 입학으로 앞당기고 있다.

[그림 I-16]에는 2011년 이후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수 비율과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지난 5년간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생수는 감소하였다. 반면, 특목고와 자율고의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고등학생 중 특목고와 자율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11.6%까지 높아졌다. 한편, 전체 고등학생의 11.6%에 불과한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생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서 2015년 기간 58.5%였다. 우수한 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은 교육경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교육환경 저하를 우려하게 한다.

[그림 I-16]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비율과 서울대 입학생 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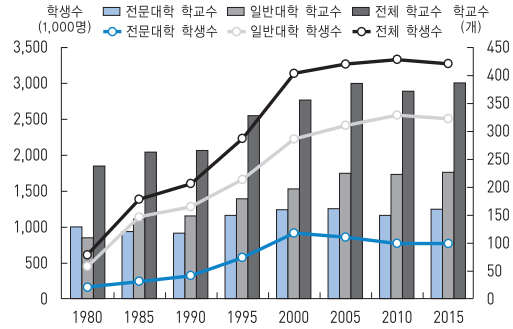


주: 1)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2012-2015년 서울대 정원 내 일반전형 입학생을 기준으로 계산함.

2) 특성화고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기타 학교를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유기홍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59)」, 2015. 10.

[그림 I-17]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교 수, 1980-2015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그림 I-17]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학교 수 추이를 보여준다.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는 1980년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바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 추이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4년제 대학은 2000년 이후에도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은 2000년 91만 명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학교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200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의 증가세가 완화된 것은 전문대학 학생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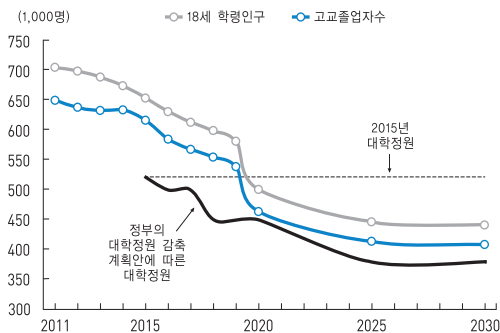
[그림 I-18]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한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원 규모를 전망한 것이다. 입학자원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의 평균 고교 졸업률(92.7%)을 대입 적정연령이라 할 수 있는 18세 학령인구에 적용하였다. 이때, 고등학교 취학률을 100%로 가정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대입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0년경에는 대입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친 대학정원 감축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2023년 이후에도 대입정원은 입학자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입학자원과 고등교육기관 정원의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2023년 이후에는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경쟁과 마찬가지로 교육성취의 질적 차이와 관



련된 교육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대학교육의 확장으로 양적 교육경쟁은 약화되는 반면, 더 좋은 학교를 가려는 질적 교육경쟁은 강화되는 것이다.

[그림 I-18]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원 규모 전망, 2011~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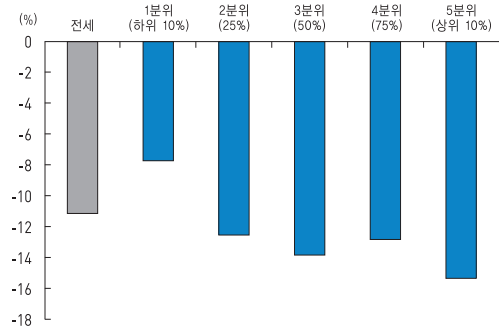
주: 1) 2015년 이후 고교졸업자수는 고등학교 취학률을 100%로 가정하고, 2011~2015년 평균 고교 졸업률(92.7%)을 대입 적정연령인 18세 학령 인구에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11~2015; 「대학교구조개혁추진계획」, 2014.

[그림 I-19]에는 2012년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 등을 고려하여도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11.1% 높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크다. 임금수준 하위 10%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7.7%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임금수준 상위 10%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보다 15.3%나 높다.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순위가 높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제 대학 내의 학교 순위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 역시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간 임금 차이, 그리고 4년제 대학 내 서열에 따른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보상은 결국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교육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감소는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의 충원율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학력수준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19] 임금 분위별 4년제 대학 졸업자 대비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 비율, 2013



주: 1) 2012년 졸업생 중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함(단, 아르바이트 제외).
2) 통계치는 회귀분석을 통해 성,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 등을 통제한 후 학력 간 격차를 추정된 결과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13.

경제활동인구 구조의 변화

학령인구의 변화는 1차적으로 교육환경과 전반적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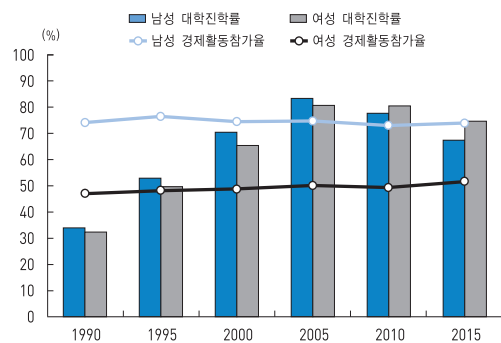
새롭게 진입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특징을 변화시킨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포화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4년제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학령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에 두 가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 학력수준의 상승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학력별 인공과 실제 공급되는 노동력 간의 수급 부조화가 심화될 것이다.

급격한 노동력 감소의 대안으로 출산율 제고와 유휴노동력 활용이 제시될 수 있다. 출산율 제고가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시행을 통해서 점증적인 인구변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유휴노동력 활용은 급격한 노동력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I-20]은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여준다. 고등교육 진학률의 경우 2005년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았으나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졌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15년 여성 74.6%, 남성 67.3%로 남녀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47.0%에서 2015년 51.8%로 25년간 4.8%p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꾸준히 70% 이상을 나타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여성의 높은 진학률을 고려

한다면,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학력 유휴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그림 I-20]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 1990-2015



주: 1) 대학진학률의 경우 2010년까지는 대학합격자 기준이며, 2011년부터는 대학등록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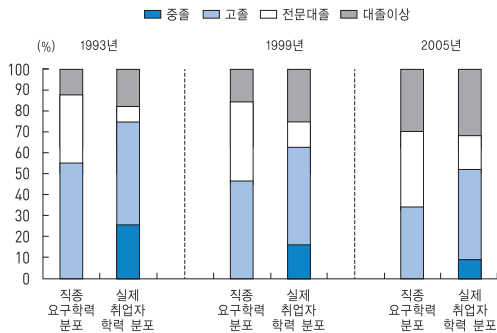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학령인구의 감소가 노동력 구조에 미칠 두 번째 문제는 전반적 학력수준 상승으로 인한 노동력 수급 부조화 현상이다. [그림 I-21]은 직종별 요구 학력 분포와 실제 취업자의 학력 분포를 대비하여 보여준다. 전문대졸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은 1993년 44.8%에서 2005년 65.7%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도 학력수준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1993년 24.9%에서 2005년 47.9%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생을 요구하는 직장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 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고졸 및 전문대졸을 요구하는 직장은 2005년 전체의 70.2%를 차지하였지만 실제 노동자의 59.3%만이 고등학교 및 전문대를 졸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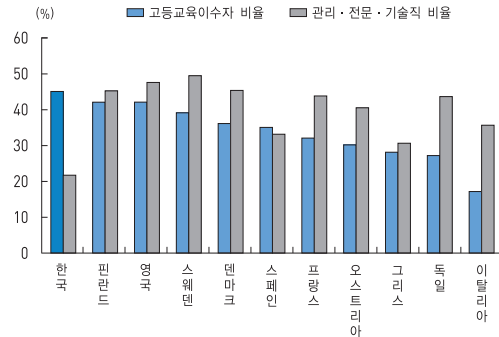
[그림 I-21] 직종요구학력 분포와 실제 취업자의 학력 분포, 1993-2005



주: 1) 직종요구학력은 직업사전에 등재된 일반적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직종 소분류 단위(약 149개)에서 분류한 것임.
출처: 박성재, 「고졸자 초기 경력 형성에 관한 연구」, 2014.

교육수준과 일자리 간의 부조화 현상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림 I-22]는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과 관리·전문·기술직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 전체 근로자 중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그림 I-22]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과 관리·전문·기술직 비율, 2014



주: 1)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만 2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5*, 2015.
ILO, *ILOSTAT Database*, 2014.

낮은 편이다. 한국은 비교대상 1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45.0%)과 가장 낮은 관리·전문·기술직 비율(21.6%)을 보인다. 한국의 관리·전문·기술직 비율은 스웨덴,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20%p 이상 낮다.

노동력 수급의 부조화는 단기간의 급격한 교육 기회 확대와 이를 수용할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졸자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장년층의 은퇴와 맞물려 노동력 수급 부조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박성재. 2014. 「고졸자 초기 경력 형성에 관한 연구: 1965-79년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Family & Household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2 0 1 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52
가족가치관의 변화	한경혜 서울대학교	61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1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 가족규모의 축소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및 1세대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누적 국제결혼 건수는 50만 건이 넘는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20만 명에 이른다.
- 여성 가구주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미혼여성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혼에 따른 모자가구가 늘어난 현상과 관련이 있다.
- 미혼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대 미혼율의 상승 폭은 여성이 더 큰 반면, 30대 미혼율의 상승 폭은 남성이 더 크다.
- 이혼율은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중년기 이혼의 증가로 평균 이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 가사노동이 남녀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의 변화는 인식 변화보다 느리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족의 주요 변화 추이와 현 주소를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에서는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의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같은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형성에서는 결혼 지연과 이혼율의 변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를 살펴본다. 가족관계에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남녀 비교를 통해 성역할과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구조의 변화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규모화’와 ‘구조의 다양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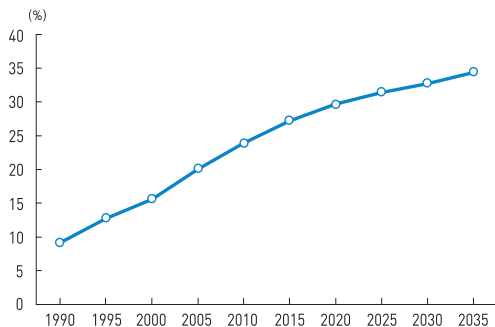
1인가구의 증가

가구규모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균 가구원수가 1990년 3.8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중이 줄고 1세대가구, 특히 1인가구의 비중이 커진 현상과 관련된다. 과거 30여 년간 68%대를 유지해 오던 핵가족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부+자녀가구, 모+자녀가구) 비율이 2015년에는 1인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58.6%까지 낮아졌다. 1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5년 27.2%로 25년 사이에 3배 이상 높아졌다.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



하여 2035년에는 전체 가구의 3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1).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높아지고 노년층에서 독거가구가 늘어나며 이혼으로 인한 독신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II-1] 1인가구 비율, 1990-2035



주: 1) 2015년 이후 자료는 추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5; 「장래가구추계」, 2012.

연령별 1인가구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20대 가구주의 1인가구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1985년에는 20-24세 가구주의 29.7%, 25-29세 가구주의 10.4%가 1인가구였으나, 2015년에는 20-24세 가구주의 79.3%, 25-29세 가구주의 63.0%가 1인가구로 나타난다(표 II-1). 이는 학업 혹은 직업상의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결혼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향에서 결혼 전이라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 것도 1인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1〉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1985-2015

연령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4세	29.7	38.4	49.6	55.7	64.0	70.8	79.3
25-29세	10.4	17.5	25.9	31.7	45.7	53.5	63.0
30-34세	3.2	5.5	9.3	13.6	22.5	29.6	36.2
35-39세	2.4	3.7	6.0	8.8	13.5	18.9	23.3
40-44세	2.3	3.2	5.3	7.7	10.8	14.5	19.5
45-49세	2.6	3.4	5.4	7.8	10.9	13.9	17.8
50-54세	3.9	4.5	6.6	8.6	11.5	14.9	18.2
55-59세	7.0	7.5	9.4	11.3	13.2	16.7	20.0
60-64세	10.6	13.1	15.3	15.8	17.5	19.8	22.1
65-69세	14.0	17.2	23.6	23.9	23.6	25.3	25.6
70-74세	18.1	20.7	28.9	33.8	32.1	32.0	29.8
75세 이상	23.2	25.5	34.9	41.4	43.6	45.1	41.1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연령집단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이들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1985년과 2015년 사이에 약 두 배로 높아졌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노인 독거가구는 총 가구의 6.4%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 3.8%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약 20년 후인 2035년에는 15.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는 배우자 사별 후 혼자 거주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70대 이상이 되면 건강 악화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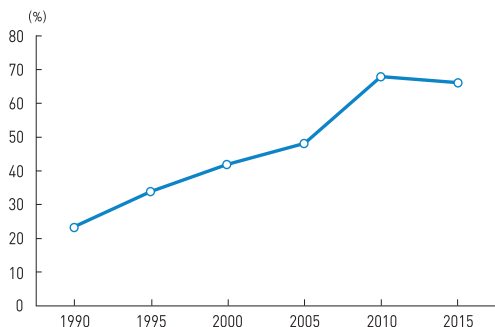
노인독거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부부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합한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1990년 23.3%에서 2015년 66.0%로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그림 II-2).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 가족의 세대관계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자녀의 도시 이주로 인한 비자발적 별거가 농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관찰되었지만, 최근에는 노인과 자녀의 동거에 대한 규범과 태도가 변화하여 자발적 별거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을 선호한다. 수명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생활수준과 의료수준이 향상되어 독립주거가 가능한 노인들이 증가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독립주거에 필요한 건강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들의 비자발적 별거도 적지 않

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만의 생활에 따른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불안감(25.8%), 앓을 때 간병문제(25.6%), 심리적 불안감(21.7%)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약 49%의 노인들이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18-65세인 근로연령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12.3%이지만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6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가능소득 빈곤율도 근로연령가구는 11.4%에 불과하지만 노인가구는 49.6%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여성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31.0%이고 남성 수급자의 경우에는 14.7%였는데, 2014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38.1%와 21.1%로 높아졌다.

[그림 II-2] 노인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 1990-2015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노인단독가구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여성 가구주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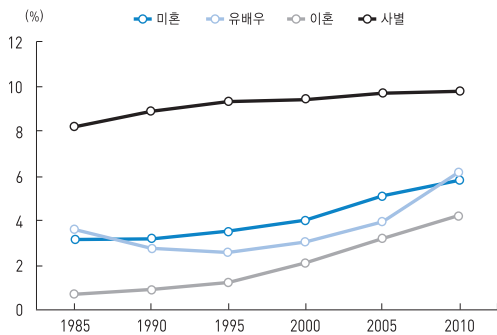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2015년 현재 여성 가구주는 565만 명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 179만 명에 비해 386만 명 증가한 것이고 그 비율도 1990년 15.7%에 비해 13.9%p 상승하였다.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20세 미만(51.8%), 20대(44.3%), 70세 이상(42.6%)이며, 40대(24.9%)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다.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미혼여성 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혼율



의 상승으로 한부모가구가 늘어난 것이 여성 가구주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상태에 따른 여성 가구주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가구 중 미혼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10년 5.8%로 1.8배 상승하였고 이혼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같은 기간 0.7%에서 4.2%로 6배가량 상승하였다(그림 II-3). 여성 가구주 증가 현상에 대해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한국의 가족이 전통적 형태로부터 벗어나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림 II-3]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비율, 1985-2010



주: 1) 가구 비율은 전체 일반가구 중 해당 혼인상태 여성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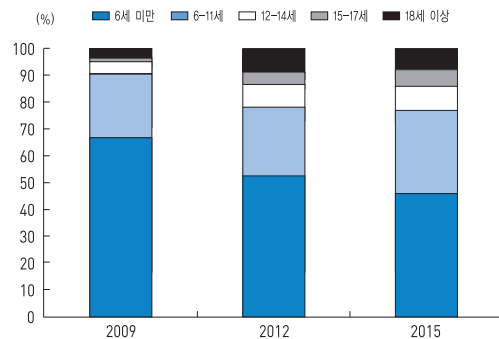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의 증가

한국 가족의 다양화 추세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1993-2015년 기간 동안 누적된 국제결혼 건수는 약 52만 8,000건

이다.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약 38만 3,000건이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2.6%에 해당한다.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약 14만 5,00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5년 현재 약 20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족의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1.02명으로 자녀가 1명인 가구가 37.1%, 2명인 가구가 24.6%, 3명 이상인 가구가 5.0%이다. 다문화가족의 33.2%는 자녀가 없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연령별 분포를 보면, 6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비율이 낮아지고 6세 이상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비율은 높아졌다. 6세 미만의 미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비율은 2009년 66.5%에서 2015년 45.8%로 낮아졌다(그림 II-4).

[그림 II-4]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구성, 2009-2015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각 연도.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르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 중 77.4%가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의 주된 어려움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31.4%),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 돌봄자를 구하는 것(21.5%) 등이다. 6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도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76.8%).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녀의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29.6%),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12.9%), 다른 학부모와의 소통이나 정보 교류(12.4%) 등이다.

가족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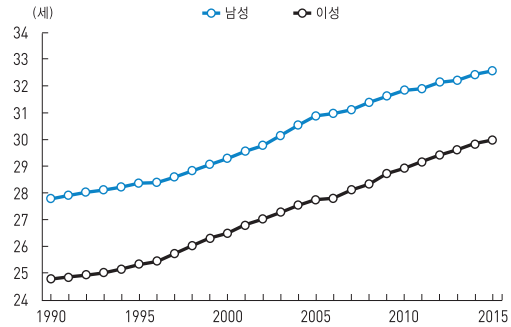
가족형성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결혼이 점차 뒤로 미루어지는 만혼화 경향과 미혼율의 증가, 이혼 양상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만혼화 경향과 미혼율의 증가

만혼, 즉 초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지난 10여년간 두드러졌다. 2015년 현재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2000년에 비해 남성은 3.3세, 여성은 3.5세 정도 높아졌다(그림 II-5).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되어 결혼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 최근 초혼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미혼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의 미혼율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림 II-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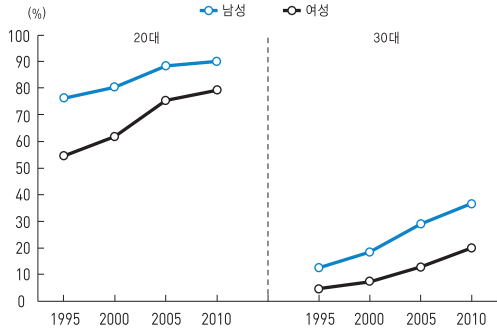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0-30대의 미혼율은 2010년 52.5%로 1995년 대비 17.4%p 상승하였다. 연령대를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25-29세의 미혼율은 2010년 76.0%에 이른다. 30-34세의 미혼율은 2010년 38.5%로 199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으며, 35-39세의 미혼율은 1995년 4.6%에 불과했으나 2010년 19.1%로 상승하였다. 미혼율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0년 기준 20대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은 각각 90.2%와 79.2%로 남성이 11%p 더 높다. 한편, 20대 미혼율의 상승 폭은 여성이 더 큰 반면 30대 미혼율의 상승 폭은 남성이 더 크다(그림 II-6).

교육수준에 따른 미혼율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학력자의 미혼율이 2000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0년 56.6%이다. 대졸 이상 학력자(49.7%)의 미혼율도 높은 편이지만, 이들의 미혼율은 1995년 44.5% 대비 2010년 5.2%p 상승하는 데 그쳐 변화가 크지는 않다. 반면 중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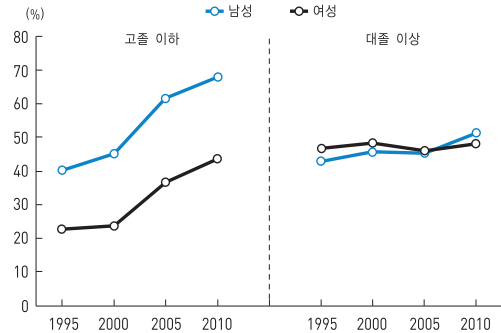


[그림 II-6] 20~3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그림 II-7] 20~30대 연령층의 성 및 교육수준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하 학력자의 미혼율은 2010년 기준 48.1%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수치는 1995년 18.2% 대비 29.9%p 상승한 것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교육수준별 미혼율 변화를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 15년간 남녀 공히 고졸 이하 학력자가 대졸 학력자에 비해 미혼율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대졸 이상 남성의 미혼율은 8.5%p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고졸 이하 남성의 미혼율은 27.7%p나 상승하였다(그림 II-7). 즉 남녀 모두에서 관찰되는 미혼율 상승은 고졸 이하 학력자의 미혼율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만혼화 경향이 가족형성의 지연을 의미한다면, 이혼율은 형성된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혼건수와 조이혼

율은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표 I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혼건수는 2010년 11만 6,900건에서 2015년 10만 9,200건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조이혼율, 즉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2.3건에서 2.1

<표 II-2>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2005~2015

연도	이혼건수 (1,000건)	조이혼율 (%)	유배우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세)	
				남성	여성
2005	128.0	2.6	5.5	42.1	38.6
2006	124.5	2.5	5.3	42.6	39.0
2007	124.1	2.5	5.2	43.2	39.5
2008	116.5	2.4	4.9	44.3	40.5
2009	124.0	2.5	5.2	44.5	40.7
2010	116.9	2.3	4.8	45.0	41.1
2011	114.3	2.3	4.7	45.4	41.5
2012	114.3	2.3	4.7	45.9	42.0
2013	115.3	2.3	4.7	46.2	42.4
2014	115.5	2.3	4.7	46.5	42.8
2015	109.2	2.1	4.4	46.9	43.3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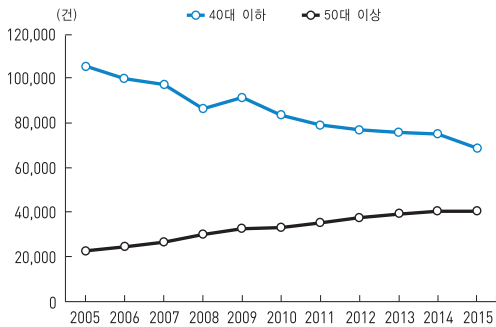
2) 유배우 이혼율은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건으로 감소하였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유배우 이혼율도 2010년 4.8건에서 2015년 4.4건으로 줄어들었다. 평균 이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5년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6.9세로 2005년에 비해 4.8세 높아졌고,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3.3세로 같은 기간에 4.7세 높아졌다. 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조이혼율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낮아지는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높아지고 있다. 이혼건수의 경우에도 남편의 연령을 기준으로 40대 이하에서는 2005년 10만 5,206건, 2010년 8만 3,692건, 2015년 6만 8,77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2005년 2만 2,829건, 2010년 3만 3,166건, 2015년 4만 38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그림 II-8). 중년세대의

[그림 II-8] 남편의 연령집단별 이혼건수, 2005-2015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진 점과 연관이 있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만 남게 되는 빈 둥우리(empty nest) 시기가 대폭 길어지면서 부부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긴장과 갈등이 부부관계에 위협으로 작용하여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이 직면하게 되는 긴장요인 뿐 아니라 중년기까지 누적되어 온 부부 간 갈등이 자녀의 독립과 함께 표면화되면서 이혼으로 연결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중년기 이후 남은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았다면,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중년의 부부에게도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할 기간이 30-40년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 사유 또한 바뀌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비율이 IMF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 10.7%까지 높아졌다가 2004년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부 간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도 2000년 40.2%에서 2015년 46.2%로 많아졌다. 반면, 확대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이혼은 2000년 21.9%에서 2015년 7.3%로 줄었다. 이혼사유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부 간 정서적 유대 등 결혼생활의 질적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혼가정 자녀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 약 14만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고 2003년



에는 그 수가 19만 명에 육박하였다. 이혼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부부의 비율도 낮아지고는 있으나 2015년 현재 이혼한 부부 중 48.4%가량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혼을 문제제시하는 사회적 시각과 편견이 이혼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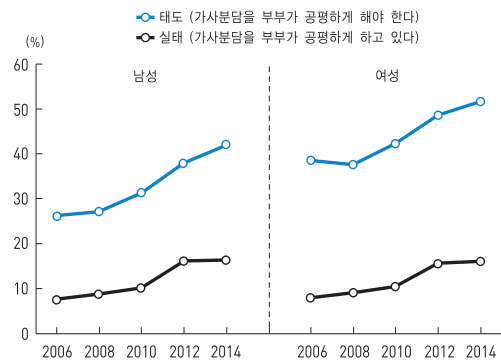
가족구성원 간 관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약화되면서 가족관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사분담 태도와 행동의 변화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역할 분담이 평등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50% 이상과 남성의 40% 이상이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사분담에 있어서 양성평등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변화는 남녀 모두에서 관찰된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06년 남성 26.1%, 여성 38.4%에서 2014년 남성 41.9%, 여성 51.5%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행동 사이

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부부 간에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14년 남녀 모두 현재 약 16%에 그치고 있다. [그림 II-9]는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9]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200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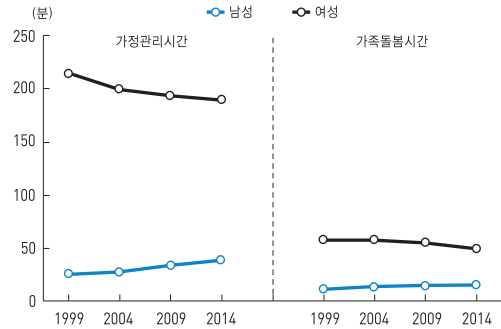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부부 간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만 1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제 가사분담에서 부부 간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파악되는 가사노동시간의 남녀 간 차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II-10]은 음식준비, 청소 등에 사용하는 가정관리시간과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가족돌봄시간의 변화를 성별로 보여준다.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돌봄시간을 합한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기혼남성이 하루 평균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1999년 25분에서 2014년 38분으로 증가하였다. 기혼여성은 1999년 당시 무려 214분을 가정관리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4년 189분으로 감소하였다. 남녀 간 가정관리시간의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이 남성보다 5배가량 많다. 기혼남녀의 하루 평균 가족돌봄시간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1999년 11분에서 2014년 15분으로 4분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1999년 57분에서 2014년 49분으로 8분 감소하였다. 남녀의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돌봄시간을 합한 총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부부 이외의 가족구성원이나 외부인력 혹은 시설기관에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II-10] 기혼남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1999-2014



주: 1) 20세 이상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가정관리시간은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항목을 합산한 시간임.

3) 가족돌봄시간은 함께 사는 자녀,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그 외 가구원 돌보기 시간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봄 시간을 합산한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가족가치관의 변화

한경혜 (서울대학교)

- 2000년대 이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녀 모두 감소했다. 반면, 결혼이 선택사항이라는 인식은 매우 높아졌다.
-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보는 방향으로의 태도 변화는 기혼자들보다 비혼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 동거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더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에 더 허용적이다.
- '결혼생활은 가족보다 당사자 간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부부중심성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2014년에 낮아졌다.
-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녀출산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2008년 이후 약간 높아졌으나 남녀 모두에서 그 상승폭이 미미하다. 혼외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이혼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결혼 및 출산율의 저하, 1인가구의 증가 등 최근 진 행되고 있는 한국 가족의 변화를 가족제도의 붕괴 신호로 볼 것인지 다양성의 증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전략적 반응

이 가족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주목할 점은 가족 관련 인구학적 지표의 변화와 가족행동의 변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혼화나 이혼율의 상승은 결혼이나 이혼을 선택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가족 경계의 유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거나 무자녀 가족에 대한 허용적 태도도 확산된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족가치 변화의 정도나 방향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치관 변화는 행동 변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행동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한국 가족 변화의 내용적 측면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결혼, 반드시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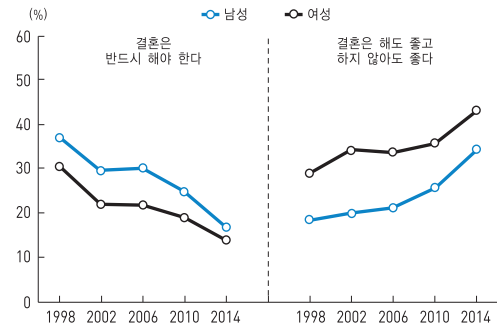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급격한 만혼화 경향과 미혼의 증가 현상에는 가족형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독신율이 극히 낮은 ‘보편적 결혼(universal marriage)’ 제도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사회인데,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결혼을 당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난 1998-2014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을 당위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 1998년 「사회조사」 결과, 남성의 36.9%, 여성의 30.5%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2014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성 16.6%, 여성 13.7%로 낮아졌다. 지난 16년 사이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남녀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은 매우 높아졌다. 1998년 당시 남성의 18.4%, 여성의 28.9%가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하였으나, 2014년에는 그 비율이 남성 34.4%, 여성 43.0%로 높아졌다. 2014년 현재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은 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11).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보는 방향으로의 태도 변화 추세는 기혼자들보다 미혼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2014년 현재 미혼 남성의 9.9%, 미혼 여성의 5.9%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42.0%)이 ‘결혼을

[그림 II-11]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선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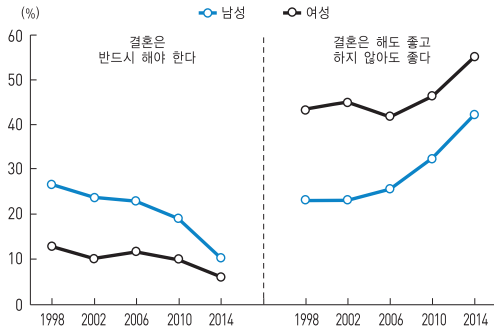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41.6%)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55.0%)이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그림 II-12). 미혼자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실제 이들의 결혼행동에 반영되어 장기적 결혼율의 저하로 나타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도의 변화 양상을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남성이다. 지난 16년 동안 결혼을 당위적인 것으로 보는 비율은 여성(-17.0%p)보다 남성(-20.6%p)에서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



[그림 II-12] 미혼자의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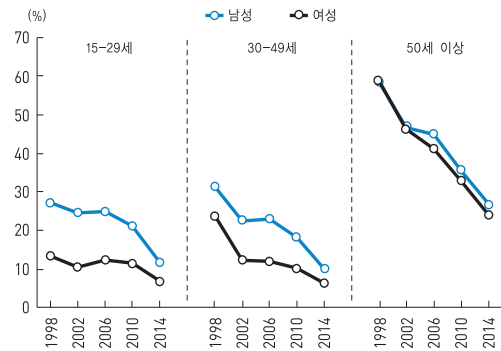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미혼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선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별 차이는 특히 미혼자 집단에서 더 현저한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6.8%p)보다 남성(-16.7%p)에서 훨씬 더 크게 줄어들었다. 동시에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14.3%p)보다 남성(+16.0%p)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변화도 남성에게서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 미혼자의 경우에도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의 증가가 여성(+11.7%p)보다는 남성(+18.6%p)에서 더 가파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40대 여성으로서 그 비율이 6.3%에 불과

하다. 10-20대 여성 역시 6.7%만이 결혼을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30-40대 남성(10.0%)과 10-20대 남성(11.7%)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다.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남녀 모두 그 비율이 20%를 상회한다. 그러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집단은 남녀 모두 50대 이상이다. 이는 결혼을 당위적으로 보는 가치관의 약화가 젊은 연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1998-2014년 사이에 10-20대와 30-40대 남녀 역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30-40대 남성의 감소폭(-21.4%p)이 가장 크다(그림 II-13).

[그림 II-13]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에 대해 당위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199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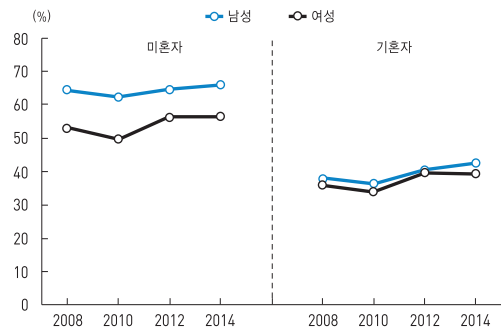
만혼화 시대에 동거는 결혼의 대안?

그렇다면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동거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차 인구학적 변천을 논의하는 학자들은 결혼연령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가 동거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확산과 함께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이미 1970년대 이후 동거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의 증가와 결혼제도 기반의 약화로 최근 동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동거가 증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거가 실제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동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어떠한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도 만혼화 및 미혼율의 상승과 함께 동거에 대한 태도가 더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자료의 한계로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2008-2014년에 걸친 6년 동안 동거에 대한 가치는 큰 등락 없이 대체적으로 보다 허용적인 방향으로 완만하게 변화하였다. 2014년 현재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이 50.1%, 여성이 43.2%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해 남성

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통념과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의 위험성(risk)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거에 대한 태도는 미혼자들이 기혼자들보다 더 허용적이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4년 현재 미혼자 집단이 기혼자 집단보다 더 높다. 이 같은 미혼자 집단과 기혼자 집단의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는 남성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그림 II-14).

[그림 II-14] 성 및 혼인상태별 동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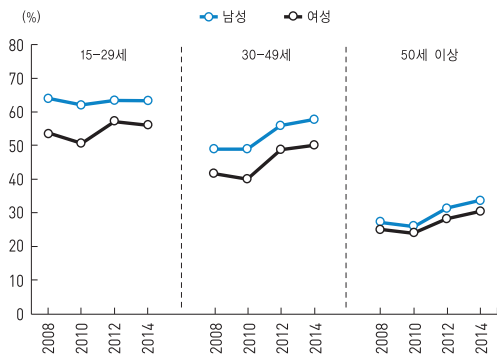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동거에 대한 태도는 연령집단 간에 차이가 크게 난다. 동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20대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이 가장 낮다.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허용적 태도의 남녀 간 차이가 매우 적은 것이 흥미롭다. 2008-2014년 동안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 양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40대 집단에서 허용적인 태도로의 변화폭이 가장 크다. 한편, 10-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의 변화가 별로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15).

[그림 II-15] 성 및 연령집단별 동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난 6년 동안의 변화폭도 크다. 남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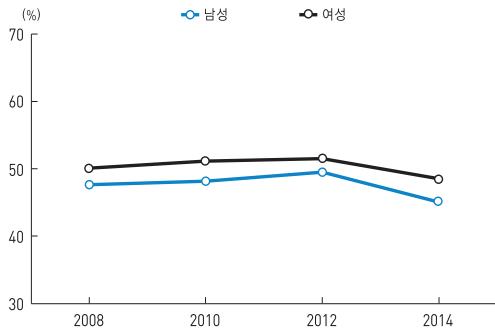
였다. 2008-2014년 동안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5.4%p,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4.5%p 더 높아졌다. 지난 6년간 중졸 이하 남성(+4.6%p)과 중졸 이하 여성(+4.2%p)의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 상승폭이 고졸 남성(+1.6%p)과 고졸 여성(+3.0%p)에 비해 더 크다.

결혼생활은 가족관계보다 당사자가 중요?

통계청 「사회조사」에는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은 부부중심적 결혼관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비율은 남성이 45.2%, 여성이 48.5%로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중심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부부중심성에 가치를 두는 인식은 2008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14년에 줄어들었다(그림 II-16).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결혼생활의 부부중심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 또한 50대는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남성과 여성의 태도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실제 결혼생활을 하고 있을 연령대인 30-40대가 10대-20대에 비해 부부중심적 태도에 동의하는 수준이 가장 높고 남녀 간 차이도 크다. 지난 6년 동안 부부중심적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

[그림 II-16] 성별 결혼생활에 대해 부부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한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약간 반대'와 '전적으로 반대'를 합한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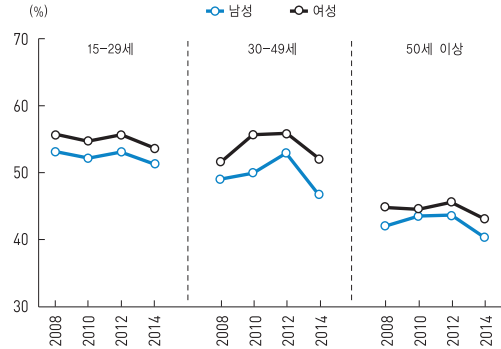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보면, 남녀 모두 30-40대가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2008-2012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2014년 사이에 다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0-40대가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17).

결혼하면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결혼관계에서 자녀의 중요성은 얼마나 유지 혹은 변화되고 있는가? 혈연가족 성격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존재는 결혼관계와 가족형성의 완성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성의 18.6%,

[그림 II-17]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생활에 대해 부부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한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약간 반대'와 '전적으로 반대'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의 24.1%가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즉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이 55.3%, 여성이 50.6%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아직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출산을 결혼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하다.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남녀 모두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 폭이 매우 작아 자녀를 결혼생활의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약화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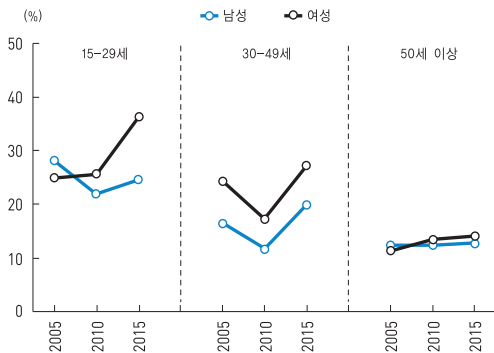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을 남녀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10-20대 여성이 36.4%로 가장 높고 30-40대 여성이 27.3%로 그 다음으로 높다. 특히, 2005-2015년 사이 10년 동안 10-20대 여성의 인식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결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20대 남성이 24.5%, 30-40대 남성이 19.9%로, 남성은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18). 이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자녀 출산을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30.6%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고졸 여성(23.9%), 대졸 이상 남성(19.3%)의 순이다. 이 결과는 고학력일수록 자녀 출산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2005-2015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인 남녀의 경우에는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남녀에 관계없이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인구집단에서도 자녀 출산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18]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에 있어 자녀출산에 대해 선택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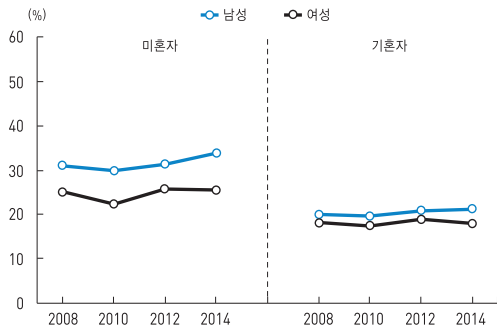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혼외출산에 대해서는?

혼외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2008-2014년 동안 별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2014년 현재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남성의 25.3%, 여성의 19.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보다 혼외출산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남녀 모두 혼외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25% 내외로 비교적 낮다. 혼외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나 남녀 모두 그 증가폭이 미미하였다. 혼외출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러한 결과는 동거에 대해 남성의 약 50%, 여성의 약

43%가 허용적 태도를 보였던 점과 연결시켜 볼 때, 출산과 결혼제도 간의 연결성이 높은 한국 가족의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에 관계없이 미혼자들이 기혼자들보다 혼외출산에 더 허용적이며, 미혼 남성의 태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허용적으로 변화하였다(그림 II-19).

[그림 II-19] 성 및 혼인상태별 혼외출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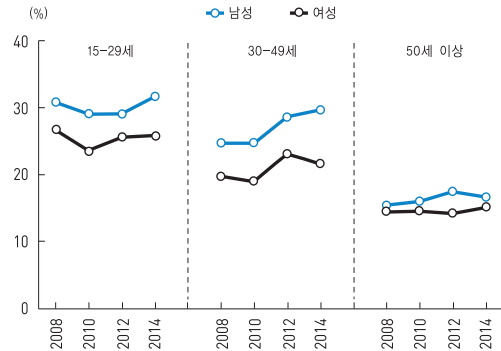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연령대별로는 2014년 현재 10-20대 남성이 혼외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31.7%로 가장 높고 30-40대 남성(31.7%)이 그 다음으로 높다. 10-20대 여성의 25.8%와 30-40대 여성의 21.6%가 혼외출산에 동의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남녀 모두 혼외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그림 II-20] 성 및 연령집단별 혼외출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0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다. 혼외출산에 대한 가치는 2008-2014년 6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20).

이혼은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인가?

급격히 증가하던 이혼율은 2003년 조이혼율이나 이혼건수가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조이혼율은 2005년 인구 1,000명당 2.6명에서 꾸준히 낮아져 2015년에는 2.1명까지 떨어졌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유배우 이혼율도 2015년 4.4건으로 2005년 5.5건보다 1.1건이나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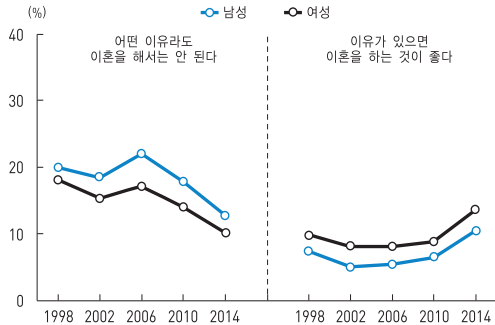
이혼율의 감소는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반영되었을까? 사회조사를 분석해 보면, 이혼율은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으나 이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림 II-21]에 나타난 것처럼, 1998년 남성의 19.9%, 여성의 18.1%가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2014년에는 그 비율이 남성 12.7%, 여성 10.1%로 줄어 들었다. 반면,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여성은 9.8%에서 13.6%, 남성은 7.4%에서 10.4%로 증가하여 이혼

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라는 시각이 완만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과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합한 부정적 태도의 비율은 2014년 현재 남성 49.1%, 여성 40.1%로 나타난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 추세에 남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00년 이후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간에 시각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36.4%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43.5%로 가장 높다. 여성은 이혼을 행복하지 못한 결혼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남성보다 강한 반면, 남성은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강하고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50대 이상에서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전통적, 보수적 시각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50대 이상 남성(20.1%)과 여성(18.5%)이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 이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30-40대 남성의 7.9%와 10-20대 남성의 8.9%만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림 II-21]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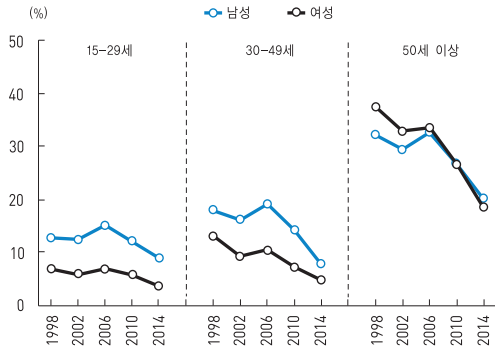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2006년 이전 설문문항에서는 응답 범주에 ‘이유가 있으면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포함되어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이혼에 대한 불허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1998년과 2002년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률에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의 응답률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2]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해 불허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199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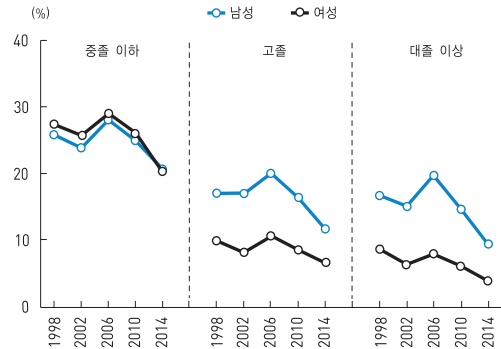
3) 통계치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 인식하고 있으며, 30-40대 및 10-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0%를 밑돈다(그림 II-22).

교육수준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 1998년 당시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그 비율이 19%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고졸이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남녀에 비해 훨씬 보수적이다. 고졸 및 대졸 이상 집단에서도 1998-2014년 동안 이혼에 대해 부

[그림 II-23] 성 및 교육수준별 이혼에 대해 불허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1998-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여 2014년에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3.8%, 고졸 학력을 가진 여성의 6.9%만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지난 16년 동안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같은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대졸 이상 남성의 9.4%, 고졸 남성의 11.6%가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여성보다 그 비율이 높다(그림 II-23).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분거가족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며 전체 가구의 10% 후반대로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 분거가족의 대부분은 자녀가 떨어져 살면서 분거된 경우이다. 가구주가 배우자와 떨어져 살면서 분거가족이 된 경우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 가구주가 배우자와 분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때문이며 가족 간 불화 때문에 분거하는 경우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가구주가 자녀와 분거하는 가장 큰 이유도 직장 때문이며 자녀의 학업 때문에 분거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가구주가 배우자와 분거하는 기간은 점차 줄어들어서 6개월 미만의 단기 분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자녀와 분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장기 분거도 많다.
- 자녀 양육과 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인식되는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에 덜 만족하고 가정생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
- 분거가족 가구주는 비분거가족 가구주에 비해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관계에 덜 만족한다.

한국의 가족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분거를 선택해 왔다. 1960년대 산업화 초창기에는 도시와 농촌으로 분거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에는 중동건설 붐으로 많은 노동자 가족이 분거를 선택하였다. 1980년대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주말부와 월말부부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따로 사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한경혜, 2009). 예전에는

주로 가장의 취업 등 생계 때문에 가족이 분거를 선택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분거를 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1인가구로 분거하면서 분거가족을 이루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분거가족은 가족구성원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가족형태를 말한다(최정민·박영미, 2012).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는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을 분거가족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분거가족의 규모와 분거이유, 분거기간 등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분거 상황이라고 해도 남편과 아내에 따라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하는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그 차이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분거가족과 비분거가족의 비교를 통해 분거가족의 특성도 파악하고자 한다.

분거가족의 실태

통계청 「사회조사」는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분거가족은 2010년 전체 가족의 15.1%에서 2012년에는 19.6%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18.7%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가족 중 분거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기에 따라 등락은 있었지만 10% 후반대로 유지되어 왔다. 분거가족의 절대 다수는 국내 분거가족이다. 국외 분거가족은 전체 분거가족의 10% 전후에 불과하다. 분거가족은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모두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분가로 인한 분거가족이 80% 이상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표 II-3).

〈표 II-3〉 분거가족 유형별 비율,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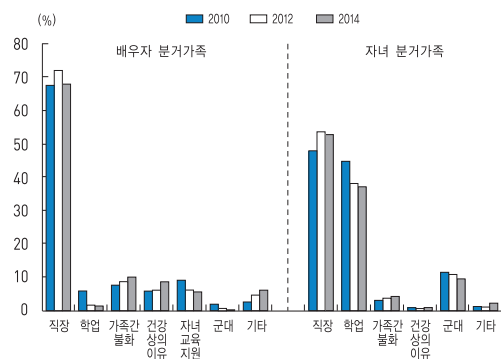
	전체 가구 내 비율			분거가족 내 비율		
	2010	2012	2014	2010	2012	2014
전체	15.1	19.6	18.7			
분거지역						
국내	13.6	17.9	17.1	90.6	91.3	91.1
국외	1.8	2.2	2.1	11.9	11.2	11.0
분거가족원						
배우자	4.4	5.7	5.7	21.1	29.1	30.5
자녀	12.5	16.3	15.3	82.8	83.2	81.8

주: 1) 분거가족 내 비율의 경우 국내 분거와 국외 분거, 배우자 분거와 자녀 분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합이 100%를 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분거 이유를 배우자 분거와 자녀 분거로 나누어 살펴보면, 배우자와 분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때문이다. 전체 분거 가족 중 직장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분거 비율은 2010년 67.5%, 2012년 72.3%, 2014년 68.0%에 이른다. 한편, 가족 간 불화 때문에 배우자와 분거하는 비율은 2010년 7.5%, 2012년 8.7%, 2014년 10.1%로 증가하

였다. 반면,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분거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녀와 분거하는 가장 큰 이유도 직장 때문이다. 전체 분거 가족 중 직장으로 인한 자녀와의 분거 비율은 2010년 47.9%, 2012년 53.5%, 2014년 52.7%에 달한다.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분거도 적지 않은데, 이 비율은 2010년 44.7%, 2012년 38.2%, 2014년 37.2%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녀수의 감소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자녀의 군복무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분거하는 경우도 일정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II-24).

[그림 II-24] 가족구성원과 분거하는 이유,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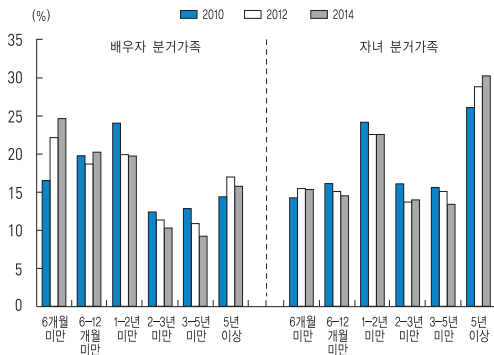
주: 1) 자녀 분거가족의 경우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분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거이유별 응답률의 합이 100%를 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가구주가 배우자와 분거하고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2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분거가 각각 22.1%와 24.6%로 가장 많다. 최근으로 올수록 분거기간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장기 분거도 2010년 14.4%, 2012



년 17.0%, 2014년 15.8%로 적지 않다. 가구주가 자녀와 분거하는 기간은 배우자와 분거하는 기간보다 더 길다. 자녀와의 분거는 5년 이상의 장기 분거가 가장 많은데, 이 비율은 2010년 26.1%, 2012년 28.8%, 2014년 30.3%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그림 II-25).

[그림 II-25] 가족구성원과의 분거기간,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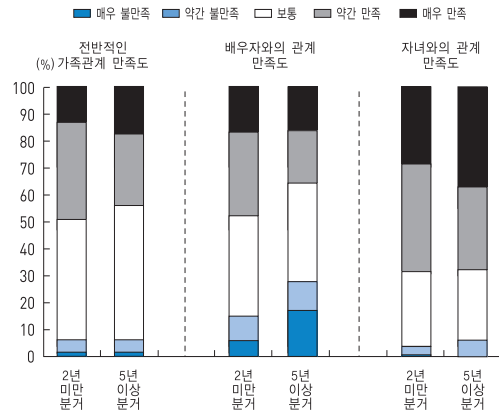


주: 1) 자녀 분거가족의 경우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분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거기간별 응답률의 합이 100%를 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부부가 장기간 분거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있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갖게 되는 동반자 의식이나 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 가구주가 배우자와 5년 이상 떨어져 사는 장기 분거가족과 2년 미만 떨어져 사는 단기 분거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나 자녀관계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배우자관계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난다. 단기 분거가족은 배우자관계에 ‘매우 불만

족’하는 경우가 6.1%에 불과하지만, 장기 분거가족은 그 비율이 17.2%로 더 높다(그림 II-26).

[그림 II-26] 배우자 분거가족 가구주의 분거기간별 가족관계 만족도, 201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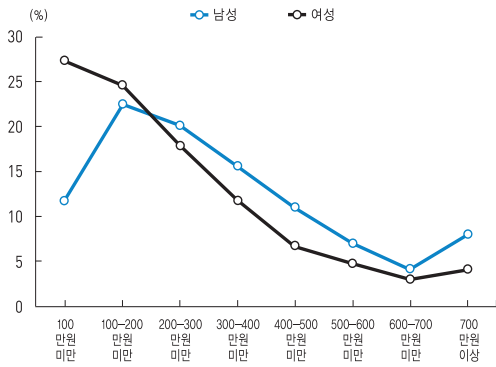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한국 가족은 직장이나 자녀교육, 자녀학업 등의 문제로 분거를 선택하며 분거기간은 배우자와 분거하는 경우 보통 1-2년 이하이고 자녀와 분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보다 더 길다. 이처럼 한국 가족은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상황에 따라 언제든 떨어져 살 수 있다는 도구적, 융통적 사고를 하고 있다(성미애·최여진, 2015).

분거가족 가구주의 성별 차이

분거라는 동일한 경험이나 상황도 남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같은 분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하는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거가족 내 남녀 가구주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그림 II-27] 분거가족 가구주의 성별 가구소득 분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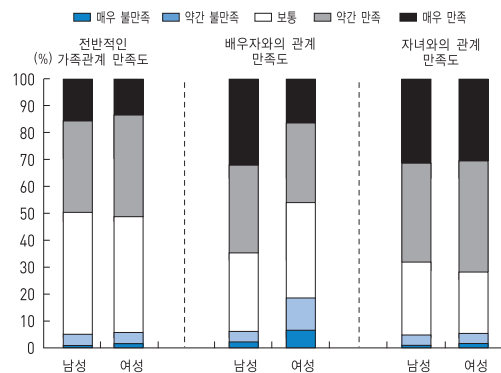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4.

이에 앞서 분거가족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분거가족의 남성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0세이고, 여성 가구주 평균 연령은 53.6세이다. 남녀에 관계없이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절대 다수로 남성의 경우 64.0%, 여성의 경우 74.7%이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성 가구주는 100~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2.5%로 가장 많지만, 여성 가구주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7.3%로 가장 많다. 이 외의 가구소득 분포는 남녀 가구주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그림 II-27).

분거가족을 이루고 있는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 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녀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배우자관계 만족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남성 가구주는 배우자관계에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가 2.4%에 불과하지만 여성 가구주는 이 비율이 6.8%이다. 반면, 배우자관계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남성 가구주가 64.5%에 달하고 여성 가구주는 45.8%에 그친다.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보다 배우자에게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28).

[그림 II-28] 분거가족 가구주의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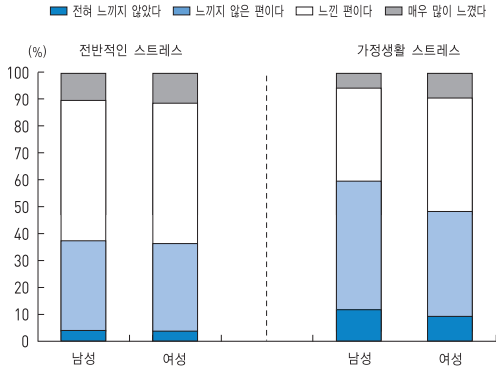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4.

전반적 스트레스나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가구주의 젠더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29] 분거가족 가구주의 성별 스트레스 수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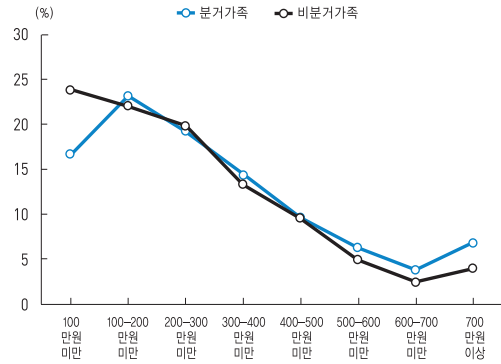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4.

여성 가구주는 51.5%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남성 가구주는 40.4%만이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그림 II-29). 이처럼 동일한 분거 상황에서도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차이가 난다.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에 덜 만족하고 가정생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

분거가족과 비분거가족의 비교

분거가족의 상대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을 비분거가족과 비교하였다. 분거가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3세이고, 비분거가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2.0세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분거가족 가구주와 비분거가족 가구주 각각 고졸 이하가 67.4%와 64.3%로 두 집단 모두

[그림 II-30] 분거가족 및 비분거가족의 가구소득 분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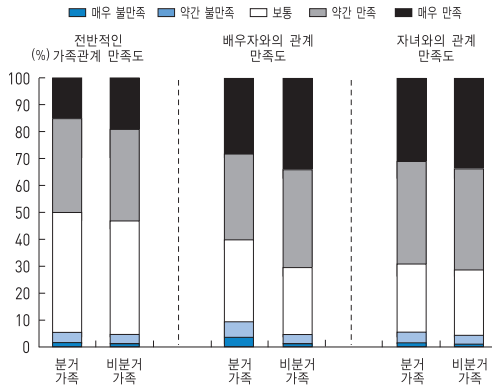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4.

고졸 이하 학력자가 과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수준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분거가족의 경우 100-200만 원 미만이 23.2%로 가장 많으나 비분거가족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이 23.9%로 가장 많다. 이 외의 가구소득 분포는 분거와 비분거라는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II-30).

분거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구주와 비분거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구주는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분거가족 가구주는 전반적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49.9%, 배우자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60.0%,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68.9%이다. 그러나 비분거가족 가구주는 전반적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52.9%, 배우자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70.4%,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71.4%로 분거가족 가구주에 비해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관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31).

[그림 II-31] 분거가족 및 비분거가족 가구주의 가족관계 만족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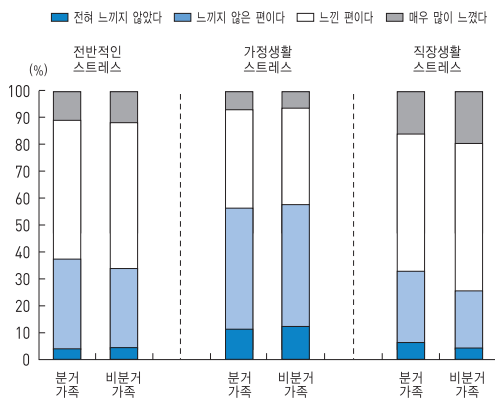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4.

가정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분거가족 가구주와 비분거가족 가구주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분거가족 가구주가 43.9%이고 비분거가족 가구주는 42.4%이다(그림 II-32). 이처럼 분거가족은 비분거가족에 비해 스트레스는 다소 덜 받지만, 가족관계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맺음말

[그림 II-32] 분거가족 및 비분거가족 가구주의 스트레스 수준, 201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4.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되고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의 일환으로 정부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본사가 서울 및 수도권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거가족의 비율은 최소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거 상황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거와 왕래의 반복 속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최정혜, 2004). 따라서 분거가족에 대해서는 개인, 가족, 기업 및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 그리고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분거 상황에 놓인 여성 가구주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주 책임자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

분거가족 가구주가 비분거가족 가구주에 비해 스트레스를 다소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 스트레스나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비분거가족 가구주가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한 역할이 아내만의 역할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역할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녀교육을 개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전략적으로 분거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비분거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만큼,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전을 계획할 때는 근로자의 가족이 분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가족친화 제도나 프로그램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할 때 분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성미애·최여진. 2015. “학령기 자녀와 함께 사는 분거가족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 고찰.” 『가족과 문화』 27(4): 89-111.
- 최정민·박영미. 2012. “미혼 직장여성의 네트워크거주 실태분석.” 『국토연구』 73: 63-82.
- 최정혜. 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49-60.
- 한경혜. 2009.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Ⅲ 건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80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조병희 서울대학교	88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조성현 서울대학교	96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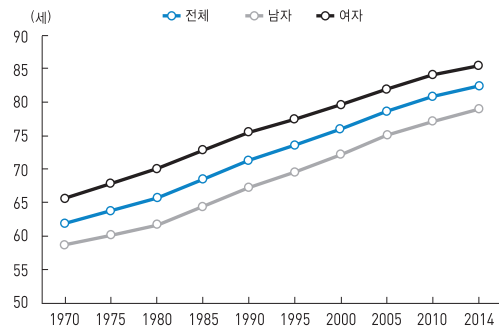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OECD 국가 평균보다 길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은 상승하고 있다.
-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지만, 병원과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가 높고,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체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평균수명이나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지표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음주율이나 흡연율과 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의료 인력과 시설, 의료비 지출 규모 등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건강과 질병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 지표는 평균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평균수명이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능성의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8년 70세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82.4세가 되었다(그림 Ⅲ-1).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80.6세보다 1.8년 더 긴 것이다.

[그림 Ⅲ-1] 평균수명, 1970~2014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평균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1970년에 남자 58.7세, 여자 65.6세로 6.9세 차이가 났고,



이후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5세로 남녀 간 수명 차이가 6.5세로 약간 줄어들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 차이는 2014년 기준 독일 4.9세, 스웨덴 3.8세, 아이슬란드 3.2세, 덴마크 4.1세, 영국 3.7세 등으로 한국보다 적은 편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노년기의 삶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만성퇴행성 질환에 노출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수명은 길어졌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와병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하여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세로 평균수명과 약 9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일본의 경우 평균수명은 84세이고 건강수명은 75세로 약 9세 차이가 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건강수명은 69-72세 수준이고 평균수명과의 차이는 대략 10세이다. 평균수명이나 건강수명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삶의 질 측정에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 좋음 ’ 또는 ‘ 매우

좋음 ’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42.8%, 2010년 36.6%, 2013년 35.1%, 2014년 32.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서 이 비율은 평균 약 70%로 나타나는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한국인이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질병상태의 총괄지표는 유병률이다. 유병률 측정에는 통상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이 사용된다. 지난 10여 년간 2주간 유병률은 20% 내외이고,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표 Ⅲ-1).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이 선진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우인 활동제한율은 2014년 현재 6.8%이다.

〈표 Ⅲ-1〉 2주간 유병률, 2003-2014

	(%)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20.8	19.5	17.5	20.7	24.1	24.6
남자	17.1	16.5	14.9	17.1	21.2	22.1
여자	24.5	22.4	20.0	24.2	26.9	27.1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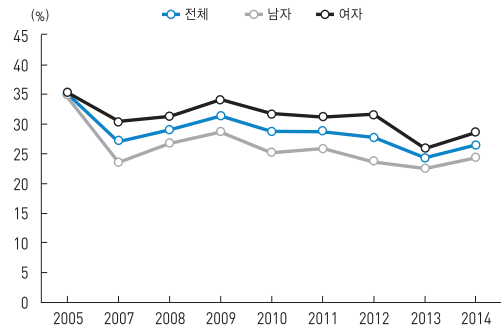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뇨병 유병

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을 의미하는데, 2005년 9.1%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하여 2013년에 11.0%였다가 2014년에는 10.2%로 약간 낮아졌다.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로 2012년 29.0%에서 2013년 27.3%, 2014년 25.5%로 낮아졌다. 30세 이상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3년 기준 OECD 국가들의 20-79세 성인 인구 당뇨병 유병률은 평균 6.8%인데, 한국은 7.5%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암 발생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국립암센터의 「201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수, 즉 암 조발생률은 1999년 214.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445.7명이 되었다. 한 시점에서 인구 대비 암 환자수를 의미하는 암 유병률은 2013년 현재 2.7%이다. 국제적으로 암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307.8명(남자 340.0명, 여자 293.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70.5명(남자 309.6명, 여자 242.5명)보다 높다.

정신건강 지표로 스트레스인지율이 있는데, 이 지표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스트레스인지율은 2005년 35.1%에서 2014년 26.5%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편이다(그림 Ⅲ-2).

[그림 Ⅲ-2] 성별 스트레스인지율, 2005-2014



주: 1) 스트레스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4 국민건강통계」, 2015.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이다. <표 Ⅲ-2>는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보여준다. 총 사망률은 1995년 53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에 500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 527.3명을 기록하였다.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1.22배 높다.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이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0.5명에서 2014년 150.9명으로 증가하였다. 암



〈표 Ⅲ-2〉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4

	1995	2000	2005	2014
전체	532.1	517.9	501.0	527.3
악성신생물(암)	110.5	121.4	133.8	150.9
내분비질환	18.8	24.8	25.5	22.9
순환기질환	138.9	122.7	115.6	113.9
호흡기질환	24.4	33.8	29.2	47.6
소화기질환	39.2	31.2	23.0	22.4
운수사고	38.7	25.3	16.3	11.2
자살	10.8	13.6	24.7	27.3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사망률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등의 순으로 높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3.9명이 되었다.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995년 39.2명에서 2014년 2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사고사의 경우 운수사고 사망이 1995년 38.7명에서 2014년 11.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995년 10.8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27.3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건강행태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 병'이라고 간주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인 흡연율은 2014년 현재 24.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Ⅲ-3). 201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흡연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은 평균 19.3%이고, 한국은 이보다 조금 높은 20.0%이다. 한국은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들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23.9%와 15.2%인데, 한국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36.6%와 4.0%이다. OECD 국가들은 흡연율 자체가 낮고 남녀 간 차이가 작은 반면,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 간 차이가 크다.

성인 음주율은 큰 변화 없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14년 기준 남자 86.2%, 여자 70.6%로 흡연과 달리 음주는 여자들도 하는 경우가 많다(표 Ⅲ-3).

〈표 Ⅲ-3〉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흡연율									
전체	28.8	25.3	27.7	27.2	27.5	27.0	25.8	24.1	24.2
남자	51.6	45.0	47.7	46.9	48.3	47.3	43.7	42.1	43.1
여자	5.7	5.3	7.4	7.1	6.3	6.8	7.9	6.2	5.7
음주율									
전체	78.4	74.8	76.4	77.0	79.0	79.2	77.1	77.0	78.1
남자	86.4	85.0	85.6	86.0	88.1	88.0	85.8	85.9	86.2
여자	70.9	65.1	67.6	68.4	70.4	71.1	69.1	68.7	70.6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4 국민건강통계」, 2015.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음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측정된 고위험음주율

은 2014년 남자 20.7%, 여자 6.6%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음주수준을 측정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9.0ℓ인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9.0ℓ) 수준이다.

비만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31.7%가 되었고, 2014년에는 30.9%를 나타내고 있다(표 Ⅲ-4). 비만율은 남자 37.7%, 여자 23.3%로 남자가 더 높다. 국제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4년 4.3%로 OECD 국가 평균 22.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만 문제는 영양섭취의 과다 또는 불균형과 함께 신체활동의 부족에 기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한 (중증도) 신체활동실천율은 2005년 29.6%, 2010년 22.4%, 2013년 20.5%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표 Ⅲ-4). 그런데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측정한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03년 26.9%, 2006년 28.3%, 2008년 32.1%, 2014년 36.9%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두 조사 결과의 차이는 질문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걷기도 건강증진에 좋은 실천방법이 된다.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간 1회 30분 이상, 주 5회

〈표 Ⅲ-4〉 비만율과 신체활동 및 걷기실천율, 2005-2014

	(%)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만율	31.3	31.7	30.7	31.3	30.9	31.4	32.4	31.8	30.9	
신체활동실천율	29.6	21.1	25.9	26.3	22.4	19.3	17.3	20.5	-	
걷기실천율	60.7	45.7	46.9	46.1	41.1	38.0	39.4	38.0	41.7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m²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 신체활동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3) 걷기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4) 비만율과 각 실천율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은 2005년 60.7%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3년 38.0%까지 낮아졌다가 2014년 41.7%로 높아졌다.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로 구성된다. 의사수와 병상수 등 의료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4년 223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치과의사는 26명에서 56명, 간호사는 341명에서 641명으로 각각 늘어났다(표 Ⅲ-5).

의사 인력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진료에 임하는 활동의사(practic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표 Ⅲ-5〉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4

	2000	2005	2010	2014
전체 의료인	578	711	860	980
의사	154	177	205	223
치과의사	26	32	51	56
간호사	341	444	547	641

주: 1) 의료인수는 면허 의료인수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비교하면, 2014년 현재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3명보다 1명가량 적다.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것은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노동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평균 8.9명인데, 한국은 5.6명에 불과하다. 간호서비스가 부족하면 보호자가 직접 감당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규모로 구분하는데,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이라고 한다. 종합병원은 1995년 266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21개소가 되었다. 같은 시기에 병원은 398개소에서 1,436개소, 의원은 14,343개소에서 30,689개소로 각각 증가하였다(표 Ⅲ-6).

병원수의 증가와 함께 병상수도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2005년 7.9개에서 2014년 13.3개로 증가하였다.

〈표 Ⅲ-6〉 의료기관수, 1995-2014

	1995	2000	2005	2010	2014
종합병원	266	285	290	312	321
병원	398	581	794	1,154	1,436
의원	14,343	19,472	25,412	27,334	30,68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국제적으로 보면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4.7개인데, 한국은 11.7개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의료기술의 향상이나 정부의 의료비 절감 정책 등의 영향으로 병상수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병원들이 병상수가 많아 경쟁력이 생기는 특수한 시장구조 때문에 병상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병상수의 증가는 고가의 고급 의료장비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의료장비 보유율이 높다. 2014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MRI 보유대수는 25.7대로 OECD 국가 평균 14.9대보다 높으며, CT 스캐너의 경우에도 37.1대로 OECD 국가 평균 25.3대보다 높다.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4년 19.7일이 되었다. 국민 1인당 연 2.6일 입원하고 17.1일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당)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4년 기준 한국은 14.9회로 OECD 국가 평균 7.0회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인의 의료이용이 매우 많은 것은 단순히 병이 많아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불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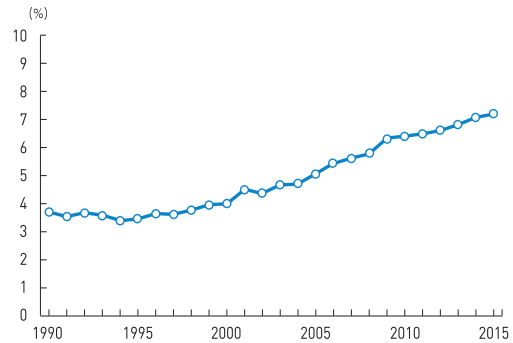
요한 입원율은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하여 만성적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구 10만 명당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자수는 2013년 기준 한국이 310.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42.2명보다 훨씬 많고, 같은 시기 당뇨병 입원자수도 한국이 310.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49.8명보다 두 배나 많다.

예방보건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모든 국민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는 비율은 아직 높은 편이 아니어서 2014년 현재 건강검진 수검률과 암검진 수검률은 각각 56.4%와 44.2%에 그친다.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90년 7.6조 원에서 2006년 55.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 102.9조 원이 되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는 매우 빠른 편이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15년 기준 한국이 7.2%로 OECD 국가 평균 9.0%보다 낮다(그림 Ⅲ-3). 2005-2015년 기간 동안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한국이 6.8%로 OECD 국가 평균 2.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소비 고급화와 의료이용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2015년 현재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1%인데, 건

[그림 Ⅲ-3]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1990-2015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 달한다.

국민의료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재원 염출방식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조세 또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최대화하고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부담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 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은 40.2%에 불과했으나 계속 확대되어 2015년 현재 55.6%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율이 평균 72.9%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아직도 공공부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이는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의사나 병원의 수가 많으면 의료체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는 치료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 만족하



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자궁경부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7.8%로 같은 시기 OECD 국가 평균 66.0%보다 훨씬 높다. 유방암 환자 5년 생존율도 한국이 85.9%로 OECD 국가 평균 84.9%에 비해 높다.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한국이 8.3%로 OECD 국가 평균 8.0%를 약간 상회하지만, 이 수치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의료체계 성과지표의 다른 측면은 의료이용자의 평가 또는 만족도로 측정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6년 45.2%, 2012년 52.9%, 2014년 54.2%로 계속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수준에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에 조사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높은 의료비(44.5%), 긴 대기시간(43.9%), 치료결과 미흡(40.9%), 필요 이상의 진료(30.6%)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난다.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크고, 의사

수가 부족하여 환자의 대기시간도 길며, 의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 세심한 진료나 환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는 행태가 환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2011년 조사에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 중 병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 등 서구 국가들은 자국의 병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0%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65%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서구 국가들은 '전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의 합이 50%에 달하지만 한국은 25%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정착으로 의료접근도가 높아졌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던 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조병희 (서울대학교)

- 감염병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퇴치 수준에 이르렀다가 1990년대 말부터 발생률이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1960년대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감염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홍역,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등은 다시 발생하고 있다.
- 쯔쯔가무시, 뎅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외래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과거처럼 높지는 않지만 감염병 발생만으로도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중세에 유행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천연두, 콜레라, 결핵, 독감 등의 감염병이 대규모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위생 및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의학적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감염병은 거의 박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다. 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의 발생으로 질병 공포감의 확산과 경제활동의 위축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다. 아울러 동물의 질병이기는 하지만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잦은 발생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우려와 인

간 감염에 대한 걱정도 감염병 공포의 확산에 일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55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추이를 개괄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의 특성과 피해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염병의 발생 추이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병원체의 감염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진다. 독감(인플루엔자)은 호흡기로 감염되고,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에이즈는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병원체에 감염되어도 보통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해소되지만, 병원체의 독성이 강할 경우에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전파되기도 한다. 과거에 감염병은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감염병이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즉시 이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는 등 일반 질병과는 다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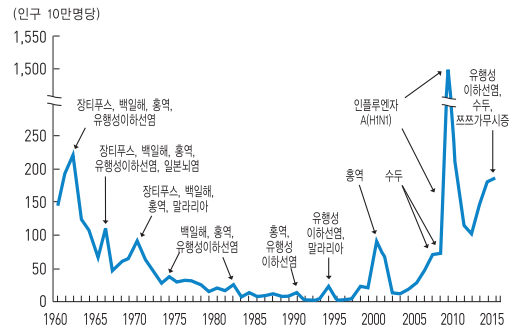


현재 55종의 법정감염병이 있으며, 2015년에 36종의 감염병이 발생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급성감염병 환자는 총 9만 5,495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85.7명이다. 발생 환자수 순으로 감염병 현황을 살펴보면, 수두(4만 6,330명), 결핵(3만 2,181명), 유행성이하선염(2만 3,448명), 쯤쯤가무시증(9,513명), 성홍열(7,002명), B형간염(3,468명), A형간염(1,804명), HIV/AIDS (1,018명), 매독1기(720명), 말라리아(699명), 신증후군출혈열(384명), 덩기(255명), 매독2기(253명), 폐렴구균(228명), 백일해(205명), 메르스(185명), 급성B형간염(155명), 장티푸스(121명), 랩토스피라(104명) 등이다.

감염병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감염병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이후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의 주기적인 유행과 말라리아의 재출현, 각종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과 2001년에 걸친 홍역의 대유행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감염병 발생률은 2001년 이후 홍역 및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적극적인 관리 정책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쯤쯤가무시증과 유행성이하선염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5년 7월 법정 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수두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더욱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 인플루엔자A(H1N1)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국내에서도 감염병 발생률이 약 1,500명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2001년 이후 발생한 주요 급성감염병으로는 홍역, 쯤쯤가무시증,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와 수두, 인플루엔자A(H1N1), 성홍열 등이 있다. 현재 감염병 발생률은 거의 1960년대 수준에 도달해 있다(그림 Ⅲ-4).

[그림 Ⅲ-4] 급성감염병 발생률, 1960~2015



주: 1) 급성감염병 발생건수는 법률에 명시된 79종의 감염병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외한 발생건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 감시연보』, 2016.

감염병의 증가는 전 지구적 현상이며, 그 원인으로서는 교통수단의 발달, 국제적 교류의 증가, 기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정보의 유통이 자유로워지고, 감염병 발생 보고가 체계화된 것도 발생률 상승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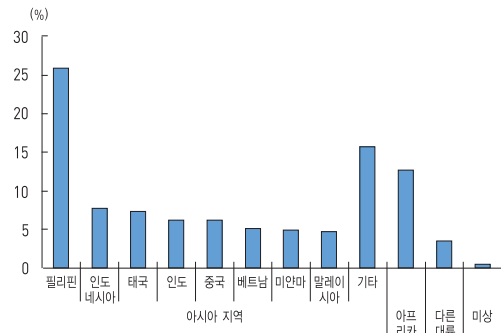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 48명에서 2015년 13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메르스(38명), 폐렴구균(34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1명), 비브리오패혈증(13명), 쯤쯤가무시증(11명), 신증후군출혈열(7명) 등에 의한 사망이 많다. 과거와 달리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사망자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15년 메르

스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6조 3,627억 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감염병의 발생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의료수준과 대응역량으로 사망자는 극소화되고 있다. 다만, 심리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은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1군에서 4군까지로 분류된다. 제1군 감염병은 전통적 수인성 감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인데, 이들 감염병의 발생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이후 매년 10명 이내의 콜레라 감염이 신고 되었으나 대부분 외국에서 감염된 사례들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 국내에서 발생하여 3명이 감염되었다. 반면, 같은 1군 감염병인 A형간염은 집단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제2군 감염병 중 백일해는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증가 추세이고, 수두 역시 신고율 향상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2014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층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홍역은 2014년 국외에서 유입되어 국내로 전파되면서 크게 유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대폭 감소하였다. 모기, 진드기에 의한 곤충매개 질환 등을 포함하는 제3군 감염병 중 말라리아는 2015년에 발생이 다소 증가하였다. 쯔쯔가무시증, 렕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매개체에 의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도 2015년

에 증가하였다. 성홍열은 2013년 진단신고기준 개정으로 의사와 환자가 신고자로 포함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4군감염병은 주로 국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으로 2015년에 신고된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유비저는 모두 해외 여행객을 통해 발생하였다.

[그림 Ⅲ-5] 국외유입 감염병의 유입국가별 구성비율, 2015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 감시연보」, 2016.

국외유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매해 300~400여 명이 보고되었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400명과 491명이 발생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52%), 말라리아(14%), 세균성이질·A형간염(각 5%), 장티푸스(4%) 등이다. 유입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중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약 84%)에 주로 분포하고 적도 기니,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약 13%)에 일부 분포한다(그림 Ⅲ-5).



국내 신종감염병 발생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주로 발일을 하는 농부들이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으로 고열과 두통을 수반한다. 1998년 이후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1년 2,637명까지 증가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 감소하였다가 2004년 4,698명, 2005년 6,780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2008년까지 그 수준이 지속되었다. 2009년 4,995명으로 감소한 후 증가하여 2013년에는 1만 365명까지 늘어났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2015년 9,513명이 발생하였는데, 월별로는 주로 10-12월(9,003명, 94.6%)에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주로 40대 이상(8,842명)에서 발생하였고, 성별로는 여자(5,964명)가 남자(3,549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1,823명), 경남(1,591명), 전북(1,366명),

충남(858명), 경기(813명) 등의 순으로 발생건수가 많았다(그림 Ⅲ-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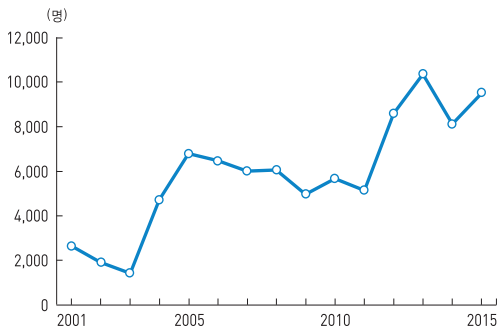
인플루엔자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으로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객담 등의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을 유발한다. 인플루엔자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이 중 A형은 중 간 전염을 유발하며 가장 강력한 인플루엔자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루엔자는 계절성을 보이며 계절에 따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만들어냈다.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약 5,0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이는 H1N1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이 바이러스는 2009년에도 인플루엔자A(신종인플루엔자,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다시 유행하였다. 인플루엔자A는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한 후 미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2009년 70만 6,911명, 2010년 5만 6,850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0년까지 누계로 약 75만여 명이 감염되었고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010년 기준 서울, 경기, 충북 지역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별로는 10대 미만에서 19,297명(33.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성별로는 남자(28,522명)와 여자(28,328명)의 발생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2010년 당시 사망자수를 약 1만 8,000명으로 밝힌 바 있다. 물

[그림 Ⅲ-6] 쯔쯔가무시증 감염자수, 2001-2015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 감시연보」, 2016.

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주된 사인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A는 2016년 현재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 이후 계절인플루엔자(제3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름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칭하였다.

덴기열

덴기열은 덴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감염은 모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덴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이 모기는 보통 아시아, 남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분포한다. WHO에 따르면, 덴기열은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며 세계 인구의 약 40%인 25억 명이 덴기 바이러스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그림 Ⅲ-7). 실제 연간 5,000만 명에서 1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50만여 명은 덴기 출혈열 또는 덴기 쇼크 증후군으로 악화된다.

덴기는 주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발생이 두드러진다. 2015년 겨울 엘니뇨 현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덴기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증가세는 201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령, 태국에서는 2016년 1월부터 7월말까

[그림 Ⅲ-7] 덴기 바이러스 발생지역



주: 1) 2016년 7월 기준임.

출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www.cdc.gov/Dengue/epidemiology/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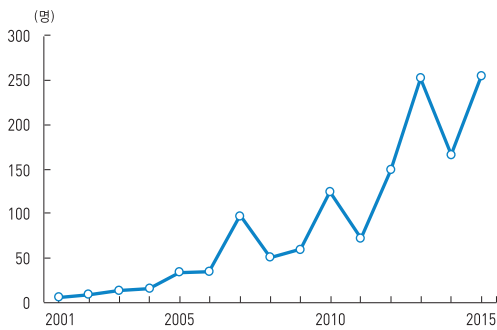
지 2만 5,037건의 감염 사례와 20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필리핀에서는 2016년 8월까지 10만 1,401건의 감염의심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5년보다 16% 증가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과거에는 연간 4,000~5,000명의 덴기열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2016년에는 11월초까지 1만 2,357건이 보고되어 평소보다 약 4배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베트남에서도 2016년 8월까지 6만 3,504건이 보고되었다. 이외에 호주,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각각 수천 건의 덴기열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국에서 덴기열은 2000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2001년 첫 환자가 신고된 후 매년 100명 내외로 발생하다가 2013년에는 252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65명과 25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는 대부분 국외 체류 중 감염되었으며, 감염된 지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로 동남아 지역이다. 신고된 환자는 20~40대가 186명(72.9%)으로 많았고, 남자(161명)가 여자(94명)보다 많았다. 2016년에는 11월 현재

322명이 신고되어 전년 대비 약 30%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그림 Ⅲ-8).

덴기열 백신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어 향후 예방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그런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덴기열을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국내에서 덴기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감염은 증가할 수 있다.

[그림 Ⅲ-8] 덴기열 감염자수, 2001~2015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 감시연보」, 2016.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또는 그 약어인 메르스(MERS)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한다. 주로 기침이나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름대로 대부분의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한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 미국 등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 20일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는 1,78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85명이 사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에서 각각 79%와 87%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185명이 감염되고 그 중 38명이 사망하여 전체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에서 각각 10%와 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3일 자정을 기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도 메르스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메르스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후 입국한 사람에게서 2015년 5월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족과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 확산되었다. 같은 해 7월 4일까지 총 18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첫 확진환자는 국외유입 사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내감염 사례이다. 연령별로는 50대 41명, 70세 이상 37명, 60대 36명, 40대 31명, 30대 26명, 20대 13명, 10대 1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110명, 여자 75명이었다. 사망자들은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였다.

한국은 병문안 문화가 메르스 전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급증할 때 대부분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메르스의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전체 환자의 치사율은 30-4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일부 환자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만 겪고 회복되기도 하였다. 증상이 인플루엔자 감염과 유사하여 실제 메르스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사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인플루엔자와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 자체의 전염력이 낮고 온도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메르스는 각 개인이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에볼라병

에볼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및 출혈성 질환을 의미한다. 콩고와 수단에서 197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등을 호소하다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탈수, 쇼크로 이어진다. 사망률은 연구나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50% 전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현재 과일박쥐(Fruit Bat)로 알려져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사망은 1976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인구가 별로 없는 아프

리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 서아프리카의 도시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기니에서 발생한 이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으로 전파되었다.

2014년 유행 이후 2016년 3월 30일 현재까지 총 발생건수는 5만 7,000여 건, 사망자수는 1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99% 이상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3국에서 발생하였다. WHO는 2016년 1월 14일 라이베리아를 마지막으로 에볼라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후 시에라리온 북부에서 에볼라 양성반응 환자가 나타남에 따라 시에라리온의 공식적인 종료 선언은 3월 17일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니와 라이베리아를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WHO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데에는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국가 간 왕래가 활발했던 점, 불안정한 치안 상태, 그리고 시신에 손을 대는 장례풍습 등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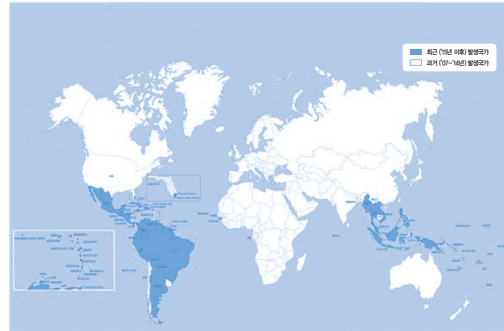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1947년 우간다의 붉은털 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숲모기를 통해 전파된다. 인체감염 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증상 자

체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가벼운 두통이나 발진, 열, 관절통 등이 나타난다. 감염되더라도 5명 중 1명꼴로 증상이 나타난다. 모기 이외에 수혈이나 성관계를 통한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인간 감염이 보고된 이후 2007년까지 발생건수는 14건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5년 브라질에서 환자가 보고된 이후 남미와 중미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2016년 7월까지 감염자는 브라질(6만 6,180명), 콜롬비아(8,682명), 푸에르토리코(4,437명), 베네수엘라(1,632명), 에콰도르(1,082명), 멕시코(927명) 등 주로 남미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총 55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림 Ⅲ-9). 한국에서는 2016년 9월 18일 현재까지 필리핀 등 해외여행객에 의한 13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여러 합병증 중 대표적인 것이 소두증을 포함한 뇌기형 신생아 출산과 길랑바렛 증후군이다. 추가적으로 뇌척수염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80% 정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는다. 감염자의 약 20%만이 발열, 두통, 관절염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만 합병증을 유발하는 비율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

[그림 Ⅲ-9]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역



주: 1) 2016년 10월 28일 기준임.
출처: 질병관리본부(<http://cdc.go.kr/CDC/health/CdcKrHealth0101.jsp?menuIds=HOME001-MNU1132-MNU1147-MNU0746-MNU2423&fid=7956&cid=68928>).

본뇌염이나 뎅기열의 신경학적 합병증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과 말라리아가 많았으나 이제 말라리아 등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 등 새로운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뎅기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이집트숲모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기는 주로 남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 서식한다. 이들 지역에서 뎅기열이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조성현 (서울대학교)

-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지적된 간병문화의 구조적 원인은 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데에 있다.
- 인구 대비 활동 간호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 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간호인력 1인당 간호하는 환자수가 많아 환자 가족과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병원감염 관리와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모든 간호 서비스를 병원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 신규 면허·자격자 간호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크게 향상되고 있지 않다.
-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행정구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간호인력 정책이 필요하다.
- 앞으로 남자 간호사가 증가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인력은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간병문화나 병원감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

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입원환자의 간병부담과 간호인력 배치수준과의 관계,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시행, 간호인력의 수급,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간호인력의 분포, 간호인력의 최근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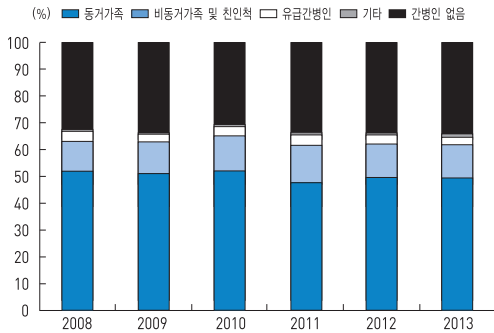
간호인력의 배치수준과 간호서비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병원에 간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 식사와 위생, 화장실 사용 등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국의료패널」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원기간 중 간병한 사람이 있었던 환자는 2008년 67.6%에서 2013년 65.9%로 큰 변화 없이 3명 중 2명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를 간병한 사람은 대부분 환자의 가족과 친인척으로 나타난다(그림 Ⅲ-10).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병문안과 보호자 상주가 병원감염의 확산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한국식 간병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간병문화의 보다 구조적인 원인은 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데에 있다.

[그림 Ⅲ-10] 입원환자의 간병인별 구성비율, 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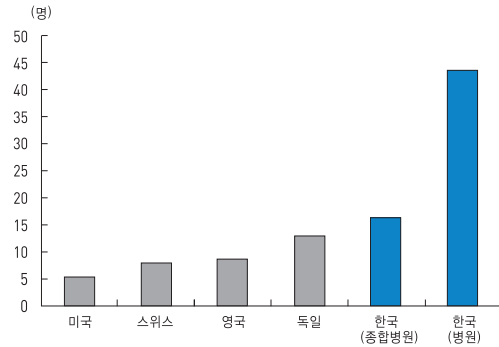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한국의료패널 기초 분석보고서(Ⅰ)」, 2015.

[그림 Ⅲ-11]에서와 같이 근무조별(3교대 근무 시 낮번, 초번, 밤번)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미국 5.3명, 스위스 7.9명, 영국 8.6명, 독일 13.0명 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에게 제공받는 간호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1명이 간호하는 환자수가 많아지면 간호사는 과도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 때문에 환자상태 확인이나 약물투여, 검사와 수술준비, 환자기록 등의 필수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간호인력이 제공하지 못하는 간호서비스를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그림 Ⅲ-11] 주요 국가의 근무조 기준 간호사 1인당 간호 환자수, 2013



주: 1) 한국은 2013년 자료이고, 유럽 국가들은 2009-2010년 자료이며, 미국은 2006-2007년 자료임.
출처: 조성현 등, 2016.
Aiken et al., 2012.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의 상주여부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간호서비스는 병원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것이 입원서비스의 보편적 원칙이다.

낮은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환자와 간호인력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간호사 배치수준이 낮을수록 환자에게 낙상과 감염 등의 위해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낮은 간호사 배치수준은 간호사의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업무량은 간호사의 이직을 증가시켜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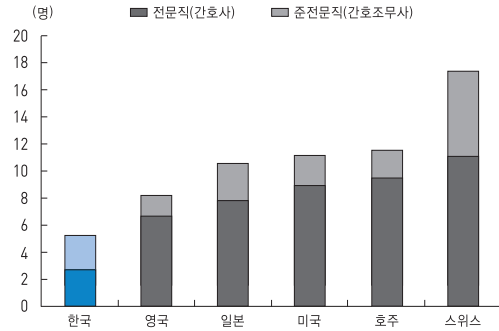
한국의 낮은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은 5.2명으로 OECD 34개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 반면 인구 대비 병상수는 2위, MRI수와 CT수는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가 인력보다는 시설과 장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practicing) 간호인력은 면허·자격 소지자 중에서 실제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말한다. 면허·자격을 소지했으나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활동 간호인력에서 제외된다. OECD에서는 간호인력을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s)와 준전문직 간호사(associate professional nurses)로 구분한다. 한국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전문직 간호사와 준전문직 간호사로 OECD에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은 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1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인구 대비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스위스 17.4명과 비교하면 약 1/3 수준이다. 그 중 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스위스의 11.0명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Ⅲ-12).

입원환자의 간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공동간병인제도 등이 시도되었으며, 2013년에는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 신설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보호자 등이 병원에 상

[그림 Ⅲ-12]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수, 2013



주: 1) 일본은 2012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주하지 않고 병원인력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환자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병원감염관리 강화와 간병문화 개선,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7개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12개당 1명 이상, 병원의 경우 병상 14개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병상 40개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앞으로 환자 낙상(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이나 욕창, 병원감염 등 위해사건 발생률과 환자 경험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인력의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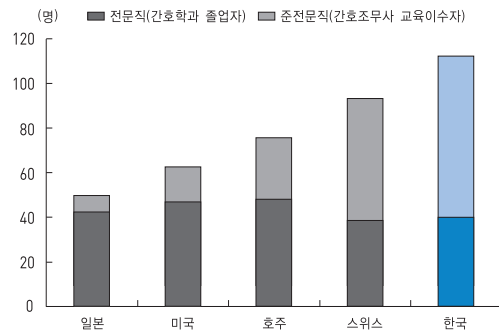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간호인력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중의 하나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교육과정(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학원의 간호조무사 고습과정 등)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간호인력은 신규 면허 및 자격 시험을 통해 매년 배출된다. 최근 연구(오영호, 2014)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은 2012년 생산성(간호사 1일 환자 간호량)을 유지할 경우 2015년부터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확대될 경우 간호사 수요가 증가하나 사업 확대 속도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면허자를 고려했을 때 급속한 간호사 공급부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간호인력 공급 확대는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간호졸업자수는 1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전문직 간호졸업자(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간호학과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0명으로 스위스 등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그림 Ⅲ-12]에

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인구 대비 활동 간호사 수는 스위스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인구 대비 간호학과 졸업자수는 매우 많다. 준전문직 간호졸업자(associate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간호조무사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한국은 특히 인구 대비 활동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스위스보다도 간호졸업자가 많다(그림 Ⅲ-13).

[그림 Ⅲ-13]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간호 졸업자수,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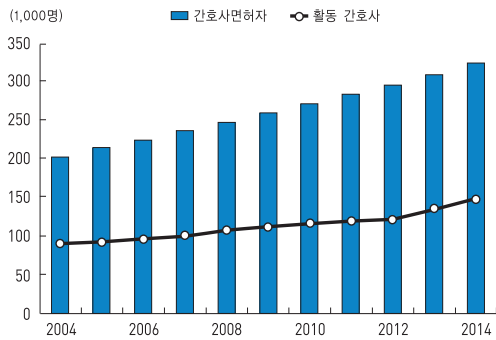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간호사 면허자는 2004년 20만 2,012명에서 2014년 32만 3,04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59.9% 증가하였다. 간호사 면허자의 증가는 매년 배출되는 신규 면허자 때문이다. 그 동안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으로 인해 매년 신규 면허자는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만 1,333명, 2014년 1만 5,458명, 2016년 1만 7,505명이 배출되었으며, 앞으로는 약 2만 명의 신규 간호사가 매년 배출될 것으

로 예상된다. 간호사 면허자 중 실제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활동 간호사(practicing nurses)는 2004년 8만 9,607명에서 2014년 14만 7,210명으로 64.3%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활동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4.4%에서 2014년 45.6%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40%대에 머물러 있다(그림 Ⅲ-14).

[그림 Ⅲ-14] 간호사 면허자수와 활동 간호사수, 200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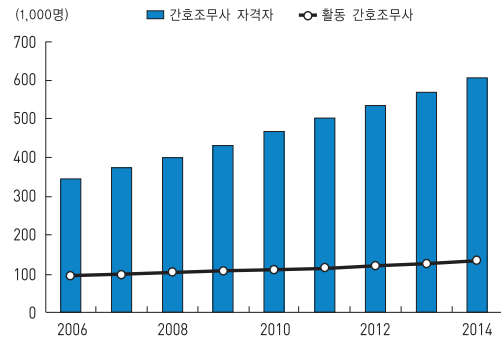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활동 간호사의 비중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때문이다. 특히, 신입 간호사의 이직률은 더 심각하다. 병원간호사회가 2015년에 실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신입 간호사 1만 3,779명 중 33.5%가 2014년 12월 기준으로 병원을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려면 이직의 주요 원인인 근무조건, 특히 낮은 배치수준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개선하는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 자격자는 2006년 34만 8,343명에서 2014년 60만 7,589명으로 지난 8년 동안 약 74.4% 증가하였다. 그러나 활동 간호조무사는 같은 기간 9만 6,424명에서 13만 5,636명으로 약 4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활동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7.7%에서 2014년 22.3%로 감소하였다(그림 Ⅲ-15).

[그림 Ⅲ-15] 간호조무사 자격자수와 활동 간호조무사수, 200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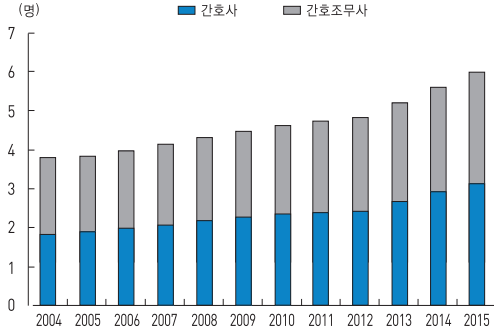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간호인력 공급 확대에 비해 인구 대비 간호인력 수준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의 공급 확대가 가시적인 간호인력 배치수준의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은 2004년 3.8명에서 2015년 6.0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1.8명에서 3.1명으로, 간호조무사는 2.0명에서 2.9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그림 Ⅲ-16).



[그림 Ⅲ-16]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수, 2004-2015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표 Ⅲ-7〉 간호인력의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2015

	기관수	구성비율(%)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급종합병원	43	24.4	1.7
종합병원	294	31.5	5.3
병원	1,496	18.1	10.8
요양병원	1,372	11.8	16.0
치과병원, 한방병원	473	1.0	1.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9,710	9.9	63.0
조산원	31	0.0	0.0
보건소	243	1.7	0.7
보건지소	1,313	0.4	1.2
보건진료소	1,906	1.2	0.0
보건의료원	15	0.1	0.1

주: 1) 구성비율에서 0.0%는 0.1% 미만인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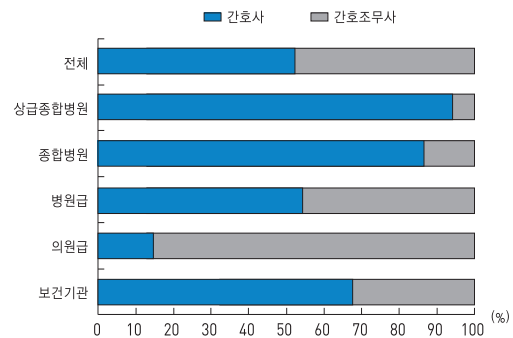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

간호인력의 분포

〈표 Ⅲ-7〉은 2015년 현재 활동 간호사 15만 8,247명과 활동 간호조무사 14만 4,886명의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보여준다. 간호사가 많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31.5%), 상급종합병원(24.4%), 병원(18.1%) 등의 순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하는데, 기관수는 43개에 불과하나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약 1/4에 해당한다. 간호조무사는 대부분 의원급(63.0%)이나 요양병원(16.0%)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이다. 간호사의 비중은 환자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94.1%와 86.5%로 높고 의원급에서는

[그림 Ⅲ-17] 보건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구성, 2015



주: 1)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3)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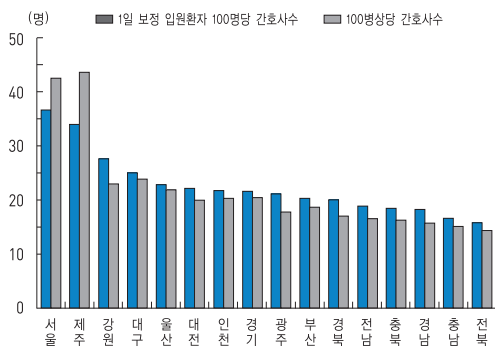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

14.7%로 매우 낮다(그림 Ⅲ-17).

간호인력의 지역별 분포는 해당 지역 인구 대비 간호인력수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환자의 지역 간 이동(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을 고려하여

지역별 의료이용과 병상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Ⅲ-18]은 행정구역별 1일 보정 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와 100병상당 간호사수를 제시한 것이다. 1일 보정 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는 서울(36.6명)과 제주(34.1명), 강원(27.7명), 대구(25.0명) 순으로 많고, 전북(15.8명)과 충남(16.6명)이 가장 적다. 100병상당 간호사수는 제주(43.6명)와 서울(42.5명)이 가장 많고, 전북(14.4명)과 충남(15.0명)이 가장 적다.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배치수준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 확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금수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Ⅲ-18] 의료기관 소재지별 입원환자 및 병상당 간호사수, 2015



주: 1) 1일 보정 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간호사수÷(연간 입원환자 진료일수+연간 외래환자 진료일수÷12)÷365]×100.

2) 100병상당 간호사수=(간호사수÷병상수)×100.

3)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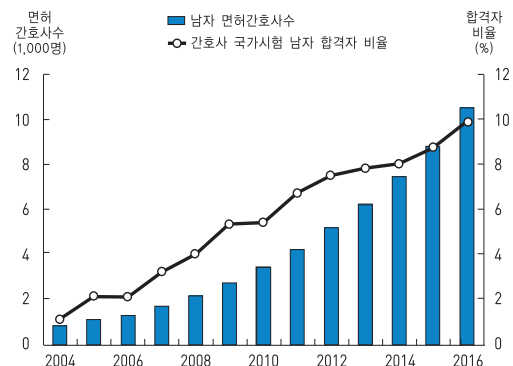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2016.

간호인력의 최근 변화

남자 간호사는 1962년 처음 배출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 829명에서 2016년 1만 542명까지 늘어났다. 남자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남자 합격자는 2004년 12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부터 1,000명을 넘어 2016년에는 1,733명에 달하였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1%에서 2016년 9.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남자 간호사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남자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2.3%로 여전히 낮다(그림 Ⅲ-19).

간호사의 양적 팽창과 함께 간호사의 진출 분야도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보험회사, 교육기관, 연구소, 정부부처

[그림 Ⅲ-19] 남자 면허간호사수와 간호사 국가시험 남자 합격자 비율, 2004-2016



출처: 대한간호협회,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1만명 돌파」, 「간호사신문」, 2016. 2.18.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는 부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간호사가 주로 근무하던 병동과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에서 보험심사, 임상시험, 질관리(quality improvement), 감염관리, 국제진료, 고객지원 등의 부서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진료과별 전담간호사나 상 처·장루·실금, 장기이식, 환자교육 등 특수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4개 영역(마취, 보건, 가정, 정신)의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요건(해당 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간호사 실무경력, 2년 이상의 대학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자격

〈표 Ⅲ-8〉 전문간호사 분야별 자격자수, 2014

(명)			
분야	자격자수	분야	자격자수
마취	606	응급	248
보건	2,014	중환자	559
가정	6,379	호스피스	416
정신	463	종양	611
감염관리	262	아동	61
노인	1,877	임상	173
산업	125		

출처: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

시험 합격)이 명시화되었다. 전문간호사 영역도 4개 분야에서 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을 포함한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가정간호와 노인간호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표 Ⅲ-8).

참고문헌

- 오영호. 2014.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2015-203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조성현·이지윤·전경자·홍경진·김윤미. 2016.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2(3): 209-219.
- Aiken et al., 2012. “Patient safety, satisfaction, and quality of hospital care: cross sectional surveys of nurses and patients in 12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MJ* 344(e1717).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Educ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V 교육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106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김경근 고려대학교	116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4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8년에 83.8%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그 뒤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70.8%까지 낮아졌다.
- 최근 학위 취득과 무관한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직업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었지만, 중학교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 PISA 수학 성취도 분포에 따르면 학생들 간의 성취도 격차가 시간이 흐름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교육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은 많은 사람들을 무지와 문맹에서 해방시켰고 그들이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연대 이후에 교육은 광범한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로서 기능하는 한편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교육 영역에서 목도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의 실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

고자 한다. 교육기회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로 취학률과 진학률의 추이를 분석하고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평생학습 참여 실태도 파악한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수준과 PISA 수학 성취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에서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다.

교육기회

교육기회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지표는 취학률과 진학률인데, 최근에는 사교육 참여율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평생고용의 필요성이 점증하면서 평생학습 기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율을 중심으로 교육기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취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실제로 해당 교육단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림 IV-1]에는 1980년 이후 각 교육단계별 취학률이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97.7%로 완전 취학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후 1990년에는 일시적으로 100%를 상회하기도 했다. 취학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2014년에 96.4%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2015년에는 98.5%로 상승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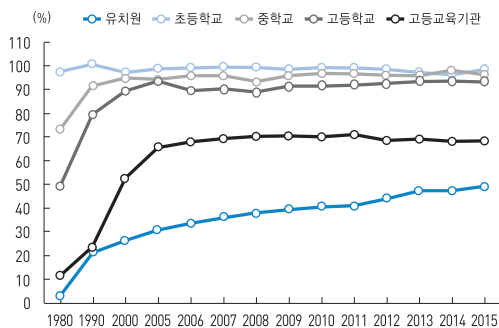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73.3%였지만 1980년대에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서 1990년에는 91.6%를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취학률이 미미하나마 꾸준히 상승한 결과, 2010년에는 97.0%까지 높아졌다. 2015년 현재 중학교 취학률은 96.3%로 보고된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취학률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1990년에는 79.4%를 기록했고, 그 후로도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져 2015년 현재 93.5%까지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에는 1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1년에 실시된 졸업정원제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1990년에는 취학률이 23.6%로 크게 상승한다. 여기에 더해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000년에는 취학률이 52.5%까지 높아진다. 그 후로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71.0%에 도달했다가 최근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8.1%이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에 2.8%로 매우 낮았지만 1990년에는 21.3%까지 높아졌고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현재 49.4%에 도달해 있다. 미취학 아동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다고 해서 많은

[그림 IV-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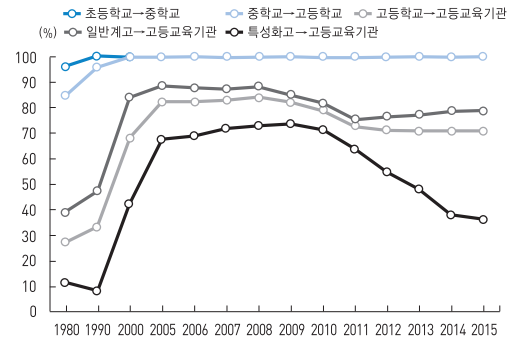


- 주: 1) 취학률 = (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 ÷ 취학 적령 인구) × 100.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임.
 3) 취학적령인구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4) 199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 또는 이후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임.
 5)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아동들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OECD 통계는 한국의 만 3-4세 아동 취학률이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학률과 함께 국민의 교육기회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진학률을 들 수 있다. 진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IV-2]에는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80년에 이미 95.8%에 달했고, 2000년 이후에는 줄곧 99.9%를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80년 84.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이후에는 99.6-99.8%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한편 1980년 27.2%에 불과했던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속히 높아져 2000년에는 68.0%에 이르렀다. 이후로도 상승세를 지속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8년 83.8%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져 2015년 현재 70.8%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특히 하락 폭이 컸는데, 이는 진학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한 것에 기인한다. 2011년 이전에는 매년 2월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5



- 주: 1) 진학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 연도 졸업자) × 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5)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6)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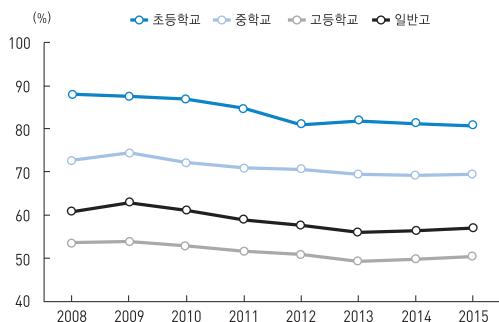
최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추세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 성향이 달라지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15년 현재 78.9%로 회복하였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 현재 36.1%까지 떨어졌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지난 6년간 절반 수준으로 격감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하던 행태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교육결과가 사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나 활용 양상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회 영역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교육 참여율이 자주 거론된다.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가정의 경제적 자원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의 주범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림 IV-3]에는 연도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완만하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7%로 가장 높고 이어 중학생(69.4%)과 고등학생(50.2%)의 순으로 높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56.8%)이 전체 고등학생 대비 6.6%p 높은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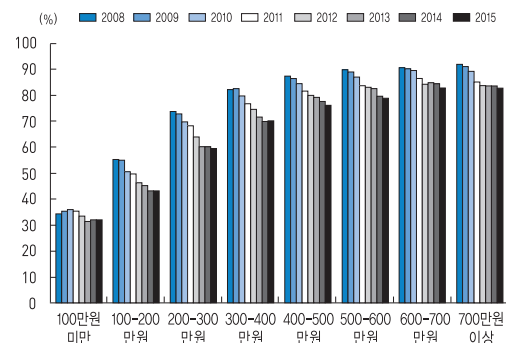
[그림 IV-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5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해당 학교급별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앞서 밝혔듯이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바, [그림 IV-4]는 이와 관련된 실태를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확연하게 다르다. 이 같은 소득 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300만 원 이상인 집단들 사이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V-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8-2015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모든 소득계층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교육 참여율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가구소득 100-200만 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 55.3%에서 2015년 43.1%로 7년 사이에 12.2%p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가구소득 200-300만 원 미만 집단

의 사교육 참여율은 14.3%p로 더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가구소득 600~700만 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7.8%p만 하락하였고, 700만 원 이상 집단도 9.0%p 하락에 그쳤다.

이 같은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사교육 참여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회 측면에서 그에 따른 영향을 저소득층이 훨씬 더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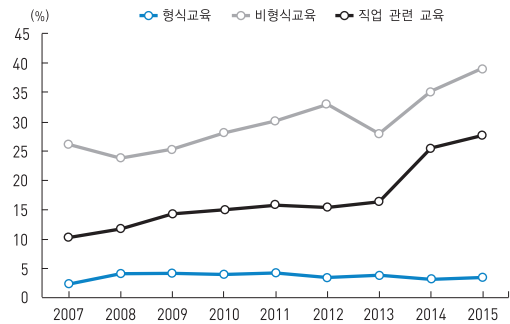
[그림 IV-5]는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여준다. ‘100세 시대’의 도래,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 및 고용안정성의 저하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실정이다. 평생학습은 크게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에 해당한다.

평생학습 가운데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교육 참여는 절대 수준 자체가 낮고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형식교육 참여율은 2008년 4.1%였지만 2015년에는 3.5%에 불과하다. 정규교육을 통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형식교육 참여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력이나 학위 인증과 무관한 비형식

교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참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08년 23.9%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9.1%까지 높아졌다. 비형식교육 참여율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직업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이다.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2008년 11.7%에서 2015년 27.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IV-5]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15



- 주: 1)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64세 이상 성인인구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2) 형식교육은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임.
 3)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4)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 중 취·창업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 외국어 학습 및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의 지표들은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대별된다. 학생수준의 대표



적 지표로는 학습시간, 학교만족도, 교육내용만족도, 교육방법만족도 등이 있고, 학교수준의 지표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급별 학생들의 교육내용만족도와 교육방법만족도, 학급당 학생수를 중심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6]에는 학교급별 교육내용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육내용만족도가 낮은 편인데,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외에 과도한 성적경쟁이나 학습부담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질 자체가 매우 열악한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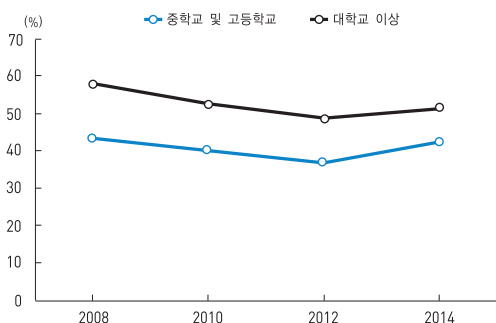
한편 중·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생 사이에

는 교육내용만족도의 차이가 뚜렷이 존재한다.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학·대학원생의 교육내용만족도가 일관되게 높다. 대학과 달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학·대학원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들 사이의 교육내용만족도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2008년에는 중·고등학생 43.6%, 대학·대학원생 57.8%로 이들 간 교육내용만족도 차이가 14.2%p였으나, 2014년에는 중·고등학생 42.3%, 대학·대학원생 51.1%로 그 차이가 8.8%p로 감소하였다. 중·고등학생의 만족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대학·대학원생의 만족도가 가시적으로 낮아져 두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그림 IV-7]은 학교급별 교육방법만족도를 보여준다. 교육방법만족도는 교사나 교수의 수업과 평가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육내용만족도에 비해 교육방법만족도는 개별 교사나 교수 차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내용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방법만족도 역시 모든 학교급에서 낮은 가운데 특히 중·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대학원

[그림 IV-6] 학교급별 교육내용만족도, 2008-2014



주: 1) 교육내용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5세 이상) 중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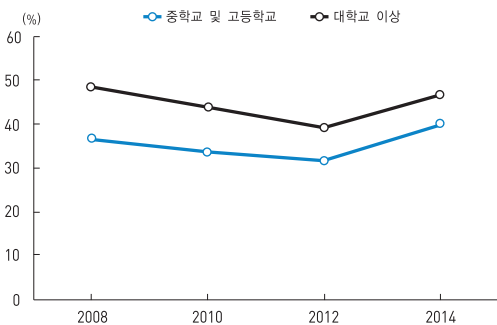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생의 만족도는 40%를 넘지만 중·고등학생의 만족도는 40% 미만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생 모두 2008년 이후 교육방법만족도가 계속 하락하다가 2014년에 상당한 수준의 반등을 보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생 사이의 교육방법만족도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생이 각각 36.6%와 48.4%로 그 차이가 11.8%p였는데, 2014년에는 중·고등학생 39.8%와 대학·대학원생 46.4%로 이들 간 차이가 6.6%p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 대비 2014년에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방법만족도가 향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 관련 학교수준

[그림 IV-7] 학교급별 교육방법만족도, 2008-2014



주: 1) 교육방법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5세 이상) 중 학교의 교육방법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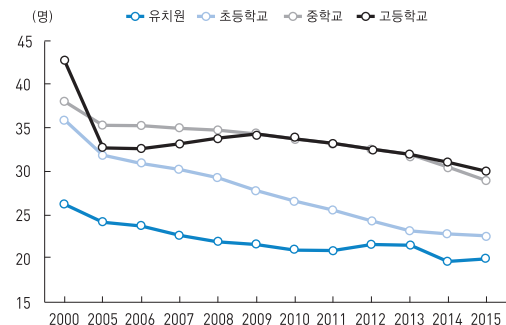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학급당 학생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업의 질 및 교육환경의 쾌적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교육 강국으로 지칭되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IV-8]은 교육단계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급당 학생수는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세가 상당히 완만한 편인데, 2015년에 처음으로 30명대 이하인 28.9명에 다다랐다. 고등학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오히려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야 감소세에 접어들어 2015년에 30.0명이 되었다. 유치원은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안정적이는데, 2010년 이후 19.7-21.6명 수준을 유

[그림 IV-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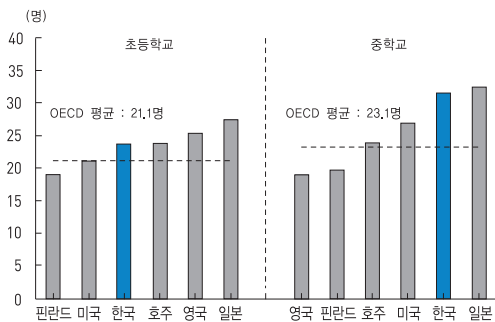
주: 1) 학급당 학생수=재적학생수÷학급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는 20.0명이다.

[그림 IV-9]에는 2014년 현재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학급당 학생수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많은 편은 아니다. 한국(23.6명)보다 영국(25.3명)이나 일본(27.4명)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중학교의 상황은 초등학교와 다르다. 한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1.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1명을 크게 상회하며,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가 중학교에까지 미친다면 점차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국제적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9] OECD 주요 국가의 학급당 학생수, 2014



주: 1) 학급당 학생수=재적학생수÷학급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6, 2016.

교육효과

교육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지적, 정의적 발달수준을 살펴보는 방식

이 있는가 하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보상을 분석하는 방식도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수준과 관련이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과 PISA 수학 성취도의 점수 분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중심으로 교육효과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표 IV-1〉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학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육격차도 확대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2012년까지 하락세였다가 2013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낸 후 2015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같은 양상은 지역규모별로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읍면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의 도농간 학력격차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의 차이가 2010년 0.7%p에서 2013년 0.3%p로 줄었다가 2015년에는 0.7%p로 커졌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3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2013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계속 상승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2015년에 이 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고등학교에서의 도농 간 학력격차는 2010년 1.4%p에서 2012년 0.2%p까지 감소한 후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IV-1〉 지역규모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2010~2015

(%)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대도시	읍면지역	전체	대도시	읍면지역
2010	4.4	4.2	4.9	4.0	3.9	5.3
2011	2.2	2.1	2.6	3.3	3.1	4.1
2012	2.2	2.0	2.4	3.0	2.8	3.0
2013	3.3	3.0	3.3	3.4	3.2	3.4
2014	3.7	3.5	3.9	4.2	4.0	4.4
2015	3.5	3.3	4.0	4.2	4.1	4.3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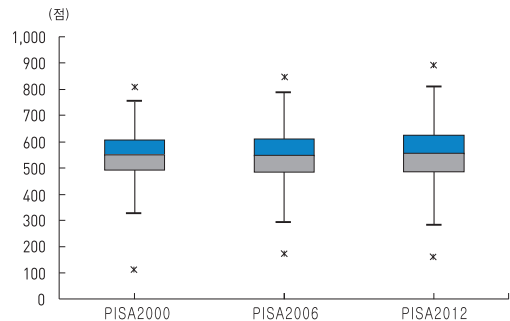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3, 2015.

다음으로 [그림 IV-10]은 박스플롯을 통해 한국 학생들의 PISA 수학 성취도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평균적으로 높더라도 성취도 분포

의 퍼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 이는 교육결과와 평등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취도의 절대 수준과는 별개로 그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취도의 분포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분편차를 구해 그 추이를 분석하면 된다. 사분편차는 어떤 분포의 3사분위 값과 1사분위 값 간 차이의 1/2을 가리키는데, 표준편차에 비해 극단적인 관측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클수록 분포의 산포도도 크다. 한국 학생들의 PISA 수학 성취도 사분편차는 2000년 112.4, 2006년 127.0, 2012년 138.1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PISA 수학

[그림 IV-10] PISA 수학 성취도 분포, 2000~2012



- 주: 1) PISA 점수는 평균이 500점이며,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점수임.
 2) 상자의 하단 및 상단은 각각 1사분위 점수 및 3사분위 점수에 해당하며, 상자 내부의 경계선은 2사분위 점수(즉 중앙값)를 나타냄.
 3) 수염의 양쪽 끝은 각각 이상치(outliers)를 제외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냄.
 4) 별(*) 표시는 각각 이상치(outliers)를 포함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냄.

출처: OECD, PISA dataset, 2000, 2006, 2012.



성취도 표준편차 역시 각각 84.3, 92.6, 99.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에서 학생들 간의 성취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표 IV-2>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취업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금씩 높아졌지만 2013년부터는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녀 간 취업률 차이는 대체로 6%p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취업률 추이를 고등교육기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 상황이 가장 양호해서 매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각각 2012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0~2014 (%)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전체				
2010	55.0	55.6	51.9	70.7
2011	58.6	60.7	54.5	72.1
2012	59.5	60.8	56.2	69.7
2013	59.3	61.2	55.6	68.9
2014	58.6	61.4	54.8	67.2
남성				
2010	58.3	56.0	55.7	78.9
2011	62.2	61.0	58.7	80.6
2012	62.8	61.5	60.1	77.0
2013	62.7	61.5	59.7	76.8
2014	61.6	61.4	58.6	74.6
여성				
2010	51.9	55.2	47.9	58.3
2011	55.1	60.4	50.0	59.4
2012	56.2	60.3	52.1	59.2
2013	56.1	61.0	51.3	58.5
2014	55.8	61.4	51.1	57.4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제외인정자)}]×100.

2) 조사시점 기준일은 해당연도 6월 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김경근 (고려대학교)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동일한 교육수준이라면 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 교육수준은 가족관계, 일자리, 소비생활, 여가생활 등 삶의 주요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대체로 대졸 이상 집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교육수준이 동일할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자리나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거의 사라졌다.
-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 같은 경향은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국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대표적인 국가로 일컬어진다. 물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된 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졌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웰빙에 의해 측정된다. 그런데 한국은 객관적 생활조건은 크게 개선된 반면 주관적 웰빙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주관적 웰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교육수준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나 기술은 노동시장에

서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을 주고, 이는 다시 풍족한 소비생활이나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투자하며, 배우자 선택이나 교우관계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넓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교육수준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보다는 교육수준과 연계된 삶의 여러 측면들, 즉 소득수준, 소비생활, 여가생활, 일자리, 건강 등이 주관적 웰빙에 더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교육수준과 주관적 웰빙 간의 연관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관적 지표인데, 이는 응답자들이 전반적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측정한다. 여기에서는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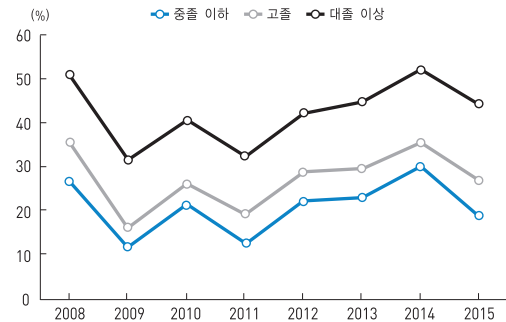
저 교육수준과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관계가 성,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가족관계, 일자리, 소비생활, 여가생활 등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차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특성과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

[그림 IV-11]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졸 이상 집단의 만족도가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집단보다 훨씬 높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자신의 전반적 생활에 '매우' 또는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중졸 이하 집단이 18.9%, 고졸 집단이 27.0%, 대졸 이상 집단이 44.3%이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은 비교 성향이 강하고 상향 비교에 익숙한 한국인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양상은 교육수준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학력집단에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만족도가 급락하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

[그림 IV-11]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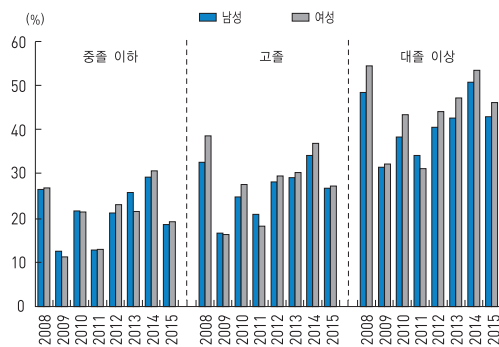
주: 1)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2013년도부터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문항이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변경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상승세는 2011년의 예외를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지다가 2015년에 다시 하락한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2015년에 다시 꺾인 것은 이 시기에 수저계급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실과 연관은 없는지 생각하게 한다. 갈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립이 난망하다는 절망감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도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비율이 2013년 39.9%에서 2015년 31.0%로 8.9%p나 급락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IV-12]는 교육수준이 동일하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대해 더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을 더 만족스럽게 여기는 경향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두드러진다.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2011년(남성 34.1%, 여성 31.1%)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남녀 간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V-12] 성 및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8-2015



주: 1)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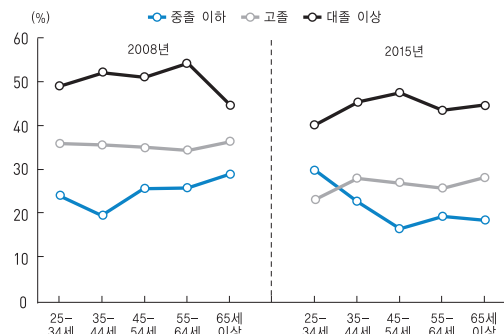
2) 2013년도부터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문항이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변경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V-13]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수준 및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35% 전후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대졸 이

상 및 중졸 이하 집단은 연령대에 따라 만족도가 상당히 다르다. 구체적으로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55-64세 연령층이 54.3%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 연령층이 44.9%로 가장 낮다. 이와 달리 중졸 이하인 집단에서는 65세 이상 연령층(29.1%)이 가장 높고, 35-44세 연령층(19.9%)이 가장 낮다.

2015년에는 일부 연령대에서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삶에 더 만족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구체적으로 25-34세 연령대에서 중졸 이하 학력자의 만족도는 30.0%인데 고졸 학력자의 만족도는 23.4%이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만족도와 학력이 비례한다. 특히 45-54세 연령대에서는 중졸 이하 학력자의 만족도가 16.8%, 대졸 이상 학력자의 만족도가

[그림 IV-13]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8, 2015



주: 1)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2013년도부터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문항이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변경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47.7%로 두 집단 간 만족도 격차가 30.9%p까지 벌어진다. 노년층 내 학력별 만족도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벌어졌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65세 이상 연령대의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 차이는 확연하게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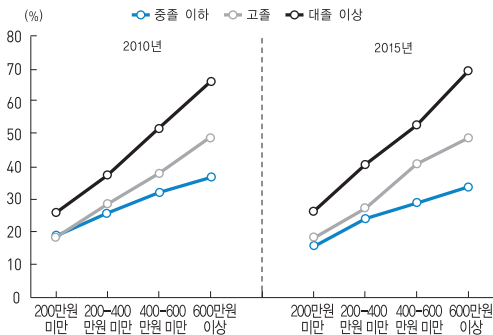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IV-14]는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다.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강화된다. 그래서 학력집단 간 만족도 차이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작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600만 원 이상

만 원 이상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과 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는 2010년과 2015년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에서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삶의 만족도 차이는 2010년 29.0%p에서 2015년 35.2%p로 증가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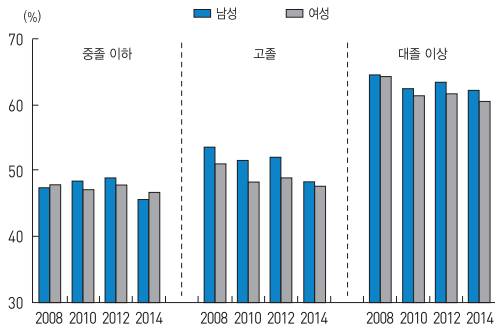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삶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겠다. [그림 IV-15]에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남녀의 교육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졸 이상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고졸 이하 집단보다 높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시기에 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 남녀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가 60%를 상회했다. 반면 고졸 집단의 경우 2008년에는 남녀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가 50%대 초반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향세로 접어들어 2014년 현재는 48% 전후에 있다. 기본적으로 고졸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지만 고졸 집단의 만족도가 하향세를 그리면서 양자 간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최근 들어 대졸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 간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는 확대되고 있다.

[그림 IV-14]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2015



주: 1)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2013년도부터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문항이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변경됨.
3)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V-15] 성 및 교육수준별 가족관계 만족도, 2008-2014



주: 1)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졸 집단을 제외하고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성의 남녀 간 차이는 대체로 미미했다. 다만, 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집단에서는 모든 시기에 걸쳐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의 성별 우위가 시점에 따라 뒤바뀌는 양상을 나타낸다.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남녀 간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가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 엿보이지만, 고졸 집단에서는 반대로 남녀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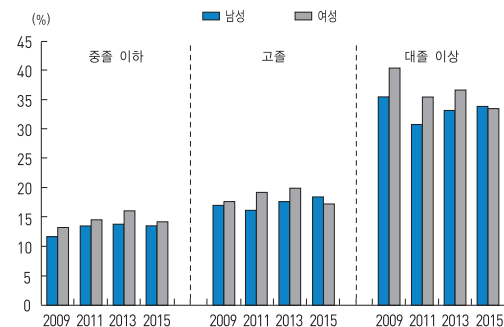
일자리 만족도

교육수준은 선택할 수 있는 일자의 종류와 쾌적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이 높다. [그림 IV-16]은 실제로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일자리에 훨씬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수준별 일자리 만족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대졸 이상 집단은 일자리 만족도가 하락한 반면에 고졸 집단이나 중졸 이하 집단은 일자리 만족도가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IV-16]에서 목도되는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일자리 만족도의 남녀 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모든 학력집단에서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가 하향세를 그리다가 2015년에는 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집단에서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IV-16] 성 및 교육수준별 일자리 만족도, 2009-2015



주: 1) 일자리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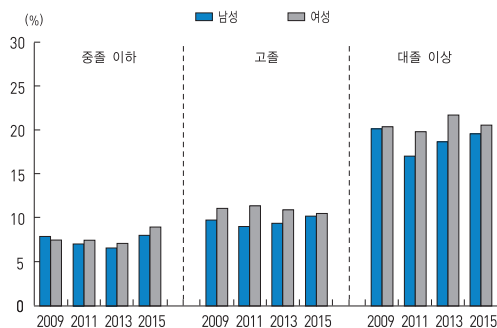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비생활 만족도

이번에는 교육수준과 소비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IV-17]에는 소비생활 만족도가 남녀의 교육수준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졸 이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생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고졸 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훨씬 더 낮아 전자는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후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생활에서도 대체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 다만, 최근 들어 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집단에서는 이러한 소비생활 만족도에서의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림 IV-17] 성 및 교육수준별 소비생활 만족도, 2009-2015



주: 1)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 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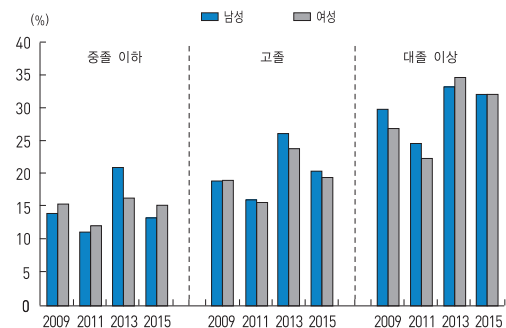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생활 만족도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자. [그림 IV-18]은 남녀의 교육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삶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가생활 영역에서도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다만,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 추세적 양상을 보이지 않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학력집단에서든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3년에 가장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의 남녀 간 차이는 고졸 집단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여성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남성보다 항상 높다. 반면 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에는 여가생활 만족도의 성별 차이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IV-18] 성 및 교육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 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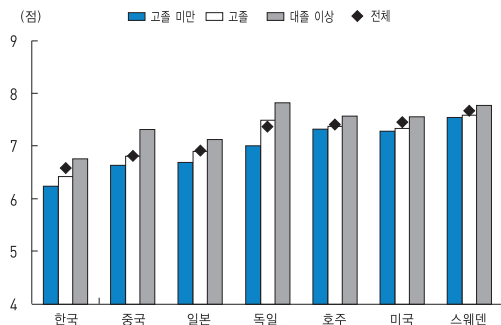
주: 1) 여가생활 만족도는 만 2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한국인의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6차(2010-2014)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했는데,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IV-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9] 주요 국가의 교육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주: 1) 만 2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0점 척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10점 '매우 만족')로 측정된 응답 평균 점수임.

3) 한국과 일본은 2010년 자료, 칠레와 스웨덴은 2011년 자료, 중국과 호주는 2012년 자료, 독일은 2013년 자료임.

출처: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OFFICIAL AGGREGATE v.20150418, 2015.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 같은 결과는 각 교육수준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높은 기대와 각박한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사람들의 기대는 고도성장기에 맞추어져 매우 높은 반면, 완전한 저성장기로 진입하면서 이전에 비해 기회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안전망도 크게 미흡한 현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7.68점)인데, 스웨덴에서는 교육수준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한국은 독일,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교육수준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뚜렷하게 층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집단은 독일(7.82점)이 가장 높고, 고졸 집단과 고졸 미만 집단은 스웨덴(고졸 7.57점, 고졸 미만 7.56점)이 가장 높다.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한국에서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가족관계, 일자리, 소비생활, 여가생활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만족도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



면 그간 지속적으로 심화된 소득양극화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노출된 국민들을 양산함으로써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인은 상향 비교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계층 상승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일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고는 삶

에 대한 만족도가 좀처럼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교육수준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확연하게 층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고한 학력주의 풍토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된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학교폭력이나 체벌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과 체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 인권 보장수준의 차이가 발견된다.
-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따돌림 등 주요 유형에서 모두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 18세 미만 연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되고, 2000년대 이후 ‘두발자유’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보장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였다. 가깝게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필두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 조치도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人權)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역할, 지위와 상관없이 인권을 누린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나 학생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학생을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가르침과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교육풍토의 영향이 크다.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것이라면 학생인권도 이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수준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서 수집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인권보장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수준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학교폭력과 학교체벌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해 볼 것이다. 아울러 인권준중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인권교육 실태도 점검할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수준

먼저,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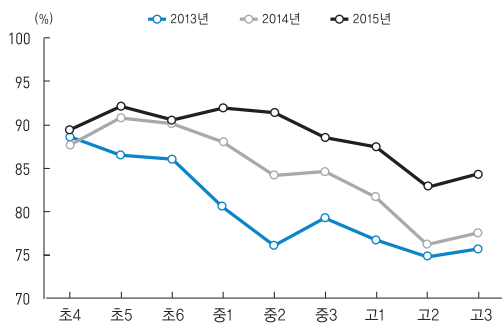
[그림 IV-20]에는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다.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13년 80.1%, 2014년 84.1%, 2015년 88.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과 더불어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 비율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2015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92.1%가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그 비율이 각각 88.5%와 82.8%에 그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존중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권리의식이 발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풍토나 교육방법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V-21]과 [그림 IV-22]는 각각 학업성취 수준과 가정형편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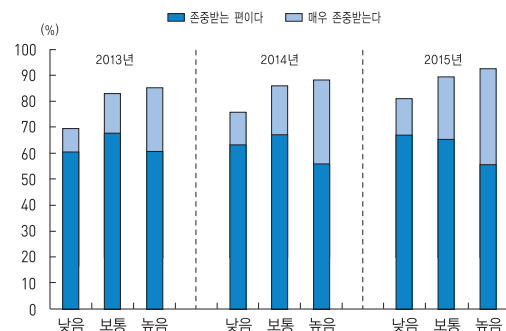
[그림 IV-20]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감, 2013-2015



주: 1)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V-21]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수준별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 2013-2015



주: 1)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학업성취수준은 학생이 자신의 학업성적을 1점('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5점('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1-2점을 '낮음', 3점을 '보통', 4-5점을 '높음'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 가운데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1%인 데 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92.5%로 두 집단 간에 11.4%p의 차이가 난다. 특히, ‘매우’ 존중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하위권에서 14.0%, 상위권에서 36.8%로 나타나 상위권과 하위권 간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그림 IV-21).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가정형편에 따른 차이도 발견된다.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일수록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다. 예컨대, 2015년 조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9.5%로 가정형편이 양호한 학생들의 응답비 91.6%에 비하면 12.1%p나 낮다. 자신의 인권이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두 집단 간 차이는 19.7%p로 더 크다(그림 IV-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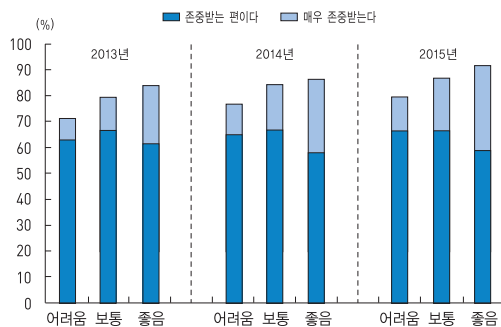
인권은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인권보장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반적 학교폭력 피해실태

UN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실태 점검을 위한 주요 지표의 하나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IV-23]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성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 2015년 기준 남학생의 22.9%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여 15.5%에 그친 여학생보다 훨씬 높다. 학교폭력 경험률은 학교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2015년 기준 학교폭력 경험률은 초등학교생 24.3%, 중

[그림 IV-22] 초·중·고 학생의 가정형편별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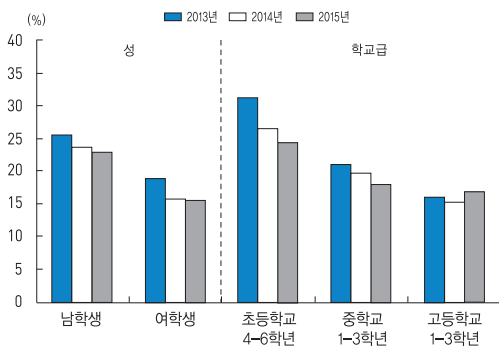
주: 1) 학교에서의 인권보장감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가정형편은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1점(‘매우 못 산다’)부터 7점(‘매우 잘 산다’)까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1-3점을 ‘어려움’, 4점을 ‘보통’, 5-7점을 ‘좋음’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다. 이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IV-23]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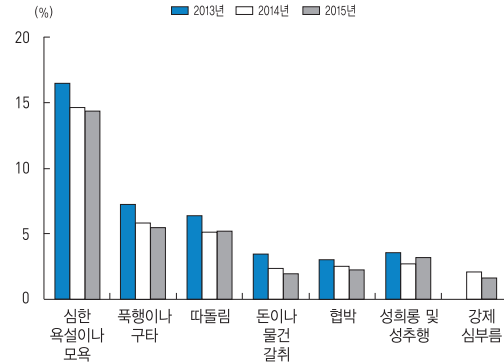


주: 1)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 갈취, 협박, 성희롱 및 성추행, 강제심부름 등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V-24]는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학교폭력을 당하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1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폭행이나 구타(5.5%), 따돌림(5.2%) 등의 순이다. 학교폭력 피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학교폭력 경험률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따돌림과 성희롱·성추행 경험률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미세하나마 높아졌다.

[그림 IV-24]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13-2015



주: 1)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 갈취, 협박, 성희롱 및 성추행, 강제심부름 등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강제 심부름은 2014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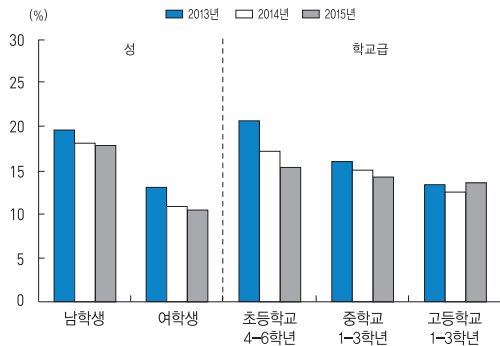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실태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유형인 언어폭력, 폭행 및 구타, 따돌림을 중심으로 피해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25]는 학생들의 언어폭력 피해실태를 성별 및 학교급별로 보여준다. 2015년 조사 결과, 남학생은 17.9%가 학교에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였으나 여학생은 그 비율이 10.5%로 남학생보다 낮다.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학교급이 낮을수록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폭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언어폭력에 적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척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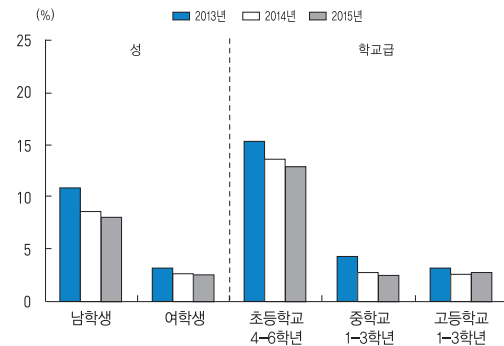
[그림 IV-25]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언어폭력
피해 경험률, 2013-2015



주: 1) 언어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의 자연령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림 IV-26]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률,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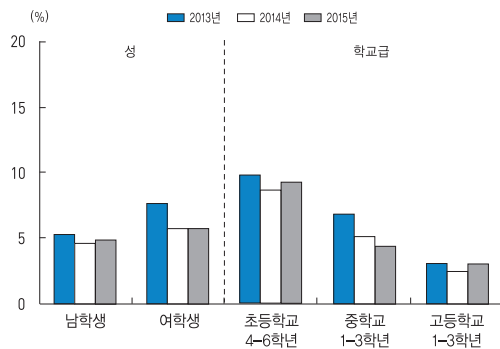
주: 1)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V-26]에는 학교폭력 중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은 남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2015년 기준 여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2.6%인 데 비해 남학생의 피해율은 8.1%로 나타나 남학생이 3배 이상 높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2% 수준인 반면 초등학생은 무려 12.8%에 달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광범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학교폭력은 그 상처가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왕따’로 대표되는 따돌림 또한 학생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림 IV-27]은 성별 및 학교급별 따돌림 피해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여타 유형의 양상, 즉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과 달리 따돌림은 여학생의 피해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남학생의 4.8%, 여학생의 5.7%가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남학생은 신체 폭력이나 욕설 등 보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는 데 비해 여학생들은 따돌림처럼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급별로는 여타 학교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이 동일하게 관찰된다.

[그림 IV-27]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교급별 따돌림 피해 경험률, 2013-2015



주: 1) 따돌림 피해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학교체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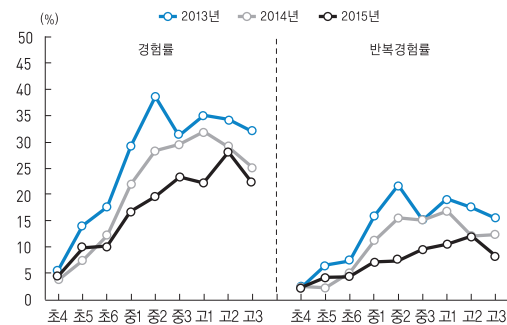
UN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은 모든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벌에는 신체적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경험한 모욕적인 말(욕설)이나 신체적 벌을 토대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수준을 점검해 보았다.

먼저, [그림 IV-28]과 [그림 IV-29]는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진다. 2013년에는 27.3%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2.0%와 18.3%로 하락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초등학교 4학년의 언어폭력 경험 비율은 4.7%에 불과하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각각 23.2%와 28.0%로 크게 높아진다(그림 IV-28).

체벌이나 욕설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한 번만 발생해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같은 행위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림 IV-28]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 2013-2015



주: 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반복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에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진다.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1달에 1~2회 이상 반복해서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별도로 집계해서 보면, 2015년 기준 초등학교는 2~4% 수준인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각각 9.6%와 11.9%이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언어폭력이 학생훈육의 수단으로 일정 부분 일상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그림 IV-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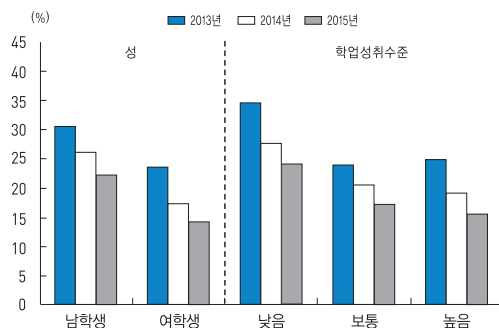
교사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인해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14.2%가 교사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2.1%로 여학생보다 더 높다. 이는 교사로부터 경험하는 언어폭력에 남학생들이 더 일

반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비율은 뚜렷한 반비례관계를 보인다. 즉,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학업성적 상, 중, 하위권 학생들의 언어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15.6%, 17.2%, 24.0%이다(그림 IV-29).

이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신체적 체벌의 실태를 살펴보자. [그림 IV-30]과 [그림 IV-31]은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의 체벌 경험률이 초등학교에 비해 확연히 높다. 2015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신체적 체벌 경험률은 평균 11.5%에 불과하지만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각 20.4%와 21.8%에 이른다. 반복 체벌도 중·고등학생이 초등학교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2015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10.7%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2.3%가 한 달에 1~2회 이상 반복적인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6%대로 중·고등학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그림 IV-30).

학교에서의 신체적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여전

[그림 IV-29]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업성취수준별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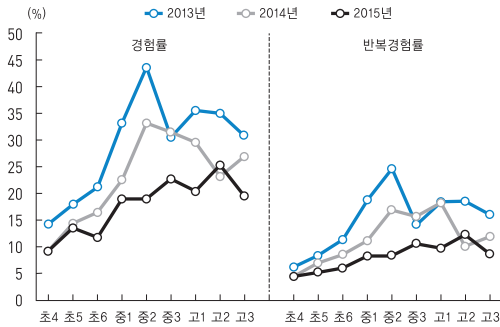


주: 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학업성취수준은 학생이 자신의 학업성적을 1점('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5점('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1~2점을 '낮음', 3점을 '보통', 4~5점을 '높음'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히 체별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중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학생 통솔이 어려워질수록 체벌이 학생지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0]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체벌 경험률,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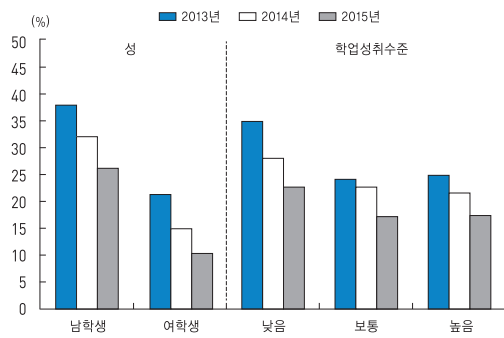


- 주: 1) 체벌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반복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을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V-31]은 학생들의 신체적 체벌 경험률 성별 및 학업수준별로 비교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다. 예컨대, 2015년 남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26.0%에 달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10.2%로 남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남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광범하게 사용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폭력과 마찬가지로 체벌도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한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학업성적 중·상위권 학생들의 체벌 경험률은 각각 17.2%와 17.1%인데 하위권 학생들의 체벌 경험률은 22.5%로 차이가 난다. 신체적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일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V-31] 초·중·고 학생의 성 및 학업성취수준별 체벌 경험률, 2013-2015



- 주: 1) 체벌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학업성취수준은 학생이 자신의 학업성적을 1점('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5점('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1-2점을 '낮음', 3점을 '보통', 4-5점을 '높음'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인권교육

UN은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구성

원들은 인간을 존중하고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보장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먼저, 인권교육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보면,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2013년 54.4%, 2014년 64.4%, 2015년 65.3%로 나타난다. 인권교육이 충분하게 제공되지는 못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상급 학교일수록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낮다. 2015년 기준 초등학교의 72.7%, 중학교의 67.6%, 고등학교의 57.6%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교육의 양적 측면, 즉 실시율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즉 교육효과도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낮다. 2015년 기준 초등학교의 87.5%가 교육 효과를 긍정적(도움이 되는 편이다 + 도움이 된다)으로 평가한 데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69.0%와 56.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는 한국의 교육풍토에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6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 노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134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전병유 한산대학교	144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151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2015년 65.7%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남성 고용률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여성 고용률은 높아져 성별 고용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나, 청년 실업률과 시간제 일자리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증가하는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간의 연관성을 추측해 한다.
-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고용의 증가세는 위축되었다. 여가 관련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눈에 띄지만 고용 규모가 작아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저숙련, 저임금 업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다.
- 일자리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비중은 35% 내외에 머문 상태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넓게 형성되어 있다.
- 노동시장 불평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임금수준에서도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의 성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취약계층 여성이 이중적 차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한 해 한국 사회는 상당한 관심과 파장을 불러온 몇 가지 노동이슈와 마주하였다. 세계 최선두를 달리던 조선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구의역 플랫폼 안전문을 수리하던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 알파고의 등장 등이 예고한 인간노동의 불확실한 미래와 일자리 구조의 변화, 10%대에 진입한 청년실업과 청년의 소득

보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예다. 이 예들은 다양한 계층의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갈등적 양상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반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례없는 공론장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이는 노동 관련 이슈가 노동 영역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적 징후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성과, 일자리의 질, 노사관계 등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에 제기된 노동이슈의 맥락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용률과 실업률

먼저, 고용률과 실업률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양적 성과를 살펴보자. 한국의 고용률은 2015년 현재 60.3%이다. 고령화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제한하면 고용률은 65.7%로 높아진다. 취업자는 2014년(고용률 65.3%)에 비해 30만여 명 증가하였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0.4%p에 그쳐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고용 둔화는 대체로 2015년의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눈여겨 볼 것은 인구집단별로 고용의 추이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신규취업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5-29세 청년집단의 고용 사정이 남녀 공히 좋지 않았다는 점(전년 대비 남성 고용률 0.1%p, 여성 고용률 0.2%p 하락)과 경력 고조기라 할 30-40대 남성의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점 등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반면, 고용률이 높아진 집단도 있다. 여성 고용률은 2014년 대비 0.8%p 높아진 55.7%로 최근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남성 고용률이 75.7%로 2014년 수준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표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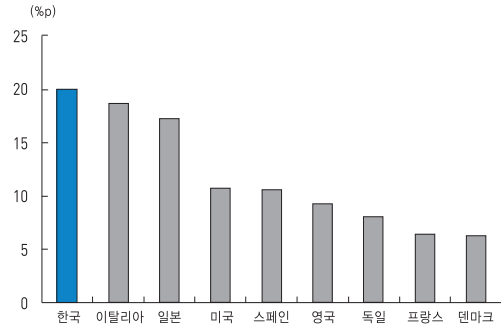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5

	고용률(%)			전년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5.7	75.7	55.7	0.4	0.0	0.8
15-29세	41.5	39.8	43.2	0.8	0.9	0.7
15-19세	7.9	6.9	8.8	0.2	0.1	0.2
20-24세	46.1	40.8	50.8	1.3	1.5	1.3
25-29세	69.0	69.3	68.6	-0.1	-0.1	-0.2
30-49세	76.8	91.6	61.6	0.2	-0.3	0.7
30-39세	74.2	90.9	56.9	0.3	0.0	0.6
40-49세	79.1	92.2	65.7	0.0	-0.5	0.6
50-64세	70.6	83.2	58.1	0.3	-0.5	1.0

주: 1) 고용률은 만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2015.

여성 고용의 증가와 남성 고용의 지체로 남녀 간 고용격차(20.0%p) 역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림 V-1]이 보여주듯 이 정도의 감소 추세로는 OECD 주요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는 한국의 남녀 간 고용격차를 의미 있게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림 V-1]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고용률 격차, 2015



주: 1) 성별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여성 고용률.
2) 고용률은 만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고용률의 상승은 주로 20-24세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 때문이다. 이 연령대의 청년 고용률은 46.1%로 2014년 대비 1.3%p 상승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고용률(50.8%)이 남성 고용률(40.8%)을 크게 상회했다. 이러한 25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률 상승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청년층 흡수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 기준 20-29세 연령층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자수는 45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6.6%p 증가하였다.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도 뚜렷해 2015년 이 집단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1.0%p 상승한 58.1%이다.

청년층과 중고령층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는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최근 고용률 추세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했던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체 고용규모와 개인 경력 모두 성숙기에 해당하는

30-40대에서 남녀 간 고용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91.6%에 달하는 데 비해 같은 연령대 여성 고용률은 61.6%에 불과하다. 특히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56.9% 정도로 매우 낮다.

한편, 실업률은 2015년 평균 3.7%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2%로 2014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6년 전기 더욱 가속화되어 결국 10%대에 진입하였다. 2016년 1/4분기와 2/4분기 실업률은 각각 11.3%와 10.3%이다. 이러한 변화는 30-49세와 50-64세 연령집단의 실업률이 각각 1.2%p와 0.4%p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표 V-2).

청년층 실업률의 상승은 이들이 안정성이 낮은 직업에 분포해 고용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20-24세 청년들이 임시직이나 시간제 취업에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재학 중 직장체험 비율이 40%이고, 그 중 시간제 취업이 69.1%에 이른다는 통계가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1년여가 걸린다는 점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정착하기 쉽지 않은 현실임을 말해 준다. 2015년의 경우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약 11개월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14개월로 여성 9개월보다 길다.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취업자의 13.4%가 시간제 일자리에 취직해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3%p 늘어난 것이다. 첫 일자리가 시간제인 경우는 남성 15.1%, 여성 12.1%로 남성이 더 높다. 전일제 일자리는 남녀 공히 약간 줄었다(표 V-3).

다음으로 취업자 구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V-2]는 2015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

〈표 V-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5

	실업률(%)			전년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7	3.8	3.7	0.0	0.1	0.1
15-29세	9.2	10.6	7.8	0.2	0.1	0.1
15-19세	10.6	10.4	10.7	1.4	0.2	2.3
20-24세	10.5	11.5	9.8	0.3	0.1	0.5
25-29세	8.1	10.1	5.8	-0.2	0.0	-0.5
30-49세	2.7	2.5	2.9	0.1	0.0	0.0
30-39세	3.1	3.1	3.1	0.0	0.2	-0.4
40-49세	2.3	2.0	2.7	0.1	-0.1	0.3
50-64세	2.4	2.8	2.0	0.1	0.3	0.0

주: 1) 실업률은 만 15-64세 인구 및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2015.

〈표 V-3〉 청년층의 성별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구성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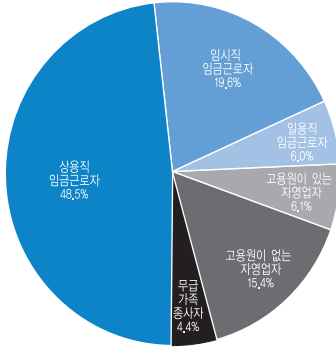
	구성비율(%)			전년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96.5	96.0	96.8	-0.5	-0.6	-0.5
전일제	83.0	80.9	84.7	-1.9	-3.0	-0.9
시간제	13.4	15.1	12.1	1.3	2.5	0.4
자영업자	2.0	2.1	1.8	0.4	0.6	0.1
무급가족종사자	1.6	1.9	1.3	0.2	0.0	0.3

주: 1)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인구(만 15-29세)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4, 5, 2015, 5.



[그림 V-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 201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성 현황을 보여준다. 우선, 임금근로자 비중은 74.1%로 2014년 73.2%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21.5%로 이탈리아와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중 영세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V-4〉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여준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2014년 대비 약 249만 명 늘어 경제의 서비스화 혹은 서비스업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상대적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 V-4〉가 제시하는 것처럼, 서비스업 전체 고용의 증가세는 2014년 424만 명에서 2015년 249만 명으로 상당히 위축되었다. 고용

〈표 V-4〉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년 대비 증감 취업자수, 2012-2015

(1,000명)

	2012	2013	2014	2015
제조업	14	79	146	156
서비스업	415	320	424	249
숙박 및 음식점업	52	65	127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	155	139	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57	7	6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8	22	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7	2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1	23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	-6	3	23
교육 서비스업	58	4	59	11
운수업	48	33	-6	2
도매 및 소매업	51	-29	132	-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15	-9	-2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25	26	-13	-22
기타 서비스업	11	4	-35	-29
금융 및 보험업	-4	22	-27	-48

주: 1) 기타 서비스업은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증가를 주도하던 서비스업의 위축은 2015년의 전반적인 고용 둔화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량이 큰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둔화가 서비스업 고용 위축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제조업의 고용 증가가 서비스업 고용 둔화를 다소 상쇄하였다.

서비스업은 2015년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최근 몇 년간 고용 증가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는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저숙련, 저임금 업종에 치우쳐 있다. [그림 V-3]은 이러한 저숙련, 저임금 업종의 고용 증가를 여성 취업자가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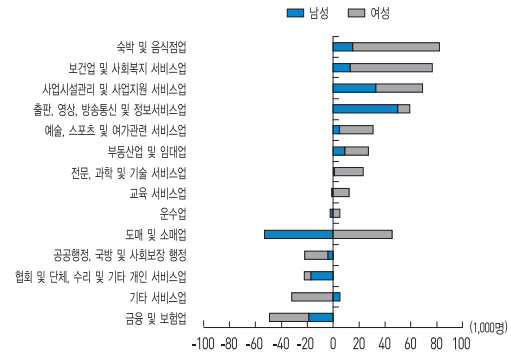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의 4배 이상에 달한다. 요컨대 최근 가속화된 탈산업화, 서비스 경제화의 경향이 저부가가치화, 고용의 질 저하, 그리고 고용의 여성화 등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시장 부문에서도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력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외국인 취업자는 2013년 76만 명에서 2015년 93만 8,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표 V-5). 이들 중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46.6%로 가장 높다. 증가 속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며, 남성은 주로 제조업(55.8%), 여성은 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38.8%)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인 58.0%가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저임금군에 빠질 위험은 여성의 경우 한층 높다. 전체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80.3%(남성은 47.3%)가 월평균 200만 원 이하, 11.0%가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단, 2014년 대비 2015년에 2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약 7%p가량 감소한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서비스업종으로서 금융·보험업의 경우 최근 단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 감소가 현저하다. 2015년 한 해만 약 4만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앞서 전문직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용 증가를 언급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서비스 경제화가

[그림 V-3] 서비스업종별 남녀 전년 대비 증감 취업자수, 2015



주: 1) 기타 서비스업은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활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2015.

〈표 V-5〉 산업별 남녀 외국인 취업자수, 2015

	전체	남성	여성
외국인 취업자수(1,000명)			
전체	938	626	312
농림어업	41	27	14
광업	2	2	0
제조업	434	349	85
건설업	86	81	5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179	58	121
전기·운수·통신·금융	15	12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180	97	83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10.1	10.2	9.9
농림어업	5.1	0.0	16.7
광업	100.0	100.0	0.0
제조업	3.8	6.7	-6.6
건설업	0.0	-1.2	25.0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17.0	9.4	19.8
전기·운수·통신·금융	15.4	20.0	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26.8	40.6	13.7

출처: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 2014, 2015.



현재까지 한국 고용구조에 미친 대체적인 영향은 경제의 고도화보다는 전반적인 고용의 질 저하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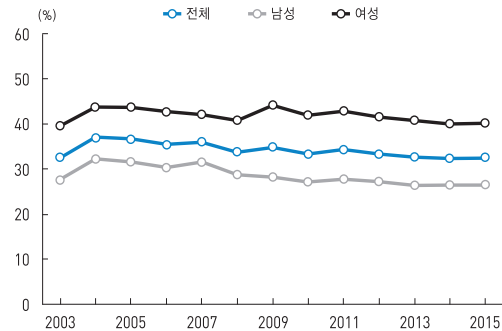
다음으로 고용 및 임금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자.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질의 저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아 온 비정규직의 확산은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발효 후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 시점인 2007년 35.9%에서 2015년 32.5%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한 해의 단기 변화만 놓고 보면 2014년 32.4%에서 0.1%p 높아졌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도 2014년 39.9%에서 2015년 40.2%로 0.3%p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V-4). 제도적 변화 등 추가적 감소 요인이 없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전체 30%, 여성 40%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의 질을 고용안정성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즉, 모든 비정규직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비정규직,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법정 사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취약한 일자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정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0% 내외에 불과하다.

[그림 V-4] 임금근로자의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03-2015



주: 1)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비정규직 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100.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특히 <표 V-6>이 보여주듯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사회보험에 직접 가입한 경우가 대개 20%를 넘지 못해 사각지대가 넓게 분포한다. 한편, 퇴직금, 상여금, 시간의 수당, 유급휴가 등의 부가급여 수혜율에서도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취약성이 드러난다(표 V-6).

임금수준에서도 고용형태별 격차가 확대되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15년 8월 기준 약 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147만 원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0.7%) 수준인 1.0% 증가에 그쳤다(그림 V-5).

임금격차는 남녀 간에도 크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 1,000원이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283만 7,000원의 62.8% 수준이다. 남성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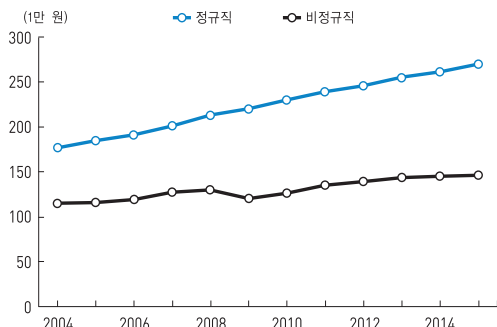
〈표 V-6〉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 2015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67.4	82.0	36.9	54.4	13.3	21.0
건강보험	71.5	84.8	43.8	64.1	17.5	31.1
고용보험	68.6	82.4	42.5	60.4	18.8	29.0
근로복지 수혜율						
퇴직급여	69.9	84.0	40.5	59.4	14.3	30.7
상여금	70.0	85.0	39.0	52.0	17.4	28.3
시간외 수당	47.2	58.4	23.7	33.1	9.4	14.7
유급휴가	60.3	73.9	31.9	47.5	9.3	20.2

주: 1) 사회보험 가입률은 해당 근로형태의 임금근로자 중 해당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임.
 2) 근로복지 수혜율은 해당 근로형태의 임금근로자 중 해당 부가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비율임.
 3) 국민연금에는 특수직역 연금이 포함됨.
 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을 집계한 수치임.
 5)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 제외자인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가입대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6) 유급휴가의 경우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 8.

〈그림 V-5〉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4-2015



주: 1)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비정규직 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100.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비율은 2012년 64.4%에서 더 낮아졌다.

〈그림 V-6〉 역시 성별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지난 15년간 대졸자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좁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추세적으로 벌어져 왔음을 관찰할 수 있다. 동시에 남녀 간 임금격차의 변화가 대졸 여성 연령대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99년 20대 후반 대졸 여성이 받은 임금은 같은 연령대 대졸 남성이 받은 임금의 95% 수준이었는데 2014년에는 이 비율이 90% 수준으로 낮아졌다. 남녀 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30대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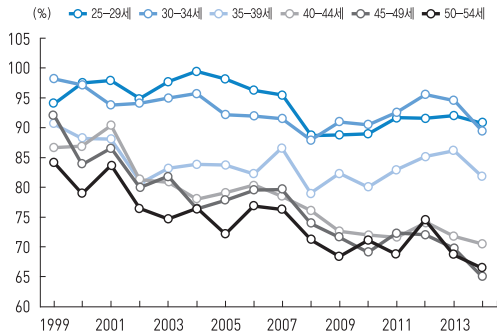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를 동시에 고려하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 정규직의 성별 임금격차 증감률이 3.8%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성별 임금격차 증감률은 12.0%로 남녀 간 임금차이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더 현저하다(그림 V-7).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임금소득 지니계수는 1995년 0.278, 2000년 0.305, 2005년 0.323, 2010년 0.328, 2014년 0.34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소득 불평등은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과도 연관될 수 있다. 2015년 법정 최저



[그림 V-6]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199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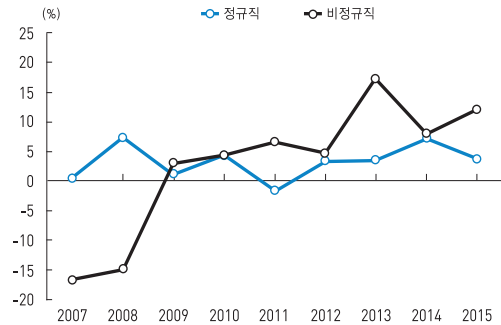


주: 1) 임금은 월평균 임금으로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2)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6 KLI 노동통계」, 2016.

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 5,210원에 비해 7.1% 상승하였다. 실제 수혜를 받은 근로자수는 약 266만 명으로 그 영향률이 14.6%로 추정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5.8%로 해당 시기 미국(36.7%)이나 일본(38.9%)보다는 높지만 프랑스(61.1%)나 호주(53.3%)보다는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간 매년 6~7%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상황은 근로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근로형태가 불안정할수록 하는 일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일에 불만족하는 비율은 상용근로자에서는 13.2%이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서는 각각 18.8%와 30.5%로 높아져 고용이 불안

[그림 V-7] 정규직 및 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의 전년 대비 증감률,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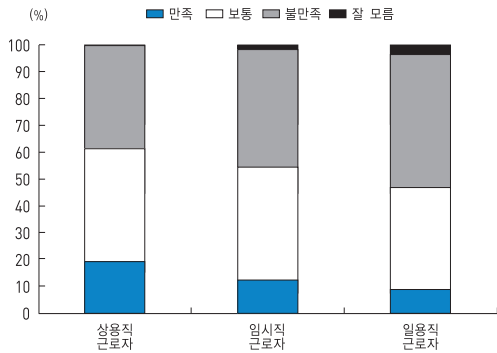


주: 1) 성별 임금격차=남성 월급여액-여성 월급여액, 월급여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포함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정할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임금에 대한 태도도 근로형태별로 차이가 난다. 2015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임금 불만족 비율은 38.3%에 그치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임금 불만족 비율은 각각 44.0%와 49.6%에 달한다(그림 V-8).

노동시장의 불평등 양상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서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보다 높는데,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여서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5~9인 사업체와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2008년에 각각 52.4%(205만 5,000원)와 74.7%(292만 8,000원)였으나 2015년에는 각각 50.6%(253만 9,000원)와 69.5%(348만 7,000원)로 낮아졌다.

[그림 V-8]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만족도, 2015



주: 1) 설문문항은 '귀하가 다니시는 직장의 임금(일에 비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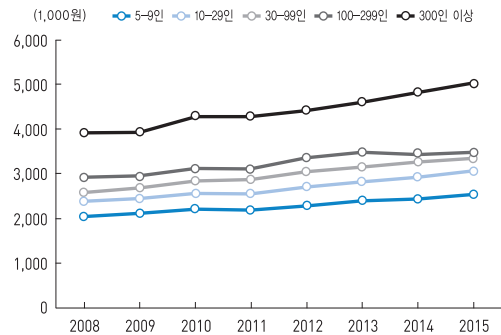
2)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응답 비율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지난 6년간 더 커진 것이다(그림 V-9).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비단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재해율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 [그림 V-10]은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체의 규모별 산업재해율을 각기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사업체 규모와 산업재해율 사이에 체계적인 반비례 관계가 발견된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예방교육, 작업감독 등에 소홀할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이 보편화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소규모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이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사업체 규모 간 산업재해율 차이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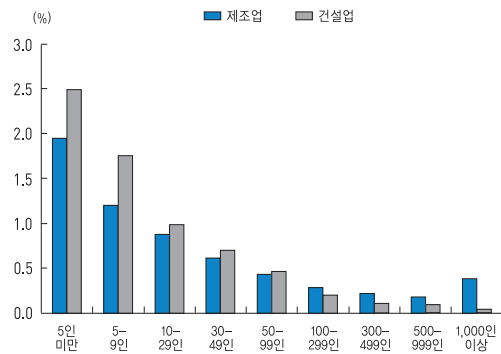
[그림 V-9]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8-2015



주: 1) 월평균 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임.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12월.

[그림 V-10] 제조업 및 건설업의 사업체 규모별 재해율, 2014



주: 1)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4.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전반적 조직력은 지난 몇 년간과 같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노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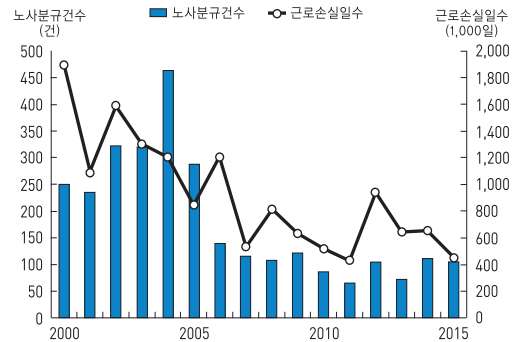
직률은 2014년 현재 10.3%이다. 이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가진 노동자가 100명 중 10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남성 노동자의 조직률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조직률 13.7%), 여성 노동자의 조직률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조직률 5.6%). 이러한 남녀격차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에 노조의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형태별로도 조직률 격차가 발견된다. 2014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각각 12.4%와 1.4%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3.7%), 숙박·음식점업(1.2%) 등 고용이 증가하는 저임금 업종의 조직률이 매우 낮다. 직종별로도 장치·기계직(22.4%), 사무직(10.7%) 등의 직종과 서비스직(3.8%), 판매직(4.5%) 등의 직종 간에 차이가 크다. 성, 고용형태, 산업, 직종 등을 막론하고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의 집단 대표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대표가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대변 기제를 결여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분규 상황을 보면, 2015년에도 현대자동차, 서울대병원 등에서 크고 작은 분규가 있었지만 분규건수의 전반적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그림 V-11).

[그림 V-11]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00-2015



주: 1) 노사분규건수는 2006년부터 산별노조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할 경우 1건으로 파악함.

2) 근로손실일수=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 연도.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전병유 (한신대학교)

-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과 복지, 고용안정성, 교육훈련 기회 격차가 크고 노동 이동이 제한되는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70~9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5~40% 정도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40~70% 수준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 형태는 원하청 관계이다. 하청협력업체의 임금은 원청업체의 50% 수준이며, 이는 하청단계가 낮아질수록 더 낮아진다.

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는 임금과 고용안정성, 복지, 교육훈련의 기회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는 이중화(dualization)라고 한다. 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는 임금격차가 매우 크고 실직 가능성의 차이도 크다. 서로 노동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대기업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이 서로 분리되는 이중구조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업규모에 의한 노동시장 이중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의 수준을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원하청 관계의 특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의 수준을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의 노동 일터에는 다양한 형태의 균열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이 다르고(성별 직종분리), 남녀 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 일터를 구분 짓고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균열선이 기업규모이다.

기업규모와 일자리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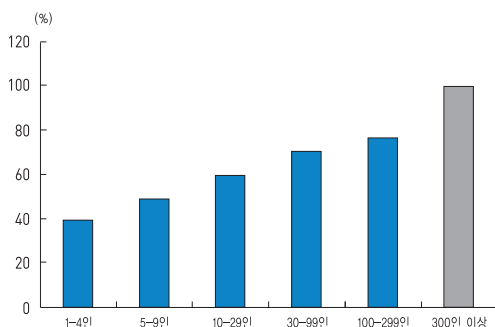
글로벌화에 따른 아웃소싱의 증가와 노동절약적인 기술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이중화의 압력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 노동시장이 주

로 고용형태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규모로도 분리되어 있다. 한국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일반적으로 종업원 규모 300인 미만)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50~60% 수준이다. 독일 73.9%(2014년), 일본 82.1%(2011년), 프랑스 90.0%(2010년) 수준에 비하면(김경아, 2015)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2015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대비 1~4인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39.3%에 불과하며, 100~299인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도 76.4%에 그친다(그림 V-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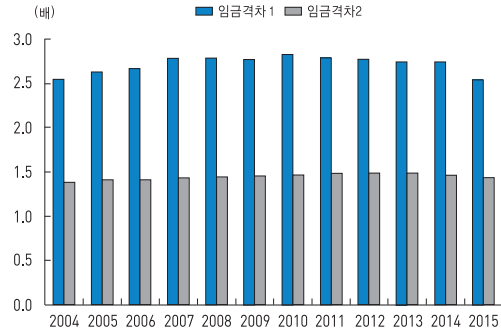
이러한 임금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을

[그림 V-12]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 2015



주: 1) 임금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대비 해당 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5. 8.

[그림 V-13] 1~4인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 간 임금격차,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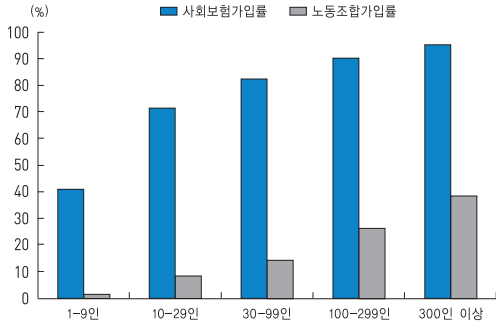


주: 1) 임금격차(1)은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배수임.
2) 임금격차(2)는 임금함수(종속변수=로그 시간당 임금, 통제변수=성, 연령, 연령제곱, 근속, 고용형태, 사업체규모 변수 더미) 추정치 기초하여 계산한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배수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5. 8.

수 있다. 회귀분석으로 근로자의 성, 연령, 근속년수, 고용형태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한 규모별 격차를 추정해 보았다. [그림 V-13]에서 임금격차 (1)은 이러한 특성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인 사업체 임금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 배수를 나타내며, 임금격차 (2)는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임금 배수를 나타낸다.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임금격차는 2.45배이고, 통제할 경우에는 1.43배이다. 즉 성, 연령, 근속년수 등이 동일하다면,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보다 43% 정도의 임금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V-14]에서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그림 V-14]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과 노동조합가입률, 2015



주: 1) 사회보험가입률은 해당 규모 사업체 근로자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 다만, 공무원, 교사, 우체국 직원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분모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자료의 한계로 고려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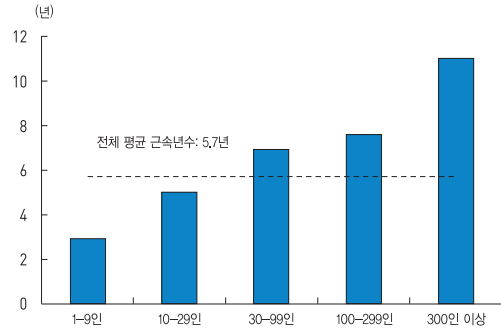
2) 노동조합가입률은 해당 규모 사업체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5. 8.

의 경우 95.0%에 달하는 반면 1-9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40.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38.4%에 달하지만, 1-9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1.5%에 불과하다.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성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 외에도 고용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5.7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사업체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근속년수는 11년에 달하지만 1-9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2.9년에 불과하다(그림 V-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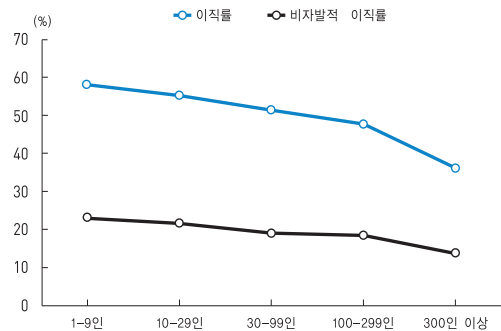
[그림 V-15] 사업체규모별 평균 근속년수, 201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5. 8.

한국 근로자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 자료를 통해서 볼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들의 매년 평균 이직률은 48.9%에 달한다. 종업원 100인 사업체에서 매년 50명 가까이가 이직을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그림 V-16] 사업체규모별 이직률, 2014



주: 1) 이직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보험 상실자 비율로 산출하였음.

2) 보험 상실사유가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에 의한 자진 퇴사, 폐업 및 도산,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등인 경우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2014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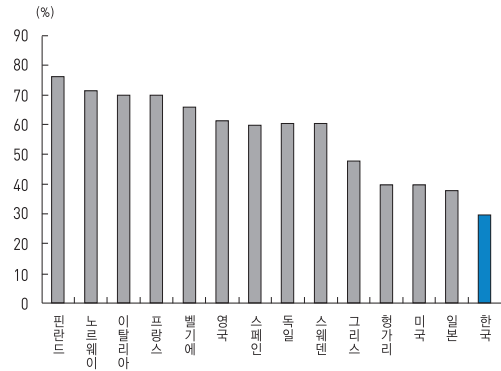
비자발적 이직, 즉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계약만료 등에 의한 이직의 비율은 19.0%이다. 이는 매년 근로자 10명 중에서 2명은 해고, 폐업, 계약만료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체규모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비자발적 이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3.8%에 불과하지만 1~9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23.2%에 달한다(그림 V-16).

기업규모별 일자리 격차의 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특성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근로자 1인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 액수이다. 일반적으로 기계장비가 많이 투입될 경우 부가가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노동력의 질이 높을 경우에도 부가가치가 커진다. 생산된 부가가치는 임금과 이윤으로 나뉜다. 부가가치가 임금과 이윤으로 나뉘는 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것은 결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V-17]에서 보듯이 한국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5% 수준으로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가 적고 종업원의 인적자본 질이 낮아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것

[그림 V-17] OECD 주요 국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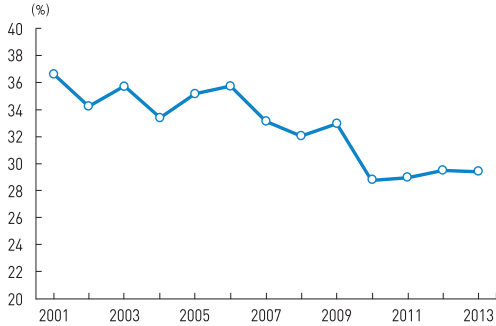


- 주: 1) 노동생산성 격차는 제조업 기준 대기업 명목 노동생산성 대비 중소기업 명목 노동생산성의 비율임.
 2) 한국은 사업체 기준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기업체 기준 자료임.
 3) 유럽 국가의 경우 기업규모는 종업원수 250인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한국과 일본은 300인을 기준으로 구분됨.
 4) 명목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명목 부가가치로 측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부가가치 대신 명목 출하액(매출액)으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임.
 5) 미국은 2007년 자료임.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2015.

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그림 V-18]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생산성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01년 36.6%에서 2013년 29.4%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기계, 인력, 연구개발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와 장비의 근대화,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등이 중소기업에게 요구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계, 사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림 V-19]에

[그림 V-18]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2001-2013



주: 1) 노동생산성 격차는 제조업 기준 대기업 명목 노동생산성 대비 중소기업 명목 노동생산성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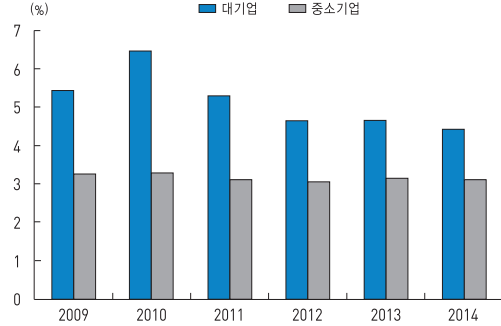
2) 명목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명목 부가가치로 측정하였음.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2015.

제시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 평균 5% 전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3.1~3.3%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데 그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낮은 이익률이 낮은 투자율로 이어져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들에 쌓여 있는 초과이익은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있어 한국 경제 전반의 투자와 수요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익률의 격차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즉, 대기업들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산물 시장에서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

[그림 V-1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2009-2014



주: 1)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2015년 기업경영분석」, 2016.

업 간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낮은 투자율-낮은 노동생산성-낮은 임금-낮은 인력의 질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구조화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김주훈, 2013)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의 격차는 대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원하청 관계 하에서 대기업의 단가인하 전략과 핵심인력 이외의 고용 감축 및 외주화 전략에 기인한다.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노동집약화와 과다 창업도 대기업의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전략과 아웃소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원하청 관계와 임금격차

독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원



하청 관계이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을 행사하여 하청단가 결정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수출경쟁력을 가격에서 찾고 있는 대기업들은 하도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원가에 일정한 마진율을 적용하여 납품가격을 책정하는 비용연동가격제(cost-plus pricing)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률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 하청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거나 혁신을 해도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할 여유가 없다. 불공정 행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금 정체는 원청업자에서 1차 수급업체로, 다시 하위 수급업체(2차, 3차 등)로 내려갈수록 더욱 확대된다.

〈표 V-7〉은 원하청 거래 네트워크에 포착된 5만여 개 표본기업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연결해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임금수준을 분석한 것이다. 하청기업의 임금은 정액급여에 초과급여와 성과급 등을 합한 총액임금 기준으로 원청기업의 5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임금총액(2) 기준)가 그렇지 않은 경우(정액급여 또는 임금총액(1) 기준)보다 격차가 더 크다. 즉, 정액급여나 초과근로에 따른 급여의 격차보다는 연말 상여금의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표 V-7〉 원하청 단계별 월평균 임금, 2013

	임금(1,000원)			상대임금(%)		
	정액 급여	임금 총액 (1)	임금 총액 (2)	정액 급여	임금 총액 (1)	임금 총액 (2)
전체	2,169	2,310	2,621	67.2	62.2	46.8
원청기업	3,229	3,712	5,597	100.0	100.0	100.0
하청기업	2,322	2,557	2,861	71.9	68.9	51.1
1차	2,343	2,582	2,911	72.6	69.6	52.0
2차	2,331	2,558	2,791	72.2	68.9	49.9
3차 이상	1,973	2,188	2,360	61.1	58.9	42.2

주: 1)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의 합임.
 2) 임금총액(1)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임.
 3) 임금총액(2)는 임금총액(1)과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의 합임.
 4) 상대임금은 원청기업 근로자 임금 대비 해당 하청기업 근로자 임금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산업과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2015.

수 있다. 이는 하청기업들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성과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편, 하청단계가 내려갈수록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 원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559만 7,000원인데, 1차 협력사는 291만 1,000원으로 원청기업의 52.0%, 2차 협력사는 279만 1,000원으로 원청기업의 49.9%, 3차 협력사는 236만 원으로 원청기업의 42.2%에 불과하다(표 V-7).

맺음말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초래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격차를 비롯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기본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기업 간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저해 등 많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에 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주훈. 2013.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 『KDI FOCUS』 29. 한국개발연구원.
- 김경아. 2015.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HERI Report』 2. 중견기업연구원.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한국은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간 전문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의 증가와 제조업 부문 중·저숙련 기능직의 감소라는 서비스 경제화를 겪었다. 특히, 신흥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며 그 대부분을 여성 취업자가 채웠다.
- 일자리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고루 분포하는 반면, 여성은 그간 일자리 증가가 현저했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포함한 서비스·판매직에 집중 분포한다.
- 남녀 공히 사무직의 비중이 크며, 남성이 많았던 전문직종에서 여성이 크게 늘어났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작다.
- 고용이 현저히 증가한 일자리는 평균소득이 중위 소득의 2/3선에 미치지 못하는 돌봄 및 단순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이 현저히 감소한 일자리는 관리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한국의 일자리 구조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2016년 한국의 봄을 뜨겁게 달군 알파고와 한 프로기사의 바둑대국은 결국 인간 노동과 일자리의 향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연일 대국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나의 직업은 안전한가,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등장할까 등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과장마저도 옛보이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로봇기술의 위협적 등장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계화,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전, 경제의 서비스화와 금융화, 고령화 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역시 일자리의 기회와 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축적된 여러 연구들은 숙련 편향적 기술 발전에 따른 고숙련 직종의 증가와 중간 숙련 직종의 감소, 고령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에 따른 개인 및 사회 서비스 직종의 확대 등을 지적하고, 그 결과 선진산업국에서 일자리의 이중구조화 혹은 일자리의 상향화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일자리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는지 혹은 상향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탈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은 유례없는 속도의 고등 교육 확산과 고숙련 고급인력의 대량생산을 통해 압축적 산업화를 성취하였다. 그러나 압축적 발전은 역설적으로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에 대한 의존을 끌어올려 특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기능인력 수요를 감소시켰다.

이 글에서는 2008년부터 2015까지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개된 일자리 변화를 개관하고 감소하고 있는 일자리군과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군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시기의 설정은 자료의 제약에 따른 것이지만, 2008년이 글로벌 위기 이후 제2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일자리 변화를 관찰하기에 용이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통계는 직업중분류를 제공하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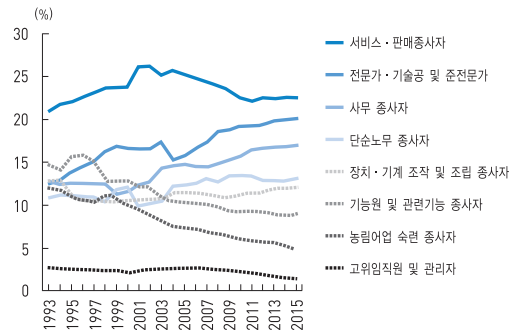
최근 일자리 구조의 변화: 2008-2015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상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20여 년간 직종대분류에 기반한 장기 일자리 추세를 짚어보자. [그림 V-20]은 1993-2015년 기간 비중이 증가한 직종과 감소한 직종을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대비하여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 증가가 현저하며 사무 종사자 역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뚜렷한 비중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중 감소 추세가 가장 현저한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2010년 이후에는 관리자의 비중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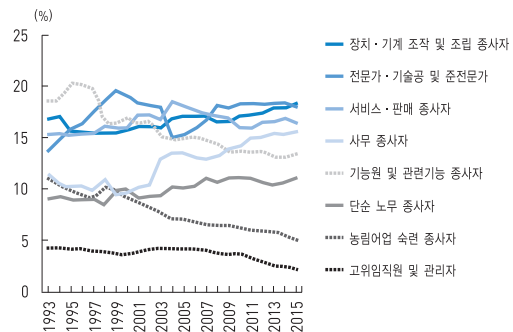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과 그 변화 양상은 남녀에 따라 다소 다르다. 남성의 경우 1990년대 중

[그림 V-20] 성별 취업자의 직업대분류별 구성비율, 199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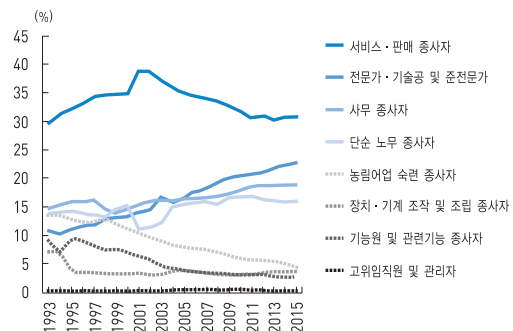
1) 전체



2) 남성



3) 여성



주: 1) 실선은 1993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이 높아진 직종을 표시한 것이고, 점선은 낮아진 직종을 표시한 것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반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외환위기 직후 크게 감소한 반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등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줄곧 그 비중을 늘려왔다. 이는 자동화와 서비스 산업화로 인한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서비스·판매 종사자 비중의 변화에는 부침이 있다.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 2000년대 정보통신산업의 붐을 타고 증가하다 2000년대 중반 감소한 이후 최근 제2의 상승 국면을 맞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중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남성 지배 직종으로 볼 수 있는 관리자 비중 또한 2000년대 후반 이후 줄어들고 있다. 전통적 위계조직의 변화를 포함하는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남성 취업자가 다양한 직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면서 그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줄곧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단,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변화 양상은 남녀가 유사하다. 여성의 경우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비스·판매 종사자 비중이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93년 10.9%에 불과하던 이 직종 취업자 비중이 2015년에는 22.8%까지 증가하였다.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 증가와 고학력화를 반영하는 변화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교

육, 의료, 복지 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따른 여성 밀집 직종이 동반성장한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단순노무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한 점은 남성 취업자 직종의 장기 추세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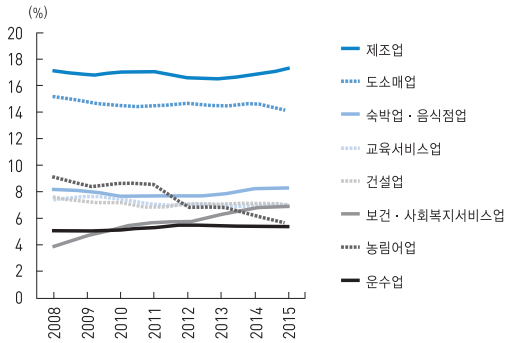
요컨대, 지난 20여 년간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변화는 전문직과 사무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의 증가와 제조부문 중·저숙련 기능직의 감소이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상당히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비스직 고용규모가 7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최근 통계는 한국이 고도의 서비스 경제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여기서 잠시 취업자의 산업부문별 구성과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그림 V-21]은 2015년 취업자 규모를 기준으로 각기 상위 50%와 하위 50% 산업의 취업자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2015년 현재 전 산업부문에 걸친 취업자 규모를 보면, 서비스 경제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7.3%로 여전히 가장 높다. 그 뒤를 도소매업(14.2%), 숙박·음식점업(8.3%), 교육서비스업(7.1%), 건설업(6.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9%) 등이 잇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기능직 취업자 규모의 급격한 감소가 제조업 자체의 축소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고도화는 노동집약적 조립인력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중간숙련 인력과 여타 부문의 기술 및 서비스 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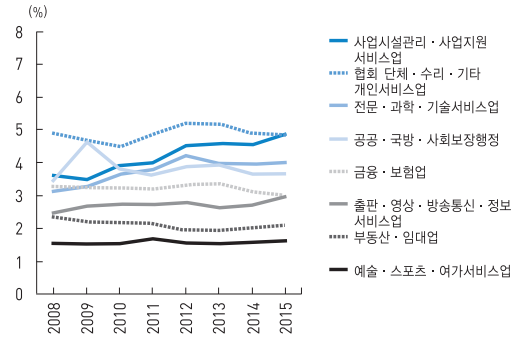


[그림 V-21] 취업자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율, 2008-2015

1) 다수 산업



2) 소수 산업



주: 1) 다수 및 소수 산업 구분은 2015년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상위 50%에 해당하는 산업을 다수 산업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산업을 소수 산업으로 분류한 것임. 이때 취업자 비율이 1% 미만인 4개 산업은 제외시켰음.

2) 실선은 2008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이 높아진 산업을 표시한 것이고, 점선은 낮아진 산업을 표시한 것임.

3) 2011-2012년은 3/4분기 자료를 2013-2015년은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취업자 비중이 낮은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그리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비교적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변화가 급격한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 혹은 서비스 부문보다 신흥 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아웃소싱과 가치사슬의 고도화에 관계하는 사업서비스, 가족 내 돌봄 노동의 공백을 메꾸거나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하는 개인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났음이 확인된다.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 전반을 주도하는 지식산업과 문화의 산업화를 반영하는 방송·

문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만들어 내고 있는 일자리의 증가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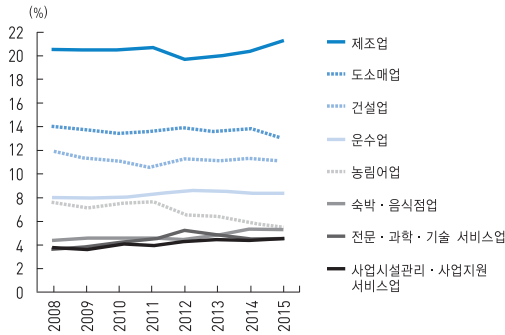
산업별 일자리 분포는 남녀 간에 차이가 난다. 남성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여전히 제조업(21.3%)으로 그 뒤를 잇는 도소매업(13.1%), 건설업(11.1%), 운수업(8.4%)의 일자리 규모와는 꽤 큰 격차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도소매업(15.6%), 제조업(12.0%) 등 상위 일자리의 순위는 남성과 비슷하나 뒤를 잇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0%), 숙박·음식점업(12.4%), 교육서비스업(11.1%) 등의 산업에 일자리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에서 남성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V-22).

〈표 V-8〉은 직업중분류별 취업자 비중과 취업자수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 기준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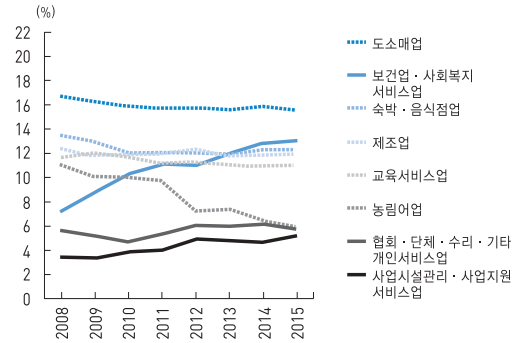


[그림 V-22] 성별 취업자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율, 2008-2015

1) 남성



2) 여성



주: 1) 2015년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율을 기준으로 취업자 비율이 1% 미만인 산업을 제외시키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상위 50%에 해당하는 산업만을 제시하였음.

2) 실선은 2008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이 높아진 산업을 표시한 것이고, 점선은 낮아진 산업을 표시한 것임.

3) 2011-2012년은 3/4분기 자료를 2013-2015년은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비중이 가장 큰 직종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14.0%)이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매장 판매직(7.6%)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취업자가 여전히 전통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밖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6.0%),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5.3%), 운전 및 운송 관련직(5.2%),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5.2%) 등이 취업자 비중 상위 직종을 구성하고 있다.

2008년 대비 2015년 취업자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65.3%),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52.3%),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51.9%),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25.0%),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21.0%)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반면, 농축산 숙련직(-34.6%), 매장판매직(-6.3%),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1.2%)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표 V-8〉 직업중분류별 취업자수와 2008년 대비 증감률, 2015

	취업자수 (1,000명)	취업자 구성비율 (%)	2008년 대비 취업자 증감률 (%)
전체	26,298	100.0	10.3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683	14.0	25.0
매장판매직	2,002	7.6	-6.3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585	6.0	5.8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384	5.3	2.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369	5.2	10.9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68	5.2	52.3
농축산 숙련직	1,322	5.0	-34.6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031	3.9	21.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93	3.0	10.4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763	2.9	14.7
영업직	688	2.6	8.9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686	2.6	65.3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650	2.5	-1.2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632	2.4	51.9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48	2.1	1.5

주: 1) 중분류 51개 직종 중 취업자 비율이 높은 상위 15개 직종만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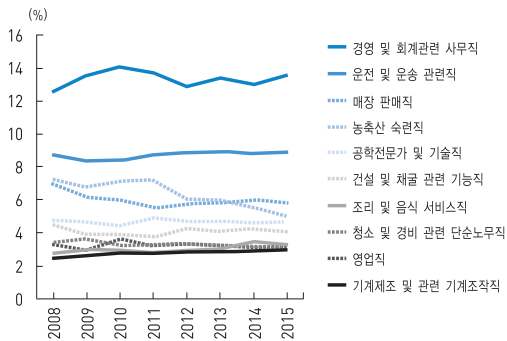
2) 2015년 자료는 하반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08,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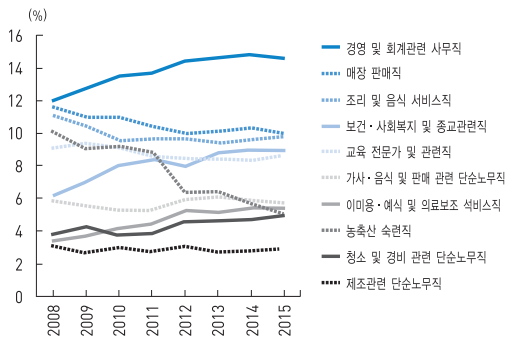
[그림 V-23]의 취업자 직업중분류별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남성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3.6%)이다. 이어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9.0%, 매장판매직, 농축산 숙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

[그림 V-23] 성별 취업자의 직업중분류별 구성비율, 2008-2015

1) 남성



2) 여성



주: 1) 2015년 직업중분류 기준으로 취업자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직종만을 제시한 것임.

2) 실선은 2008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이 높아진 산업을 표시한 것이고, 점선은 낮아진 산업을 표시한 것임.

3) 2011-2012년은 3/4분기 자료를 2013-2015년은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직이 각각 5% 내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과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이 각각 3%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이후의 일자리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대개의 직종에서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자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2008년 이후 40% 이상의 급격한 일자리 증가율을 보이는 직종은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조작직 등이다. 크게 보아 문화·정보 관련 전문직과 단순노무직 두 종류의 일자리가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 취업자 역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4.6%)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매장판매직(10.0%)과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9.8%)이다. 이외에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 9.0%,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8.6%이며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과 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이 각각 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직종별 여성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과 사회 및 개인 서비스직에서 여성 취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역시 2008년 이후 35.1%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은 76.3%, 보



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62.0%,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은 47.1%나 증가하였다.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었던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 증가율이 40-100%에 이르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질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일자리의 질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2008년의 경우 직종 평균소득이 상용근로자 중위소득(200만 원)에 미달하는 직종은 총 147개 중 53개였다. 이 중 회계 및 경리 사무직(12.5%), 자동차 운전직(9.7%), 매장판매직(7.8%)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2008년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기업고위임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의료진료 전문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등이었다.

이러한 직종별 임금 순위는 2015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직종 평균소득이 2015년 중위소득(250만 원)에 미달하는 직종은 총 63개로 2008년에 비해 10개, 2010년(51개)에 비해 12개 늘었다. 직종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인 직종 중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직종은 회계 및 경리 사무직(11.2%), 자동차 운전직(7.4%), 매장판매직(6.6%)으로 2008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는 2008년 3.8%, 2010년

5.7%, 2015년 6.0%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70% 이상이 소득 하위 25%에 분포된 직업을 열거해보면 <표 V-9>와 같다. 2008년에 비해 2015년 해당 직종의 수가 감소하였다. 저소득 직업의 일부에서 소득분포의 변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25-50% 구간에 50% 이상의 취업자가 집중된 직종의 수는 2008년 한두 개에 불과했는데, 2015년에는 10개로 늘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종의 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저소득 직종이라도 각 직종 내 소득분포의 변이는 커지고 있다.

반면, 평균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직종은 11개로 줄어들었다.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표 V-9> 소득 하위 25% 미만 취업자가 70% 이상 종사하고 있는 직종, 2008, 2015

2008년(20개 직종)	2015년(10개 직종)
이미용·예식·의료보조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경비원 및 검표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유치원 교사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감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자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섬유·가족 관련 기능 종사자 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직물·신발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이미용·예식·의료보조 서비스종사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경비원 및 검표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주: 1) 2015년 자료는 하반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8, 2015.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금융 및 보험전문가, 행정 전문가가 2008년에는 상위 10%에 속하는 직업이었으나 2015년에는 속하지 못한 직종이다. 2008년에는 10%에 들지 못했으나 2015년에 새로 진입한 직종은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이다. 평균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직종은 2008년 10개에서 2015년 13개로 오히려 증가하였다(표 V-10).

〈표 V-10〉 소득 상위 25% 이상 취업자가 70% 이상 종사하고 있는 직종, 2008, 2015

2008년(10개 직종)	2015년(13개 직종)
기업고위임원	기업고위임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영상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영상 관리자	환경·청소·경비 관련 관리자
법률 전문가	연구·교육·법률 관련 관리자
연구·교육·법률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행정 전문가	보험 및 금융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대학 교수 및 강사	행정 전문가
의료진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판매 및 운송 관리자
	대학 교수 및 강사
	의료진료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주: 1) 2015년 자료는 하반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8, 2015.

전반적 경향을 요약하면, 중위소득 미만에서 평균임금이 형성되는 직종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5년에 늘어났으며 소득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직종의 수는 같은 기간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하위소득자의 밀집도가 강한 직종의 수는 줄어들고 상위소득자의 밀집도가 강한 직종의 수는 늘어났다.

다음으로 2008년 대비 취업자가 늘어난 주요 직종의 일자리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등 6개 직종이다. 돌봄 및 서비스 관련 3개 직종(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200만 원 미만으로 중위임금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설비 및 장치 조작 관련 3개 직종(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의 평균임금은 중위임금에 해당하는 250만 원 정도이다(표 V-11).

〈표 V-11〉 주요 취업 증가 직종의 평균 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비율, 2008, 2015

직종	직종 평균 임금 (1,000원)		중위임금 대비 비율 (%)	
	2008	2015	2008	2015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1,482	1,396	74.1	55.9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2,281	2,595	114.1	103.8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2,699	2,690	135.0	107.6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2,045	2,404	102.3	96.2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136	1,215	56.8	48.6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1,452	1,772	72.6	70.9

주: 1) 2015년 자료는 하반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8, 2015.

이렇게 보면, 2008년과 2015년 사이 한국에서 양적으로 가장 현저하게 늘어난 직종의 일자리



는 적어도 임금 면에서 볼 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직종 중 고숙련 고임금 직종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돌봄 및 단순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중위임금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더욱이 이들 직종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하락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2008년 중위임금의 74.1%에서 2015년 55.9%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56.8% → 48.6%)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72.6% → 70.9%)의 경우에도 공히 발견된다. 설비 및 장치 조작용역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상대적 임금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 분포의 변화가 대체로 소득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변화가 갖는 성별 함의도 강한데, 돌봄 및 서비스 관련 3개 직종은 여성의 비중(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59.0%,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86.6%,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91.9%)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설비 및 장치 조작 관련 직종은 남성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들 직종의 고용안정성은 일관되지 않다. 기타 단순 서비스직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낮아 2008년 81.4%, 2010년 78.8%, 2015년 86.7%가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취업하였다. 상용직을 고용계약상의 지위로 더 세분화하면 비정규직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의료·복지 서비스직은 2008년 약 30%에서 2015년 약

45%로, 사회복지 서비스직은 같은 기간 약 80%에서 88%로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고용안정성에 개선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이들 직종에 파견 및 하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도 있어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비 및 장치 조작 관련 3개 직종의 경우에도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크지 않다.

다음으로 일자리가 현저하게 감소한 3개의 직종과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거 일자리 상실이 일어난 금융업의 일자리 질의 특성을 살펴보자. <표 V-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자리가 감소한 주요 3개 직종은 건설·전기·생산 관련 관리자, 환경·청소·경비 관련 관리자, 판매·고객 서비스 관리자 등 모두 관리자 직종이다. 이들 직종은 2008년 기준 평균임금이 중위임금의 130~200%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중간소득 계층이다. 고용 감소 후 이들의 임금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하였고, 상대적 임금수준 역시 중위소득의 175~25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관리직에 대한 고용조정이 대개 중간관리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표 V-12> 주요 취업 감소 직종의 평균 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비율, 2008, 2015

직종	직종 평균 임금 (1,000원)		중위임금 대비 비율 (%)	
	2008	2015	2008	2015
건설·전기·생산 관련 관리자	4,356	6,113	217.8	244.5
환경·청소·경비 관련 관리자	3,073	5,556	153.7	222.2
기타 판매·고객 서비스 관리자	2,452	4,388	122.6	175.5

주: 1) 2015년 자료는 하반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8,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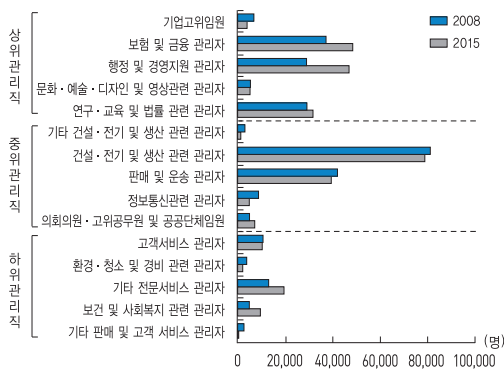
관리직의 감소가 고위관리직의 감소라기보다는 서비스 종사자나 생산직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직접 통제하는 감독자들의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V-24]는 15개 관리직종의 임금수준별 취업자 변화를 보여준다. 2008년 기준 평균임금 상위 5개 직종은 기업고위임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이다. 평균임금 하위 5개 직종은 고객 서비스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이다. 임금 상위 관리직종은 대체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임금 하위 관리직종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가폭이 상위 관리직

에 비해 적다. 비용절감 압력이 큰 현재의 경쟁적 사업 환경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법의 발전과 조직위계 축소 경향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간관리직의 감소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고용조정의 여파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 및 금융 관리자의 평균임금은 2008년 569.5만 원에서 2015년 641.6만 원으로 다소 상승한 듯 보이나 중위소득 대비 284.8%에서 256.6%로 상대임금은 다소 낮아졌다. 같은 경향이 금융 및 보험 전문가(214.7% → 198.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146.7% → 142.8%) 등 동일 업종의 관련 직종에서도 공히 발견된다. 이는 고용조정의 여파가 이들 중·고급 직종 종사자들에게 고르게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V-24] 상·중·하위 관리직종 취업자수, 2008, 2015



주: 1) 상·중·하위 관리직종은 15개 직업소분류 관리직종의 2008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높은 순으로 5개 직종씩 상·중·하로 구분한 것이다.

2) 2015년 자료는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8, 2015.

맺음말

지난 7-8년 사이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는 전반적인 고도화라기보다는 이중화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술 변화와 복잡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전문직의 증가, 특히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변호사 등 조정·중재 전문가 그리고 행정, 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사회 및 의료 복지 전문직의 경우 준전문직을 다수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들 직업은 대개 어느 정도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허락되는 좋은 일자리와 연계된다. 관리직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중간 및 하급 관리직에 감소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숙련 저임금 계층의 일자리 증가는 보다 확연하다. 일자리가 증가한 직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이들 직종의 취업자 규모 증가도 현저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일자리가 소득분위에서 하층에 분포할 뿐 아니라 일부 직종, 특히 돌봄 및 단순 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최근 7-8년간 오히려 낮아졌다.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최근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는 전문직과 돌봄, 단순조작 및 서비스직이 주도하는 이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종합할 수 있다. 특히,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이중화의 특성을 보인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분포상의 이중화 경향도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하위직, 특히 개인 및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여성화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업의 이중화가 갖는 성별 격차에 대한 함의도 상당하다.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Income & Consumpt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164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유경원 상명대학교	173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문성만 전북대학교	181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 세후소득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은 최근 완화되고 있다.
- 직종 간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점차 확대되어왔다.
- 1인가구의 상당수가 장년 및 고령층이며 빈곤층에 속한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더 높으며, 저소득층에서 이차 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다.
- 최근 모든 연령집단과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 순자산 기준으로 최근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 성과 하락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위기 시작 전부터 최근까지 소득계층별, 연령집단별, 가구특성별 소득과

소비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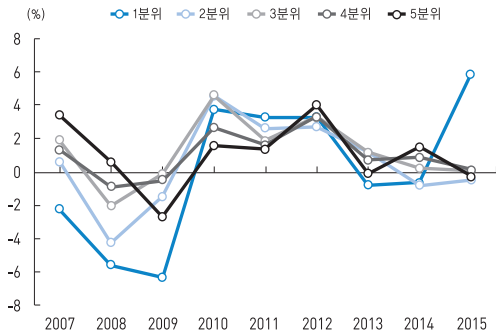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 금융복지조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그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이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가구의 특성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가구소득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각 소득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을 구한 후 연도별 증가율을 파악하였다.¹⁾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2007-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1]은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소득 분위별로 보여준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그 다음해인 2009년에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급격히 하락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2년 기간에는 평균 3%대를 회복하였으나 그 후 2013-2015년 기간에는 평균 1% 이하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추이는 경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3.4%와 3.3%로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2.5%와 2.3%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득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평균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5년 1분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반등한 것은 해당 집단 소득의 35%를 차지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17.9%)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VI-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처분가능소득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가구원수가 다른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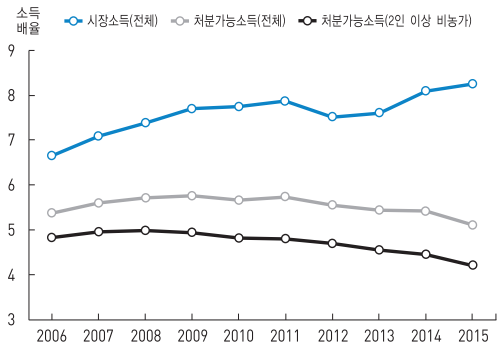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34.9	66.8	90.9	119.4	187.8
2007	34.0	66.1	90.3	119.3	190.1
2008	33.5	66.3	89.8	118.9	191.4
2009	33.1	66.0	90.7	119.5	190.5
2010	33.4	67.3	91.0	119.0	189.2
2011	33.1	67.2	91.4	118.7	189.5
2012	33.8	67.4	91.6	119.8	187.4
2013	34.1	68.1	92.2	120.1	185.4
2014	34.4	68.3	91.6	119.6	186.1
2015	36.0	69.1	92.3	118.3	184.1
2006-2015 평균	34.0	67.3	91.2	119.3	188.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1)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동일한 가구의 연도별 실질소득 변화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각 소득집단의 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집단 간 소득 변화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으로 변환하였다. 2006~2015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소득비는 34.0이고 5분위 소득비는 188.2이다. 2009년 이후 1분위와 2분위 소득은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5분위 소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06~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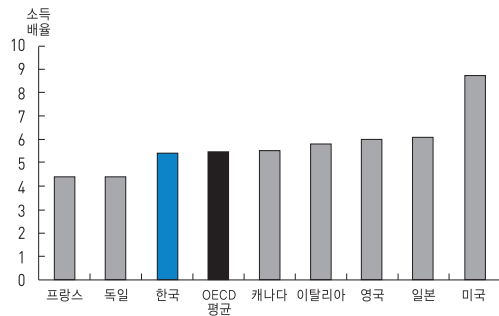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VI-2]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을 보여준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해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까지 상승하다가 2012년에 하락한 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인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06년 5.4배

에서 점차 상승하여 2009년 최고 5.8배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에는 5.1배로 낮아졌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를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와 전체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의 5분위 배율이 전체 가구보다 더 낮고 하락 추세도 더 가파르다. 이는 1인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VI-3] OECD 주요 국가의 소득 5분위 배율, 2014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2) 한국과 미국은 2014년 자료이고, 일본은 2012년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2013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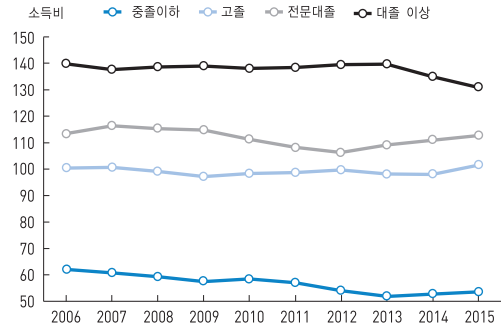
[그림 VI-3]은 OECD 주요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OECD 국가 평균 이하 수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보다는 낮고 프랑스, 독일보다는 높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이번에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20대와 60대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다. 특히, 은퇴자가 다수 포함된 60대는 더 낮다.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30대와 60대의 소득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대의 소득비는 2006년 75.6에서 2015년 66.3으로 크게 낮아졌고 같은 기간 40대와 50대의 소득비는 각각 117.8과 112.4에서 126.9와 122.1로 높아졌다. 이처럼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소득비 격차는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저성장 기조와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보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 반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중년층과 장년층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림 VI-4]는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고졸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의 소득비는 2006년 100.7과 113.4에서 2015년 101.8과 112.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대졸 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의 소득비는 2006년 139.8과 62.1에서 2015년 131.0과 53.7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VI-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06~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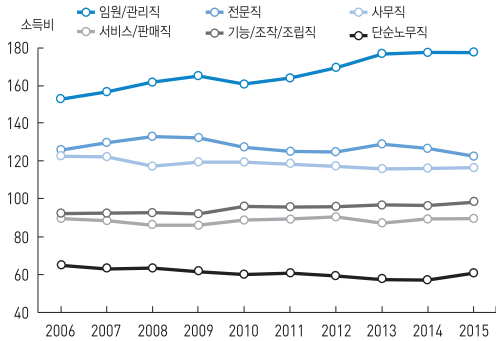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학력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차이를 보면, 2015년 기준 대졸 가구주와 고졸 가구주 간 소득비의 차이는 30대에 1.27, 40대에 1.29, 50대에 1.45로 커지다가 60대에는 1.22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VI-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임원·관리직의 소득비는 상승한 반면 전문직과 사무직의 소득비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조작·조립직과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소득비는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직종 간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6-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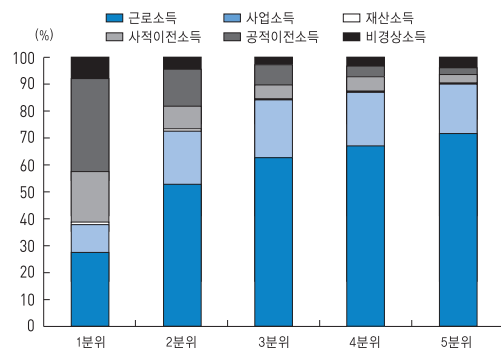
최근 고령화로 인해 1인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2015년 83.4%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저소득 1인가구가 많아진 이유는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1인가구 중 95.9%가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데, 1인가구 중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006년 42.7%에서 2015년 53.8%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1인가구의 빈곤화는 곧 고령층의 확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인가구 소득비는 2007년 46.1에서 2014년 42.3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15년에는 45.6으로 다소 회복되었는데, 이는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평균 64.7%와 19.1%로 두 소득 비중의 합이 83.8%에 이른다.

[그림 VI-6]에 제시된 2015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각각 27.0%와 52.5%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6.9%와 71.7%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그림 VI-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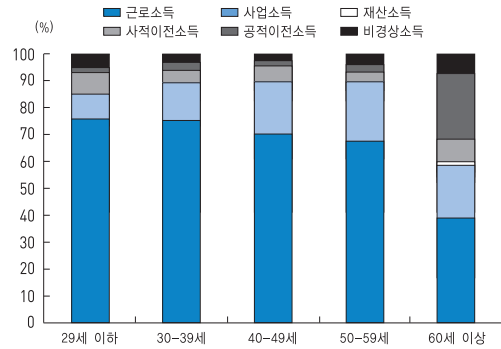
수 있다. 아울러 2006년 이후 저소득층은 근로 소득 비중이 낮아진 반면 고소득층은 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소득 비중은 소득 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006년 11.7%에서 2015년 34.8%로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1분위에 고령자 비중이 높고 동시에 최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VI-7]의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20대 75.9%에서 50대 67.5%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 사업소득 비중은 40-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은 20대와 60대에서 각각 총 소득의 14.8%와 40.0%를 차지해 청년층과 노령층에서 이차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구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기여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성 배우자 소득 비중은 2006년 13.4%에서 2015년 15.4%로 높아졌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지난 10년간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1분위의 여성 배우자 소득 기여도는 2006년 5.8%에서 2015년 7.4%로 상승하였고, 5분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6.2%에서 19.7%로 상승하였다.

[그림 VI-7]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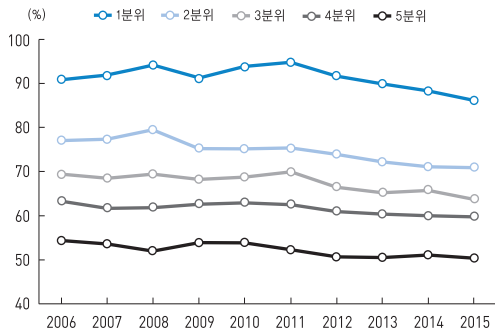
취업해 있는 여성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20대와 30대가 줄어들고 40대 이상이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40대 이상의 비중은 2006년 58.3%에서 2015년 71.2%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취업 여성 배우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2006년 40.6%에서 2015년 30.7%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전문·관리직 비중과 사무직 비중은 각각 14.1%에서 23.5%, 15.4%에서 18.8%로 높아져 여성 근로자의 직종이 보다 고소득 직종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지출과 가계수지의 변화

가구소득은 가구지출의 재원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가구지출 또한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70.5%에서 2011년 70.2%로 유지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5년 65.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I-8]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낮다. 2011년 이후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낮아진 가운데 특히 1분위 소득계층의 하락 폭이 크다.

[그림 VI-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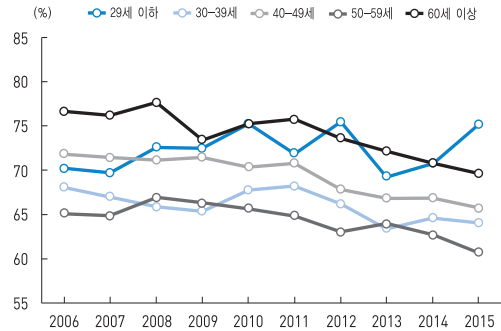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1분위 가구 중 소비지출 비중이 200%가 넘는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9]는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구주 연령이 20대이거나 60대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30대, 50대 가구의 순으로 높다. 2011년 이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의 가구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낮아졌다.

[그림 VI-9]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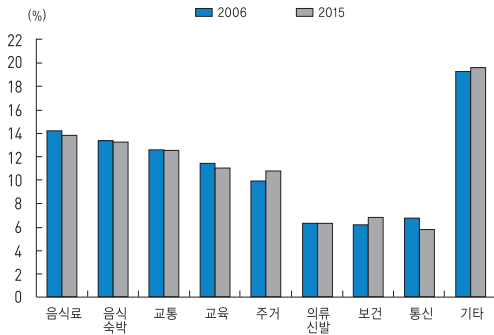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평균 소비지출 대비 1인가구의 소비지출 비는 2015년 기준 47.6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1인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우선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VI-10]에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지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교육과 통신 지출 비중이 줄어든 대신 주거와 보건 지출 비중이 늘어났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 음식 및 숙박, 교통, 주거, 교육 지출이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항목의 가격 변화가 한국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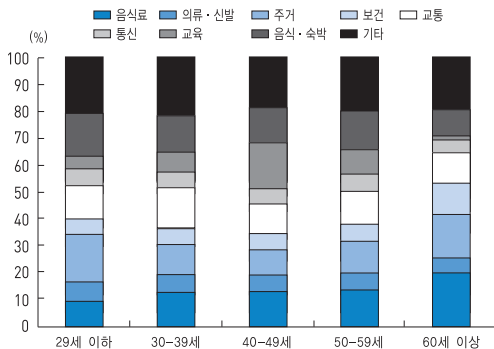
[그림 VI-11]에는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지출 항목들 중

[그림 VI-10]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06, 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 2015.

[그림 VI-11]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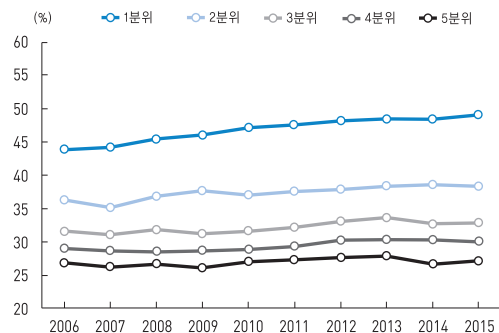
의식주 지출 비중은 40대가 28.5%로 가장 낮고 20대가 34.1%로 높은 편이며 60대 이상은 41.4%로 매우 높다. 보건 지출 비중은 60대가 11.6%로 다른 연령집단 평균인 6.0%의 두 배 수준이다. 교육 지출 비중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주로 학령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대와 50대가 각각 17.1%와 9.3%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40대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의식주, 보건 등의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아 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다른 소비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VI-12]는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의식주 지출 비중은 2010년과 2015년 사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상승하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의식주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6.9%에서 2015년 17.9%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비소비지출 중 경상 및 비경상 조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006년 2.3%에서 2014년 2.8%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금과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3%와 2.0%에

[그림 VI-12] 가구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비율, 2006-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의식주 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료·신발, 주거·수도·광열 등의 지출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 2.7%와 2.9%로 높아졌다. 한편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2015년 기준 2분위 1.7%, 3분위 2.1%, 4분위 2.9%, 5분위 4.6%로 조세의 누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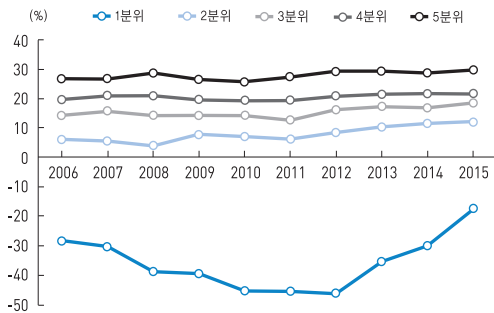
가구 입장에서는 소득이 지출보다 크면 흑자를 볼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적자를 볼 것이다.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다시 소득으로 나눈 것을 가계흑자 비율이라고 할 때, 이 비율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3]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2010년과 2015년 사이 2~5분위 소득계층은 흑자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1분위 소득계층은 적자 상태인데, 2012년까지 적자 비율이 높아지다가 이

후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자산과 부채 실태를 살펴보았다.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의 64.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는데, 1분위의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32.0%에 불과하나 5분위는 그 비율이 80.7%에 이른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30%이고 1분위 148%, 2분위 144%, 5분위 131% 등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2~2015년 기간 동안 평균 4.4%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21.2%와 13.4%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의 순자산은 3.3% 증가하는 데 그쳤고 5분위의 순자산은 오히려 1.5% 감소하였다. 전체 순자산에서 각 소득분위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7.6%이고 5분위는 44.1%로 두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5.8배이다. 이는 2012년 7.1배에서 낮아진 수치이다. 같은 기간 1분위와 2분위의 점유율은 다소 높아진 반면 4분위와 5분위의 점유율은 낮아져 순자산 불평등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I-13]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2006~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가계흑자비율은 가구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1분위의 경우 월소득 10만 원 이하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유경원 (상명대학교)

- 최근 가계부채가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가계부채 상환부담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고소득층의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층은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 부채규모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에서 가장 크지만, 부채 증가율은 고령층에서 가장 높다.
-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지 못해 최근 가계부채 관련 위험가구가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바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환부담의 변화 및 계층별 특성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 위험가구의 규모와 그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상환부담 수준을 살펴보고,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 자산규모, 연령집단별 가계부채의 특징을 분석한다. 아울러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여 부채 관련 위험가구의 규모 등을 파악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저금리의 지속, 주택시장의 호조 등으로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대가 향후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등 최근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경험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 압류, 급매, 자산가격의 하락, 가계재무 여건의 악화,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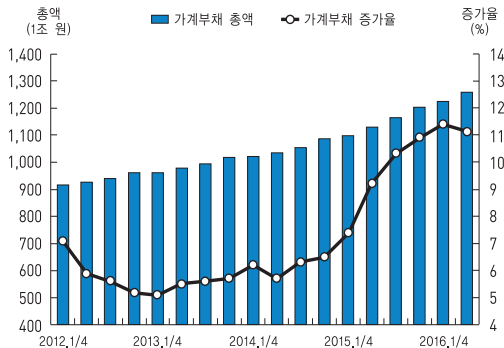
가계부채 규모와 원리금 상환부담

한국의 가계부채¹⁾ 규모는 2012년 말 963조 원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6월 말 현재 약 1,257조 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전년 대비 2012년 말 5.2%에서 2015년 말 10.9% 그리

1)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채 거시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가계신용통계」와 「자금소환통계」이다. 임대보증금은 가계 간 상호거래로서 거시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후 미시자료 분석 시에도 일관되게 금융부채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고 2016년 6월 말 전년 동기 대비 11.1% 높아져 증가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VI-14).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신규분양이나 재개발 입주를 앞둔 차주 집단에게 일괄승인 방식으로 실행되는 집단대출이 증가하여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주택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상당 기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I-14] 가계부채 총액, 2012. 1/4-201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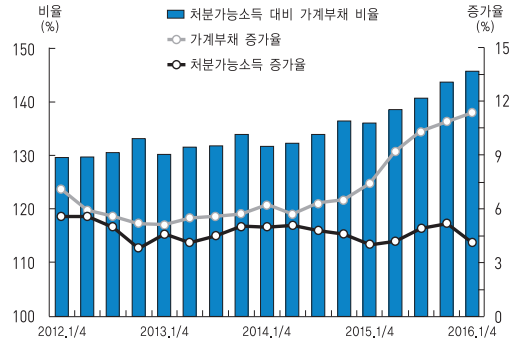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2016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보도자료, 2016. 8.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2015년 말 143.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에 비해 빨랐으나 증가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차이가 확대되어 처분가능

[그림 VI-15]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2. 1/4-2016. 1/4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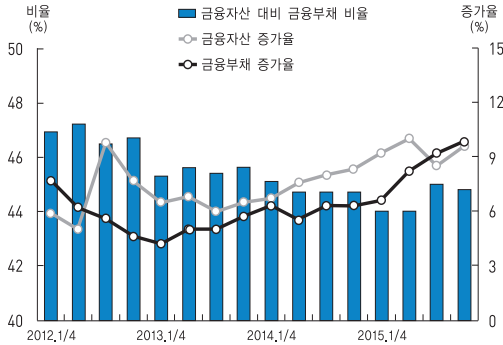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VI-15). 이처럼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가계부채의 건전성 지표라 할 수 있는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2년 말 46.7%에서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소 상승하여 2015년 말 현재 44.8%이다(그림 VI-16). 그동안 가계부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일부 줄여 주었으나, 최근 금융부채의 빠른 증가와 금융자산 축적의 부진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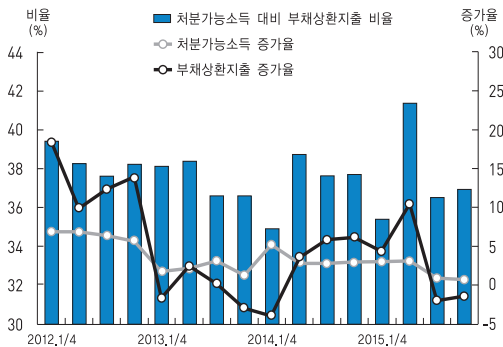
가계부문의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2015년 말 36.9%로 전년 동기 대비 0.8%p 하락하였다(그림 VI-17).

[그림 VI-16]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12. 1/4-2015. 4/4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그림 VI-17]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
2012. 1/4-2015.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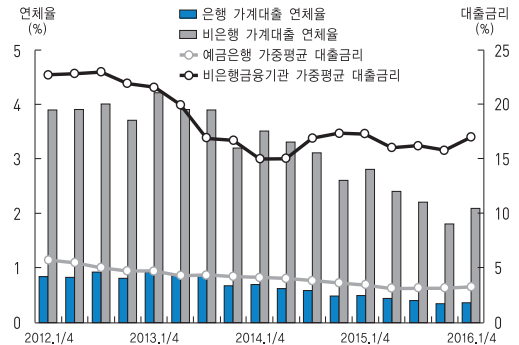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부채상환지출에는 현금서비스 및 할부구입 관련 신용카드 상환액뿐만 아니라 일시불 결제대금 등 모든 신용카드 상환액이 포함됨.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이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부채상환지출이 소폭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의 영향과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부채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3월 말 현재 0.36%로 2013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은행권 여신규제 강화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높고 이자율 격차도 줄지 않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3년 4.2%에서 하락하여 2016년 3월 말 2.1%로 은행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VI-18).

[그림 VI-18]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2012. 1/4-201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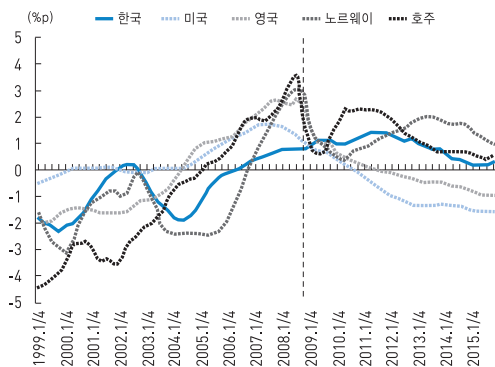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거시자료를 토대로 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국제 비교를 위해 국제결제은행, 즉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을 보면, 한국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DSR이 장기 평균에 근접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DSR은 가계 신용 확대에 의한 금융위험의 예측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림 VI-19]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 DSR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향후 금리 등 거시경제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19] 주요 국가의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의 변화, 1999-2015



주: 1) 통계치는 해당 국가의 1999년 1/4분기-2015년 4/4분기까지의 평균값 대비 해당 시점 값의 편차(%p)임.

2) 수직 점선은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3/4분기를 의미함.

출처: BIS, Data: Debt Service Ratios, 2016, 8.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와 원리금 상환부담

가계의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거시자료로 가계부채 관련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

득, 자산, 가구주 연령 등 가구특성별로 부채규모와 상환부담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13-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며 특히 최고 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부채규모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월등히 크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보유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1분위 가구의 25.8%, 5분위 가구의 71.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3개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 소득계층(4, 5분위)의 금융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V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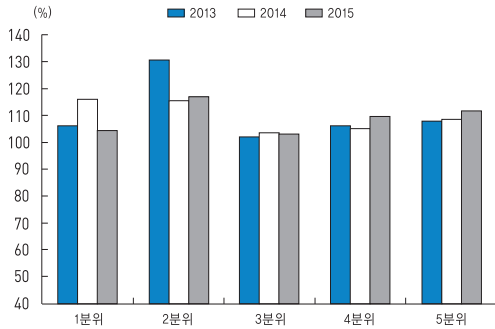
〈표 VI-2〉 소득계층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가구당 보유액, 2013-2015

소득계층	보유가구 비율(%)			가구당 보유액(만 원)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1분위	29.0	27.3	25.8	759	838	797
2분위	58.7	56.9	53.7	2,371	2,250	2,341
3분위	69.3	67.4	65.8	3,042	3,278	3,373
4분위	73.6	72.1	71.1	4,677	4,873	5,241
5분위	72.6	72.2	71.3	9,019	9,350	9,850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소득수준에 따라 부채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를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2분위 가구가 소득 대비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분위 가구와 4분위 가구는 최근 들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V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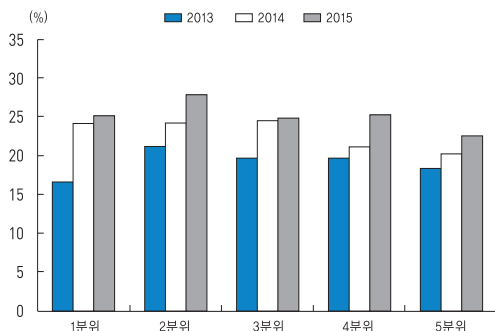
[그림 VI-20] 소득계층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13-2015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부채규모가 작은 2분위 가구의 상환부담이 오히려 가장 크고 부채규모가 큰 5분위 가구의 상환부담이 반대로 가장 작다(그림 VI-21). 이는 앞서 [그림 VI-18]에

[그림 VI-21] 소득계층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013-2015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서 보았듯이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대출금리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연령집단별 가계부채와 원리금 상환부담

금융부채 보유액과 보유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와 50대가 보유액도 많고 보유율도 높은 반면 사회진입기인 20대와 은퇴시기인 60대는 보유액도 작고 보유율도 낮다. 부채보유 패턴이 대체로 생애주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표 V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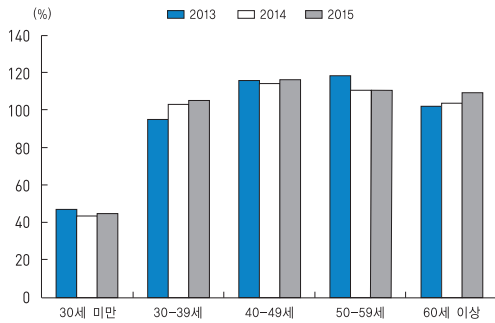
〈표 VI-3〉 연령집단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가구당 보유액, 2013-2015

연령집단	보유가구 비율(%)			가구당 보유액(만 원)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30세 미만	53.6	49.9	49.6	1,218	1,287	1,322
30-39세	70.7	70.7	68.2	3,735	4,192	4,393
40-49세	74.2	72.6	70.1	5,043	5,089	5,342
50-59세	67.1	65.2	64.6	5,313	5,256	5,414
60세 이상	35.7	34.7	35.2	2,249	2,388	2,693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금융부채 보유 패턴과 유사하게 40대와 50대의 부채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대의 부채비율은 낮지만, 60대의 부채비율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30대보다 오히려 높다(그림 V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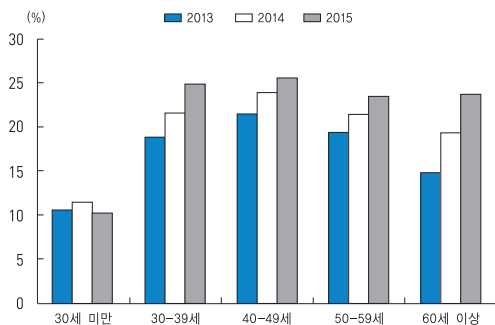
[그림 VI-22]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13-2015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연령대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살펴보면, 부채규모가 큰 40대의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VI-23).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고령층의 부채비율과 상환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VI-23]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013-2015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가계부채 위험집단

가구의 소득, 자산, 연령 계층별로 구분하여 부채규모와 원리금 상환부담을 살펴본 결과, 현금흐름, 자산보유, 생애경제활동 측면에서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금흐름과 자산보유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작은 고소득자와 고자산가가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생애경제활동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의 부채보유와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비록 부채규모나 부채 비중은 작지만 저소득층(1, 2분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들을 가계부채의 취약 계층으로 남게 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고자산가들이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산의 뒷받침을 받기도 하지만 소득 대비 부채규모와 원리금 상환부담 역시 커서 현금흐름상의 위험, 즉 유동성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로 보았을 때 40-50대 가구에 비해 60대 이상 가구는 부채보유 비중이 낮고 부채규모도 작다. 하지만 이들의 상환부담이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어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고령가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관련 위험가구의 전반적인 규모를 부채상환 가능성 측면에서 파악해 보기로 한다. 부채의 상환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하는데,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소득과 금융자산이 충분한지와 상황이 불투명할 경우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가 그 기준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련 위험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를 정의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 2,000가구로, 이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로 추정된다. 한계가구는 최근 금융부채의 빠른 상승으로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늘어났고 금융부채 보유비중도 0.5%p 상승했다(표 VI-4).

부실위험가구는 2015년 기준, 111만 4,000가구(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0.4%)이고, 이들이 보

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0.1%에 달한다. 전년 대비 부실위험가구 수는 3만 2,000가구가 늘어났고 부채비중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VI-4).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로 중복 판별된 가구는 54만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약 5% 정도로 추정된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로 중복 판별된 가구에는 저소득층(1, 2분위), 40대,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볼 때,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2015년 기준 약 54만 가구에서 134만 가구,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5.0~12.5%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10가구 중 1가구가 다양한 부채 관련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위험가구 비중을 고려하면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4년 16만 6,000건에서 2015년 15만 4,000건으로 줄었고 2016년 5월 말 기준 6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 감소하였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채무조정건수는 2014년 8만 5,000건에서 2015년 9만 2,000건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I-24). 최근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공적 및

〈표 VI-4〉 가계부채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가구의 수와 금융부채 비율, 2014, 2015

연도	한계가구		부실위험가구	
	가구수 (1만 가구)	금융부채 비율(%)	가구수 (1만 가구)	금융부채 비율(%)
2014	130.3	28.6	108.2	19.1
2015	134.2	29.1	111.4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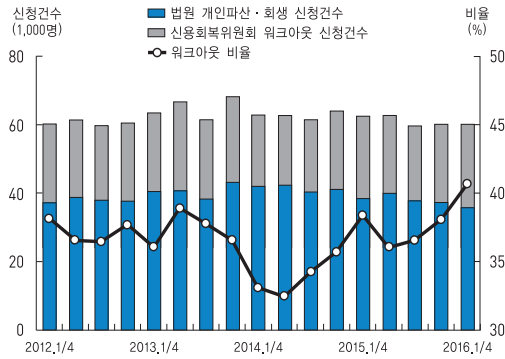
주: 1)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임.

2) 부실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임.

3)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금융부채 중 해당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그림 VI-24]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 신청건수, 2012. 1/4-2016. 1/4



주: 1) 워크아웃 비율은 전체 채무조정 신청건수 중 워크아웃 신청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사적 채무조정 신청규모는 분기당 6만 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매년 23만 건에서 25만 건 정도의 개인채무조정이 공적 및 사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의 소득 증가 추세에 비해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험가 구도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공적 및 사적 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매년 20만 건 이상의 개인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깊 어지거나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위험가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항상 필요하다.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문성만 (전북대학교)

- 1인 청년가구에서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으며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흑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외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남녀 모두 외식비지출이 식료품지출보다 많다.
- 식생활 관련 지출 비중은 남녀 모두 낮아지고 있다.
-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주거 관련 지출 비중은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그 반대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 추세는 모든 연령층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그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은 세대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5-39세 청년층 1인가구 중 약 88.5%가 미혼 가구이지만 60세 이상 노년층 1인가구의 경우 약 79.4%가 사별 가구이다. 1인 청년가구의 소득은 1인 노년가구의 소득보다 매우 높다. 소득 원천도 청년가구는 근로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노년가구는 이전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글은 이러한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 연령이 25-39세인 1인 청년가구¹⁾의 소득과 소비 활동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가계동향조사」가 전국 1인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이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명목변수를 실질변수로 변환하였다.

1인 청년가구의 규모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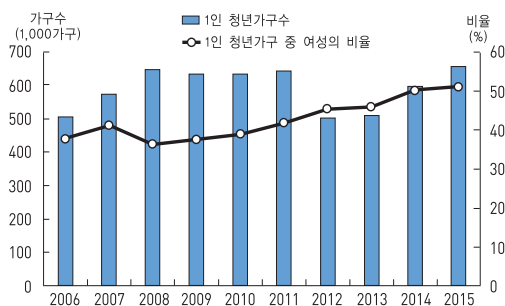
1인 청년가구는 2015년 현재 약 65만 5,000가구이다. 통계청이 1인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과 비교하면 29.8% 증가하였다(그림 VI-25). 반면, 이 기간 동안 2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청년가구는 약 21.1% 정도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만혼과 비혼의 급속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추세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통해 2인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대신

1) 이 글에서는 25-39세 인구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독신으로 남아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는 주로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2006-2015년 기간 동안 1인 남성 청년가구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1인 여성 청년가구는 75.9% 증가하였다. 1인 청년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7%에서 2014년 50.0%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51.1%로 여성가구가 남성가구보다 많아졌다.

[그림 VI-25] 1인 청년가구 수와 여성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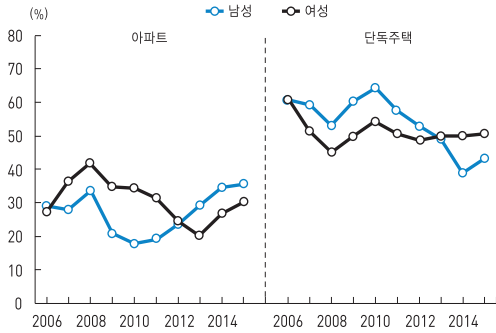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관련이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9.9%에서 2015년 62.9%로 높아졌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67.5%에서 2015년 72.9%로 상승하였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1인 청년가구의 교육수준은 지난 10년간 높아졌다. 2006년에는 1인 여성 청년가구 중 59.3%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졌지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80.4%에 달한다. 남성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고학력자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다. 1인 여성 청년가구 대다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2006년에는 1인 여성 청년가구 중 86.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지만, 2015년에는 95.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남성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여성의 도시 거주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학력수준이 높고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는 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했던 청년들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으로 거주를 바꾸는 경향이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2006년에 1인 청년가구의 88.9%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75.4%만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5년에는 이 비율이 80.0%로 다시 상승하였다.

1인 남성 청년가구의 아파트 거주는 2008년부터 감소하여 2010년에 저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아파트 거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단독주택에 더 많이 거주하였지만 최근 2년간 이 현상이 역전되었다(그림 VI-26).

[그림 VI-26] 1인 청년가구 가구주의 성별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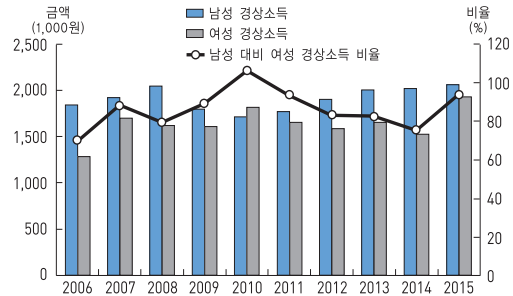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1인 청년가구의 입주형태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2006년에 1인 남성 청년가구 중 11.9%가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22.7%로 상승하였다. 반면, 월세 비중은 남녀 모두 낮아졌다. 2006년에 1인 여성 청년가구 중 40.9%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였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29.6%로 하락하였다. 남성가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지난 10년간 전세로 사는 남성가구와 여성가구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해 왔다.

1인 청년가구의 소득

가구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발

생하는 정상소득과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정상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1인 청년가구의 정상소득의 변화와 그 원천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10년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정상소득 수준은 2010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남성에 비해 낮았다. 평균적으로 여성 소득은 남성의 약 86% 수준이다(그림 VI-27). 이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보다는 적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1인 여성 청년가구의 높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VI-27]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실질 정상소득,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상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 가구소득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인 남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2006년 87.3%에서 2015년 75.0%로 하락하였다. 이 추세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았던 여성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2006년 74.6%에서 2015년 71.3%로 낮아졌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1인 남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사업소득 비중은 2006년 6.8%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8.9%로 높아졌다.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사업소득 비중도 2006년 10.5%에서 2015년 21.9%로 상승하였다(그림 VI-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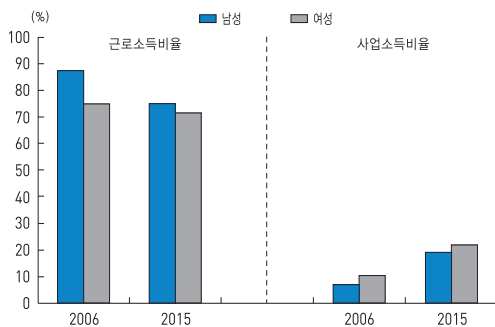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청년가구 모두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사업소득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기업들의 청년고용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기업들의 청년고용 감소가 청년창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인 남성 청년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2006년 7.4%였는데 2015년에는

12.2%로 상승하였다. 여성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 청년가구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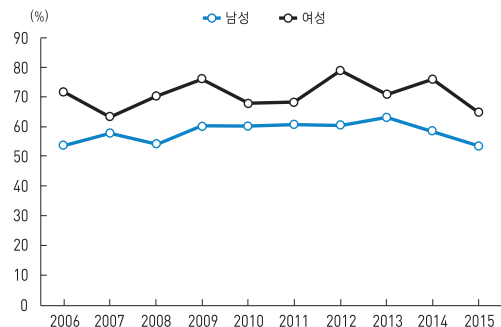
다음으로 1인 청년가구의 소비성향과 소비패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계의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지출은 의식주 등 생계와 관련된 지출과 교통 및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등과 관련된 지출을 포함한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및 사회보장,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지난 10년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다. 평균적으로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70.8%이지만 1인 남성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58.2%에 불과하다(그림 VI-29). 이는 소득이 같더라도 여

[그림 VI-28]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구성, 2006, 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29]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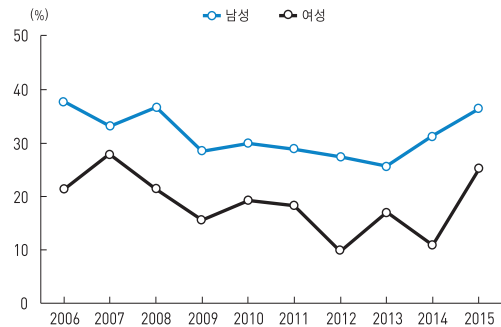
소득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절대 지출액을 비교하더라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높다. 2015년 기준 여성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은 약 125만 원인데 남성의 소비지출은 약 110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만 원을 더 지출한다. 이러한 추세는 연령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인 25-29세 혹은 30-34세의 여성은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모든 연도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다. 35-39세 여성 또한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거의 모든 연도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비지출 성향이 낫다는 기존의 통념과 배치된다.

소비지출 비중과 달리 비소비지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다. 평균적으로 1인 남성 청년가구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7.2%이고 여성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5.7%이다. 이는 비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와 연금이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남성의 비소비지출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구의 지출이 소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저축하거나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에 따르면, 가계흑자율은 가계의 총 소득에서 소비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을 뺀 금액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

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지난 10년간 줄곧 1인 남성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여성 청년가구보다 훨씬 높다. 2015년 기준 1인 남성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36.4%인데 여성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25.3%에 불과하다(그림 VI-30).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과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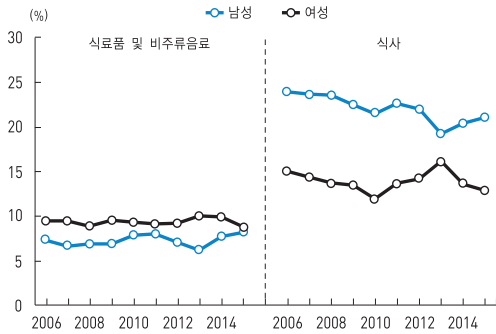
[그림 VI-30]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가계흑자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가계흑자율은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금액을 가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인 청년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패턴을 살펴보자. 가구원의 식생활과 관련된 지출항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식사 등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은 가정에서 음식 장만을 위한 재료의 지출을 포함하며, 식사지출은 식당음식과 배달음식 등을 포함한 외식비와 단체식비를 포함한다. 먼저, 지난 10년간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식사지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그림 VI-31).

[그림 VI-31]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식생활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러한 추세는 남성의 외식 의존도가 여성보다 높다는 통념과 일치한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식사지출 비중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보다 훨씬 높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3배 정도 외식에 더 많이 지출하였고 여성은 약 1.5배 정도 외식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는 근로활동을 하는 1인 가구의 가정식 생산의 기회비용이 외식비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비주류음료, 식사 지출 총합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경우 2006년에 이 비중이 31.3%였으나 2015년에는 29.3%로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4.5%에서 21.6%로 낮아졌다. 이 추세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지출 대비 식생활과 관련된 지출의 비중이 낮아진다고 예측하는 엥겔의 법칙에 부합된다. 그러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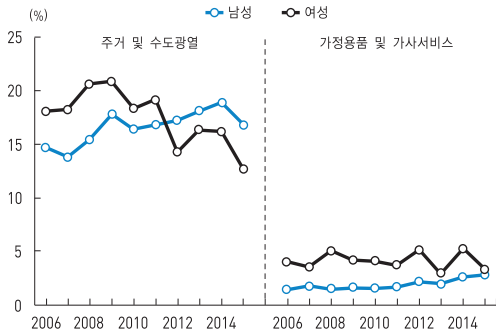
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여성보다 식생활 관련 지출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청년가구의 의류 및 신발 관련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의류 및 신발지출 비중은 남성보다 꾸준히 높다. 2015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여성 9.5%, 남성 6.3%이다. 이는 여성이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 및 신발에 남성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기존의 통념에 부합된다.

가구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지출은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를 포함한다.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은 실제 주거비, 연료비, 주택유지 및 수선 비용 등을 포함한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은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사용품, 가사서비스 지출 등을 포함한다.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은 2006-2011년에는 줄곧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2012-2015년에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2006년에는 여성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이 18.0%이고 남성은 14.7%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여성의 경우 12.7%로 낮아졌고 남성의 경우에는 16.7%로 높아졌다(그림 VI-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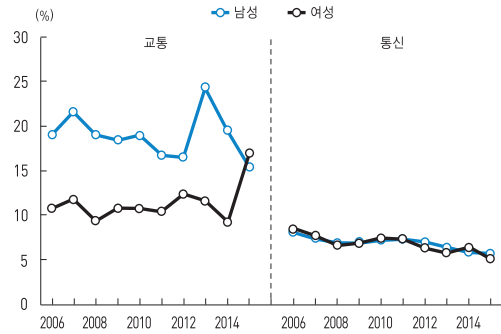
이는 남성들의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와 주거공간 사용면적의 증가로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제 주거비와 연료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 2006-2011년

[그림 VI-32]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주거생활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33]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교통 및 통신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는 1인 남성 청년가구의 주거공간 평균 사용면적은 42.0㎡이고 여성가구의 평균 사용면적은 43.9㎡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넓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2012-2015년에는 남성가구의 평균 사용면적은 47.8㎡이고 여성가구의 평균 사용면적은 45.1㎡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소비지출 대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 비중은 5% 내외로 낮은 가운데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그림 VI-32). 이는 여성이 가구나 실내장식, 주방기구 등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들 항목에 남자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구원의 근로활동과 여가활동에 필수적인 교통 및 통신 관련 지출을 살펴보자. 교통지출은 자동차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비용, 운송기구 연료비,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항공요

금 등을 포함한다. 통신지출은 일반전화기 및 이동전화기 구입비, 통신요금 등을 포함한다.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통지출 비중은 2015년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2006년에 남성의 교통지출 비중은 19.1%이고 여성의 교통지출 비중은 10.8%에 불과하였다(그림 VI-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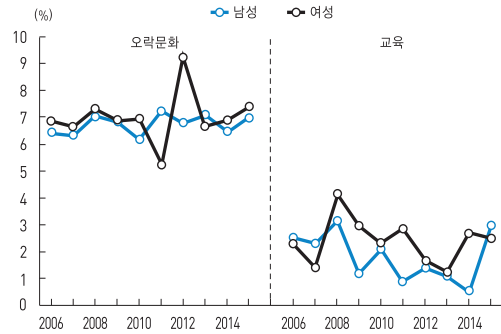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동차 구입을 많이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구입한 차량의 유지와 보수, 연료비 등에 대한 지출이 여성보다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에 1인 남성 청년가구는 약 0.54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으나 1인 여성 청년가구는 약 0.12대를 보유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5년에는 남성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0.50대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는데 여성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0.29대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5년 여성의 교통지출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는 여성의 신차구입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지출 대비 통신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줄곧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그림 VII-33). 이는 통신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전화기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패턴에 남녀 간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통신지출 비중은 꾸준히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이동전화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

오락문화지출은 가구원의 여가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지출은 가구원의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다. 오락문화지출은 영상음향 및 정보 기기,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 관련용품 및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교육은 정규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기타교육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평균 7.0%이고 남성의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평균 6.7%이다. 운동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다. 소비지출 대비 교육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그러나 지출액 규모는 크지 않다(그림 VII-34). 이는 교육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미 대다수의 가구주들이 수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VII-34]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오락문화 및 교육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항목들 외에, 남성과 여성의 지출패턴에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항목들을 살펴볼 것이다. 소비지출 대비 이 항목들의 비중은 아주 낮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험기피 성향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운송 관련 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화재보험·연금보험 가입, 복권 구입, 택시비 등의 지출이 있는데, 이 중 보험과 택시 관련 지출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반면, 복권 구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10년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0배 이상 복권 구입에 많이 지출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기피적 소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부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지출하지만 가구 간 이전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정도 더 많이 지출한다.

주류지출과 담배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꾸준히 많다. 지난 10년간 주류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2배 많고 담배지출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6.8배나 많다. 남성의 담배지출액은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에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2015년에 시행된 담배세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담배지출액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감소하였는데, 여성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추론된다. 주류지출액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주류지출 대비 담배지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 10년간 낮아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2006년에 주류보다 담배에 4.5배 많이 지출하였지만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2배로 낮아졌다(그림 VI-35). 이는 소비지출 대비 담배지출 비중이 지난 10년간 빠르게 낮아진 반면 소비지출 대비 주류지출 비중은 계속 높아진 것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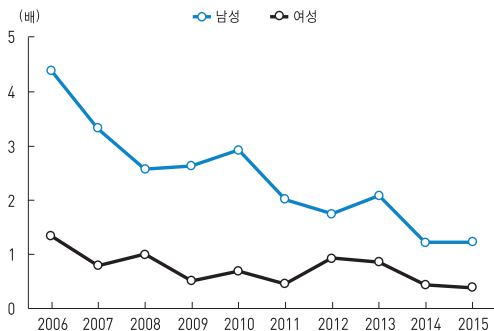
련이 있다. 남성은 지난 10년간 줄곧 주류지출에 비해 담배지출이 많지만, 여성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주류지출이 담배지출보다 많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25-39세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성별로 비교하였다. 사회 통념에 반하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높으며 가계의 저축률을 반영하는 가계흑자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25-39세 연령층은 2인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가구,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지 못한 켄거루가구를 포함한다.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주된 차이는 결혼 여부에 있으며, 2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는 자녀 유무에 있다. 특히,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소득과 소비 양상에 대한 비교분석은 최근 늘어나는 청년층의 비혼과 만혼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득과 소비 양상에 대한 비교분석은 최근 늘어나는 무자녀가구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향후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VI-35]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주류지출 대비 담배지출의 비,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Culture &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I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192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차승은 수원대학교	201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배 영 송실대학교	208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국민 10명 중 6명은 주말이나 휴일에 TV시청이나 휴식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주로 하고 관광, 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 취미 및 자기개발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꼽는다.
- 문화예술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명 중 2명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이는 주로 영화 관람률 상승에 의한 것이다. 다른 장르의 관람률은 정체되거나 하락하였다.
- 여가만족도는 2013년과 큰 차이가 없이 4명 중 2명은 보통이고 1명은 만족, 1명은 불만족하는 수준이다. 여가 불만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와 여가 모듈 항목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이 수집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가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여가활동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여가의 기반을 살펴본 후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의 동향을 분석하고 여가만족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을 둔 사업들을 포함하여 문화융성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광복 70주년, 한불 수교 130주년 등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2015년에는 6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많은 문화행사들이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 여행 및 관광 활동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도 한국의 영화산업은 지난 2013년 총 관객 2억 명을 넘어선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1,000만 명 관객의 영화가 두 편이나 배출되었으며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여가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 인프라가 최근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Ⅶ-1>을 보면 박물관과 공공도서관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은 2005년 358개에서 2015년 780개로 증가하였고, 공공도서관은 2005년 514개에서 2015년 978개로 늘어났다. 미술관도 동 기간 80개에서 202개로 증가하였다. 최근까지 계속 신설되었던 문예회관은 2015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05-2015

연도	박물관	미술관	공공 도서관	등록 공연장	문예 회관
2005	358	80	514	503	150
2006	399	92	564	558	155
2007	511	115	600	589	160
2008	579	128	644	619	167
2009	630	131	703	639	182
2010	655	141	759	637	193
2011	694	146	786	751	209
2012	740	171	828	826	211
2013	740	190	865	881	220
2014	745	190	930	992	232
2015	780	202	978	-	22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운영실태조사」, 각 연도: 「미술관운영실태조사」, 각 연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재화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문화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졌다. 문화산업의 매출규모는 2014년 94조 9,5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3년의 91조 2,100억 원에 비해 3조 7,4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캐릭터산업의 매출이 2013년에 비해 1조 7,400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VII-2).

문화여가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10세 이상 국민의 여가시간은 평균 4시간 49분으로 2009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 전체 생활시간 중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과 같은 의무생활시간은 2009년에 비해 20분 줄어들고 수면, 식사와 같은 필수생활시간은 2009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1-2014

(1조 원)

	2011	2012	2013	2014
총 매출액	82.97	87.27	91.21	94.95
출판	21.24	21.10	20.80	20.59
만화	0.75	0.76	0.80	0.85
음악	3.82	3.99	4.28	4.61
게임	8.80	9.75	9.72	9.97
영화	3.77	4.40	4.66	4.57
애니메이션	0.53	0.52	0.52	0.56
방송(영상)	12.75	14.18	14.94	15.77
광고	12.17	12.48	13.36	13.74
캐릭터	7.21	7.52	8.31	9.05
지식정보	9.05	9.53	10.39	11.34
콘텐츠솔루션	2.87	3.03	3.44	3.89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통계」, 각 연도.

년에 비해 21분 늘어났다. 의무생활시간이 줄면서 생긴 여유를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데 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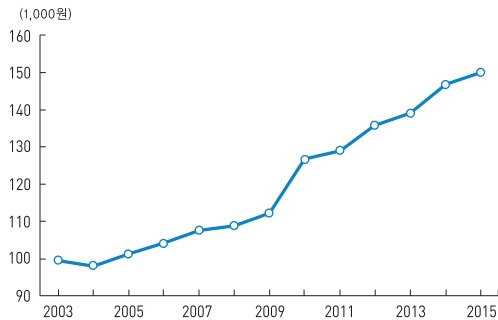
여가시간을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 4시간 58분, 여성 4시간 40분으로 남성의 여가시간이 18분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5년 전에 비해 3분 줄어든 것으로 여성의 여가시간에는 변화가 없으나 남성의 여가시간이 5년 전보다 3분 줄어든 결과이다. 여가활동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 시간이 11분 더 길고 집단 게임 및 놀이,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 개인 취미활동, 유흥 등을 포함하는 기타 여가활동 시간이 24분 더 길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제활동 시간이 10분 더 길고 TV시청 시간이 3분 더 길다.

여가비용의 변화는 대체로 여가시간의 변화

와 연동되어 나타났으나 다른 양상도 혼재되어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의 2014년 결과에 따르면, 실제 여가비용은 증가하고 희망 여가비용은 감소하여 실제 비용과 희망 비용 간의 차이가 2012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여가비용은 2006년 14만 2,000원에서 2007년 12만 2,000원으로 감소한 후 2010년 16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2만 5,000원과 13만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였다. 희망 여가비용은 2006년 24만 3,000원에서 2007년 19만 8,000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 26만 6,000원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19만 8,000원으로 감소하였는데 2014년에도 18만 9,000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파악되는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만 원 대였다가 2009년 11만 원을 넘어선 후

[그림 VII-1]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액,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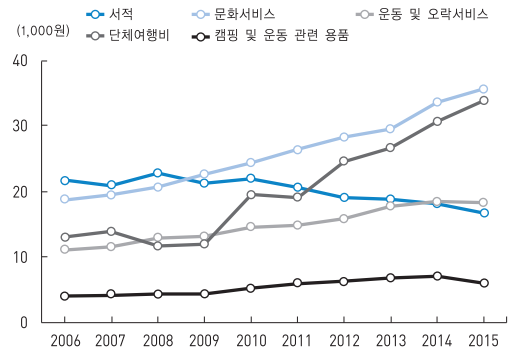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4만 9,908 원이 되었다(그림 VII-1).

오락문화비를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증가 추세인 것은 문화서비스, 단체여행, 운동 및 오락 서비스 지출이고 감소 추세인 것은 서적 지출이다. 캠핑 및 운동 용품 지출은 증가해 오다가 감소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연 및 극장 관람, 공원 및 관람 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이용, 방송수신료, 기타 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문화서비스 지출이고, 증가 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체여행비 지출이다(그림 VII-2).

[그림 VII-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6-2015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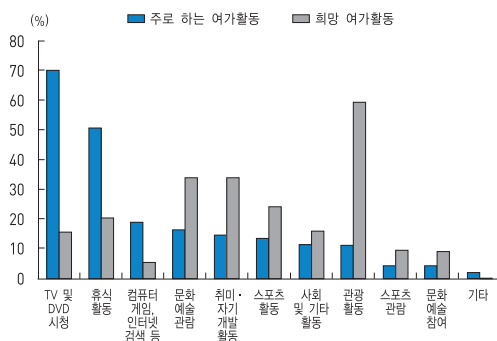
여가활동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42.5%로 가장 많고, 수면이나 사우나와 같은 휴식이 16.7%로 두 번째



로 많다. 이어 스포츠활동(7.3%), 봉사·종교·사고 등 사회 및 기타 활동(7.1%),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6.5%), 취미 및 자기개발(6.5%), 문화예술관람(5.2%), 관광활동(4.8%) 등의 순이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도 비슷한데, TV시청(69.9%)과 휴식(50.8%)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외에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19.0%), 문화예술관람(16.5%), 취미 및 자기개발(14.7%), 스포츠활동(13.4%), 봉사·종교·사고 등 사회 및 기타 활동(11.3%), 관광활동(11.1%) 등의 순이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관광이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람(12.2%), 스포츠활동(12.2%), 취미 및 자기개발(10.9%) 등이 많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에서도 관광이 59.4%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문화예술관람(34.2%), 취미 및 자기개발(34.2%), 스포츠활동(24.1%) 등이 따르고 있다(그림 VII-3).

[그림 VII-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5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다중응답(1~3순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

2015년 「사회조사」의 여가활동 항목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즉, 현재 하는 여가활동에서는 TV시청과 휴식과 같은 소극적인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는 관광, 문화예술관람, 자기개발, 스포츠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이전 결과와 비슷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스포츠관람, 스포츠활동,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휴식, 문화예술관람, 사회 및 기타 활동이다. 희망하는 여가활동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남녀 간 차이가 확연히 존재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스포츠관람, 스포츠활동,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문화예술관람, 취미 및 자기개발, 사회 및 기타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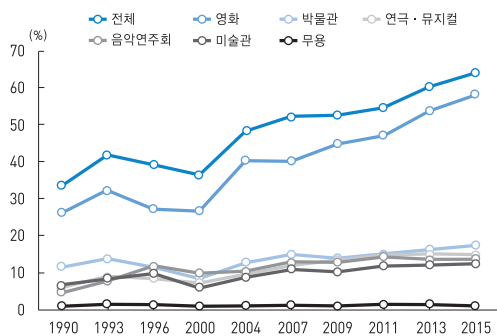
여가활동 동반자로는 가족이 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가 20.2%, 혼자가 19.1%이며 동호회는 6.4%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친구인 경우가 21.9%이고 혼자인 경우가 20.3%로 여성보다 각각 3.4%p와 2.4%p 높다. 여성은 가족이 57.5%로 남성의 51.0%보다 6.5%p 높다.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관람에 참여한 국민의 비율은 전제적으로 높아졌다. 영화가 58.2%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박물관(17.5%), 연극·뮤지컬(14.7%), 음악연주회(13.5%) 미술관(12.6%) 등이 비슷한 수준이며 무용(1.1%)이 가장 낮다(그림 VII-4). 문화예술공연을 최소한 한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인구를 나타내는 문화예술관람률은 63.9%로 2011년 54.5%, 2013년 60.1%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문화예술관람률의 상승은 주로 영화관람 인구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영화관람률은 2013년에 비해 4.4%p 상승하였지만 다른 장르의 관람률은 미미한 상승에 그치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 문화예술관람률은 여성(66.3%)이 남성(61.5%)보다 높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모든 장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림 VII-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0-2015



주: 1) 문화예술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2012년 69.6%, 2014년 71.3%로 나타나 통계청의 「사

회조사」보다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두 조사에서 관람률 상승 추세는 공통으로 관찰된다. 2012년과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통예술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관람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영화, 대중음악·연예, 연극 등의 관람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 박물관과 영화 관람의 증가는 시설 증가와 더불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와 같은 대중적 장르 외에 연극 관람이 증가한 것은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을 파악하는데, 이 비율은 2014년에 85.4%로 조사되어 실제 관람률과 약 14%p의 차이를 보인다. 2012년 조사에서는 실제 관람률과 희망 관람률의 차이가 약 9%p였는데, 이보다 더 커진 것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으로는 경제적 부담(35.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간부족(19.1%)과 정보부족(17.2%)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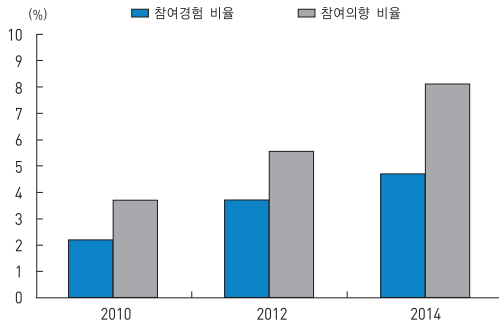
교육, 창작 및 동아리 활동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창작발표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나타난 창작발표활동 경험 비율은 4.7%로 이는 2010년의 2.2%와 2012년의 3.7%에 이어 계속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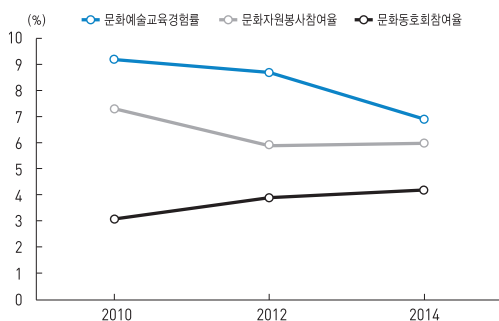
높아진 것이다. 분야별로는 미술전시회 참여율이 1.7%로 가장 높다. 앞으로 창작발표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 비율도 2010년 3.7%에서 2014년 8.1%로 높아졌다(그림 VII-5).

[그림 VII-5] 창작발표활동 참여경험 및 참여의향 비율, 2010~2014



- 주: 1) 창작발표활동 참여경험 비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2) 창작발표활동 참여의향 비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앞으로 창작, 발표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VII-6] 문화예술교육 경험률과 문화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율, 2010~2014



- 주: 1)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2)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3)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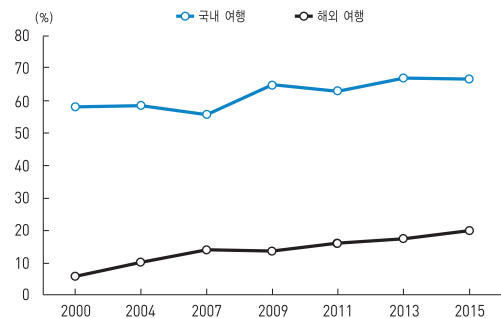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건이 갖추어지면 창작발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6.9%로 2012년 8.7%에 비해 1.8%p 하락하였다. 반면, 문화자원봉사 참여율과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각각 6.0%와 4.2%로 2012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다(그림 VII-6).

여행과 관광

해외 관광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하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의 수는 2014년 1,420만 명에서 2015년 1,323만 명으로 97만 명 감소하였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의 수는 2014년 1,608만 명에서 2015년 1,931만

[그림 VII-7]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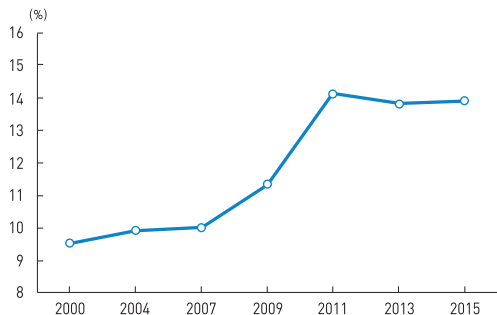
- 주: 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은 각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명으로 323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국내여행자 비율은 2013년 67.0%에서 2015년 66.6%로 0.4%p 낮아졌다. 반면, 해외여행자 비율은 같은 기간 17.4%에서 19.9%로 2.5%p 높아졌다(그림 VII-7). 국내여행자 비율은 여성이 68.5%로 남성 64.6%보다 3.9%p 높고, 해외여행자 비율은 남녀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생활체육과 스포츠관람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 중의 하나인 스포츠관람률은 2011년 14.1%, 2013년 13.8%, 2015년 13.9%로 큰 변화가 없다(그림 VII-8).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 관람률(19.6%)이 여성 관람률(8.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림 VII-8] 스포츠 관람률, 2000-2015



주: 1) 스포츠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관람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로 파악한 2015년 기준 체육활동 참여율을 보면, 주 1회 이

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6.0%이고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45.3%이다. 이는 2014년에 비해 각각 1.2%p, 1.8%p 높아진 것이다. 성별로 비교하면, 주 1회 이상 기준으로는 남성(58.2%)이 여성(53.8%)보다 4.4%p 높지만 주 2회 이상 기준으로는 여성(46.6%)이 남성(44.1%)보다 2.5%p 높다.

미디어 이용

여가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 이용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매체 이용률은 TV가 95.5%로 가장 높고 스마트폰(76.3%), PC 및 노트북(56.6%)이 그 다음으로 높다. 국민이 일상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매체는 스마트폰(46.4%), TV(44.1%), PC 및 노트북(7.1%)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전년에 비해 TV와 PC 및 노트북의 중요도가 각각 0.2%p와 2.3%p 낮아진 반면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2.5%p 높아졌다. 스마트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다른 매체의 중요도가 낮아진 결과, 2015년에는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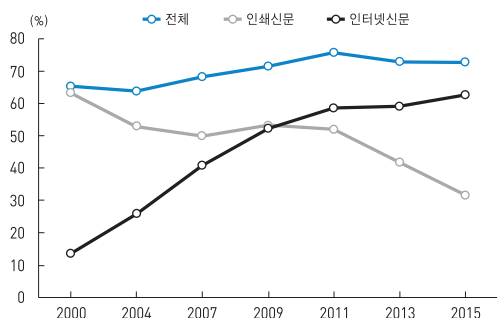
세대 간 매체 이용 차이도 관찰된다. 50대 이상에서는 TV를 필수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2014



년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각각 5.5%p와 10.8%p 상승하여 중년층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을 읽는 방법에도 매체 이용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2015년 62.4%에 달하는데,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같은 해 31.6%에 그친다. 2013년과 비교하면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3.4%p 높아진 반면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은 10.0%p 낮아졌다.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이 거의 비슷했던 2009년 이후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차이는 계속 확대되었다.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모두 고려한 신문 읽는 전체 비율은 72.7%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VII-9).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과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 모두

[그림 VII-9] 신문 읽는 비율, 2000-2015



주: 1) 2000년과 2004년 통계치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고, 2007년 이후 통계치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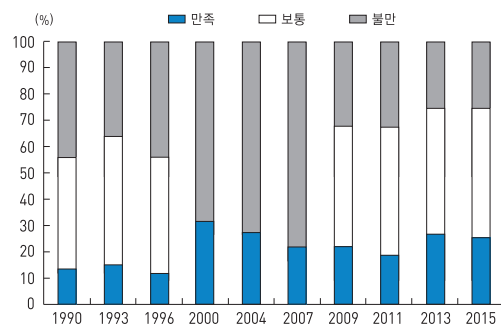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는데, 그 차이는 인터넷신문(9.4%p)보다 종이신문(14.3%p)에서 더 크다.

여가만족

여가만족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지난 1990년부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나 2000년부터 '보통'이라는 응답범주 없이 4점 척도로 조사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다시 5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고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5.3%와 25.5%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그림 VII-10). 여가생활에 만족도 불만족

[그림 VII-10] 여가만족도, 1990-2015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000-2007년 조사의 경우 응답범주가 '만족', '불만족' 등 이분형 척도로 조사되었음.

3) 1990-1996년, 2009-2015년 자료의 경우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며, 불만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도 하지 않는 인구가 절반, 만족하는 인구와 불만족하는 인구가 각각 4명 중 1명꼴이다.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거의 변화가 없다. 여가만족도는 남녀 간에 차이가 난다.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남성이 26.4%이고 여성이 24.2%이다.

여가 불만족의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58.5%로 가장 많고, 시간부족(20.0%), 건강문제(9.8%), 취미부재(4.6%) 등의 순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고 여성은 건강문제 때문인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차승은 (수원대학교)

- 2000년대 들어서 관찰되는 생활시간의 가장 큰 변화는 주말 생활시간 활용방식이 바뀐 점이다. 주말 유급노동 시간은 줄었지만 수면, 식사, 건강관리 등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은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말 여가시간 역시 약 13분 증가하였다.
- 주말 여가시간의 활용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TV시청, 교제, 독서 시간은 줄어들고 그 시간을 문화활동, 운동 및 스포츠, 그리고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시간이 차지하였다.
- 여가시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TV 시청 시간은 감소하였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TV시청 시간이 꾸준히 늘어났다.
- 평일 여가시간 부족을 겪는 시간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른다. 기혼 취업자이면서 자녀를 돌보는 여성의 시간빈곤율은 2014년 68.1%, 남성의 시간빈곤율은 60.5%이다. 이는 일과 삶의 양립이 남녀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이 최근 바뀌고 있다. 여가시간은 일이나 학습과 같은 의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재량껏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여가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이 시간을 확보하여 정보를 습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별다른 일 없이 빈둥대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도 재충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언론이나 매체에서 많이 언급되는 시간빈곤(time poor)은 여가시간의 결핍을 의미한다. 시간빈곤은 소득빈곤만큼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중요해졌다.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간 여가시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여가시간의 변화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여가시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1999년부터 5년마다 수집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이 하루 24시간 동안 수행한 모든 활동을 10분 단위로 보고하는 시간일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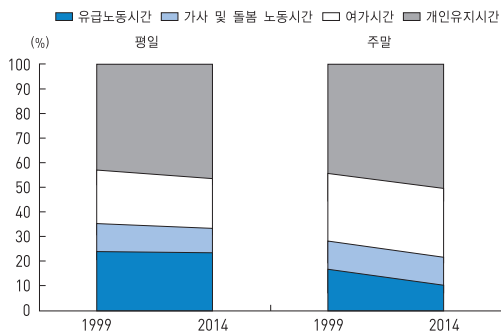
최근 시간빈곤 연구에서 말하는 여가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무시간(일, 공부, 가정관리, 가족돌봄 및 관련 이동시간 등)과 개인유지에 필요한 필수시간(수면, 식사, 건강관리 및 관련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정의를 바탕으로 여가시간을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과 여가활동 관련 이동시간 그리고 성인의 학습 및 교육 시간의 합으로 파악한다. 여가활동에는 교제활동, 종교활동, 문화활동, 운동 및 스포츠, 야외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독서 및 음악감상, 그 밖의 다양한 취미 및 유흥적

활동과 기타 활동(음주, 가무, 흡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생활시간일지 기입시간 등)이 포함된다. 여가시간 분석에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1999년과 2014년 자료를 사용하되 성인(20-79세, 학생 제외)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여가시간의 추이

[그림 VII-11]에는 성인의 하루 24시간이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해 왔는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성인의 주중 5일 평균 여가시간은 1999년 314분에서 2014년 292분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평일 평균 유급노동 시간과 가사 및 돌봄 시간은 각각 350분에서 340분, 160분에서 141분으로 약간 줄었고, 필수시간은 615분에서 667분으로 늘어났다. 평일 하루 시간 중 여가시간, 유급노동 시간, 가

[그림 VII-11] 성인의 평일과 주말 생활시간배분, 199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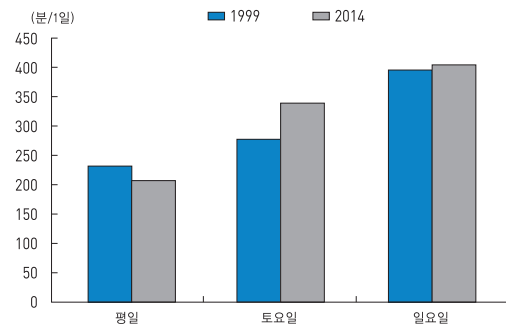


주: 1) 만 20-79세 성인(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하루 24시간 중 해당 활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사 및 돌봄 시간은 각각 22분, 10분, 19분 줄어든 대신 필수시간이 52분 늘어난 것이다. 이에 비해 주말에는 유급노동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고 여가시간과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이 늘어났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이틀간의 평균 유급노동 시간은 1999년 246분에서 2014년 151분으로 95분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여가시간은 390분에서 403분으로 13분 늘어나고 필수시간은 639분에서 723분으로 84분 늘어났다.

주중 여가시간이 줄어들고 주말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은 특히 취업자 집단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취업자(20-64세로 한정)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1999년 232분에서 2014년 207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이 기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각각 277분에서 338분, 395분에서 404분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II-12). 최근으로 올수록 주중은 ‘일하는 날’, 주말은 ‘쉬는 날’의 구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

[그림 VII-12] 취업자의 평일과 주말 여가시간, 1999, 2014



주: 1) 만 2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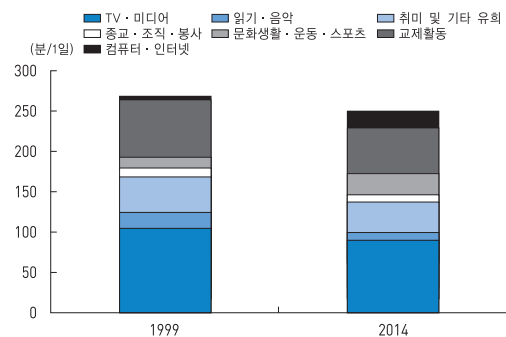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999년에 비해 2014년에 주말 여가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여가시간은 감소함에 따라 주 7일 합계로 보면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말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 5일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판매·서비스업이나 여가산업 종사자들은 대개 주말에도 일을 한다. 둘째, 주말의 줄어든 유급노동 시간의 상당부분을 필수시간이 채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여가시간과 함께 기본생활에 요구되는 필수시간을 늘렸다.

여가시간 활용의 변화는 여가활동 내용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VII-13]은 취업자의 주말 여가활동을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사용한 시간을 산출한 것인데, 이 그림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관찰된다. 첫째, 여가시간으로 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둘째, 문화활동이나 운동 및 스포츠와 같은 바깥활동을 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셋째,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는 교제시간은 다소 줄었다. 교제활동에 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까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교제시간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취미생활이나 독서, 음악감상 등 정적인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과거보다 줄었다.

전체적으로 문화활동과 같은 계획된 여가와 운동 및 스포츠와 같은 동적인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TV시청이 여전히 여가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컴퓨터게임과 같이 앉아서 하는 활동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 VII-13] 취업자의 주말 여가활동별 사용시간, 199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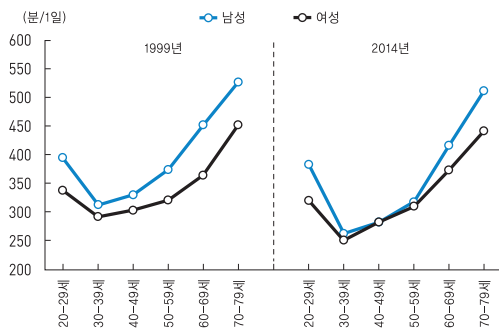
주: 1) 만 2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한편, [그림 VII-13]에 제시된 여가활동은 주 행동시간만 파악한 것이다. 음악을 들으면서 컴퓨터게임을 할 때 주 행동이 컴퓨터게임이면 음악감상은 동시행동(multitasking)이 된다. 동시행동을 한 사람들의 여가활동 순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1순위가 교제활동(65%)이고 그 다음이 음악감상(29%), TV시청(24%), 컴퓨터나 기기 이용(1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10년 전인 2004년에는 TV시청(47%)이 1순위 동시행동 여가활동이었고 이어 음악감상(27%), 교제활동(24%) 등의 순이었다.

성별 및 연령집단별 여가시간 격차

여가시간의 변화를 인구집단별로 살펴보자. [그림 VII-14]는 남녀의 연령대에 따라 여가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고, 30-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가시간이 적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간(유급노동 시간, 가사 및 돌봄 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30-50대가 일상생활에서 여유시간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림 VII-14] 성인의 성 및 연령집단별 여가시간, 1999, 2014



주: 1) 만 20-79세 성인(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함.

2) 여가시간은 요일 평균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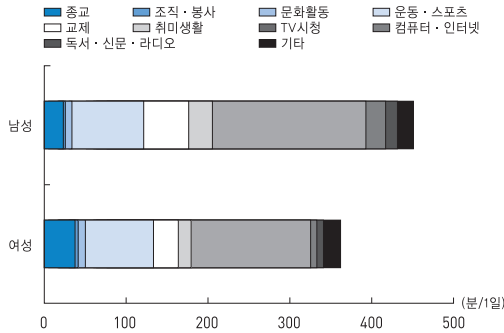
성별 여가시간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999년에는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적은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격차는 지난 15년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성별 여가시간 격차의 감소는 특히 일하는 연령

대인 30-60대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생애단계상 빈 둥우리(empty nest) 시기, 즉 은퇴를 맞이하는 60대의 여가시간은 2014년 평균 380분,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평균 450분으로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이처럼 여가시간의 분포가 생애과정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중·장년기에 급격한 결핍을 경험한 이후 급격히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하는 연령기에서는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은퇴 이후 시기에는 여가시간이 너무 많아서 한 개인의 생애과정 내에서도 여가시간 배분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 격차가 30-6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는데, 과연 할 일이 많은 기혼자들의 경우에도 남녀 간 격차가 줄었을까? 그리고 남녀가 즐기는 여가의 유형은 비슷해 졌을까? [그림 VII-15]는 기혼남녀의 일요일 총 여가시간 중에서 여가활동 유형별로 사용한 시간을 나타낸다. 기혼자의 경우 여가시간의 성별 격차가 여전하다. 기혼여성의 여가시간은 362분으로 기혼남성의 451분보다 89분 정도 적다. 여가시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유형에서도 남녀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요일을 기준으로 기혼남성은 기혼여성보다 TV 시청 시간도 길고 교제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시간도 길다. 독서, 신문읽기, 라디오청취 시간도 길고 심지어는 취미를 즐기는 시간도 길다. 기혼여성은 종교활동 시간만 기혼남성보

다 길다. 문화활동을 즐기거나 조직 및 봉사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은 기혼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림 VII-15] 기혼남녀의 일요일 여가활동별 사용시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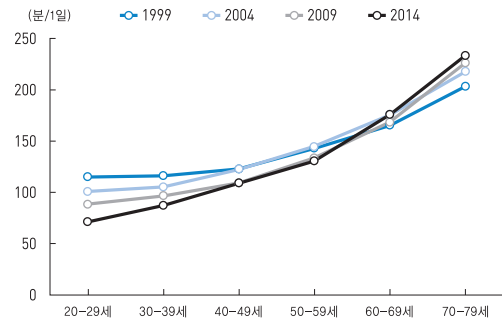


주: 1) 만 20-79세 기혼자(학생 제외)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과거에는 여가활동의 대부분이 TV시청이나 교제활동, 취미생활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가활동이 운동 및 스포츠,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문화활동, 조직 및 봉사 활동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든 사람들의 여가 양상은 차이가 있을까? 연령집단 간 여가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TV를 포함한 영상물 시청이다. [그림 VII-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대 연령층에는 지난 15년간 TV시청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였다. TV시청 이외 다른 유형으로 여가활동이 확장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0-50대 연령층에서도 최근으로 오면서 TV시청 시간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지난 15년간

TV시청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젊은 층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림 VII-16] 성인의 연령집단별 TV 및 미디어 시청시간, 1999-2014



주: 1) 만 20-79세 성인(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함.
2) 시청시간은 요일 평균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II-3〉에서는 20대 자녀세대와 50대 부모세대의 토요일 여가활동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대 연령층의 여가활동은 TV시청 시간의 감소가 특징적이다. 20대의 경우 TV시청 시간이 줄어든 대신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문화활동, 운동 및 스포츠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통적 여가의 하나였던 취미생활이나 독서, 신문읽기, 라디오청취 시간은 줄었다. 50대 연령층은 과거 TV시청과 함께 교제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 및 스포츠 시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비중은 작지만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나 문화활동 시간도 늘어났다. 토요일을 보내는 방식에서 50대 부모세대와 20

대 자녀세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3〉 20대 및 50대 연령층의 토요일 여가활동별 사용시간, 1999, 2014

	20대		50대	
	1999	2014	1999	2014
TV시청	121.9	96.2	141.4	146.0
독서·신문·라디오	36.0	17.3	18.7	11.8
취미생활	39.8	27.2	42.4	25.8
종교·조직·봉사	10.0	11.4	14.0	14.2
문화활동	5.7	15.3	1.5	5.2
교제	107.1	111.8	89.6	84.6
운동·스포츠	12.6	25.3	22.5	43.5
컴퓨터/인터넷	11.4	54.7	0.7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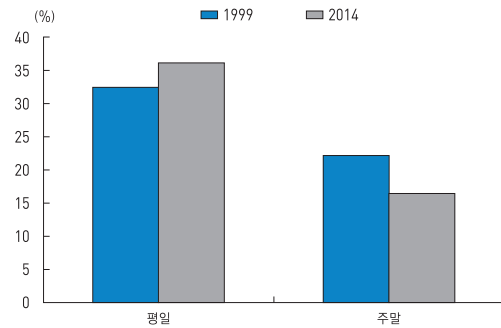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시간빈곤 인구의 분포

최근 시간빈곤 문제는 소득빈곤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시간빈곤(time poverty)이란 삶에 필요한 적절한 여가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시간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간단한 측정은 상대소득빈곤을 파악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전체 인구의 여가시간 중위수를 알아내고 중위수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로 시간빈곤 기준을 삼는다. 여기서는 기존의 시간빈곤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 표본에서 나타나는 여가시간의 60%(1일 186분) 이하의 여가시간을 갖는 사람들을 시간빈곤층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시간빈곤 인구

의 규모를 파악해 보면, 1999년 주중 시간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4%였으나 2014년에는 이 비율이 36.1%로 약 3.7%p 증가하였다. 주말의 경우에는 1999년 22.1%가 시간빈곤 상태에 있었으나 2014년에는 16.4%만이 시간빈곤을 경험하였다(그림 VII-17).

〔그림 VII-17〕 평일 및 주말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 1999, 2014



주: 1)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은 만 20-79세 성인(학생 제외) 중 평균 중위 여가시간의 60%(1일 186분)에 미치지 못하는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성인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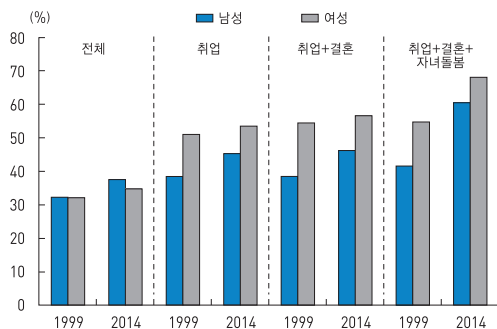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시간빈곤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게 취업이나 결혼, 육아 등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겪을 것이다. 시간빈곤 인구는 평일에 많고 주말에 적기 때문에 시간빈곤이 심하게 나타나는 평일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VII-18]을 보면 남녀의 시간빈곤 인구 비율은 1999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2014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을 뿐이다. 그런데, 취업자 집단으로 한정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53.5%가 시간빈곤



을 겪은 반면 남성 취업자는 45.2%가 시간빈곤을 경험하였다. 기혼 취업자의 시간빈곤 비율은 취업자의 시간빈곤 비율과 비슷한 수준인데, 기혼 취업자이면서 자녀를 둔 집단의 시간빈곤 비율은 남녀 모두 60%를 넘는다. 특히, 이 집단의 시간빈곤 수준은 지난 15년간 더욱 심해졌으며 기혼남성의 시간빈곤 상황이 기혼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이 남녀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 VII-18] 사회적 역할 특성별 평일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 199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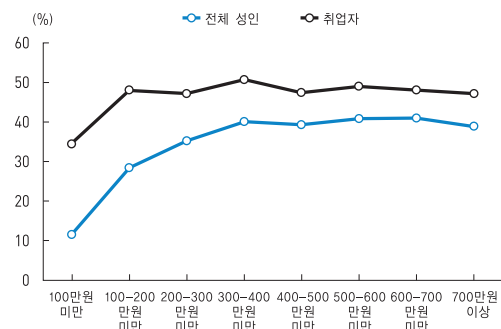
주: 1)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은 만 20~79세 성인(학생 제외) 중 평균 중위 여가시간의 60%(1일 186분)에 미치지 못하는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성인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마지막으로 시간빈곤과 소득수준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 VII-19]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별 평일 시간

빈곤 집단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그림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빈곤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400만 원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는 시간빈곤 인구의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빈곤을 겪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 가운데 시간빈곤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월평균 300~400만 원 소득집단으로 절반 이상이 시간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3인가구 기준 2016년 중위소득 수준이 약 360만 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 중산층이야 말로 시간빈곤의 해소가 필요한 정책목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II-19] 가구소득수준별 평일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 2014



주: 1) 시간빈곤을 겪는 성인의 비율은 만 20~79세 성인(학생 제외) 중 평균 중위 여가시간의 60%(1일 186분)에 미치지 못하는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성인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2014.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배 영 (송실대학교)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과의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 위험군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과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2015년에는 여성이 더 높다.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청소년, 특히 가구 소득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과의존위험군이 일반사용자군보다 콘텐츠 소비형 서비스(게임, 동영상, 웹툰 및 소셜 등) 이용률이 높다.
-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내성 현상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재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은 다양한 편리와 함께 과의존의 문제도 가져왔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인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에서도 합리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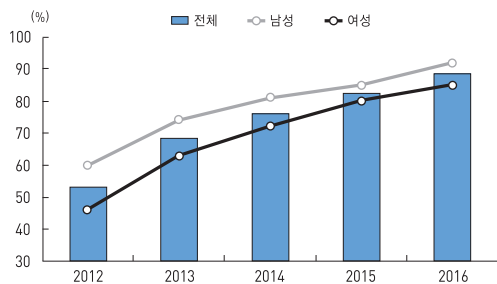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중독’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과도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대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잠재적 중독자로 본다는 문제가 지적되곤 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관한 논의에서 ‘중독’ 대신 ‘과의존’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및 과의존의 전반적 실태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아울러 스마트폰 과의존집단과 일반사용자집단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비교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스마트폰 사용 및 과의존 실태

스마트폰 이용률은 스마트폰 보급 초기인 2012년 53.4%에서 2013년 68.4%, 2014년 76.1%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88.7%의 이용률을 보여 이제 스마트폰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IT 기기 이용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수 중의 하나인 성별로 보면, 2012년 스마트폰 이용률은 남성 60.0%, 여성 46.0%로 남녀

간에 14%p 차이가 났지만 2016년에는 7%p까지 차이가 줄었다.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이용률 상승과 함께 남녀 간 이용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II-20).

[그림 VII-20] 성별 성인 스마트폰 이용률,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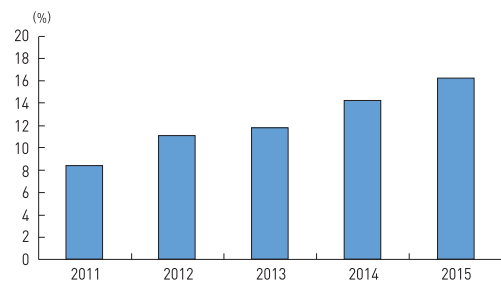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해당 연도 1월 자료임.
출처: 한국갤럽, 「2012-2016 스마트폰 사용과 스마트워치에 대한 조사」, 2016. 7.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개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표준화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척도는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연령대에 따라 측정항목을 달리하여 개발되었다. 연령집단별로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한 후 측정총점과 4가지 요인(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 일상생활장애)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금단과

내성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잠재적 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스마트폰 사용조절력 감소와 이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사용자군은 이용 목적에 맞게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있는 집단이다. 여기에서는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과의존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이 집단을 일반사용자군과 비교할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11년 8.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6.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그림 VII-21).

[그림 VII-2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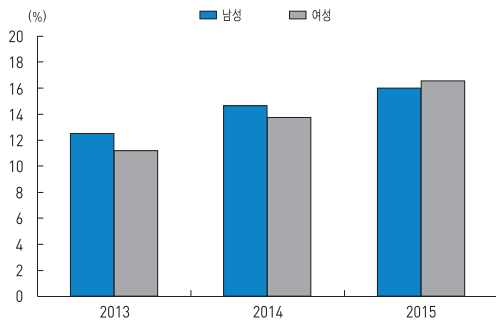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스마트폰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비율임.
2) 2015년부터 유아동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연도별 조사대상 연령은 2011-2012년의 경우 만 10-49세, 2013년은 만 10-54세, 2014년은 만 10-59세, 2015년은 만 3-59세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남성 12.5%, 여성 11.2%로 남성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조금 더 높았

으나 2015년에는 남성 16.0%, 여성 16.5%로 오히려 여성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약간 더 높아졌다(그림 VII-22).

[그림 VII-22]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3-2015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스마트폰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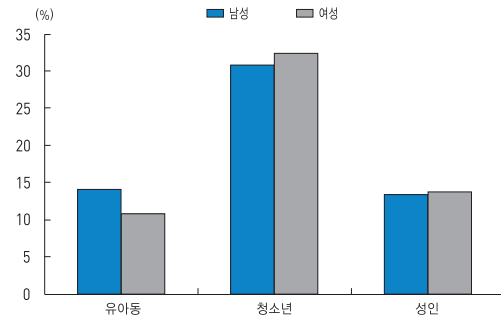
2) 2015년부터 유아동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연도별 조사대상 연령은 2013년의 경우 만 10-54세, 2014년은 만 10-59세, 2015년은 만 3-59세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남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특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인 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 간 차이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청소년 집단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남성은 성인 집단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낮고 여성은 유아동 집단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낮아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유아동을 제외한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과의존 양상과는 다른 결과로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는 여성이 다소 더 과의존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VII-23).

[그림 VII-23] 유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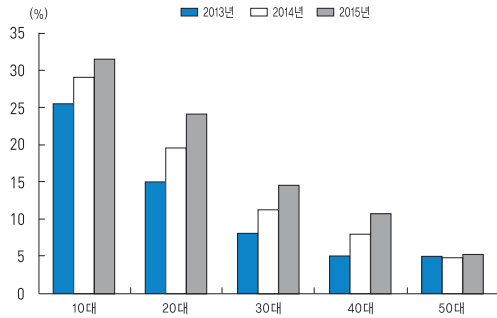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스마트폰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비율임.

2) 유아동은 만 3-9세, 청소년은 만 10-19세, 성인은 만 20-59세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다음으로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 세대에 걸쳐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10대의 경우, 2013년 25.5%에서 2015년 31.6%로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20대는 2013년 15.0%에서 2015년 24.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0대의 경우에는 2013년 8.2%에서 2015년 14.5%로, 40대는 같은 기간 5.0%에서 10.7%로 각각 상승하였다. 50대는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5% 내외로 가장 낮고 변화도 거의 없다(그림 VII-24).

[그림 VII-24]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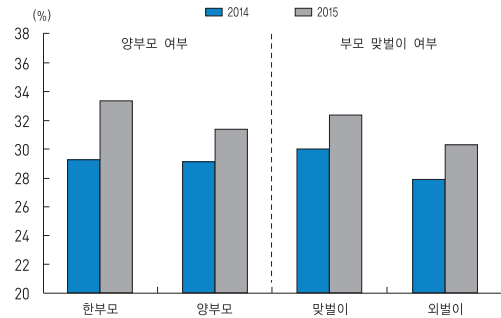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해당 집단 스마트폰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비율임.
2) 2013년 자료의 경우 50대는 만 50~54세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가족형태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먼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33.4%인데 양부모가정 청소년은 31.4%이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달라진다. 맞벌이가정 청소년의 32.4%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속하지만 외벌이가정 청소년은 30.3%만 과의존위험군에 속한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VII-25).

일반적으로 정보기기의 이용 격차에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수준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스마트폰 이용률은 소득수준과 정적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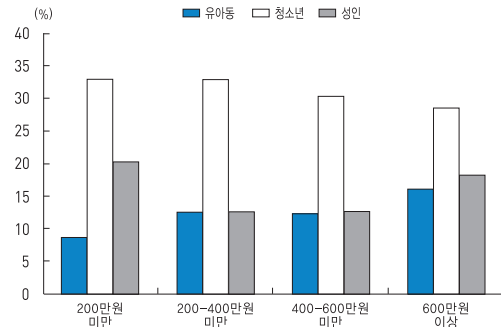
[그림 VII-25] 청소년의 부모 특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4, 2015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해당 집단 청소년(만 10~1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비율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점에서 과다 사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도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그림 VII-26]에 제시한 것처럼, 같은 연령집단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양상이 다르다. 성인의

[그림 VII-26] 가구소득수준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5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해당 집단 스마트폰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비율임.
2) 유아동은 만 3~9세, 청소년은 만 10~19세, 성인은 만 20~59세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경우 200만 원 미만 소득집단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인과 청소년은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보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낮다. 반면, 유아동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높아진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0만 원 미만 소득집단에서는 8.6%에 불과하지만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에서는 16.0%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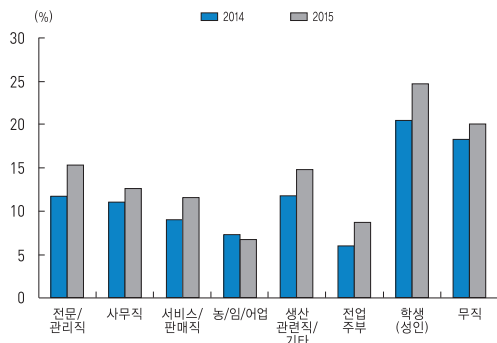
이번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학생이 가장 높은데, 이들의 비율은 2014년 20.5%에서 2015년 24.7%로 상승하였다. 무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학생과 무직자를 제외하면, 2015년 기준으로 전문·관리직,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등의 순으로 높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직업집단 중 유일하게 2014년 대비 2015년에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낮아졌다 (그림 VII-27).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이용자군의 비교

이번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의 비교를 통해 과의존위험군이 어떤 집단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 모두 대부분 2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2시간 미만이나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 사이에 차이도 관찰되는데, 4시간 미만까지는 일반이용자군의 사용 비율이 과의존

[그림 VII-27] 성인의 직업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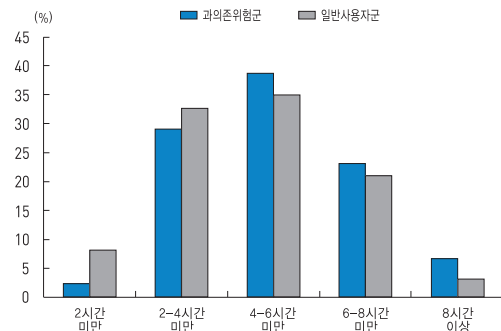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해당 집단 스마트폰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비율임.

2) 성인은 만 20-59세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그림 VII-28]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분포, 2015



주: 1) 만 3-59세 스마트폰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위험군보다 높지만 4시간 이상부터는 과의존 위험군의 사용 비율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높다 (그림 VII-28).

전반적으로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 모두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의 구분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과의존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의존 정도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해보았다. 서비스 종류는 메신저, 웹서핑, 음악, 게임, SNS, 동영상, 학습 및 업무, 웹툰 및 소설, 이메일 등의 9가지로 분류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르다. 과의존위험군은 웹서핑이 30.2%로 가장 높고 이어 메신저(28.6%), 음악(24.6%), 게임(19.4%) 등의 순으로 높다. 일반사용자군은 메신저 이용이 31.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웹서핑(29.3%), 음악(24.6%), 게임(18.8%) 등의 순으로 높다(표 VII-4).

과의존위험군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일반사용자군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잘 나타난다. 음악과 게임, 동영상, 웹툰 및 소설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한 콘텐츠 소비형 서비스에서는 고위험군의 이용 비율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높다. 반면, 메신저와 SNS, 웹서핑, 학습 및 업무 관련 서비스 등 관계 유지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서비스 이용 비율은 일반사용자군이 고위험군보다 높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온라인게임이 제시되어 왔다. 온라인게임이 청소년이나 특정 집단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게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과의존적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롤플레잉(role playing) 계

〈표 VII-4〉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별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2015

	과의존위험군			일반 사용자군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메신저	28.6	25.2	29.2	31.2
웹서핑	30.2	27.9	30.5	29.3
음악	24.6	28.1	23.9	24.6
게임	19.4	20.7	19.1	18.8
SNS	17.8	15.3	18.2	17.1
동영상	18.5	20.5	18.1	16.9
학습 및 업무	14.3	11.5	14.8	14.9
웹툰 및 소설	12.1	14.1	11.7	11.3
이메일	8.3	9.1	8.1	8.2

주: 1) 만 3~59세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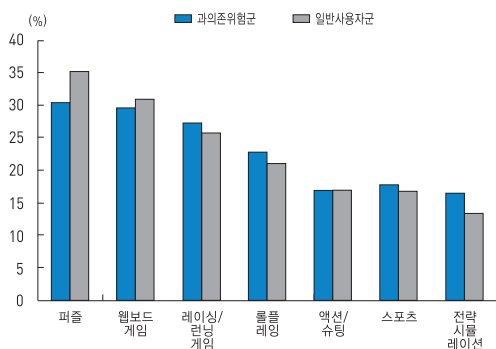
2) 통계치는 해당 집단 스마트폰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임이나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크레프트’와 같은 전략시물레이션 게임은 개인이 이용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게임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집단 모두 퍼즐 게임과 웹보드 게임을 가장 선호한다. 두 가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으로 과의존위험군보다 일반사용자군의 선호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종류의 게임에 대해서는 모두 과의존위험군의 선호가 높는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물플레이팅 게임이나 전략시물레이션 게임뿐만 아니라 레이싱·런닝 게임, 액션·슈팅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이 포함된다(그림 VII-29).

[그림 VII-29]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의 선호하는 스마트폰 게임종류, 2015



주: 1) 만 3~59세 스마트폰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집단 스마트폰 이용자 중 해당 게임을 평소에 즐겨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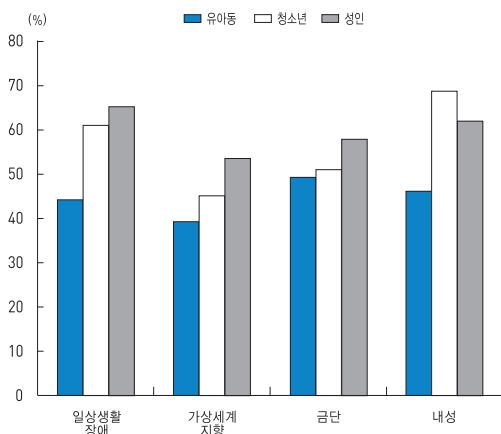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려움의 종류에는 일상생활장애와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 등이 포함된다.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사고, 정서, 행동 등을 지배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상세계지향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훨씬 선호하고 오프라인 생활보다 온라인 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증상을 말한다. 금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짜증을 내는 현상을 의미하고, 내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의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커지는 양상이 일반적이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어려움 중 내성을 제외하고는 유아동보다는 청소년,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장애를 경험한 유아동의 비율은 44.1%이지만 같은 장애를 경험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은 각각 60.8%와 65.1%에 이른다. 가상세계지향은 전반적으로 다른 어려움들에 비해 적게 경험하는데 유아동 39.3%, 청소년 44.6%, 성인 53.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경



험하는 양상을 보인다. 금단 경험률은 유아동 49.3%, 청소년 50.7%, 성인 57.6%로 성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내성의 경우에는 유아동 45.8%, 청소년 68.3%, 성인 61.9%로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다. 청소년이 내성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모든 집단이 경험한 네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한 시간조절의 어려움이 특히 청소년층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 VII-30).

[그림 VII-30]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어려움, 2015



주: 1) 유아동은 만 3-9세, 청소년은 만 10-19세, 성인은 만 20-59세임.
 2) 통계치는 해당 연령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이용 후 해당 증상 경험 여부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맺음말

이제 현대인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와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접목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범위와 사용시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사용의 심화는 곧 의존의 증가로 연결된다. 이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집에 두고 온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성이 커진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부재가 단순히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감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듯 스마트폰 사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활용을 보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게 할지에 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척도의 개발을 통해 과의존 실태와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현재의 질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용시간과 사용시간대 등에 대한 양적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양적, 질적 차원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의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Housing & Transportation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2 0 1 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II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218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이영성 서울대학교, 유현지 서울대학교	225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정동재 서울대학교	231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 주택보급률은 2005-2014년 사이 98.3%에서 103.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324.5호에서 385.3호로 약 18.7% 증가하였다.
-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은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29.0%,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8.3배에 달한다.
- 지역 간 주택수급의 편차와 소득계층 간 주택 점유 안정성의 불균형으로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주도로 임대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현재 약 2,100만 대로 가구당 1.12대, 인구 1,000명당 414.7대에 달한다. 도로망과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각각 9만 9,024km와 3,590km에 이른다. 버스는 등록대수, 종사자수 등 양적 공급과 함께 전용 차로 확충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0년 기준 33.7분이다.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년 개선되고 있다.
- 최근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5년 현재 저상버스는 6,737대, 특별교통수단은 2,601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주거 부문에서는 주택보급률이나 주택가격 등

의 지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과 아울러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 문제도 다룬다.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이동성 향상, 교통서비스 수준과 삶의 질, 마지막으로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 문제를 살펴본다.

주택보급률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표 VIII-1〉은 지난 10년 동안 주택보급률과 인

〈표 VIII-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2005-2014

연도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주택 보급률 (%)	인구 1,000명당 주택수(호)
2005	15,887	15,623	98.3	324.5
2006	16,105	15,978	99.2	330.3
2007	16,364	16,295	99.6	335.3
2008	16,619	16,733	100.7	341.8
2009	16,862	17,071	101.2	347.1
2010	17,339	17,672	101.9	357.7
2011	17,719	18,131	102.3	364.2
2012	18,057	18,551	102.7	371.0
2013	18,408	18,969	103.0	377.7
2014	18,773	19,429	103.5	385.3

주: 1) 가구수는 보통가구(혈연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 등을 포함한 일반가구 기준이고, 주택수는 다가구주택을 호수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임.

2)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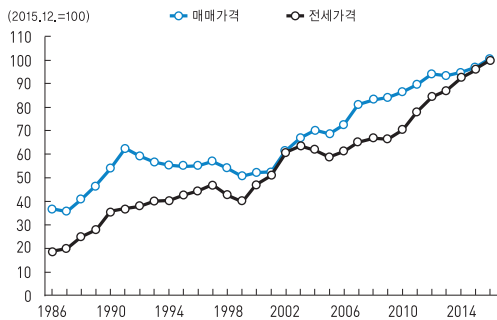


구 1,000명당 주택수 등 주택수급 변화를 보여 준다. 2005~2014년 사이 주택보급률은 98.3%에서 103.5%로 5.2%p 증가하였는데, 2008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324.5호에서 385.3호로 약 18.7% 증가하였다.

주택가격과 주거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림 VIII-1]은 1986~2016년의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을 조사하여 2015년 12월 가격을 100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매매가격은 1990년대에 하향 안정화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수년간 빠르게 상승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격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VIII-1]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종합지수, 1986~2016



주: 1) 해당연도 3월 기준임.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2016. 8.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VIII-2>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을 나타낸 것이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로 높아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RIR은 2014년 기준 29.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4.2배에서 4.7배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 PIR은 8배가 넘지만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0배와 4.7배에 그친다. RIR과 PIR의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볼 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I-2>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및 주택가격 배율, 2006~2014

	2006	2008	2010	2012	201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전체	18.7	17.5	19.2	19.8	20.3
저소득층	27.6	25.0	28.2	21.8	29.0
중소득층	18.9	17.6	16.6	17.3	17.0
고소득층	16.1	17.4	21.1	22.6	21.6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배)					
전체	4.2	4.3	4.3	5.1	4.7
저소득층	6.3	6.4	6.1	7.5	8.3
중소득층	3.4	4.3	4.2	4.3	5.0
고소득층	3.6	4.2	4.0	4.4	4.7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평균) 월임대료÷중위(평균) 월소득)×100.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중위(평균) 주택가격÷중위(평균) 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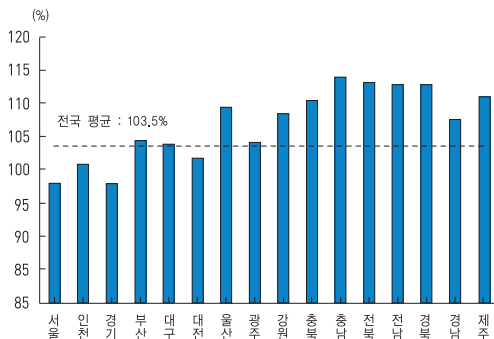
3)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

주거비 부담과 함께 지역 간 주택수급의 편차와 소득계층간 주택점유 안정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 VIII-2]의 시도별 주택보급률(2014년 기준)을 보면, 서울 97.9%, 인천 100.9%, 경기도 97.8% 등으로 수도권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98.2%에 불과하나 수도권 외 지역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108.6%에 이른다. 이러한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은 1인가구의 증가, 가구규모의 감소, 인구집중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림 VIII-2] 시도별 주택보급률,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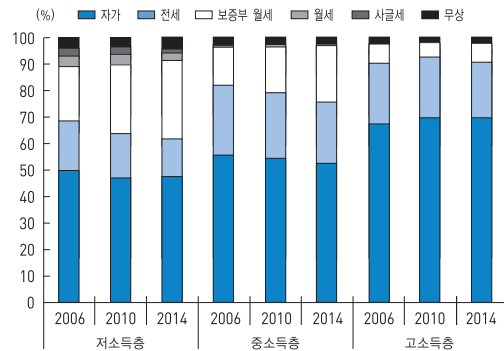


주: 1)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2014.

[그림 VIII-3]은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를 보여준다. 2006-2014년 사이 저소득층의 자가 비중은 연도별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전세 비중도 18.8%에서 14.2%로 4.6%p 감소하였다. 반면, 보증부월세와 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006년 27.5%에서

2014년 34.0%로 6.5%p 증가하였다. 이 비중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각각 22.3%와 8.1%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의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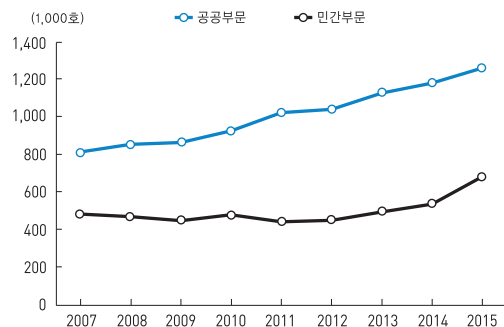
[그림 VIII-3]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2006, 2010, 2014



주: 1)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 능력에 맞춰 영구, 국민, 1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

[그림 VIII-4]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5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공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그림 V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2007년 약 81만 호에서 2015년 약 126만 호로 55%가량 증가하였다.

교통시설 확충과 이동성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VIII-3>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1990년 약 340만 대에서 2000년 약 1,200만 대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100만 대이고,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도 계속 증가하여 각각 1.12대와 414.7대에 이른다.

자동차 보급률의 상승과 함께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표 V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꾸준한 도로투자로 도로연장은 1980년 4만 3,937km에서 2015년 9만 9,024km로 약 125%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과 국토면적당 도로연장도 2015년 현재 각각 1.96km와 0.99km/km²에 이른다.

자동차 보급과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림 VIII-5]와 같이 철도연장은 1990년 3,091km에서 2014년 3,590km로 약 16% 증가하였다. 특히, 복선철도연장이 같은 기간

<표 VIII-4> 도로연장, 1980-2015

연도	도로연장(km)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km)	국토면적당 도로연장(km/km ²)
1980	43,937	1.15	0.44
1985	51,368	1.26	0.52
1990	56,022	1.31	0.56
1995	70,313	1.56	0.71
2000	82,440	1.75	0.83
2005	90,817	1.89	0.91
2010	94,230	1.91	0.94
2011	94,656	1.90	0.95
2012	96,948	1.94	0.97
2013	96,418	1.92	0.97
2014	97,920	1.94	0.98
2015	99,024	1.96	0.99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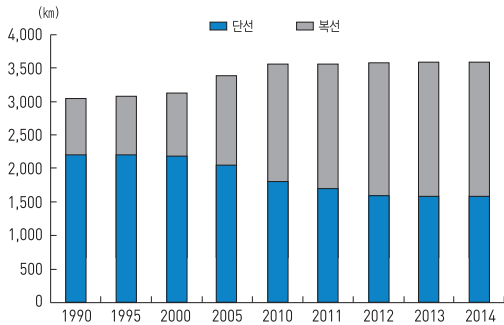
<표 VIII-3> 자동차 등록대수, 1990-2015

연도	자동차 등록대수(1,000대)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대
1990	3,395	0.30	79.2
1995	8,469	0.65	187.8
2000	12,059	0.83	256.5
2005	15,397	0.96	319.8
2010	17,941	1.03	363.1
2011	18,437	1.04	370.4
2012	18,871	1.05	377.4
2013	19,401	1.07	386.3
2014	20,118	1.09	399.0
2015	20,990	1.12	414.7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장래가구추계」, 2012.

847km에서 2,009km로 약 137% 늘어나 전체 철도연장의 56%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VIII-5] 철도연장, 1990-2014



출처: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버스 등록대수는 <표 VIII-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1년 4만 451대에서 2015년 4만 4,740대로 4,289대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버스업체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버스업체 종사자수는 9만 1,105명에서 9만 6,964명으로

[표 VIII-5] 버스 업체수, 종사자수 및 등록대수와 버스 전용차로연장, 2001-2015

연도	버스 업체수 (개)	버스업체 종사자수 (명)	버스 등록대수 (대)	버스전용차로연장 (km)
2001	529	91,105	40,451	-
2003	539	92,879	41,635	-
2005	538	91,042	41,119	-
2007	531	92,861	42,177	-
2009	530	94,975	43,494	714.5
2011	522	95,488	43,738	714.5
2013	529	96,253	44,625	751.7
2015	524	96,964	44,7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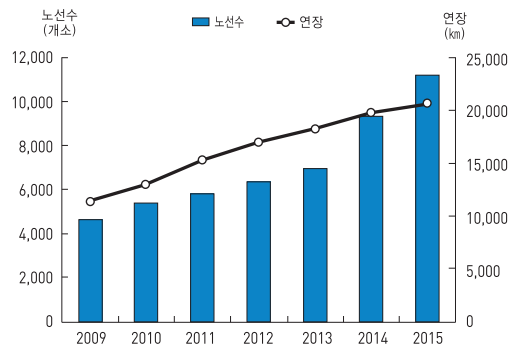
주: 1) 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고속버스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로 5,859명이 증가하였다. 버스의 양적 공급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2009년 714.5km에서 2013년 751.7km로 37.2km 증가하였다.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그림 VIII-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전거 노선은 2009년 4,647개소에서 2015년 1만 1,169개소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자전거도로 연장은 1만 1,387km에서 2만 789km로 약 82% 증가하였다.

[그림 VIII-6] 자전거도로 노선수와 연장, 2009-2015



주: 1) 자전거도로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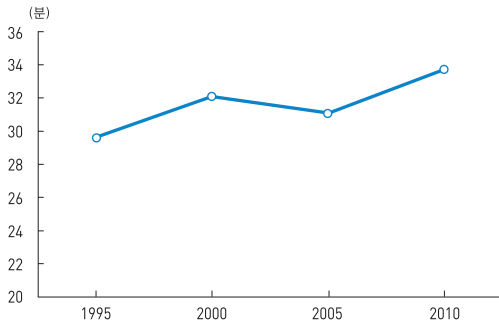
출처: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현황」, 각 연도.

교통서비스 수준과 삶의 질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은 통근시간과 대중교통만족도 등의 지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33.7분이다. 이는 10년 전인 2000년의 32.1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그림 V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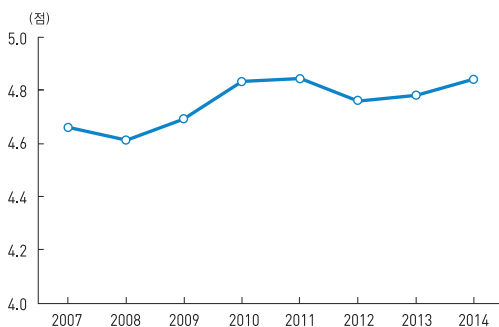
[그림 VIII-7] 평균 통근시간, 1995-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한편,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년 개선되고 있다. [그림 VIII-8]은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종합만족도(7점 만점) 추이를 보여준다. 대중교통만족도는 2007년 4.66점에서 2014년 4.84점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VIII-8] 대중교통만족도, 2007-2014



주: 1) 대중교통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7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측정되었음.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

최근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표 V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상버스는 2010-201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737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의 19.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현재 2,601대가 운행되고 있다. 보급률로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 95.4% 수준이다.

<표 VIII-6>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5

연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대)	보급률 (%)	운행대수 (대)	보급률 (%)
2010	3,204	7.3	1,302	23.5
2011	3,899	12.6	1,476	25.5
2012	4,775	14.5	1,597	57.2
2013	5,447	16.4	1,752	63.0
2014	6,076	18.7	2,298	85.4
2015	6,737	19.9	2,601	95.4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그러나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2015년 기준 서울특별

시와 6개 광역시의 저상버스 대수는 총 4,275대로 시내버스 1만 6,503대의 25.9%에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상버스 대수는 총 2,462대로 시내버스 1만 7,273대의 14.3%에 그친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경상남도가 165.8%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54.9%로 가장 낮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시범운영 중인 복지택시(바우처 택시)를 포함하여 100%를 넘지만,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6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표 Ⅷ-7).

〈표 Ⅷ-7〉 시도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5

시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대)
	운행대수 (대)	보급률 (%)	운행대수 (대)	보급률 (%)	
전국	6,737	19.9	2,601	95.4	1,545
서울	2,653	35.5	424	98.1	50
부산	464	18.5	198	107.0	1,090
대구	360	23.7	123	96.1	100
인천	318	13.9	140	100.7	120
광주	166	16.6	92	121.1	11
대전	214	22.2	57	73.1	65
울산	100	13.5	41	83.7	52
세종	41	32.5	8	80.0	-
경기	1,376	13.1	566	103.5	50
강원	184	32.3	93	91.2	-
충북	118	20.4	107	85.6	-
충남	54	5.7	84	63.6	3
전북	139	16.8	110	65.5	-
전남	66	9.5	79	54.9	4
경북	112	9.5	124	67.8	-
경남	367	22.4	315	165.8	-
제주	5	2.7	40	105.3	-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이영성 (서울대학교)
유현지 (서울대학교)

-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구규모는 작아지고 있다.
- 가구가 증가한 이유는 젊은 층의 미혼율 상승과 사별한 고령 독거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가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 최근 들어 주택의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중소형주택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 1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점유율은 낮고 월세 비율은 높다. 특히, 젊은 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월세 거주 비율이 높다.
- 1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다.

최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 증가는 정체되고 있으나 가구 증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인구는 점차 감소하지만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젊은 층의 결혼연령 상승과 독거노인의 증가로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에 비해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1인가구의 증가는 주택시장과 주거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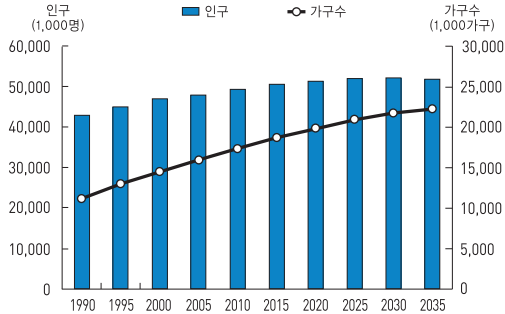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인구 및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과 주거형태의 변화를 살펴본다. 인구 및 가구

특성 변화 가운데 특히 1인가구의 증가에 주목한다.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전세와 월세의 변화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증가가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1인가구의 주거형태 변화를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 글의 분석에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KB국민은행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 자료,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량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

한국의 인구는 1990년 4,339만 명에서 2015년 4,971만 명으로 14.6%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가구수는 1,135만 가구에서 1,911만 가구로 68.3% 급증하였다. 그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77명에서 2.53명으로 감소하였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5년에는 5,18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가구수는 2015년 1,870만 가구에서 꾸준히 늘어나 2030년에는 2,171만 가구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2,226만 가구로 정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그림 VI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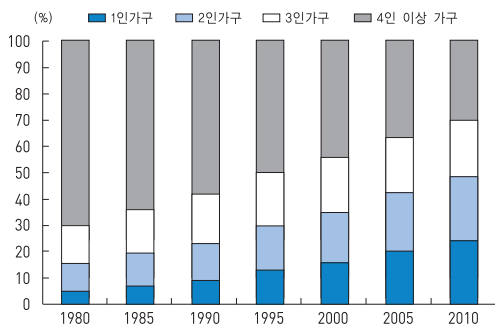
[그림 VIII-9] 인구 및 가구 추계, 1990~2035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장래가구추계」, 2012.

연령별로는 고령층 인구와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 대비 2015년에 20대 인구와 가구는 각각 26.5%와 15.3% 감소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인구와 가구는 각각 332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161만 가구에서 532만 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 역시 가파르다. 1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5년 27.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58.2%에서 25.2%로 하락하였다

[그림 VIII-10]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율, 198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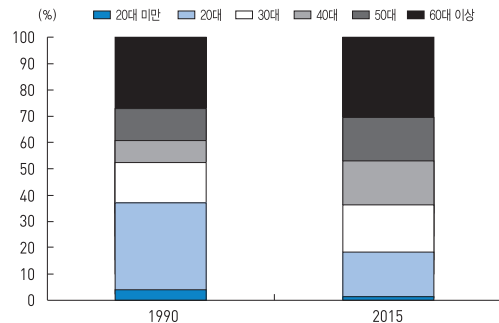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VIII-10).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대의 비중이 낮아지고 60대 이상과 30대의 비중이 높아졌다. 1990년에는 20대(33.3%)가 가장 많았지만, 2015년에는 60대 이상(30.3%)과 30대(18.3%)가 20대(17.0%)보다 많아졌다. 1인가구에서 60대 이상과 30대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독거노인의 증가와 미혼율의 상승 때문으로 이해된다(그림 VIII-11).

[그림 VIII-11]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1990, 201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2015.

성별로 보면, 2015년 전체 1인가구 중 남성 1인가구가 49.8%이고 여성 1인가구는 50.2%이다. 남성 1인가구는 성별 자료를 처음 구할 수 있는 2000년에 94만 가구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59만 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여성 1인가구도 128만 가구에서 261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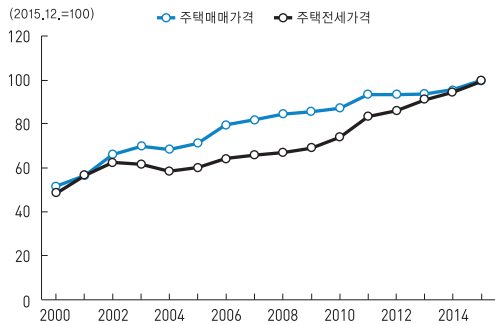


연령과 성을 교차시켜 살펴보면, 30대에서는 남성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가 비슷하게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남성 1인가구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30대의 경우 2000년 대비 2015년에 남성 1인가구는 27만 가구에서 61만 가구로, 여성 1인가구는 15만 가구에서 34만 가구로 각각 2.3배씩 증가하였다. 60대 이상의 경우 남성 1인가구는 2000년 12만 가구에서 2015년 45만 가구로 3.8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성 1인가구는 59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1.9배 증가하였다.

주택시장의 변화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14년 103.5%에 이르렀다. [그림 VIII-12]를 보면,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2년에 주택시장이 일시

[그림 VIII-12]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종합지수,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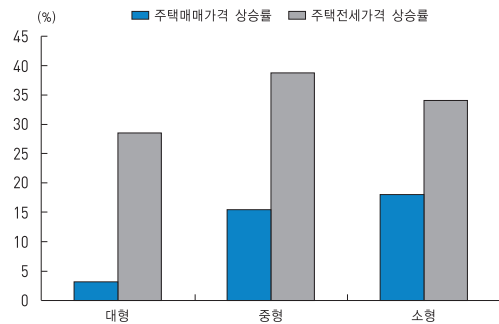
주: 1) 해당연도 12월 기준임.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2016. 8.

적으로 침체되었지만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2015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2005년 대비 65.7% 상승하였고 2010년에 비해서도 34.7%나 상승하였다. 2015년 수도권 주택의 전세가격도 2005년과 2010년 대비 각각 75.4%와 36.0% 상승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비슷한 동향을 보인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규모별로 보면, 대형주택보다는 중소형주택에서 가격 상승폭이 크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대형주택이 3.2%, 중형주택이 15.5%, 소형주택이 18.1% 상승하였다. 전세가격은 중형주택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대형주택이 28.5%, 중형주택이 38.9%, 소형주택이 34.1% 상승하였다(그림 VIII-13).

[그림 VIII-13] 주택규모별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2010년 대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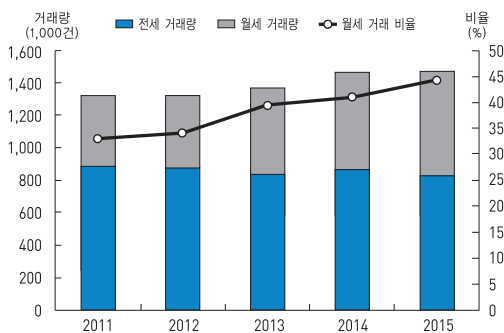


주: 1) 해당연도 12월 기준임.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2016. 8.

주택 거래량에서는 전월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보다 더 많다. 2015년 12월 기준 연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119만 4,000여 건이고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7만 2,000여 건이다. 특히, [그림 VIII-14]에서 보는 것처럼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월세 거래량은 2011년 약 43만 6,000여 건에서 2015년 약 65만 1,000여 건으로 49.3% 증가하였다. 최근 월세로의 전환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VIII-14).

[그림 VIII-14] 전월세 거래량 및 월세 거래 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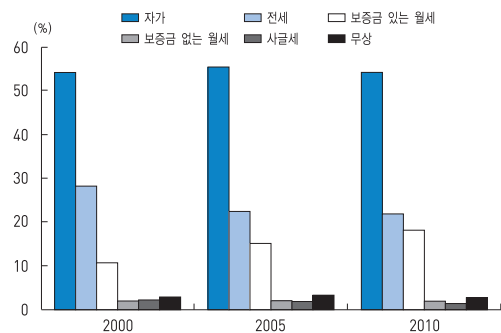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각 연도 12월.

1인가구의 주거형태

일반가구와 1인가구로 나누어 주거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00년 54.2%에서 2010년 54.2%로 큰 변화가 없다. 전세 비율은 2000년 28.2%에서 2010년 21.7%로 6.5%p 낮아졌다. 그러나 보증금 월세 비율은

2000년 10.7%에서 2010년 18.2%로 7.5%p 상승하였다. 순수 월세 비율은 2000년 2.0%에서 2010년 2.0%로 거의 변화가 없다(그림 VIII-15).

[그림 VIII-15] 일반가구의 주거점유형태,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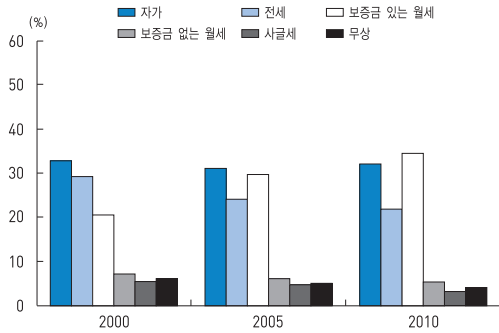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고 변화도 크지 않다. 1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00년 32.6%에서 2010년 31.9%로 뚜렷한 변화가 없다. 전세 비율은 일반가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보증금 월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인가구의 전세 비율은 2000년 29.0%에서 2010년 21.8%로 낮아졌다. 그러나 보증금 월세 비율은 2000년 20.4%에서 2010년 34.4%로 상승하였다. 이는 일반가구의 보증금 월세 비율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순수 월세 비율은 2000년 7.0%에서 2010년 5.1%로 1.9%p 낮아졌다(그림 VIII-16).

가구의 성별로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남성 1인가구는 보증금 월세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 1인가구는 자가 비율이 가장

[그림 VIII-16] 1인가구의 주거점유형태, 2000-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높다. 남성 1인가구의 경우 보증금 월세 40.1%, 전세 22.5%, 자가 22.1%, 순수 월세 6.9%의 순이다.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가 40.4%, 보증금 월세 29.5%, 전세 21.2%, 순수 월세 3.5%의 순이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젊은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증금 월세 비율이 높다. 2010년 기준 20대 1인가구의 보증금 월세 비율은 55.9%에 이른다. 전세 비율은 24.2%, 순수 월세 비율은 6.4%이고 자가 비율은 6.0%에 불과하다. 30대 1인가구도 보증금 월세 비율이 44.1%로 가장 높다. 전세 비율은 30.5%, 자가 비율은 15.6%이고 순수 월세 비율은 4.3%에 그친다. 반면, 60대 이상 1인가구는 자가 비율이 61.1%로 가장 높고 전세와 보증금 월세 비율은 각각 15.9%와 14.1%이며 순수 월세 비율은 3.1%로 매우 낮다(표 VIII-8).

이제 일반가구와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일반가구의 아파

〈표 VIII-8〉 1인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집단별 주거점유 형태, 2010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전체	31.9	21.8	34.4	5.1	3.0	3.8
20대 미만	4.1	10.7	60.0	12.5	10.8	2.0
20대	6.0	24.2	55.9	6.4	4.7	2.8
30대	15.6	30.5	44.1	4.3	1.8	3.8
40대	22.1	23.5	40.2	6.5	3.1	4.6
50대	34.7	19.4	31.1	6.6	3.5	4.8
60대 이상	61.1	15.9	14.1	3.1	2.2	3.6
남성	22.1	22.5	40.1	6.9	3.6	4.9
20대 미만	4.5	9.6	58.5	13.2	12.0	2.2
20대	6.6	24.1	53.2	7.2	5.4	3.4
30대	16.6	29.6	42.4	4.9	1.8	4.6
40대	20.4	21.2	41.4	8.0	3.4	5.8
50대	26.7	17.6	35.5	9.2	4.1	7.0
60대 이상	51.0	16.0	20.0	5.6	3.0	4.5
여성	40.4	21.2	29.5	3.5	2.5	2.8
20대 미만	3.6	11.9	61.4	11.8	9.5	1.8
20대	5.3	24.4	58.9	5.5	3.9	2.1
30대	13.9	32.0	47.0	3.1	1.6	2.4
40대	24.9	27.2	38.5	4.1	2.6	2.6
50대	42.5	21.1	26.7	4.1	2.8	2.7
60대 이상	64.2	15.8	12.3	2.4	2.0	3.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트 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0년 대비 2010년에 10.5%p 상승하였다. 특히, 30대와 40대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58.4%와 58.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대 미만과 20대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각각 11.7%와 26.1%에 불과하다.

일반가구 가구주의 성과 연령대에 따라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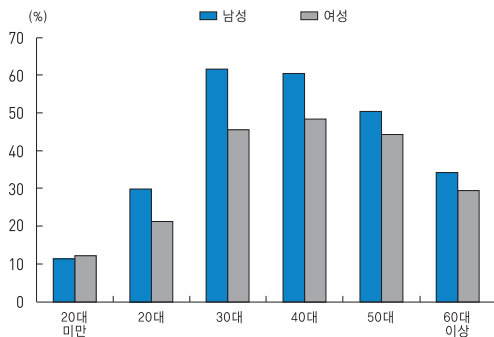
파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일반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50.6%이고 여성 일반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2%이다. 남성 30대와 40대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각각 61.6%와 60.4%로 높지만, 20대 미만과 20대는 각각 11.3%와 29.7%로 30, 40대에 비해 훨씬 더 낮다. 여성 일반가구의 경우는 30-50대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45% 내외로 높고 20대 미만과 20대는 10-20%대에 그친다(그림 Ⅷ-17).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0년 대비 2010년에 7.2%p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 기준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일반가구보다 21.6%p 낮다. 연령별로는 일반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30-50대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대체로 높고 20대 미만과 20대

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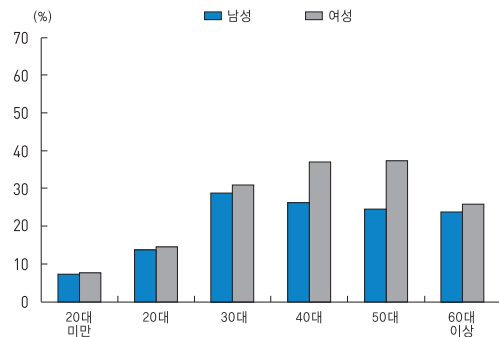
1인가구의 연령대별 아파트 거주 비율을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먼저, 여성 1인가구 중 아파트에 사는 비율은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다. 그 뒤를 60대 여성, 20대 여성, 20대 미만 여성의 순이다. 남성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높으며 20대와 20대 미만은 약 10% 정도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남녀 간 아파트 거주 비율의 차이는 40대와 50대에서 가장 크다. 즉 40대와 50대만 놓고 보면,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반면 20대, 30대, 60대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에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다(그림 Ⅷ-18).

[그림 Ⅷ-17]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집단별 아파트 거주 비율, 2010



주: 1) 아파트 거주 비율=아파트 거주 일반가구÷전체 일반가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그림 Ⅷ-18] 1인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집단별 아파트 거주 비율, 2010



주: 1) 아파트 거주 비율=아파트 거주 1인가구÷전체 1인가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정동재 (서울대학교)

-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 추세이지만 아직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약 90만 대 수준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기술린 자동차 대신 친환경 자동차를 1대 보급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0.7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3톤,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는 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친환경 자동차란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지칭한다. 친환경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교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개인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확대를 바라는 기업,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보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는 우리 사회의 교통체계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념과 종류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현재까지의 보급 현황과 향후의 상황을 전망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살펴본다.

친환경 자동차의 개념과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부합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의미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력원에 따라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2009년에 클린디젤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켰다. 클린디젤 자동차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매연저감장치(DPF) 등을 장착하여 기존 디젤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여전히 휘발유 차량에 비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에서

도 클린디젤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현황과 전망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경하

〈표 VIII-9〉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 혜택

구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방비 별도 지원)	100만원	500만원	1,200만원	2,750만원
세금 감경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최대 140만원	최대 140만원
	지역개발 채권	최대 2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200만원
인센티브	공영주차장 20-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서울 남산터널)			

출처: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2015.

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표 VIII-9).

주로 버스, 택시, 청소차 등으로 보급되는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도 〈표 VIII-10〉과 같이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VIII-1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

대상	지원내용	
충전 사업자	세제 지원	- 충전소 설치를 위한 투자비의 3% 법인세 감면(약 2,000만원 절감) - 충전소 전력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연간 1,500만원 절감) - 충전소 설치에 따른 개발훼손부담금 10-20%로 인하
	재정 지원	- 충전소 설치비 장기 저리(약 1.74%) 융자 - 공차운행보조금 지급
버스 사업자	세제 지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감면(약 1,600만원 절감)
	재정 지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시 구입비용 보조(대형버스 1,200만원/대, 중형버스 700만원/대, CNG하이브리드버스 6,000만원/대, 청소차 11톤급 4,200만원/대, 5톤급 2,700만원/대 보조)
기타	세제 지원	주요 수입부품 관세 감면
	재정 지원	-

출처: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홈페이지(<http://www.kangv.org>).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비용으로 전기차 1대당 완속충전시설 400만 원, 공공급속충전시설 1기당 7,000만 원, 수소충전소 1기당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표 VIII-11〉과 같이 충전인프라 시설이 꾸준히 확충되어 2016년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 196 개소와 전기차 충전소 8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시설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차량 구매부담 경감, 인센티브 확대, 충전인

〈표 VIII-11〉 시도별 천연가스 및 전기 자동차 충전소수, 2016

시도	천연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	
	충전소 수 (개소)	1,000km ² 당 충전소수 (개소/1,000km ²)	충전소 수 (개소)	1,000km ² 당 충전소수 (개소/1,000km ²)
전국	196	2.0	817	8.1
서울	32	52.9	55	90.9
부산	16	20.8	16	20.8
대구	12	13.6	11	12.4
인천	16	15.3	13	12.4
광주	6	12.0	9	18.0
대전	6	10.1	4	6.7
울산	5	4.7	5	4.7
경기	64	6.3	141	13.9
강원	7	0.4	90	5.3
충북	3	0.4	29	3.9
충남	2	0.2	48	5.8
전북	6	0.7	35	4.3
전남	6	0.5	51	4.1
경북	4	0.2	48	2.5
경남	11	1.0	55	5.2
세종	-	-	1	2.2
제주	-	-	206	111.4

주: 1) 천연가스 충전소수는 2016년 8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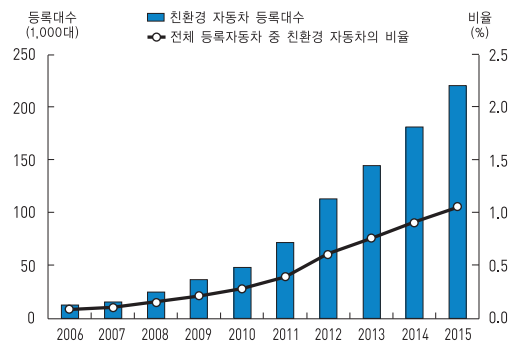
2) 전기자동차 충전소수는 2016년 10월 기준임.

3) '-'는 자료 없음.

출처: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홈페이지(<http://www.kangv.org>),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http://www.ev.or.kr>),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2016.

프라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그림 VIII-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의 연간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1만 1,992대에서 2015년 22만 144대로 18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7만 4,620대로 전체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각각 18.1%와 2.6%를 차지한다.

〔그림 VIII-19〕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와 비율,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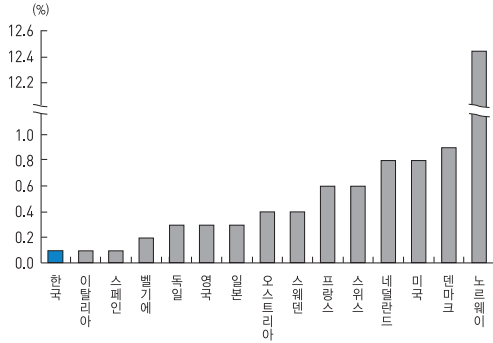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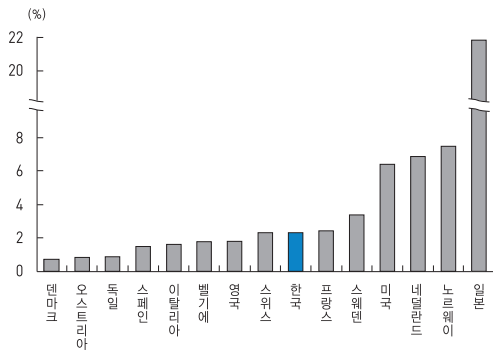
이처럼 빠른 속도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인 2,098만 9,885대의 1%에 불과하다(그림 VIII-19).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한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 비율은 0.1%로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가장 낮다(그림 VIII-20).

[그림 VIII-20] 주요 국가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율, 2014

1) 전기 자동차



2)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 1)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된 승용차 중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임.

2)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함.

3) 한국 자료는 내수 판매실적임.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2014.12; 「세계자동차 통계」, 2015.

정부는 <표 VIII-12>와 같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약 90만 대 수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64만 9,00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 자동차 20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5만 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9,000대의 순이다.

<표 VIII-12>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

(1,000대)

연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2016	49	3	10	0.1
2017	73	5	30	0.3
2018	108	10	40	2.0
2019	166	13	50	2.6
2020	253	19	64	3.9
합계	649	50	200	9.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 계획(2016-2020)」, 2015.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대에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9-110g/km까지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VIII-13). 현재 일반 가솔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 192.2g/km인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 자동차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표 VIII-13> 주요 국가의 자동차 환경규제 목표치

국가	규제 대상	목표 연도	규제치(g/km)
한국	CO ₂ 또는 연비	2020(예정)	97
일본	연비	2020	100
중국	연료소비	2020	110
미국	CO ₂ 및 연비	2025	89
유럽(EU)	CO ₂	2021	91

주: 1) 규제치는 CO₂ 배출량 단위로 환산한 값임.

출처: 환경부, 「환경·경제의 상생 고리 친환경차 보급정책」, 2014.

고효율 저비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개발 경쟁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I-14>에 정리하였듯이,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운행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게다가 정부의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향후 배터리 성능 향상, 다양한 저가형 자동차 양산, 관련 산업 육성, 법과 제도의 정비,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III-14>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비용 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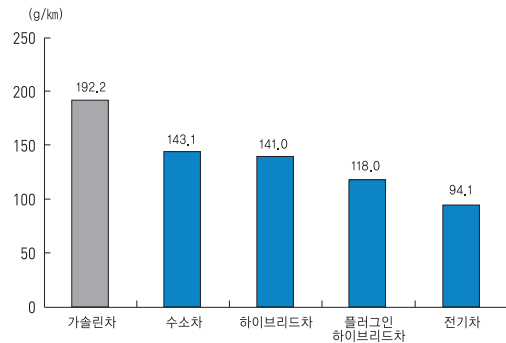
종류	운행비용 절감 효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18.2km/L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연비 12.1km/L보다 우수 - 연간 15,000km 주행 시 내연기관차보다 연료비 약 65만원 절감(연료비 1,534원/L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차보다 1,480만원 가량 유류비 절감(내구 연한을 165,000km로 가정)
전기 자동차	연료비용이 휘발유 자동차 대비 1/5-1/3 수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연간 15,000km 주행 시 약 50-80만원 절감
천연가스 자동차	CNG 버스와 CNG하이브리드 버스의 주행 원가는 각각 325.3원/km, 446.3원/km로 경유 버스의 주행원가 488.56원/km보다 저렴

출처: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2015.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홈페이지(<http://www.kangv.org>).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사회적 영향

친환경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에 비해 유해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 피해를 줄인다. [그림 VIII-21]과 같이 친환경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4.1-143.1g/km로 일반 가솔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92.2g/km의 49-74% 수준에 불과하다. 가솔린 자동차 대신 친환경 자동차를 1대 보급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하이브리드차는 0.7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1.3톤, 전기차와 수소차는 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를 각각 106그루, 197그루, 303그루를 심는 효과에 상응한다(환경부, 2015). 친환경 자동차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배출량도 적어서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나 생태계와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림 VIII-21] 가솔린 및 친환경 자동차의 CO₂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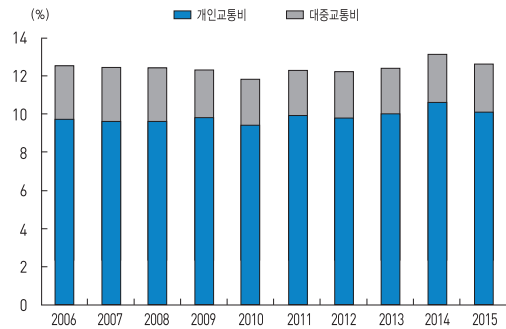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2015.

친환경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가구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 것이다. 가구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 중에서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에 달한다(그림 VIII-22). 운행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되면 대중교통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도 개인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연비 개선과 교통비 부담 감소는 통행수요, 즉 통행횟수와 통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통행수요 증가는 교통혼잡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량이 상쇄된다. 이를 반등효과(rebound effects)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정리한 Sorrell 등(2009)에 따르면 이 효과는 약 10~30% 수준이다. 즉, 자동차 주행비용이 10% 감소하면 자동차 주행거리는 1~3% 더

[그림 VIII-22] 가구 교통비 지출률, 2006~2015



주: 1) 가구 교통비 지출률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가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개인교통비는 자동차 구입비, 기타 운송기구(오토바이, 자전거 등)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비(부품 및 관련용품,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 개인교통) 등을 포함하고, 대중교통비는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기타운송비(항공, 교통카드 이용, 기타 여객운송)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실증연구(송은해, 2012)에서도 이 효과를 15.5%로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송은해·2012.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개선의 반등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환경부. 2015. 「친환경 자동차」.
- Sorrell, Steve, John Dimitropoulos, and Matt Sommerville. 2009. “Empirical estimates of the direct rebound effect: A review.” *Energy Policy* 37(4) : 1356 – 1371.

2016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X 환경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8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이미숙 창원대학교	247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6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대기오염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미세먼지나 오존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증대, 해수면 상승 등 한반도의 기후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지정폐기물 발생량과 화학물질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는 같은 일부 중금속의 혈중 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환경소음 수준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소음은 환경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GDP 대비 환경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정체 상태에 있다.

2015년 9월에 개최된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2016-2030년 인류 공통의 발전의제로 채택되었다. 모두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3 이상이 환경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전의제로 채택했다는 것은 환경문제가 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

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여기서는 대기, 물,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영역의 구분방식에 따라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현황을 살펴본다.

대기환경

대기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표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0-2013

(톤)

연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2000	490,761	1,122,844	61,719	706,915
2005	408,462	1,306,724	67,343	756,421
2006	446,488	1,274,969	64,795	794,158
2007	402,525	1,187,923	98,143	874,699
2008	417,980	1,045,104	110,797	857,856
2009	387,727	1,014,318	103,735	851,162
2010	401,741	1,061,210	116,808	866,358
2011	433,959	1,040,214	131,176	873,108
2012	417,645	1,075,207	119,980	911,322
2013	404,660	1,090,614	121,563	913,573

주: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생물성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제외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황유 정책에 힘입어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중반에 배출량 증가 추세가 꺾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Ⅸ-1).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 중의 하나인 이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 무효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02ppm 이하)을 충족시키고 있다. 반면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야 주요 대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50\mu\text{g}/\text{m}^3$ 이하)을 충족시

〈표 Ⅸ-2〉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도시수, 2000-2014

연도	전국		경기도	
	측정 도시수	환경기준 초과 도시수	측정 도시수	환경기준 초과 도시수
2000	34	22	8	8
2005	62	43	22	22
2006	65	49	25	25
2007	70	53	26	26
2008	70	45	26	25
2009	70	41	27	25
2010	70	41	26	26
2011	76	39	31	27
2012	77	17	30	12
2013	79	37	30	23
2014	81	36	31	25

주: 1) 유효측정처리비용 미만인 도시는 제외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4」, 2015.

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측정 대상 도시 중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시의 비율은 여전히 40%를 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80% 이상의 도시들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표 Ⅸ-2).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평균 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기상여건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해마다 변동 폭이 크다(표 Ⅸ-3).

〈표 Ⅸ-3〉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2005-2014

연도	시행지역 (곳)	발령일수 (일)	발령횟수 (회)	시간최고농도 (ppm)
2005	57	19	84	0.199
2006	58	22	52	0.192
2007	62	30	82	0.217
2008	63	32	101	0.203
2009	64	20	60	0.169
2010	62	25	83	0.181
2011	63	19	55	0.174
2012	68	29	66	0.163
2013	69	39	160	0.179
2014	69	29	129	0.188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4」, 2015.

기후변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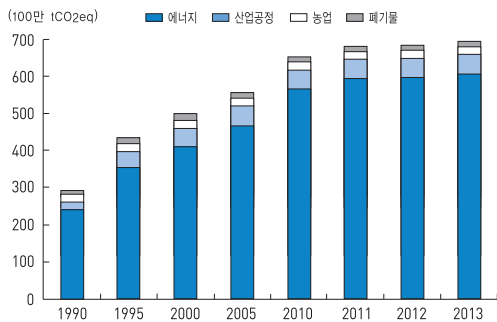


가스라고 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7개 기체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체 온실효과의 8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1990-2013년 동안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0년 약 3억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약 6억 9,450만 톤으로 137.6% 증가하였다. 2013년 현재 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4위인데, 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3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며, 동 기간 동안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1.2% 증가하였다(그림 IX-1).

[그림 IX-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3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5.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 및 가뭄, 육상생태계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1981-2010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0.41℃/10년) 상승하였는데, 지구 평균기온이 지난 133년간(1880-2012년) 0.85℃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한반도의 기온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간 강수량은 78mm(10년 평균 25.87mm) 정도 증가하였다. 해수면은 지난 43년간(1964-2006년) 약 80mm 상승하여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연평균 1.9mm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알레르기나 병원체 서식환경을 변화시켜 말라리아, 쯤쯤가무시, 천식,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유발하며, 한여름 고온은 호흡기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악화시켜 초과사망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물환경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생활하수, 분뇨, 산업폐수 및 축산분뇨는 대체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모두 증가하다가 그 후로는 각기 다른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하수는 2011년을 제외하면 발생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분뇨 발생량 역시 2009년을 기점으로 뚜렷이 감소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폐수는 2000년대 후반에 급속히 감소한 후 1일 발생량이 400~500만^m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IX-4).

〈표 IX-4〉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0~2013
(1,000^m/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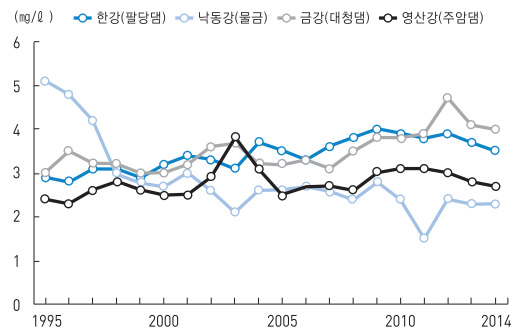
연도	하수	분뇨	산업폐수	가축분뇨
2000	15,441	47	7,097	125
2005	16,833	48	9,181	138
2006	16,920	47	6,215	137
2007	16,745	45	5,352	154
2008	17,113	46	4,557	128
2009	16,681	49	4,622	136
2010	16,111	46	5,229	136
2011	18,661	42	5,269	129
2012	15,722	42	5,662	177
2013	15,148	38	5,299	173

주: 1) 2000년 산업폐수 발생량은 2001년 자료임(2000년 자료 없음).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1991년과 1994년에 낙동강 폐놀오염사고 및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 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mg/L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mg/L에서 2014년 2.3mg/L로 대폭 낮아졌지만, 한강(팔당댐)이나 금강(대청댐)의 COD는 1990년대 후반 3.0mg/L 내외 수준에서 2010년대에 4.0mg/L 내외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그림 IX-2). 총인 농도의 경우에는 한강(팔당댐)과 낙동강(물금)이 개선 추세에 있지만 영산강(주암댐)은 정체 상태에 있다.

〔그림 IX-2〕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4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기준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기준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정부는 흔히 녹조라고 부르는 조류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호와 대청호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말 현재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가 시행되고 있다. 조류경보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X-5).

〈표 IX-5〉 조류경보 발령일수, 2000-2014

(일)

연도	주의보	경보	합계
2000	56	18	74
2001	79	42	121
2002	93	0	93
2003	133	33	166
2004	97	0	97
2005	318	0	318
2006	278	34	312
2007	101	97	198
2008	95	19	114
2009	201	43	244
2010	163	14	177
2011	131	0	131
2012	161	43	204
2013	82	0	82
2014	158	7	165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연도.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에 0.99-1.05kg/일/인 수준에서 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0.95kg/일/인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

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IX-6).

〈표 IX-6〉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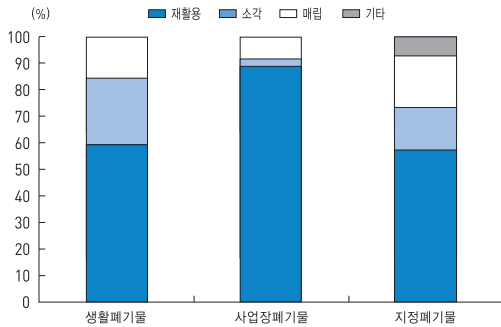
(톤/일)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	사업장배출 시설계	건설	
2000	46,438	101,453	78,777	7,615
2005	48,398	112,419	134,906	8,634
2006	48,844	101,099	168,985	10,026
2007	50,346	114,807	172,005	9,511
2008	52,072	130,777	176,447	9,594
2009	50,906	123,604	183,351	9,060
2010	49,159	137,875	178,120	9,488
2011	48,934	137,961	186,417	10,021
2012	48,990	146,390	186,629	12,501
2013	48,728	148,443	183,538	12,417
2014	49,915	153,189	185,382	13,177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4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59.0%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5.3%)되거나 매립(15.7%)된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88.6%)되며 소각(2.9%) 또는 매립(8.1%)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57.3%)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해 소각(16.0%) 또는 매립(19.2%)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 IX-3).

[그림 Ⅸ-3]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4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도)」, 2015.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도)」, 2015.

화학물질

사업장에서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중에는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많으며, 이 물질들은 대부분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대상 업종 및 화학물질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연간 약 5만 4,261톤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 현재 0.0332% 수준이다(표 Ⅸ-7).

중금속이나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영향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혈액이나 소변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이다.

혈중 납 농도의 경우 1.7~2.0 $\mu\text{g}/\text{dL}$ 수준으로

〈표 Ⅸ-7〉 화학물질 배출량, 2000~2014

연도	화학물질 배출량 (1,000톤)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 (%)
2000	30	0.0520
2005	47	0.0420
2006	48	0.0404
2007	48	0.0373
2008	48	0.0368
2009	47	0.0348
2010	50	0.0350
2011	52	0.0347
2012	51	0.0323
2013	51	0.0315
2014	54	0.0332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각 연도.

조사되었는데, 이는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1993년에 의무화된 무연휘발유 보급 시책의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혈중 수은 농도의 경우 3~4 $\mu\text{g}/\text{L}$ 수준

〈표 Ⅸ-8〉 성별 혈중 중금속 농도, 2007~2014

	2007	2008	2009-2011	2012-2014
납($\mu\text{g}/\text{dL}$)				
전체	1.72	1.98	1.77	1.94
남성	2.32	2.55	2.16	2.28
여성	1.47	1.77	1.46	1.66
수은($\mu\text{g}/\text{L}$)				
전체	3.80	3.00	3.08	3.11
남성	4.94	3.87	3.65	3.70
여성	3.27	2.68	2.62	2.63

주: 1)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2009~2011년 자료와 2012~2014년 자료는 각각 3개년도 조사결과를 통합하여 산출한 기하평균값임.

출처: 환경부, 「2015 환경통계연감」, 2016.

국립환경과학원,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2015.

인데, 이는 미국이나 독일($1\mu\text{g/L}$ 이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혈중 납 농도나 수은 농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특성도 함께 고려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표 IX-8).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시간대(낮, 밤)에 따라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

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지난 20년 동안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그림 IX-4).

일상생활에서 소음 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분쟁조정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85.4%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층간소음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소음·진동 관련 분쟁사건의 비율은 86.3%에 이른다(표 IX-9).

〈표 IX-9〉 환경분쟁 원인별 조정건수, 199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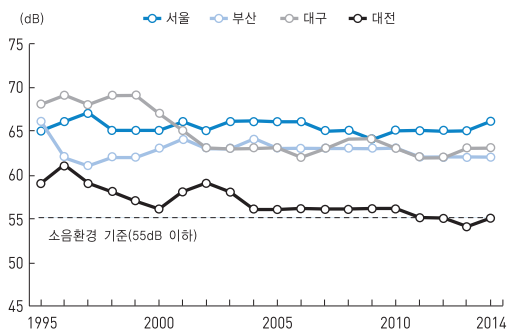
(건)

연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	기타
1991-2001	366	52	35	0	8
2002	229	26	4	0	4
2003	264	19	8	0	1
2004	206	8	3	5	1
2005	151	11	5	6	1
2006	150	8	3	1	3
2007	142	7	3	15	5
2008	173	8	3	0	25
2009	241	13	2	21	6
2010	149	3	6	12	5
2011	164	7	3	6	5
2012	214	14	6	17	4
2013	154	12	3	19	3
2014	203	5	4	18	7
2015	177	10	2	13	8

주: 1)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통계현황」, 2016.

[그림 IX-4]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1995-2014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환경관리

정부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환경부 예산의 3배 가까운 수준이었다(표 Ⅸ-10).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부 예산의 비율은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2005년 행정자치부의 수질보전지방양여금이 환경부 예

산으로 편입되면서 외형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1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 수준을 넘었다. 하지만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2.1% 내외 수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예산과 환경분야 예산의 차이가 현재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것이 환경보호지출이다. 환경보호지출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9개로 구분되는 환경보호지출 영역 중에서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표 Ⅸ-10〉 환경예산, 1995-2014

연도	환경분야 예산		환경부 예산	
	금액 (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	금액 (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
1995	17,801	2.39	6,729	0.90
2000	30,581	2.44	13,023	1.04
2005	35,578	2.12	28,557	1.70
2006	33,978	1.94	29,992	1.71
2007	32,837	1.86	32,203	1.82
2008	36,568	1.87	35,514	1.82
2009	42,101	1.94	40,282	1.85
2010	46,740	2.07	44,832	1.98
2011	49,741	2.11	47,778	2.03
2012	51,496	2.07	49,897	2.01
2013	54,458	2.07	52,477	1.99
2014	56,119	2.04	54,324	1.98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표 Ⅸ-11〉 환경보호지출, 2004-2013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55	15.5	38.6	26.4	19.5
2005	24,017	2.6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74	17.4	38.4	24.7	19.6
2007	28,675	2.75	18.9	37.7	23.9	19.5
2008	30,188	2.73	19.0	37.4	24.3	19.3
2009	32,629	2.83	17.2	37.9	24.6	20.3
2010	32,880	2.60	17.4	36.8	25.8	20.0
2011	33,784	2.54	17.3	36.5	26.4	19.8
2012	34,547	2.51	18.0	38.8	23.0	20.2
2013	35,246	2.47	16.6	39.2	23.3	20.8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Ⅸ-11).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에 지출이 많은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에 대부분 지출되는 폐기물 영역은 공공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지만,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주로 지출되는 대기 영역은 기업부문이 지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이미숙 (창원대학교)

- 한국인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환경분야별로는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도시보다 현저히 높다.
-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환경보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친환경 행동의 실천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부담이나 실천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개인의 삶의 질이나 국가발전에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에 집중된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1980년대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성장의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던 환경문제는 점차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21세기에는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하는 국제적 과제이자 국가경쟁력의 판단 기준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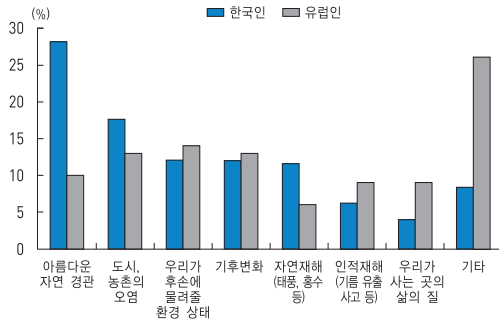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인의 환경의식은 현재 어느 수준인가? 환경의식은 친환경 행동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나아가 환경이 삶의 질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민환경의식조사」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먼저 국민들이 환경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환경에 대해 비교적 제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환경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름다운 자연경관(28.1%), 도시·농촌의 오염(17.6%),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의 상태(12.1%), 기후변화(12.0%) 등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떠올렸다(그림 IX-5). 유사한 설문항목을 포함하여 시행한 2011년 European Commission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유럽인이 한국인보다 환경에 대해 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X-5] 한국인과 유럽인의 환경에 대한 이미지, 2014



주: 1) 통계치는 환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한 해당 응답범주의 응답률로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응답범주만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제시하였음.
2) 유럽은 2011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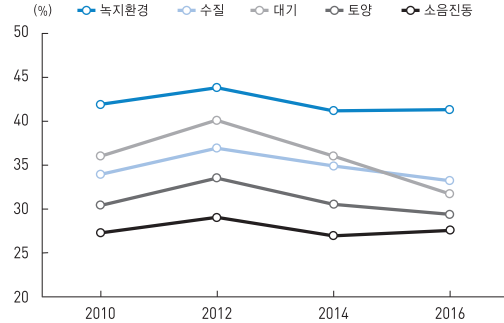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2014.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European citizens towards the environment, 2011.

한국인의 체감 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환경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부 환경분야 중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어 수질, 대기, 토양, 소음·진동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그림 IX-6).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환경분야별 만족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대기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성별로는 5개 환경분야에서 모두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의 만족도보다 소폭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의

[그림 IX-6] 거주지역 체감 환경에 대한 만족도, 2010~2016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만족도가 도시 거주자의 만족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1년 전과 비교한 체감 환경 상태를 보면, 2014년 기준 응답자의 70~80%는 체감 환경에 변화가 없다고 인식한다. 다만,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1년 전보다 '나빠졌다'(19.8%)는 응답이 '좋아졌다'(8.7%)는 응답보다 많고, 녹지환경에 대해서는 1년 전보다 '좋아졌다'(21.6%)는 응답이 '나빠졌다'(6.9%)는 응답보다 많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인의 절반 이상(53.6%)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판단된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20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다.(표 IX-12)

〈표 IX-12〉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2013-2015 (%)

	관심 있음	보통	관심 없음
2013	51.5	35.5	13.0
2014	51.3	38.5	10.2
2015	53.6	36.5	9.9
성			
남성	53.1	37.4	9.5
여성	54.1	35.7	10.2
연령			
20대	32.9	52.7	14.3
30대	53.4	34.4	12.2
40대	53.7	38.6	7.7
50대	63.7	29.6	6.7
60대	67.8	23.6	8.6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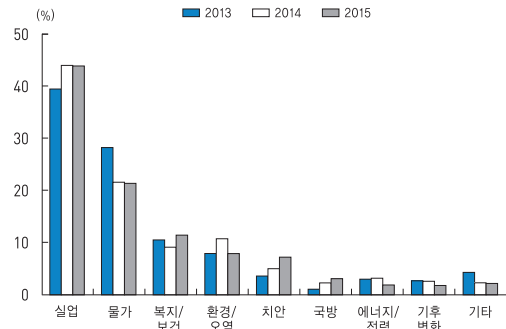
2) 관심 있음은 '매우 관심이 있다'와 '관심이 있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관심 없음'은 '관심 없음' '전혀 관심이 없다'와 '관심이 없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각 연도.

그렇다면 한국인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5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54.2%)가 절반 이상이어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사안으로는 실업, 물가 등의 경제문제가 기후변화, 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선시 되고 있다(그림 IX-7).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는 쓰레기 증가(22.5%), 자원고갈(20%), 대기오염(10.5%) 및 수질오염(9.8%)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X-7] 우선 순위 정부 정책, 2013-2015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로 1순위 응답 기준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각 연도.

조사문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해서도 환경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한국 사회가 환경문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더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가장 우려하며 자원고갈, 자연재해의 순으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한다(표 IX-13).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황사·미세먼지 유입(79.3%), 기후변화(62.8%), 유해화학물질·방사능 유출(65.3%)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불안감을 더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Ⅸ-13〉 환경문제별 위험성 인식, 2013, 2014

	(%)		
	위험함	중립	위험하지 않음
2013			
환경오염	68.6	19.8	11.6
자원고갈	64.7	22.6	12.7
자연재해	58.7	19.4	21.9
원전사고	56.2	24.5	19.3
2014			
환경오염	73.1	18.1	8.8
자원고갈	68.3	21.2	10.5
자연재해	60.8	20.0	19.2
원전사고	59.9	25.0	15.0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한국 사회가 해당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률임(무응답 제외).

3) 위험함은 '전적으로 노출', '상당히 노출', '다소 노출'을 합한 응답률이고, 위험하지 않음은 '별로 노출되지 않음', '거의 노출되지 않음', '전혀 노출되지 않음'을 합한 응답률임.

4) 자연재해의 경우 '홍수·태풍', '지구온난화', '황사·가뭄', '지진·해일' 등 4개 항목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3, 2014.

이처럼 한국인은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지 않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이 친환경적 태도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다음 절에서는 이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친환경 행동의 실천과 태도

먼저, 친환경 행동의 실천 실태를 살펴보자.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친환경 행동

실천은 최근 5년간 큰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환경 행동 실천율은 종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행동은 80~90%가 실천하고 있지만 녹색제품 구입이나 환경보호 활동 참여와 같은 노력은 50% 이하에 그친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친환경 행동을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Ⅸ-14).

〈표 Ⅸ-14〉 친환경 행동별 실천 수준, 2012~2016

	(%)				
	2012	2014	2016		
			전체	남성	여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91.0	90.5	91.1	87.0	95.1
음식물쓰레기 저감	83.1	83.5	83.3	78.7	87.8
대중교통 이용	74.1	72.5	71.9	63.7	79.8
일회용품 사용자제	70.2	69.8	71.4	64.0	78.7
합성세제 사용자제	67.3	65.9	65.0	57.9	72.0
녹색제품 구입	50.9	47.6	-	-	-
환경보호 활동참여	28.0	40.7	33.3	33.3	33.3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친환경적 행동을 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 또는 '약간 노력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세부적인 항목과 결과의 차이는 있지만, 2015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친환경 행동 중 쓰레기 분리수거(80.3%), 에너지 절약(61.2%), 일회용품 사용자제(58.2%) 등은 비교적 잘 실천하는 반면 친환경제품 구매(24.5%), 지역제품 구매(21.3%) 등의 실천은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바람직성' 추구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난 실천 정도는 더욱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조 원을 상회하며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36.2%에 불과하며 비용부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3.7%에 달한다. 환경보호 비용부담에 대한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친환경적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0여 년간 비용부담에 대한 찬성률이 상승하고 반대율이 하락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태도가 조금씩이나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찬성률이 1.6%p 높아 남성이 경제적 비용부담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체감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비용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Ⅸ-15).

또 다른 실천 형태로 2015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는 환경단체 회원이거나 지난 1년 동안 환경과 관련하여 기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두 가지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91.5%에 달하는 반면 두 가지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1.8%에 불과하였다. 이는 2014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환

〈표 Ⅸ-15〉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대한 의향, 2005~2016 (%)

	찬성	보통	반대
2005	24.9	37.8	37.3
2008	33.5	36.4	30.1
2010	30.4	38.9	30.7
2012	34.9	39.2	25.9
2014	36.8	39.9	23.4
2016	36.2	40.1	23.7
성			
남성	37.0	38.7	24.3
여성	35.4	41.4	23.2
지역			
도시	36.1	40.2	23.8
농어촌	36.7	39.8	23.5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 이전 자료는 만 15세 이상).

2) 찬성은 '매우 찬성한다'와 '약간 찬성한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반대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경 관련 사회적 활동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남성의 9.0%, 여성의 8.0%가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은 참여도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참여율이 가장 높으면서 두 가지 모두 하지 않는 불참률도 가장 낮다. 이는 30대가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대 이면서 이들의 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적 태도 간의 차이는 몇 가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조사대상의 54.9%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11.3%만이 안전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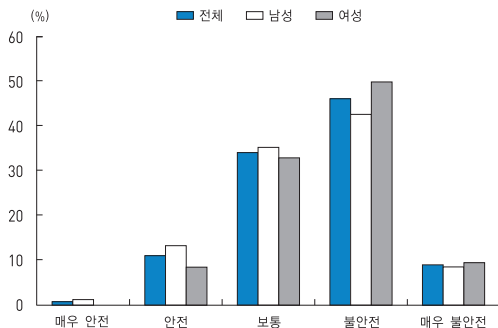
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5% 이내 인상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42.4%,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이 29.4%로 나타나 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그림 IX-8).

2015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생태계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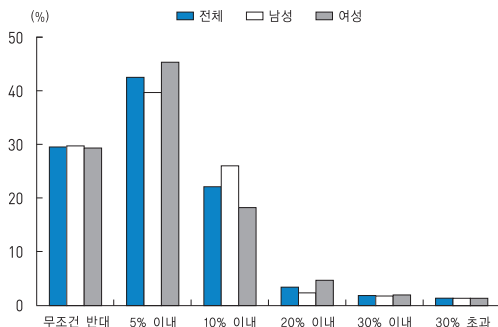
의 73.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인식과 달리, 자연자원 관리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면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37.1%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36.8%는 현재 세금 수입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21.5%는 추가적인 세금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다(그림 IX-9).

[그림 IX-8]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인식과 원자력 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허용범위, 2012

1)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2) 원자력 발전 축소 및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허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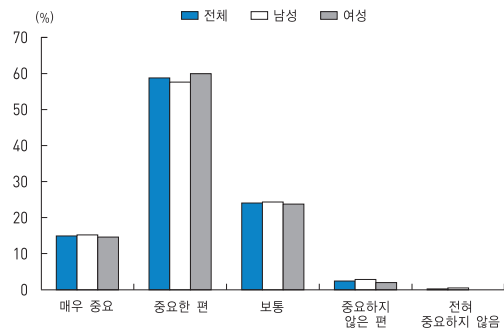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각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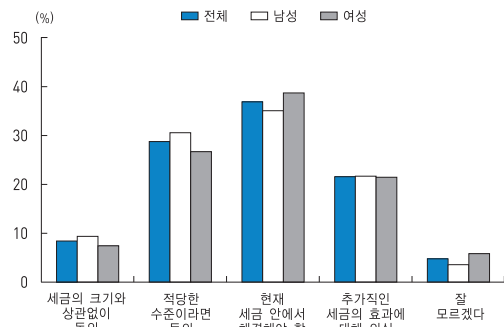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2012.

[그림 IX-9] 생태계 혜택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자연자원 관리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용의, 2015

1) 생태계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중요성 인식



2) 자연자원 관리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용의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각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2015.



이처럼 환경의식과 관련된 조사에서 응답자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당위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경제적 부담이나 행동의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앞서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 인식과 태도 사이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환경오염의 주체에 대한 평가이다.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민(41.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이어 기업(28.9%), 정부(18.0%) 등 순으로 많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환경보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38.3%)라는 응

답이 가장 많고 이어 일반국민(35.3%), 기업(13.9%) 등의 순으로 많다(표 Ⅸ-16). 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환경이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며 시장실패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환경의 삶의 질 및 국가발전 영향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환경이 과연 국민들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환경보전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사한 결과, 중요하다는 응답은 83.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Ⅸ-10).

〈표 Ⅸ-16〉 환경오염 및 환경보전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2013-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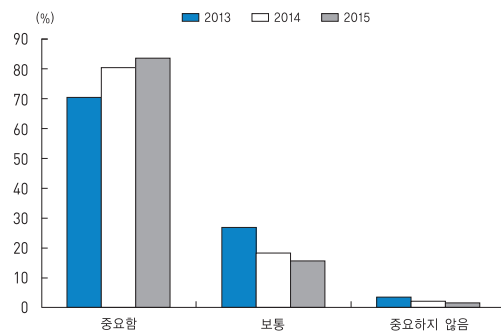
(%)					
	2013	2014	2015		
			전체	남자	여자
환경오염 책임 주체					
일반국민	39.8	36.8	41.7	40.7	42.7
기업	26.8	33.5	28.9	29.6	28.3
중앙정부	23.8	21.2	18.0	19.0	17.0
기타	9.6	8.5	11.4	10.8	12.1
환경보전 책임 주체					
중앙정부	33.1	40.3	38.3	38.5	38.1
일반국민	37.2	32.3	35.3	35.2	35.4
기업	15.6	17.5	13.9	14.1	13.6
기타	14.1	9.9	12.6	12.3	12.9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기타는 '시민단체(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시, 군)'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각 연도.

〔그림 Ⅸ-10〕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2013-2015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중요함은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한 편이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중요하지 않음은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각 연도.



그러나 개인의 삶의 질에는 경제적 요인(73.5%), 사회적 요인(63.0%), 환경적 요인(62.8%)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Ⅸ-17). 환경문제가 개인에게 중요하지만, 아직 경제적 요인만큼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환경문제는 나에게 있어 다른 것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35.8%)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15.8%)보다 2배 이상 많은 것도 동일한 맥락의 결과이다.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Ⅸ-17〉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요인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2013-2015 (%)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2013	70.3	62.7	61.1
2014	76.8	66.3	67.9
2015	73.5	63.0	62.8
성			
남자	73.5	60.7	61.0
여자	73.5	65.3	64.7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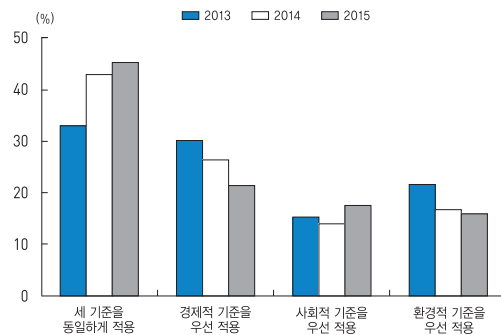
2) 통계치는 해당 요인이 개인 삶의 질에 '매우 많이' 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각 연도.

한편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 개별 기준 중에서는 경제적 기준(국내총생산, 일자리 등), 사회적 기준(시민 참여, 복지 등), 환경적 기준(환경오염, 자연환경 등)의 순으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 최근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경제적 기준이나 환경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세 가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Ⅸ-11).

[그림 Ⅸ-11] 국가발전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2013-2015



주: 1) 전국 만 19-69세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각 연도.

즉, 국가발전의 평가 기준으로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지만 점차 사회적 기준이나 환경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은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다. European Commission의 2014년 조사에서 같은 항목에 대해 유럽인의



59%가 세 가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환경·사회적 기준의 우선 적용이 20%, 경제적 기준의 우선 적용이 14%로 나타나 한국에 비해 환경·사회적 요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

한국인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당면한 환경문제를 위협하게 인식하며 향후 환경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기보다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친환경적 태도가 더욱 요구되지만, 친환경 인식에 비해 태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 부담이나 행동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행동 변화 유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환경의식 조사의 시행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통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의 PM_{2.5} 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WHO 권고기준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수준이다.
- PM₁₀ 농도는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4년에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WHO 권고기준이나 외국 대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 PM_{2.5}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체 형태의 먼지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도 삭감이 필요하다.
- PM_{2.5} 관련 물질 배출량의 배출원별 기여율은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PM_{2.5}(1차 생성 입자)와 황산화물은 사업장의 비중이 높고 질소산화물은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다. 관리가 어려운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배출원과 오염물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 개선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지는 그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입경이 10 μ m 이하인 것을 PM₁₀, 그리고 2.5 μ m 이하인 것을 PM_{2.5}라고 부르며 이를 통칭하여 미세먼지라고 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정거리 확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가지는 건강 위험성 때문이다. 특히, PM_{2.5}는 호흡을 통해 폐포까

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PM₁₀ 또는 일반 부유먼지에 비해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PM_{2.5}, PM₁₀)의 대기농도 현황과 배출량 특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치는 <표 IX-18>과 같다.

<표 IX-18> 미세먼지 환경기준

구분	PM ₁₀ (μ g/m ³)	PM _{2.5} (μ g/m ³)
한국	(연평균) 50	(연평균) 25
	(일평균) 100	(일평균) 50
WHO	IT-1	(연평균) 70
		(일평균) 35
	IT-2	(연평균) 150
		(일평균) 75
	IT-3	(연평균) 50
		(일평균) 25
AQG	(연평균) 30	(연평균) 15
	(일평균) 75	(일평균) 37.5
AQG	(연평균) 20	(연평균) 10
	(일평균) 50	(일평균) 25

주: 1) IT: Interim Target.

2) AQG: Air Quality Guidelines.

출처: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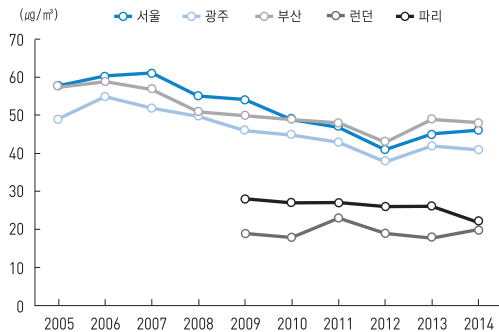


한국의 환경기준은 WHO의 과도적 기준인 IT-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기준인 AQG (Air Quality Guidelines)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은 대기 중 PM_{2.5} 농도를 2021년까지 20 $\mu\text{g}/\text{m}^3$, 그리고 202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8 $\mu\text{g}/\text{m}^3$ 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추이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504개의 측정소에서 측정하는데, 이 중 미세먼지는 일반대기오염측정망과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PM_{2.5} 측정망, 그리고 집중측정망 등에서 측정한다. PM_{2.5}는 2015년부터 환경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의 측정값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IX-12] 국내 및 해외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₁₀) 연평균 농도, 200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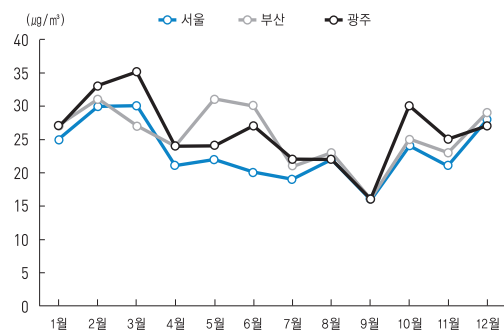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IX-12]는 PM₁₀의 국내 주요 도시와 외국 대도시의 대기 중 농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농도가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환경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런던이나 파리에 비해서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X-13]은 한국 주요 대도시의 2015년 PM_{2.5} 월별 농도 추이를 살펴본 것인데, 겨울에는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여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겨울철의 난방수요와도 관련이 있지만 강수량 등의 기상조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평균 농도는 서울 23.2 $\mu\text{g}/\text{m}^3$, 부산 25.6 $\mu\text{g}/\text{m}^3$, 광주 26.0 $\mu\text{g}/\text{m}^3$ 로 한국 환경기준인 25 $\mu\text{g}/\text{m}^3$ 을 초과하거나 또는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런던(16 $\mu\text{g}/\text{m}^3$, 2011년)이나 동경(10 $\mu\text{g}/\text{m}^3$, 2011년), LA(20 $\mu\text{g}/\text{m}^3$, 2011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IX-13] 국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_{2.5}) 월별 농도, 2015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2015」, 2016.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WHO의 권고기준(PM_{10} $20\mu g/m^3$, $PM_{2.5}$ $10\mu g/m^3$)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외국의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PM_{2.5}$)의 성분과 유해성

입자의 크기와 독성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질량농도라면 $PM_{2.5}$ 가 입자의 수가 훨씬 많고 표면적도 넓어서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질량농도와 화학조성의 조건에서 PM_{10} 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더해 작은 입자는 기관지에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

$PM_{2.5}$ 의 주요 성분과 건강영향

- 유기탄소(organic carbon)와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디젤입자(diesel exhaust particles)이다. 2012년 WHO는 디젤입자를 폐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 전이금속과 금속화합물
전이금속은 산화력이 크기 때문에 세포를 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금속이 동일한 독성을 가지는지 또는 상대적 독성이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 황산염과 질산염(2차 생성물질)

2차 생성물질인 황산염과 질산염은 인체 내에 흡수되어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황산염과 질산염이 조성의 비중으로는 중요하지만 독성 측면에서는 조성 비율만큼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PM_{2.5}$ 의 유해성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Laden 등의 연구(2006)에서는 농도가 $10\mu g/m^3$ 증가하면 사망위험이 1.1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WHO는 같은 조건에서 심폐질환 관련 사망위험이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X-19〉 $PM_{2.5}$ 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자	건강영향
Laden et al.	$PM_{2.5}$ $10\mu g/m^3$ 증가 시 사망위험 1.16% 증가
WHO	$PM_{2.5}$ $10\mu g/m^3$ 증가 시 심폐질환 관련 사망위험 0.2~0.6% 증가
배현주	$PM_{2.5}$ $10\mu g/m^3$ 증가 시 전체 사망위험 0.9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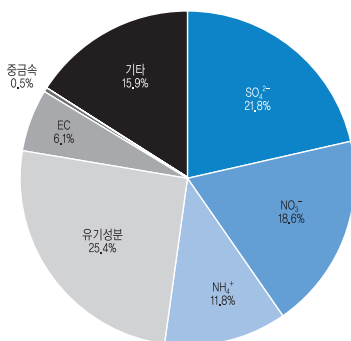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PM_{2.5}$ 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 I」, 2012.
Laden et al., 2006.
WHO, *Health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2013.

미세먼지(PM_{2.5})의 생성

먼지는 1차 생성입자(primary particulate)와 2차 생성입자(secondary particulate)로 구분한다. 1차 생성입자는 배출원에서 입자 형태로 배출되거나 배출된 후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 형태로 전환된 입자를 의미하고, 2차 생성입자는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PM_{2.5} 생성에는 다양한 물질과 기상여건이 관여하게 된다.

[그림 IX-14]는 2011~2013년 기간의 수도권 PM_{2.5} 조성을 나타낸 것인데, 탄소성분(EC, 유기성분)과 SO₄²⁻, NO₃⁻, NH₄⁺, 그리고 중금속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차 생성입자인 SO₄²⁻, NO₃⁻, NH₄⁺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PM_{2.5} 관리를 위해서는 고체 형태의 먼지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도 삭감해야 한다.

[그림 IX-14] 수도권 PM_{2.5} 조성, 2011~2013



출처: (사)한국대기환경학회, 「PM_{2.5} 실태파악 및 향후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201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표 IX-20〉은 2001~2013년 기간의 배출량과 2012년 대비 2013년 배출량의 증감률을 나타낸다. 오염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NO_x)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PM_{2.5}의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2013년 PM₁₀과 PM_{2.5},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은 2012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황산화물(SO_x)은 감소하였다.

〈표 IX-20〉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2011~2013

(톤/년)				
연도	PM ₁₀	PM _{2.5}	NO _x	SO _x
2011	131,176	81,793	1,040,214	433,959
2012	119,980	76,287	1,075,207	417,645
2013	121,563	76,802	1,090,614	404,660
증감률(%)	1.3	0.7	1.4	-3.1

주: 1) PM_{2.5}는 2011년부터 산정함.

2) 2012년 대비 2013년 증감률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5.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연료소비, 자동차 운행 등 다양한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011~2014년 기간 인구와 1차에너지 소비량, 자동차 등록대수, 그리고 제조업 생산지수는 0.43~2.95%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표 IX-21).

전국을 기준으로 PM_{2.5} 관련 물질 배출량의 배출원별 기여율은 〈표 IX-22〉와 같다. PM_{2.5}의

〈표 IX-21〉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의 변화, 2011~2014

연도	인구 (1,000명)	1차에너지 소비량 (1,000TOE)	자동차 등록대수 (1,000대)	제조업 생산지수
2011	49,779	276,636	18,437	106.0
2012	50,004	278,698	18,871	107.5
2013	50,220	280,290	19,401	108.2
2014	50,424	-	20,118	108.3
증감률(%)	0.43	0.66	2.95	0.72

주 1) 증감률은 2011~2014년 기간의 연평균 증감률임. 단,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11~201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감률임.

출처: 환경부, 「2015 환경통계연감」, 2016.

경우에는 사업장의 배출 비율이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산먼지¹⁾ 16%,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 13%, 그리고 생물성 연소²⁾ 12% 등의 순이다.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사업장(52%)과 발전소(24%)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질소산화물은 경유차(26%),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22%), 사업장(22%), 발전소(16%) 등으로부터 고르게 배출된다. 질소산화물은 연료 연소 시에 발생하는 고온의 열 때문에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므로 결국은 배출원별 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해서 배출된다.

PM_{2.5}의 배출원별 기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다. 인구와 자동차가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유차나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

1) 비산먼지는 도로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재비산 먼지와 사업장 또는 공정상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 건설공사, 나대지, 하역 및 야적, 농업활동, 축산활동,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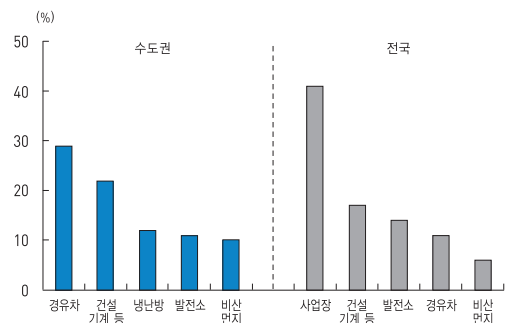
2) 생물성 연소는 고기 및 생선 구이, 노천 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목재난로 및 보일러, 아궁이, 숯가마 등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다.

〈표 IX-22〉 PM_{2.5}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기여율, 2013 (%)

배출원	PM _{2.5}	SOx	NOx
발전소	3	24	16
사업장	44	52	22
냉난방 등	1.4	8	8
경유차	10	0.03	26
휘발유차 등	-	0.02	5
건설기계 등	13	16	22
비산먼지	16	-	-
생물성 연소	12	0.04	1

출처: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보도자료, 2016. 6.

기여도가 각각 29%와 22%를 차지하는 반면, 전국적으로는 사업장과 비도로이동오염원 기여도가 각각 41%와 17%를 차지한다(그림 IX-1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원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PM_{2.5} 삭감 대상의 우선순위가 배출원별 및 지역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경유차나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 배출량 삭감 대책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사업장 대책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림 IX-15] PM_{2.5} 배출원별 배출기여도, 2013

출처: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보도자료, 2016. 6.



맺음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배출원별로 그리고 오염물질별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표 IX-23>은 미세먼지 삭감 대책 중 중요한 대책의 추진 실적을 나타낸 것인데, 사업장 대책은 규제 위주이고 이동오염원 대책은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동오염원 대책에 투입되는데,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05~’14)」에서는 예산의 94%가 이동오염원 삭감에 사용된 바 있다.

미세먼지는 구성성분이나 생성기작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배출량과 대기농도와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기오염의 특성상 기상조건이나 장거리 이동 등의 변수도 상존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대책과 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주요 배출원인 자

<표 IX-23> 미세먼지 삭감을 위한 주요 대책 추진실적

배출원	삭감대책	실적	비고
사업장	자발적 협약(’12~’17)	66개 사업장	먼지, SOx, NOx, 배출량 저감
	배출허용기준 강화	’10년, ’15년	전국
	총량관리(’14)	91개 사업장	수도권
	저NOx 버너 보급(’06~’14)	10,785 개	전국
이동오염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	휘발유차, 경유차, 이륜차	전국
	저공해자동차 보급(’05~’13)	187만대	전국
	천연가스 버스 보급(’~’14)	36,162대	전국
	운행 경유차 DPF 부착(’05~’14)	423,171 대	수도권
	운행 경유차 엔진개조(’05~’14)	185,454대	수도권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05~’14)	207,490대	수도권
비산먼지	비산먼지 제거장치 보급(’05~’14)	34	수도권

출처: 환경부,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16~’25) 수립 연구」, 2015.
감사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2016.

동차의 통행량이 증가하면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Laden, Francine, Joel Schwartz, Frank E. Speizer, and Douglas W. Dockery. 2006. "Reduction in Fine Particulate Air Pollution and Mortality: Extended Follow-up of the Harvard Six Cities Study."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173(6): 667-672.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 안전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박두용 한성대학교	264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박두용 한성대학교	274
노인범죄의 실태와 변화	민수홍 경기대학교	281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박두용 (한성대학교)

-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외인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 자연재해는 대부분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태풍의 영향이 크다.
- 화재 발생은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자동차와 철도 사고 사망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해양과 항공 사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 최근 형법범죄는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법범죄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믿음은 낮고 불안감은 높은 편이다.

안전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있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 테러, 자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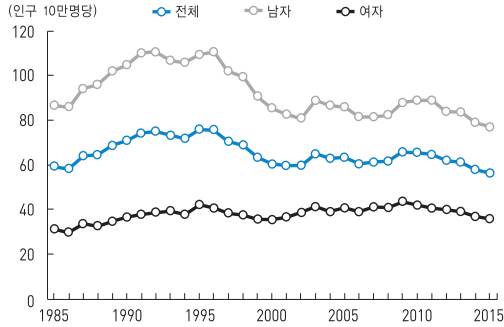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사망률은 모든 사고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남자가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1).

지난 20년간 외인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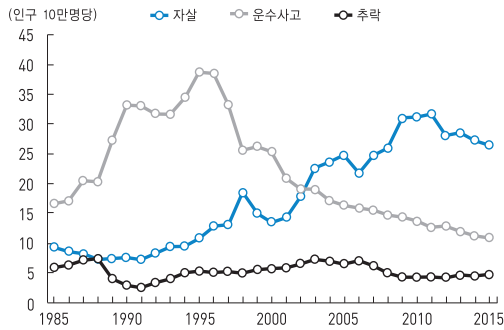


[그림 X-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5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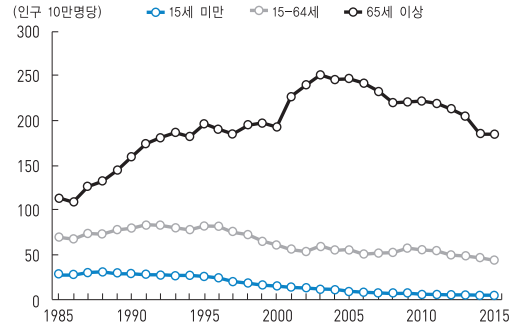
[그림 X-2]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5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자살률은 1983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그림 X-2).

[그림 X-3]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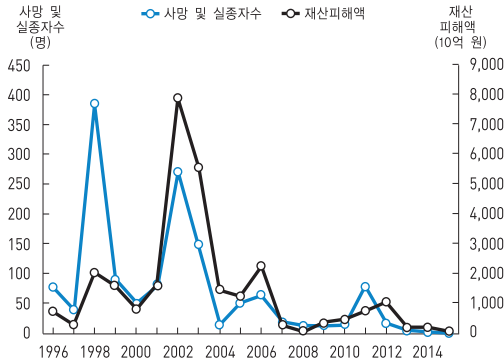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의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연령대별로는 15세 미만의 외인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외인사망률도 1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사망률은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지만, 2015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185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3).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그림 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96-2015



주: 1) 재산피해액은 2015년 가격 기준임.
출처: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각 연도.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X-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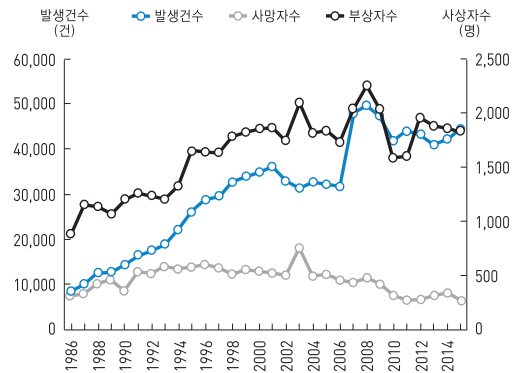
인적 사고

화재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내화재를 사용하거나 방

화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낡은 주택과 재래식 시설이 교체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5). 그러나 최근 다시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X-5] 화재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198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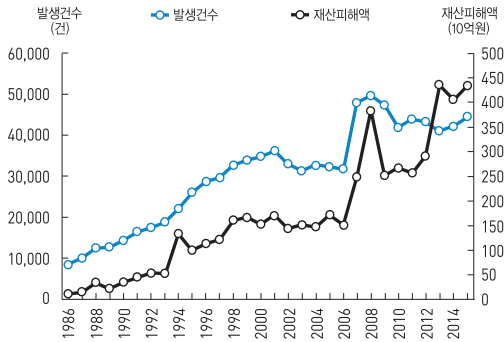


출처: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 발생건수와 달리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후 2003년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발생 시 피해자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수는 2000년까지 화재 발생건수에 거의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발생건수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화재 발생건수는 증가하지만 부상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건수는 지



[그림 X-6]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1986-2015



출처: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특히 사망자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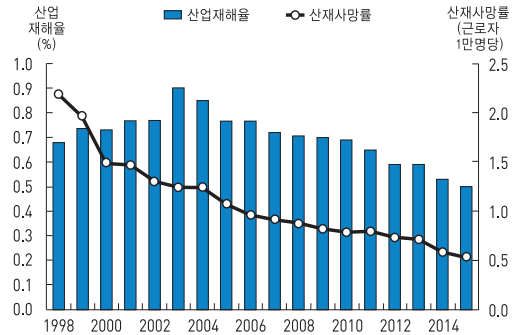
반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건수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증가율이 화재 발생건수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피해액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면서 화재 발생건당 피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그림 X-6).

산업재해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최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7). 산업재해율이나 산재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산재예방을 통해 작업장이 안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산재사망률

[그림 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5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2) 산재사망률=(업무상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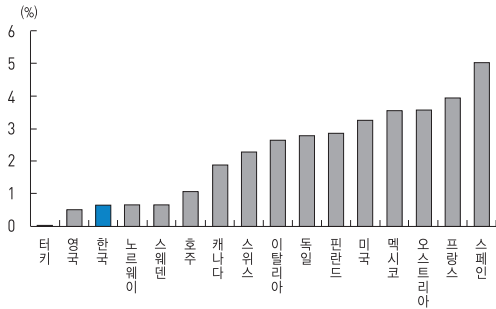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자가 10명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그리고 멕시코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산업재해율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X-8). 이는 산업재해 통계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비율을 의미한다. 산업재해율은 산업안전이 크게 발달한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개 2%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 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높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 수준이 낮은 나라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한국도 산업재해율은 높이고 산재사망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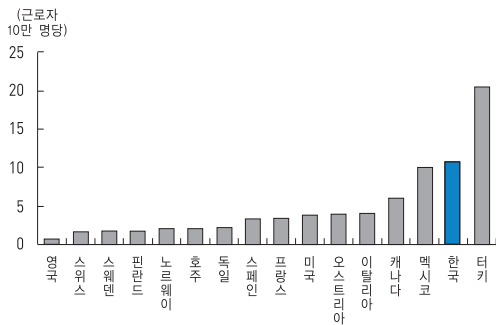


[그림 X-8] OECD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08

1) 산업재해율



2) 산재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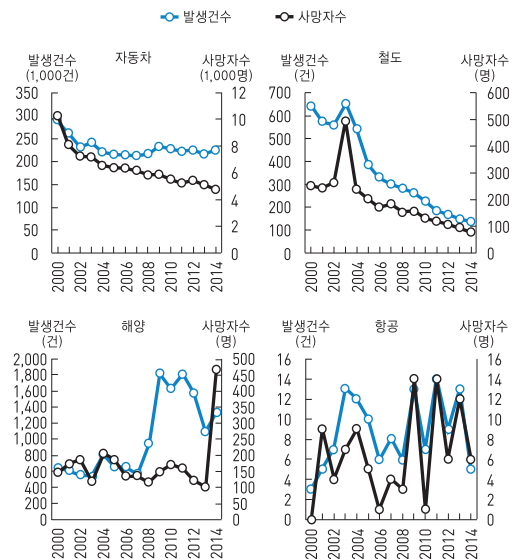


주: 1) 영국, 호주, 터키 등은 2006년 자료이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 등은 2007년 자료이며, 한국을 포함한 그 외 7개국은 2008년 자료임.

출처: ILO, ILOSTAT database(<http://www.ilo.org/ilostat/>).

운수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해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201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양사고 사망자도 2008년 이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항공사고도 연도별 등락이 크기는 하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X-9).

[그림 X-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2000-2014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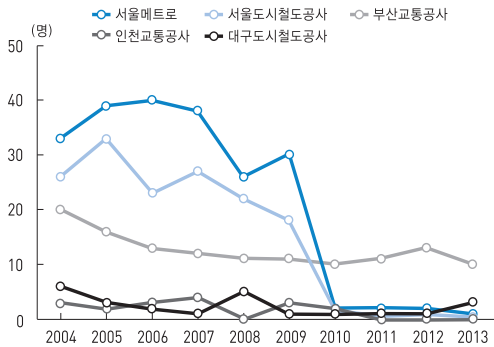
인적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다. 최근 10여 년간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철도사고는 2003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한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사고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사고사망자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2010년부터는 사고사망자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자살이나 안전사고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10).

[그림 X-10] 도시철도 사고 사망자수,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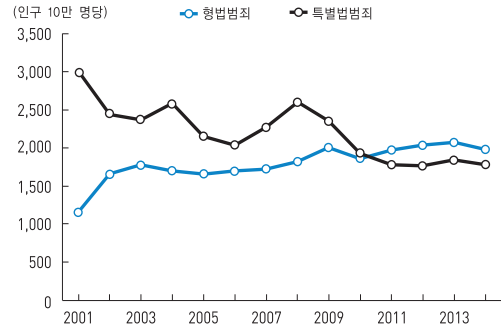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사회적 안전

범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나타내는데,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상 강력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2008년까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크게 감소한 후 최근까지 정체되어 있다(그림 X-11).

[그림 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1-2014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건수÷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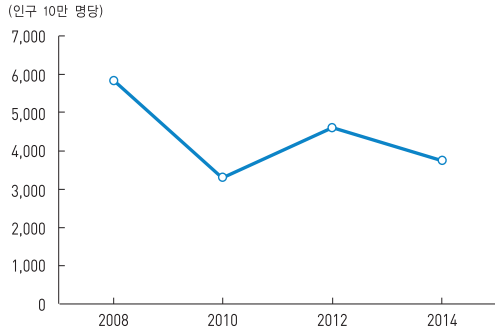
주요 강력범죄인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및 방화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살인범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해범죄는 2007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범죄는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이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범죄도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는 지난 10년간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표 X-1).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은 2010년 기준 2.6건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23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일본(0.4명), 독일(0.84명), 스웨덴(0.97명), 영국(1.17명)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4.75명), 브라질(21.02명), 멕시코(23.69명)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X-12).





[그림 X-14] 범죄피해 경험률,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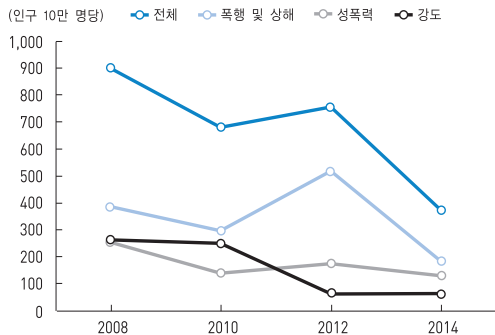
주: 1) 만 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범죄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표 X-2〉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과 이유, 2010-2014

	2010	2011	2012	2014
폭력피해 경험률 (%)	7.1	6.7	5.6	2.3
폭력피해 이유				
특별한 이유 없다	43.5	42.5	51.8	53.3
성격 때문에	10.8	10.5	12.4	12.4
내가 잘못해서	11.4	9.6	9.6	6.7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13.6	14.2	9.5	9.9
외모나 장애 때문에	4.4	3.7	3.7	6.3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아	7.0	6.2	2.4	3.5
기타	9.3	13.2	10.5	6.7

주: 1) 폭력피해 경험률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19세 미만) 중 지난 1년 동안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폭력피해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해당 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3) 2010년 폭력피해 이유에서 '기타' 응답률은 무응답(1.3%)이 포함된 수치임.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종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15]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4



주: 1) 만 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폭력범죄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51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4년 182건으로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도 2008년 253건에서 2010년 13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174건으로 증가한 후 2014년 129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강도 피해자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262건과 247건이었으나 2012년 66건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4년에도 61건에 그치고 있다(그림 X-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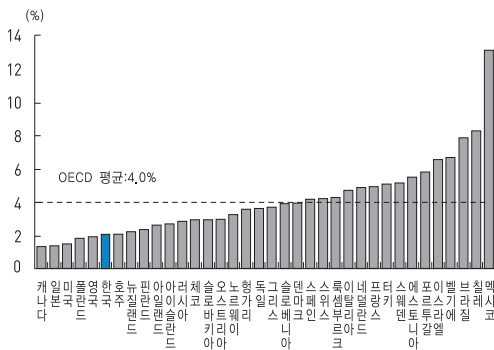
중·고등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은 2010년 7.1%에서 2012년 5.6%, 2014년 2.3%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폭력피해를 당한 이유를 보면, 2014년 기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고 이 외에 '성격' 12.4%, '신체 왜소와 허약' 9.9%, '자기 잘못' 6.7%, '외모나 장애' 6.3%, '금품요구 불응' 3.5% 등으로 나타난다(표 X-2).

범죄피해 경험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규모를 보면, 가장 빈번한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자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인구 10만 명당 384건과 295건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2012년

한국은 2.1%로 OECD 국가 평균 4.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캐나다(1.3%), 일본(1.4%), 미국(1.5%)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멕시코(13.1%), 칠레(8.3%), 브라질(7.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X-16).

[그림 X-16]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 경험률, 2010



주: 1) 범죄피해 경험률은 각 국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8년 자료, 에스토니아와 스위스는 2009년 자료, 칠레는 2011년 자료, 멕시코는 2012년 자료, 그 외 30개국은 2010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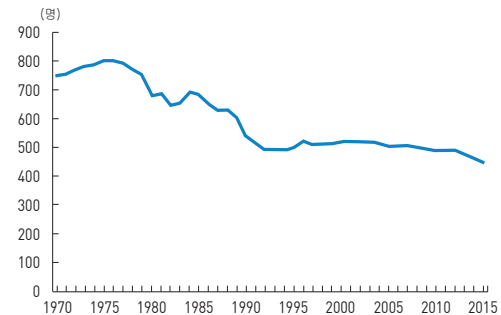
출처: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2013.

경찰력

경찰관수는 1970년 총 4만 3,003명에서 2015년 11만 3,077명으로 지난 4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인구는 750명에서 448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17). 전국의 경찰서는 1998년 225개소에서 2015년 251개소로 늘어났고, 치안예산은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3조 4,833억 원에서 8조 103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찰인력과 치안예산의 증

가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경찰력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X-17]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970-2015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총계인구÷경찰관 정원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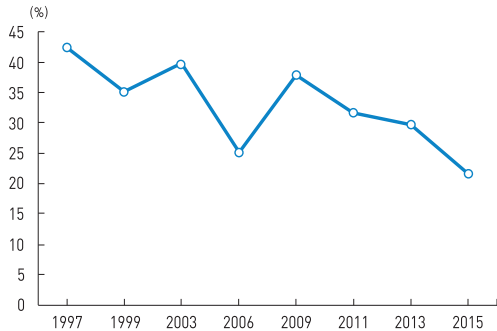
안전에 대한 인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99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2009년 37.8%에서 2011년 31.6%, 2013년 29.7%, 2015년 21.5%로 특히 최근에 크게 낮아졌다(그림 X-18).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층보다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특히, 10-30대 여성의 약 70%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여성



[그림 X-18]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5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들을 범죄로부터 안심시키는 사회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반적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은 2016년에 12.9%만이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교통사고와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 비율은 이보다 더 낮아서 각각 10.0%와 9.1%에 불과하다(표 X-3).

국민안전처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은 세월호 사고 이전인 2013년 하반기에 28.5%였으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상반기에는 23.9%로 떨어졌으며 같은 해 하반기에는 21.0%로 더 낮아졌다.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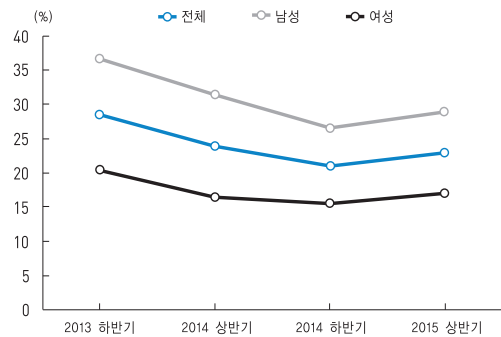
〈표 X-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16

	(%)			
	2010	2012	2014	2016
전반적인 사회안전	11.3	13.5	9.2	12.9
자연재해	18.7	22.9	14.7	20.4
교통사고	8.0	9.2	7.1	10.0
화재	16.6	17.5	13.9	18.8
범죄위험(치안)	8.2	9.0	8.8	9.1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19]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2013-2015



주: 1)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한 결과로 통계치는 해당 반기 평균값임.

출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 각 년 8월 및 12월.

상반기에 23.0%로 약간 높아지기는 했으나 세월호 사고 이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그림 X-19).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박두용 (한성대학교)

- 2014년 기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219만 개소이고 근로자는 약 1,706만 명이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근로자 등은 임의가입 대상자로 아직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재해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서비스업의 순으로 높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 업무상 질환자수는 200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7년 1만여 명에 이른 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 질환은 요통, 신체부담 작업, 진폐 등이다.
- 산재보상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약 3조 9,266억 원에 이르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약 19조 6,328억 원으로 추정된다.
-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이지만 산업재해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산업재해율이 낮은 것은 공상이나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인지하는 위험의 크기도 과소평가되기 쉽다. 특히, 안전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산업재해는 노동력을 생계로 유지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생산력 손실도 초래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재예방은 노동력 보존이라는 측면과 노령인구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산업재해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 만큼 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안전한 일터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 같은 차원에서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 적용대상 근로자와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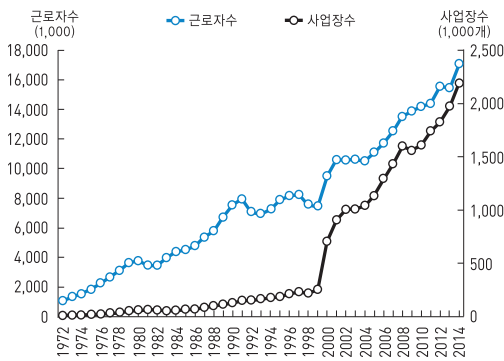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안전은 크게 환경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및 소비자안전의 5대 영역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다쳐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연간 1,2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일을 하다 다친 경우가 약 25%로 가장 많다. 집이나 집근처에서 다치는 경우가 약 20%를 차지하며, 교통사고가 약 12%를 차지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가 시행된 196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산출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보상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산업재해 발생자료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1964년에는 종사자



규모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이었지만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근로자 등도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임의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림 X-20]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수, 1972-2014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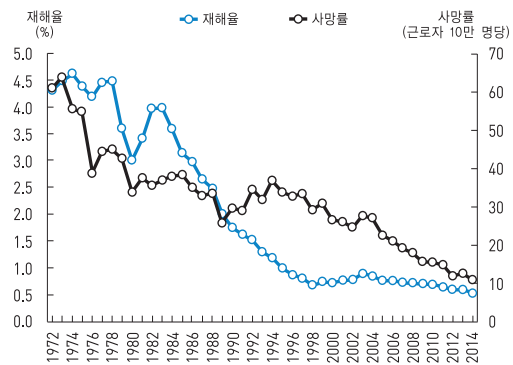
산업재해 통계가 산출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1972년 9,375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218만 7,391개소로 약 233배나 증가하였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1972년 107만 7,632명에서 2014년 1,706만 2,308명으로 16배 증가하였다(그림 X-20).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7년 12월 IMF 금융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1인 이상 사업

장으로 확대된 2000년부터 사업장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율은 1970년대 이후부터 199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부터 소폭 상승하던 산업재해율은 2003년 이후 다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산재사망률도 1989년까지 감소하다가 199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후 지금까지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X-21).

[그림 X-21]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7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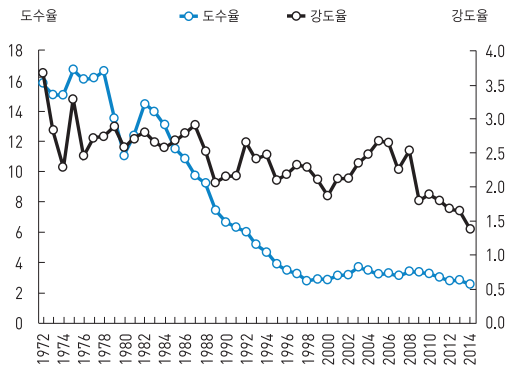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2) 산재사망률=(업무상 사고 및 질병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산업재해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많아지면 늘어난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수율이라는

[그림 X-22] 산업재해 도수율과 강도율, 1972-2014



주: 1)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2) 강도율=(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발생한 재해자수를 나타낸다. 도수율 변화 추이는 재해를 변화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난 40년간 한국의 총 근로시간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단순한 재해발생 건수가 아니라 발생한 재해의 크기나 심각성을 고려한 지표로는 강도율을 사용한다. 강도율은 1,000시간당 산업재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낸다. 강도율은 재해율이나 도수율과 달리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다. 강도율은 2000년 1.8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5년 2.67로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강도율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38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X-22).

업종별 및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보면, 광업이 월등하게 높고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창고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 산업도 매년 0.5% 내외의 재해율 수준을 보인다(표 X-4).

〈표 X-4〉 업종별 산업재해율, 2000-2014

연도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기타
2000	0.73	4.51	1.21	0.61	0.87	0.41
2001	0.77	7.35	1.21	0.69	0.88	0.49
2002	0.77	7.32	1.22	0.72	0.74	0.49
2003	0.90	10.45	1.42	0.86	0.87	0.55
2004	0.85	14.19	1.28	0.94	0.78	0.52
2005	0.77	14.10	1.18	0.75	0.70	0.51
2006	0.77	11.94	1.18	0.70	0.75	0.54
2007	0.72	9.89	1.10	0.66	0.68	0.53
2008	0.71	8.85	1.15	0.64	0.67	0.52
2009	0.70	8.14	1.04	0.65	0.62	0.57
2010	0.69	8.64	1.07	0.70	0.61	0.52
2011	0.65	9.12	0.97	0.74	0.59	0.46
2012	0.59	6.94	0.84	0.84	0.52	0.40
2013	0.59	7.91	0.78	0.92	0.55	0.41
2014	0.53	10.54	0.72	0.73	0.54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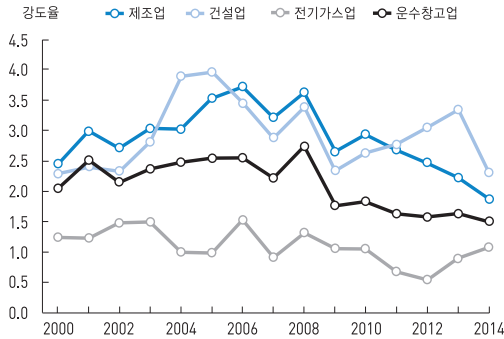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한편, [그림 X-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도율은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재해의 중등도가 비슷한 경향을 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2014년 552개소인데, 이는 지난 2000년과 같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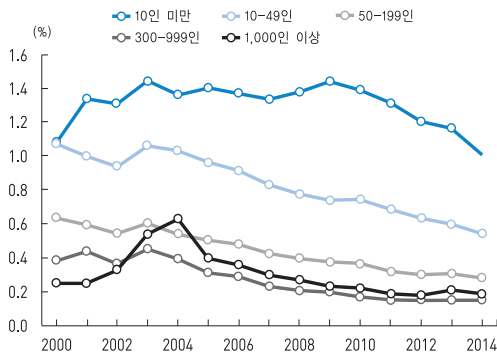


[그림 X-23] 업종별 산업재해 강도율, 2000-2014



주: 1) 강도율=(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그림 X-24]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 2000-2014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300-999인 사업장은 2000년 2,381개소에서 2014년 3,364개소로 늘어났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 15년간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도 주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증가한 반면, 300-999인 사업

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기업의 경영방식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협력회사나 하청을 주는 외주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해자의 비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높다. 재해율은 최근 10여 년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해율 수준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X-24).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구조에 있을 것이므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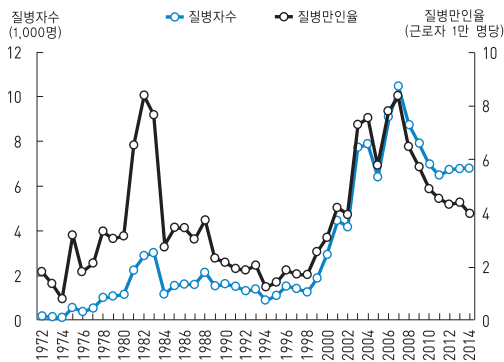
업무상 질환 발생

사고 및 부상은 발생경위나 피해정도가 대부분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의로 은폐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여부를 판단하기가 쉽다. 그러나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 성 질환은 산재보험 요양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직업적 요인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잠복기)이 긴 경우가 많고,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이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직업적 요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병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

로 복지체계가 미흡한 나라일수록 업무 관련성 질환의 인정 비율이 낮은 편이다.

업무상 질환자수는 1970년대 초반에는 200명대, 중반에는 500명대, 후반에는 1,000명대로 증가하였다. 이후 1981년 2,255명, 1982년 2,903명, 1983년 3,020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1980년 노동부가 설립되고 산업안전과가 설치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도입되면서 제대로 된 산재 예방 및 보상 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누적된 업무상 질환자가 1981년에서 1983년까지 3년간 산재보상을 받게 되면서 1984년에는 이들의 수가 1,20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다.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0년부터 다시 업무상 질환자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7년 1만 449명에 이르렀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X-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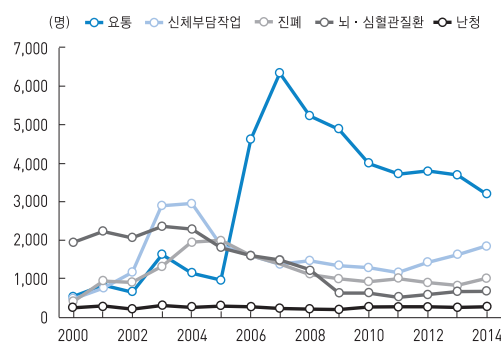
[그림 X-25] 업무상 질병자수와 질병만인율, 1972-2014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업무상 질환의 종류별로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업무상 질병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요통이나 신체부담작업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X-26). 이것은 최근 IT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신체의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계나 설비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취해야 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진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뇌심질환은 2000년대 초반 증가하다가 후반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뇌심질환 판정기준이 엄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청력손실)은 비교적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X-26] 5대 업무상 질병별 환자수, 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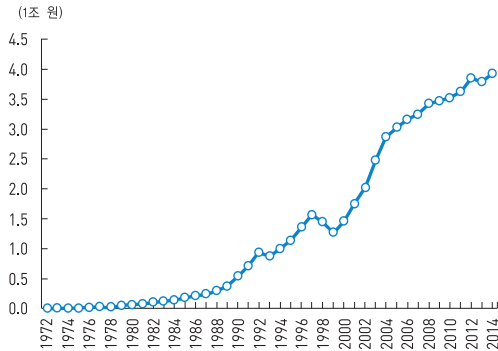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산업재해 손실규모

재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산재보상액 규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72년 34억 5,700만 원이던 산재보상금 지급액이 2014년에는 3조 9,265억 5,900만 원으로 약 1,136배나 증가하였다(그림 X-27). 산업재해로 인한 총 손실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 즉 직접손실액에 간접손실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간접손실액은 하인리히(Heinrich)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의 4배로 계산한다. 2014년 산업재해로 인한 총 손실액은 19조 6,327억 9,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X-27] 산재보상금 지급액, 197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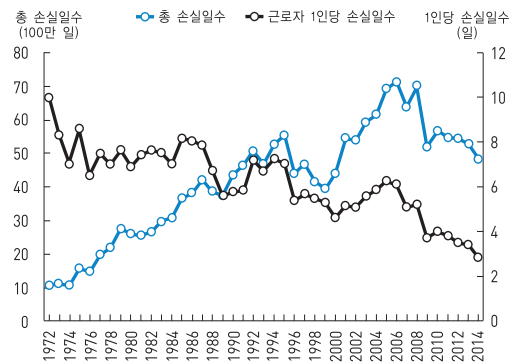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상당한 규모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는 1972년 1,076만 3,908일에 불과했지만 2006년 7,116만 3,565일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 현재 4,839만 8,387일을 기록하

고 있다(그림 X-28).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손실일수는 1972년 약 10일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4년에는 약 2.8일로 감소하였다.

[그림 X-28]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972-2014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산업재해 국제비교

산업재해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각 나라마다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 간 비교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사망률이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그림 X-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의 31개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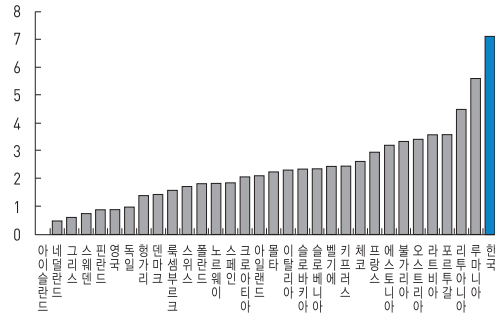
산재사망률과 달리 산업재해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재해율이 낮은 이유는 사고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공상이나 자카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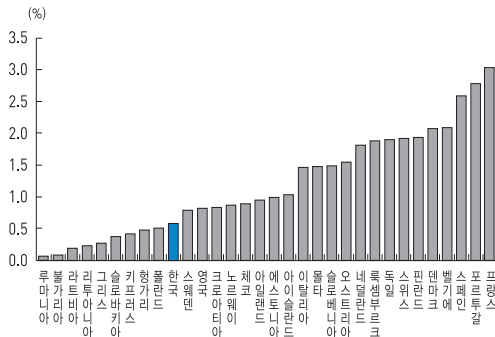
[그림 X-29] 한국과 유럽 31개국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율, 2013

1) 산재사망률

(근로자 10만 명당)



2) 산업재해율



주: 1) 한국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율은 유럽과 비교하기 위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만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4.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Statistical Explained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

안전이나 산재보상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산업재해율은 낮고 산재사망률은 높게 나타난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아차사고나 경미한 재해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경우가 많다. 즉, 중대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 번의 징후와 전조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중상자가 1명 나온 사업장은 그 전에 경미한 재해자가 29명, 아차사고나 아주 사소한 재해를 겪은 자가 300명에 이르렀다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가적으로도 산재사망이나 중대재해를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업종이나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산업재해율은 높이고 산재사망률은 낮추는 선진국형 산재예방보상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민수홍 (경기대학교)

- 지난 20년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의 증가 폭이 전체 형법범죄자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
-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수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 순으로 많다. 노인 흉악범죄자가 전체 노인 형법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지난 10년간 증가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
- 65세 이상 고령 형법범죄자는 남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재범자 비율과 재범자들 가운데 동종재범자 비율 모두 전체 형법범죄자보다 낮다. 고령 형법범죄자의 구속 비율은 전체 형법범죄자보다 낮다.
- 지난 20년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피해자의 증가폭은 노인 형법범죄자보다 크고, 피해유형별로는 재산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흉악)범죄 순으로 많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는 2018년,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미권 범죄학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시작된 범죄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인의 범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 범죄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하여 양적으로는 노인 범죄자수가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승려문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의 방화사건과 배에 태운 여성을 성추행 하려다 4명의 20대 남녀 모두를 연쇄 살해한 70대 노인의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10년 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 범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여 ‘폭주(暴走)노인’이란 표현이 유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그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노인 범죄 문제에 대해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그 실태와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경우에 61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다. 국내 공식 범죄통계인 「범죄분석」은 노인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연령대를 61-70세와 71세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범죄분석」은 노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범죄자 유형에 65세 이상의 고령 범죄자를 추가하여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 61세 이상 범죄자는 노인 범죄자, 65세 이상 범죄자는 고령 범죄자로 부른다. 이 밖에 노인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와 교도소 수



용자의 연령은 사용한 공식 통계의 범주에 따라서 각각 61세 이상과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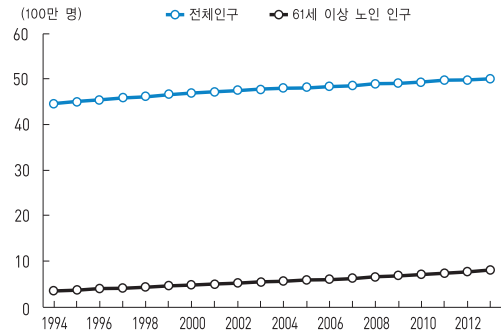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노인 범죄의 변화 추세와 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노인 범죄자의 증가가 교도소의 노인 수용자 비율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아울러 노인 범죄자 중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의 특성을 전체 범죄자 집단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범죄피해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노인 범죄피해자 실태도 남녀와 피해유형에 따라 살펴본다.

노인 범죄자의 실태와 변화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노인 인구의 변화 추세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X-30]은 한국의 전체 인구와 61세 이상 인구의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3년 5,022만여 명으로 1994년의 4,464만여 명에 비해 1.1배 증가하였다. 한편, 61세 이상 노인 인구는 같은 기간 2.2배 증가하여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X-30). 61세 이상 노인은 인구 10만 명당 수로 보더라도 꾸준히 늘어났다.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수는 1994년 8,120명에서 2013년 1만 5,997명으로 2.0배 증가하였다(그림 X-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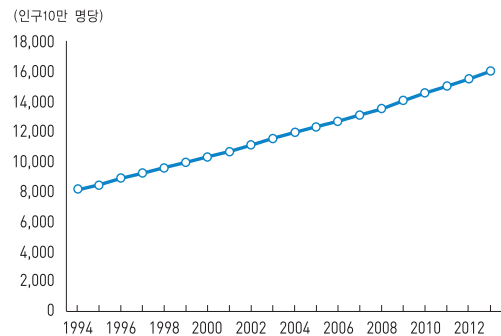
[그림 X-32]는 지난 20년간 전체 형법범죄자와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의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 형법범죄자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인

[그림 X-30] 전체 인구와 61세 이상 노인 인구, 1994~2013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그림 X-31]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수, 199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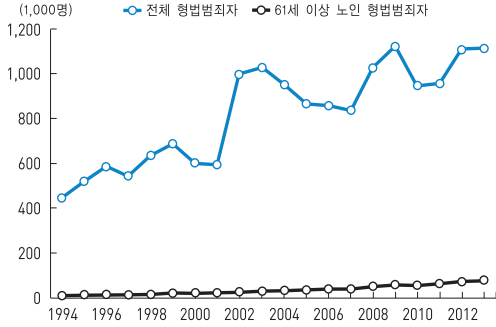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증가세를 보이는데, 2013년에는 1994년의 2.5배가 되었다. 한편, 61세 이상인 노인 형법범죄자도 꾸준히 늘어나 같은 기간 6.6배 증가하였다. 노인 형법범죄자의 증가폭이 전체 형법범죄자의 증가폭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61세 이상 형법범죄자수는 1994년 25.6명에서 2013년 151.5명까지 5.9배 증가하였다(그림 X-33). 같은 기간 인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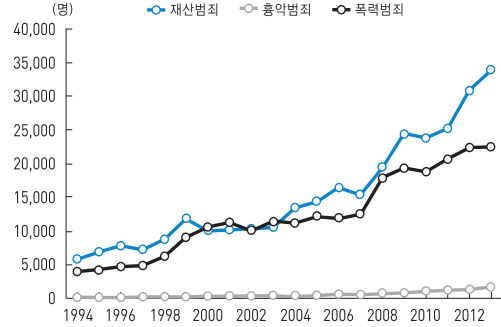


[그림 X-32] 전체 및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수, 1994-2013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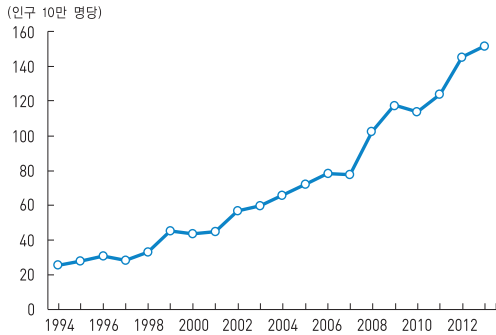
[그림 X-34] 범죄유형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수, 1994-2013



주: 1) 1994년부터 2001년까지는 강력범죄로 제시된 통계를 홍악범죄와 폭력 범죄로 재구성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그림 X-33]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수, 1994-2013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수가 2.0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노인 형법범죄자의 증가폭이 노인 인구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형법범죄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사실이다. 2013년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

서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9% 수준이다. 달리 설명하면, 2013년 기준 61세 이상 노인은 6명 중 1명꼴인데 노인 형법범죄자는 형법범죄자 15명 중 1명꼴이라는 것이다.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홍악범죄,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범죄의 유형별로 노인 범죄자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X-34]는 3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수의 지난 20년간 추이를 보여준다. 노인 범죄자수는, 2000년대 초반에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산범죄, 폭력범죄, 홍악범죄의 순으로 많다. 2013년의 경우를 보면, 재산범죄를 저지른 노인 범죄자수가 이들 3가지 유형의 범죄자 중 58.4%를 차지하고 폭력범죄와 홍악범죄를 저지른 노인 범죄자수는 각각 38.7%와 2.9%를 차지한다.

범죄유형별 노인 범죄자수를 인구 대비로 제시한 <표 X-5>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재산범죄자수는 20년간 5.2배 증가하였고, 폭력범죄자수는 5.1배, 흉악범죄자수는 11.3배 증가하여 노인 흉악범죄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X-5> 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노인 형법 범죄자수, 1994-2013

(인구 10만 명당)			
연도	재산범죄	흉악범죄	폭력범죄
1994	12.9	0.3	8.8
1999	25.2	0.6	19.3
2004	27.9	0.7	23.2
2009	49.4	1.7	39.3
2010	48.0	2.1	37.8
2011	50.5	2.5	41.4
2012	61.6	2.5	44.6
2013	67.4	3.4	44.7

주: 1) 1994년부터 2001년까지는 강력범죄로 제시된 통계를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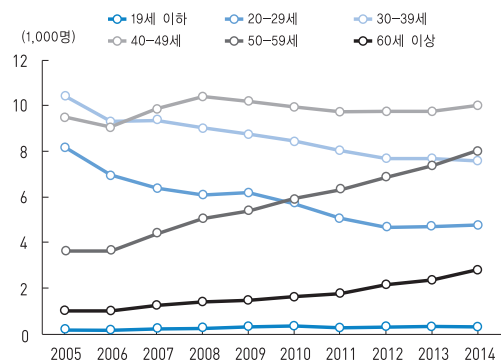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노인이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를 과거보다 더 많이 저지르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과거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은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노인 범죄 증가도 노인빈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3년 교통범죄를 제외한 일본인 전체 형법범죄자 중 절도범죄자가 52.8%를 차지하는데, 65세 이상 형법범죄자 중에서는 절도범죄자가 73.3%에 달해, 노인의 절도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많이 다르다. 한국은 2014년 전체 형법범죄자 중 절도범죄자가 10.2%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형법범죄자 중에서는 절도범죄자가 11.5%로 나타나 절도범죄자의 비율이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다. 절도를 포함한 재산범죄로 범주를 넓혀서 보면, 2014년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서 재산범죄자가 43.3%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형법범죄자 중에서는 재산범죄자가 42.8%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절도범죄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고령 범죄자에서 조금 더 높지만 재산범죄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고령 범죄자에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재산범죄의 수준이 노인 범죄의 원인이 빈곤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 한국의 경우 노인 범죄의 원인을 빈곤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노인 범죄자가 증가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노인 수용자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그림 X-35] 교도소 수감자의 연령집단별 인원수, 2005-2014



주: 1) 피보호감호자 및 노역장유치자를 포함함.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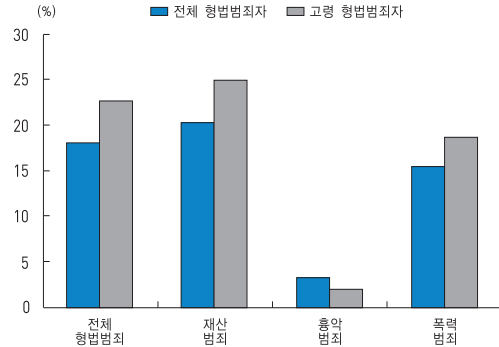
있다. [그림 X-35]는 연령별 수용자 인원의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50대 이상 수용자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50대 수용자는 2005년 3,667명에서 2014년 7,989명으로 2.2배 늘어났고, 60세 이상 수용자수는 같은 기간 1,032명에서 2,801명으로 2.7배 증가하였다. 노인 범죄자의 증가가 교도소의 노인 수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 범죄자의 특성

노인 범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2015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의 여성 비율과 재범률 및 구속률을 전체 형법범죄자 집단과 비교분석하였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형법범죄자 가운데 22.7%가 여성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자 중 18.1%가 여성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고령 형법범죄자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노인 인구 중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고령 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의 여성 비율이 각각 24.9%와 18.7%로 같은 해 전체 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의 여성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그림 X-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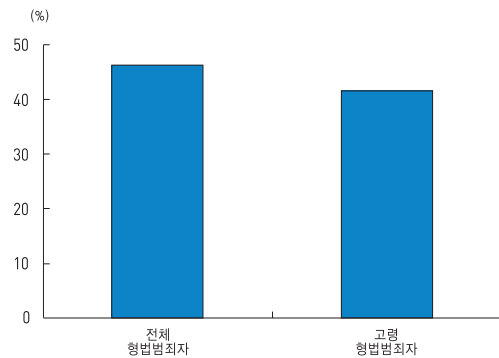
고령 범죄자 중 재범자는 2014년 현재 1만 9,940명이다. 이는 고령 형법범죄자 4만 7,921명의 41.6%에 해당한다. 고령 형법범죄자의 재범률은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자의 재범률인 46.2%

[그림 X-36]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범죄유형별 여성 비율, 2014



주: 1) 고령 형법범죄자는 65세 이상 형법범죄자임.
2) 여성 비율은 성별 미상인 사례를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그림 X-37]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재범률,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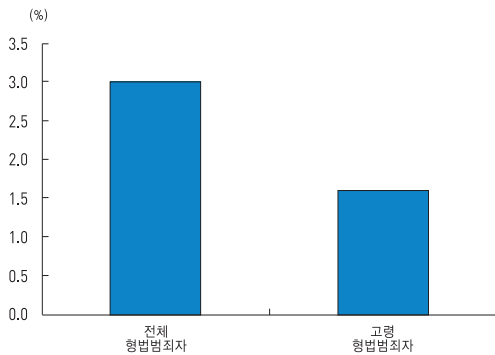
주: 1) 고령 형법범죄자는 65세 이상 형법범죄자임.
2) 재범률=형법재범자수÷전체 형법범죄자수×100.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보다 낮다. 고령 형법재범자의 26.3%가 동종재범자인데, 이는 전체 형법재범자의 30.1%가 동종재범자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그림 X-37). 일부 언론에서는 노인 범죄자에 대한 사법당



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인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과연 형사사법기관이 노인 범죄자를 차별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구속률이다. 아래 [그림 X-38]을 보면, 2014년 고령 형법범죄자 중에서 1.6%가 구속되고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서는 3%가 구속되어 고령 범죄자의 구속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사법기관이 노인 범죄자를 관대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노인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다른 연령대 범죄자들의 범죄보다 낮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X-38]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구속률, 2014



주: 1) 고령 형법범죄자는 65세 이상 형법범죄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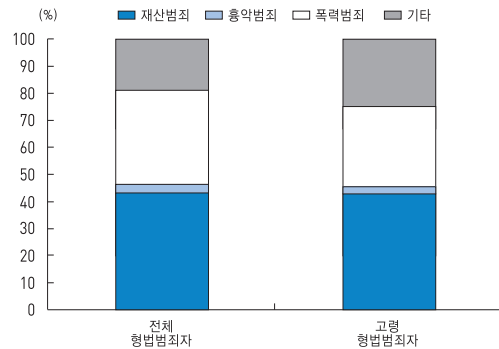
2) 구속률 = $\frac{\text{구속자수}}{\text{구속자수} + \text{불구속자수}} \times 100$.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그림 X-39]는 노인범죄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구속률이 다른 젊은 세대에 비해 낮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다. 고령 형법범죄자는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에서 전

체 형법범죄자와 차이가 난다. 즉, 고령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에 비해 심각성이 높은 폭력범죄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X-39] 전체 및 고령 형법범죄자의 범죄유형별 구성비율, 2014



주: 1) 고령 형법범죄자는 65세 이상 형법범죄자임.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노인 범죄피해자의 실태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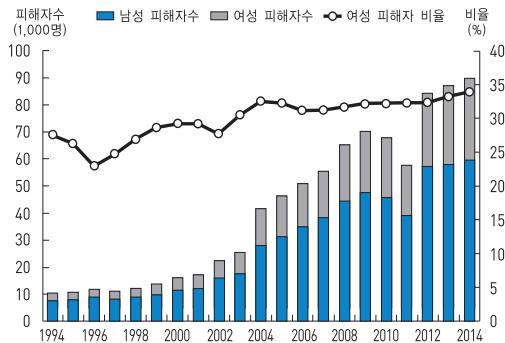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범죄피해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형법 범죄피해자의 실태와 변화를 남녀와 범죄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림 X-40]은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피해자 규모의 지난 20여 년간 추이를 보여준다. 1994년 61세 이상 형법피해자는 1만 여명으로 61세 이상 형법범죄자 1만 1,000여명보다 조금 적었다. 즉 형법피해자가 형법범죄자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피해자가 범죄자보



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피해자가 9만 여명으로 범죄자에 비해 8,000명 정도 많다. 노인 형법범죄피해자는 지난 20여 년간 8.8배 증가하여 노인 형법범죄자의 증가폭(6.6배)보다 크다. 성별로 보면,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많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는 같은 기간 10.8배 증가하여 8배 증가에 그친 남성 피해자보다 증가폭이 크다.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1994년 27.5%에서 2014년 33.9%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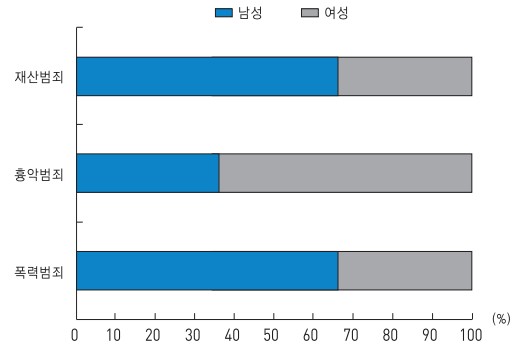
[그림 X-40] 성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피해자수와 여성 피해자 비율, 1994~201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노인 형법범죄피해자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노인 범죄자수에서 관찰된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의 순으로 피해자수가 많다. 여성 피해자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자의 1/3에 그치지만 흉악범죄 피해자 중에서는 2/3를 차지한다(그림 X-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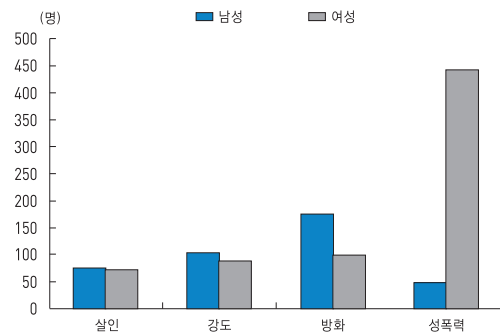
[그림 X-41] 범죄유형별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피해자의 성별 구성비율, 2014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흉악범죄와 여성 노인 피해자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2014년 남녀 노인 피해자수를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X-42]를 보면, 흉악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조금 더 많지만 성폭력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의 9.2배 많다.

[그림 X-42] 성별 61세 이상 노인 흉악범죄피해자수, 2014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범죄학자 Ferraro는 여성이 경험하는 주요 범죄피해인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덜 당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이유는 성폭력의 어두운 그림자(shadow)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요약되고, 그 영향은 범죄와 범죄피해 발생에서도 나타난다. 청소년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가면서 노인 범죄자수가 청소년 범죄자수를 추월했지만 노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는 우리로서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16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290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299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김석호 서울대학교,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306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 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 높아졌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다. 사회단체 참여는 늘고 있지만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 대인신뢰는 낮은 편이며, 정부신뢰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최근 들어 다시 낮아졌다. 정부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 정체된 상태이다.
- 주관적 웰빙은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며, 사회집단 간 주관적 웰빙의 격차는 큰 편에 속한다. 2010년 이후로 주관적 웰빙에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적연금 수급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은 개인이 사회에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사회를 이루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서로 원만하게 협력적으로 지내는 상태와 이를 향한 과정을 일컫는다. 통합된 사회가 되려면 다양한 제도와 조직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역할과 기능을 조화롭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집단 간에 갈등이나 반목의 발생도 줄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낳는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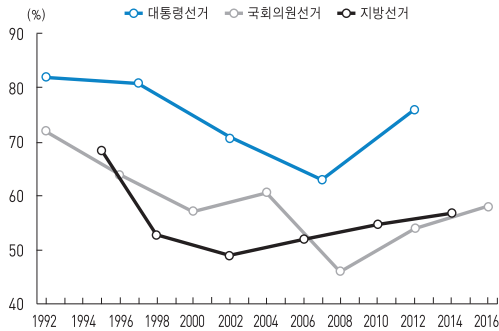
과 불공정, 사회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낮추는 불신과 불만, 차별과 배제 등이 있다. 반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적극적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낯설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 등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능적, 사회적 분화의 속도가 빠르고 제도와 조직이 복잡해져서 구성원들의 합의와 신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도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불신과 불공정 의식이 높아졌으며, 1990년대 탈규제와 개방 이후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성이 늘어났다. 그러나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노력은 아직 높지 않다. 제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정치적 참여의 변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인 정치참여 형태는 투표이다. 투표율의 변화는 정치참여의 변화를 보여준다. 투표율 하락은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불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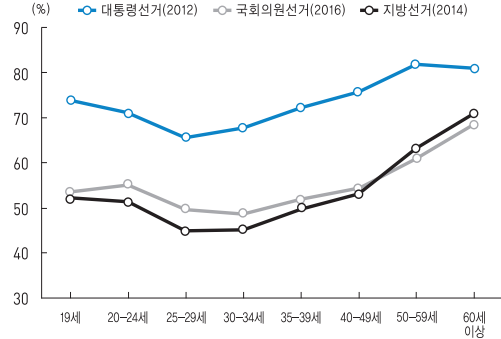


주: 1)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할 만한 현상이다. 투표율로 본 한국 사회의 정치참여 수준은 [그림 XI-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즉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1992년 81.9%에서 1997년 80.7%, 2002년 70.8%, 2007년 63.0%까지 계속 낮아졌다가 2012년 75.8%로 상승했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1992년 71.9%, 1996년 63.9%, 2000년 57.2%, 2004년 60.6%, 2008년 46.1%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년 54.2%, 2016년 58.0%로 높아졌다. 지방선거 역시 비슷한 변화의 패턴을 보이지만 투표율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시기는 좀 더 빠르다.

선거별로 가장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그림 XI-2]에서 보는 것처럼 20대에 비해 30대가 낮고 이후에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투표율이 높아진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

[그림 XI-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연령 집단별 투표율, 2012, 2014,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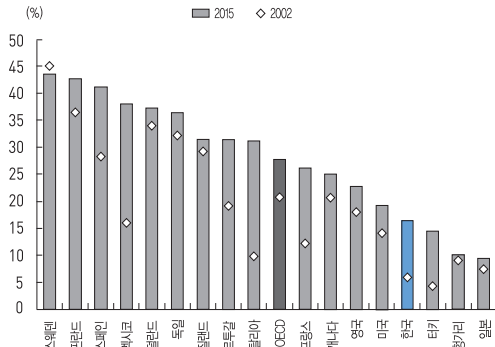


주: 1)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본 통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 결과로 실제 투표율과 다소 차이가 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201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2015.

서는 20대 후반이 65.7%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반면 50대가 82.0%로 투표율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 차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욱 크다. 30대 전반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각각 45.1%와 48.9%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70.9%,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68.7%에 이른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체 국회의원 대비 여성 의원의 비율이다. [그림 XI-3]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5년 27.8%로 2002년에 비해 7.2%p 높아졌다. 한국은 2015년 현재 16.3%인데, 이는 2002년에 비해 10%p 이상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 아일랜드, 칠레, 터키,

[그림 XI-3]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02,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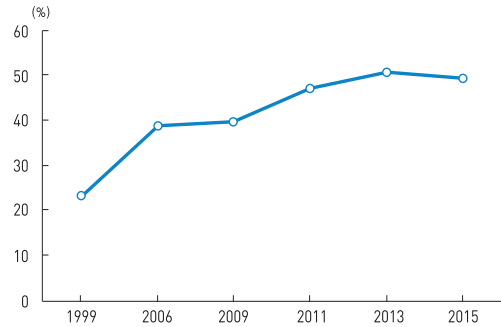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헝가리, 일본 등에 비하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서구와 북미 나라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멕시코에 비해서도 낮다.

직장 이외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전반적 사회참여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XI-4]는 다양한 사회단체들 가운데 하나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 비율은 1999년 23.1%에서 2006년 38.8%, 2011년 47.1%, 2013년 50.6%, 2015년 49.3%로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림 XI-5]는 참여단체 종류별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참여율 변화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이 그림을 보면, 1999년에서 2015년 사이 참여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회단체는 친목·사교 단체로 14.4%에서 37.6%로 상승하였으며 다음은 취미·스포츠·레저 단체로 4.9%에서 17.2%로 상승하였다. 참여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어도 참여단체가 친목·사교 단체에 편중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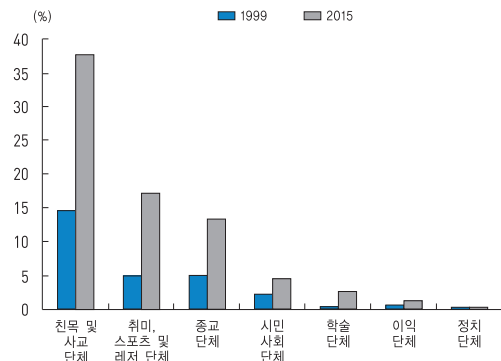
[그림 XI-4] 사회단체 참여율, 1999-2015



주: 1) 사회단체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I-5]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1999, 2015



주: 1) 단체별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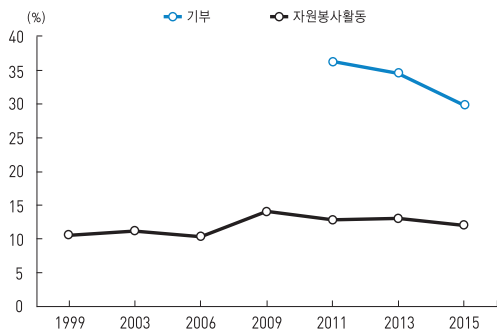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1999, 2015.

있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회참여 중에서 특히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활동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기부이다.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XI-6]이다. 기부의 경우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다루기 시작한 2011년부터 참여율 변화를 볼 수 있다.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10대 학생들의 참여가 입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림에는 19세 이상의 참여율만 제시하였다.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15년 29.9%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율 역시 1999년 10.6%에서 2009년 14.0%로 높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낮아져 2015년에는 12.1%로 나타난다.

[그림 XI-6]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99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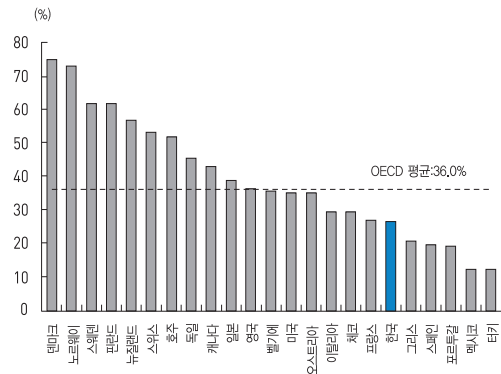
주: 1) 기부참여율은 만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의 변화

신뢰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참여를 높이며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들과 협력해서 생산적인 일을 도모하고 공공선을 증진하며 불필요한 의심에 따른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림 XI-7]은 같은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국가별로 보여준다. 한국은 타인을 신뢰하는 비율이 26.6%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36.0%에 비해 10%p 가까이 낮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다. 반면, 2010년 이후 경제위기를 경험한 남유럽 국가들과 최근 정치위기를 경험한 터키는 대인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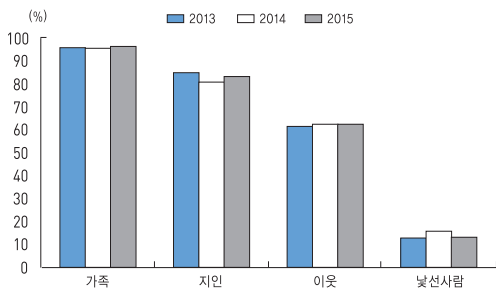
[그림 XI-7] OECD 주요 국가의 대인신뢰도, 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신뢰할 수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등 2개 범주로 조사되었음.
3) 신뢰도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2016.

대인신뢰 수준은 신뢰의 반경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신뢰의 반경범위란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관계가 멀어질수록 신뢰하는 비율이 얼마나 완만히 혹은 가파르게 낮아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대인신뢰 수준이 높으면 특수 관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 신뢰의 반경범위가 넓다. 반면, 대인신뢰 수준이 낮으면 특수 관계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관계가 멀수록 불신해서 신뢰의 반경범위가 좁다. [그림 XI-8]에 제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가족과 친척 및 친구를 신뢰하는 비율은 95%를 넘지만 지인을 신뢰하는 비율과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은 각각 80%와 60%를 조금 넘고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10%를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I-8] 가족, 지인, 이웃 및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2013-2015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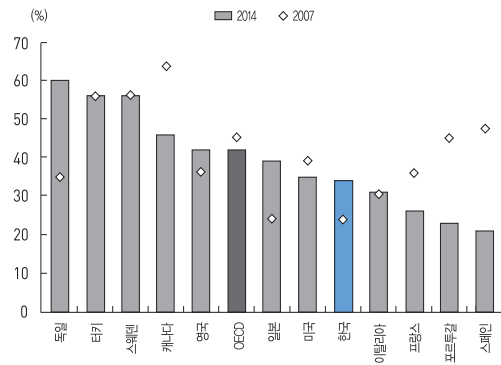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등 4개 범주로 조사되었음.

3) 신뢰도는 '매우 신뢰한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각 연도.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모두 포함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으면 시민들이 규칙을 잘 준수하고 협력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결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지속된다. 이를 제도에 대한 신뢰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제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2014년 조사 결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신뢰 수준을 비교한 [그림 XI-9]를 보면, 한국에서 정부를 신뢰하는 응답자 비율은 34%로 OECD 국가 평균 42%보다 8%p 낮으며 일본(39%)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2007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정부신뢰 하락을

[그림 XI-9] OECD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07, 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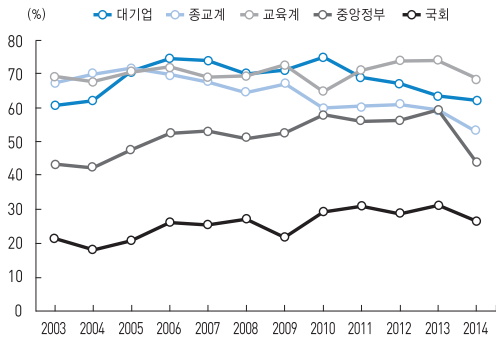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 범주는 '그렇다', '아니다' 등 2개 범주로 조사되었음.

3) 신뢰도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경험하였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정부신뢰 하락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정부신뢰가 상승한 나라에 속한다.

[그림 XI-10] 기관신뢰도, 200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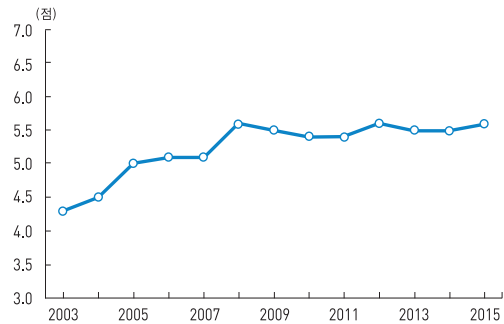


주: 1) 기관신뢰도는 만 18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신뢰한다' 또는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대부분의 제도들이 신뢰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그림 XI-10). 대기업에 대한 신뢰 비율은 2003년 60.7%에서 2010년 74.8%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4년 62.1%가 되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비율은 2003년 43.3%에서 2013년 59.4%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에는 2003년 수준인 43.8%로 크게 낮아졌다. 국회에 대한 신뢰 비율은 2004년 17.9%에서 2013년 31.0%까지 높아졌지만 2014년 26.4%로 다시 낮아졌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림 XI-11]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결과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투명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4.3점에서 5.6점으로 향상된 후 최근까지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2015년에도 최근 몇 년과 비슷한 수준인 5.6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XI-11] 부패인식지수, 2003-2015



주: 1)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168개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수준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을 의미하고 10점에 가까울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함. 2012년부터 100점 척도로 변경되었으나 시계열 비교를 위해 10점 척도로 환산한 것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주관적 웰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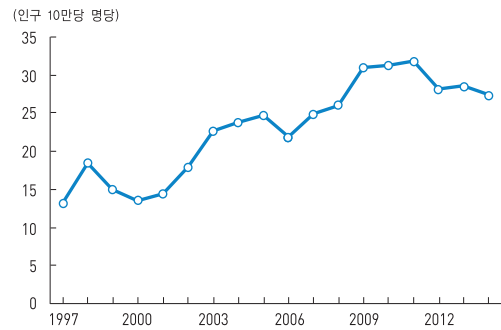
사회통합이 사회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차원이라면,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차원이다. 주관적 웰빙은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롭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인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차원에 걸쳐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로 이용되는 것은 전반적 삶의 만족이다. [그림 XI-12]는 UN의 2016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제시된 2013-2015년 주관적 웰빙 국제비교 자료이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경제 수준에 비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편이며 일본(5.9점)이나 대만(6.4점)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다. 한국은 주관적 웰빙의 표준편차가 2.2로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개인 간의 주관적 웰빙 편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자살률이다. 모든 자살의 원인을 삶의 질이나 주관적 웰빙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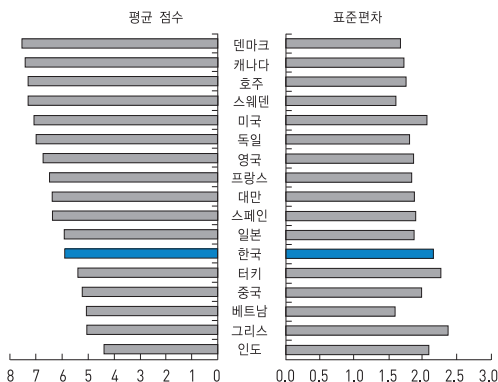
어렵지만 낮은 주관적 웰빙과 높은 자살률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XI-13]과 [그림 XI-14]는 한국의 자살률 추이와 OECD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을 보여준다. 한국의 자살률은 외환위기 시기에 높아진 후 잠시 낮아졌다가 2000년대에 걸쳐 꾸준히 높아져서 2014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되었다.

[그림 XI-13] 자살률, 1997-2014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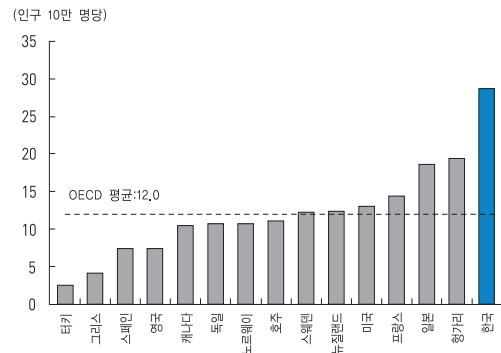
[그림 XI-12]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2013-2015 평균



주: 1) 행복지수는 각 국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현재 삶의 질에 대해 0-10점으로 평가한 만족도 평균 점수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2016.

[그림 XI-14]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 2013



주: 1)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은 2010년 OECD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캐나다는 2011년 자료이고, 그리스와 뉴질랜드는 2012년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모두 2013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2000년대 들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자살률 수준을 보인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12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OECD 국가들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는 헝가리에 비해서도 인구 10만 명당 10명 가까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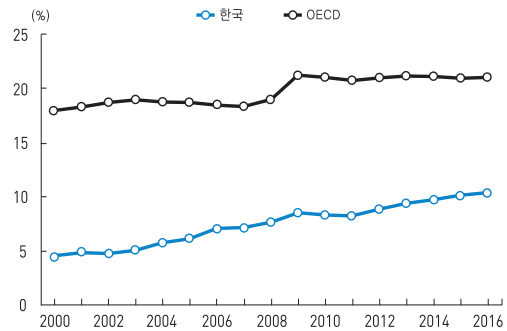
사회보장의 변화

[그림 XI-15]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GDP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계산 값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이 21.0%인데 한국은 10.4%이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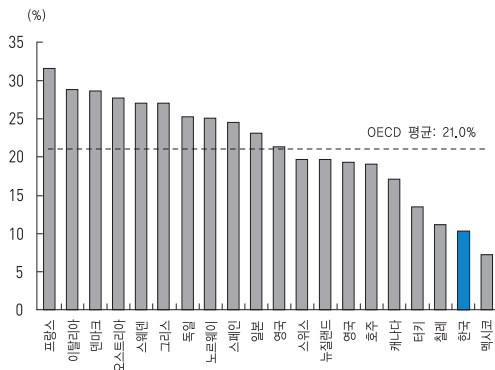
[그림 XI-16]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의 추이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XI-16]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 지출 비율, 2000-2016



출처: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database), 2016.

[그림 XI-15]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 지출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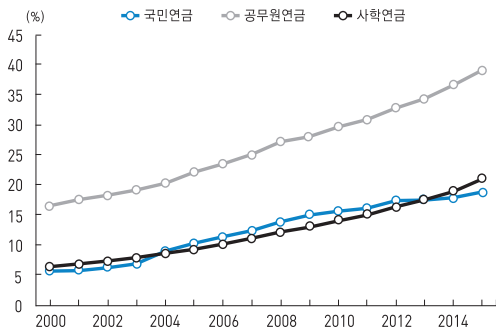
주: 1) 멕시코는 2011년 자료, 일본은 2013년 자료, 터키는 2014년 자료,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은 2015년 자료, 그 외 국가는 모두 201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database), 2016.

최근 주춤하기는 했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으며 향후에도 고령화의 심화와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은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으로는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이 있다.

[그림 XI-17]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수급률 추이를 보여준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0년대 들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공적연금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XI-17] 공적연금 수급률, 2000-2015



주: 1) 수급률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임.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맺음말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한 *How's Life* 지표에서 한국은 사회통합 수준이 높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의 사회통합에

서 사회참여 수준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신뢰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신뢰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다.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도입된 '김영란법'과 같은 과감한 정책이 소기의 결실을 거둔다면 한국 사회에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 사회는 신뢰가 낮은 편은 아니나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격차도 큰 편이다. 주관적 웰빙은 물질적 삶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것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비물질적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웰빙을 낮추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을 통해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것은 웰빙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때 사회통합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 지난 20년간 최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12%대에서 20% 내외로 증가하였고,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60%대에서 53%로 감소하였다.
- 일생 동안 노력해서 계층이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에는 낙관론자가 10명 중 5명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이다. 특히, 핵심 근로 연령대인 30~40대는 10명 중 7명이 비관적이다.
-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10명 중 3명만 낙관적이고, 2명은 유보적이며, 5명은 비관적이다. 특히, 결혼 및 출산 결정 연령대인 30대는 2006년에 10명 중 3명이 비관적이었으나 2015년에는 10명 중 약 6명이 비관적이다.
- 하위 계층일수록 세대 내 상향이동 가능성뿐 아니라 세대 간 상향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화론에 묻혀버렸다. 노력해도 계층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세대갈등 등 새로운 사회갈등의 부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통합이 더욱 저해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 및 인적자본축적 유인의 저하로 고령화라는 거대 충격에 직면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사회이동성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계층의식 추이

사회이동성, 즉 계층이동 가능성이 확연히 다른 두 사회의 미래는 갈린다. 계층이동이 어렵거나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는 당대에 특별히 애쓸 유인도 낮을 것이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다. 인제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기 힘들고, 상위계층이 점유한 지위와 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계층이동의 측면에서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음지가 양지가 되고 개천에서도 용이 나던 자수성가의 신화는 ‘금수저 흡수저’ 비유로 상징되는 계층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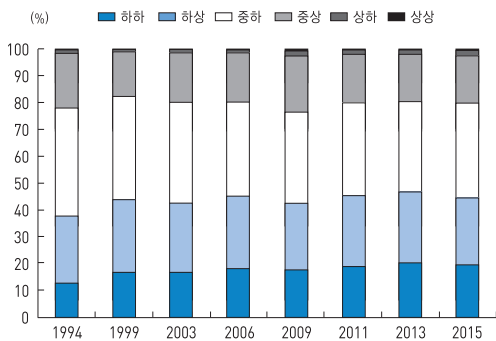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출발점으로 한다. 자신이 속한 계층을 알아야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자신이 점하는 상대적 지위에 관한 인식인 계층의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XI-18]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으로 계층의식의 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1994~2015년의 20년간 최하단의 하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12%대에서 20% 내외로 증가하였고, 중하층과 중상층을 합친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60%대에서 53%로 감소하였다.

[그림 XI-18] 가구주의 계층귀속의식, 1994~2015



주: 1) 설문문항은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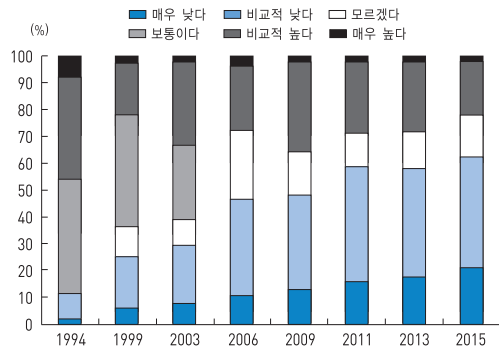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추이

사회이동성은 개인이 당대에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인 세대 내 이동성과 자녀가 부모가 속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인 세대 간 이동성으로 대별된다. 과거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2-3차 산업의 일자리 확대, 도시개발정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 등에 힘입어 세대 내 이동성이 상당히 높았다. 또한 농가의 생존 근간인 전답과 가축을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을 시켰던 것과 같이 계층을 초월한 높은 교육열과 대학교육 효과에 힘입어 세대 간 이동성도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이동성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먼저 [그림 XI-19]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를 합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1994년 45.8%로 10명 중 5명이 당대의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대량실직 사태를 불러온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에는 그 비율이 21.7%로 급락했다가 10년 후인 2009년에야 35.7%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후 긍정적 응답 비율은 다시

[그림 XI-19] 가구주의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1994~2015



주: 1) 설문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2) 1994~2003년 조사에서는 응답범주에 ‘보통이다’가 포함되어 있었음. 1994년 조사에서는 응답범주에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낮아져 2015년에는 1999년과 비슷한 21.8%까지 떨어졌다. 이제는 10명 중 2명만이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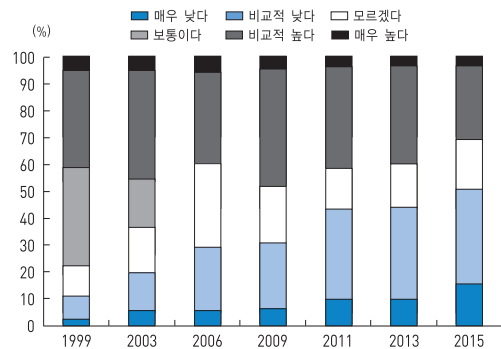
반면,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해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은 1994년 11.5%에서 2015년 62.2%로 지난 20년간 50.7%p 높아졌으며, 일관적인 응답 항목이 제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를 보더라도 약 10년 만에 15.5%p 상승하였다.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에는 중도적 응답을 제외한 뚜렷한 낙관론자가 10명 중 5명이었다면 지금은 유보적 응답을 제외한 뚜렷한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XI-20]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항이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를 더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41.2%였고, ‘보통이다’는 중도적 응답 비율이 36.6%였으며,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를 더한 부정적 응답 비율은 11.1%에 그쳤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잦아든 2003년에는 중도적 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양 갈래로 분화되면서, 긍정적 응답 비율과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48.4%와 19.8%로 높아졌다.

설문의 응답 구조가 통일된 2006년 이후 10년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는 매우 체계적이다. 부정적

응답 비율은 2006년 29.0%, 2009년 30.8%, 2011년 43.0%, 2013년 43.8%, 2015년 50.5%로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한국 가구주 10명 중 5명은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비관적이며, 2명은 유보적이고, 3명만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림 XI-20] 가구주의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199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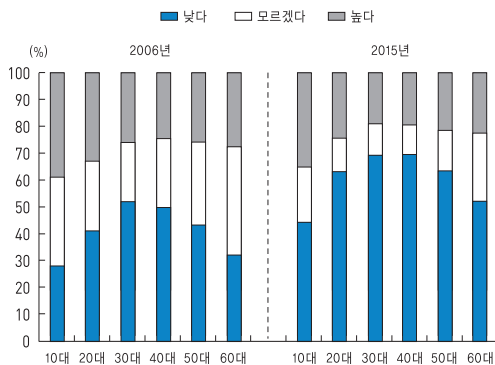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2) 1999-2003년 조사에서는 응답범주에 ‘보통이다’가 포함되어 있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집단별 사회이동성 인식

이제 2006년과 2015년 「사회조사」의 13세 이상 가구원 응답을 통해 연령대별 사회이동성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XI-21]에서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06

년에 비해 2015년에는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줄고 부정적 응답으로 바뀌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비관론이 20%p가량 늘었다. 특히 30-40대는 2015년에 10명 중 7명이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1명은 유보적이며, 2명만이 긍정적이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일할 핵심 근로연령대 국민의 대다수가 일생 동안 노력을 해도 계층이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XI-21] 연령집단별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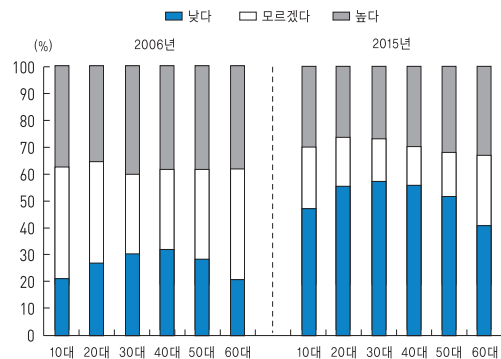


주: 1) 가구를 응답대상으로 함(2006년은 만 15세 이상, 2015년은 만 13세 이상)
 2) 설문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낮다’는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높다’는 ‘비교적 높다’와 ‘매우 높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6, 2015.

다음으로 [그림 XI-22]에서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06년과 2015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과 유보적 응답이 각각 10%p 정도씩 감소하고, 부정적

응답이 20%p 남짓 증가한 것이다. 특히 30대의 경우 2006년에는 10명 중 3명이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는데, 2015년에는 거의 10명 중 6명이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XI-22] 연령집단별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15



주: 1) 가구를 응답대상으로 함(2006년은 만 15세 이상, 2015년은 만 13세 이상)
 2) 설문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낮다’는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높다’는 ‘비교적 높다’와 ‘매우 높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6, 201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이동성 인식

이제 조금 심화된 분석을 통해 사회이동성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표 XI-1>은 세대 내 계층이동 및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가구원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 여부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표 XI-1〉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확률의
배경변인별 차이, 2006, 2015

배경변인	(%)			
	세대 내 계층이동에 대한 긍정적 응답 확률 차이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긍정적 응답 확률 차이	
	2006년	2015년	2006년	2015년
성별(남성 대비)				
여성	-18.9***	-1.3**	1.0**	1.3*
가구주 여부(가구원 대비)				
가구주			2.1***	1.9**
연령대(60대 이상 대비)				
10대	8.7***	12.2***		-4.3*
20대	-1.6*		-4.3***	-7.3***
30대	-8.4***	-6.6***	-5.1***	-10.1***
40대	-7.9***	-6.2***	-6.4***	-9.0***
50대	-4.9***	-2.9***	-3.8***	-5.3***
혼인상태(무배우자 대비)				
유배우자		1.7**	7.2***	4.8***
학력 (대졸 이상 대비)				
고졸	-5.1***	-2.5***	-3.3***	
중졸	-8.3***	-3.3***	-5.1***	
초졸 이하	-10.3***	-4.1***	-8.3***	-5.0***
종사상 지위 (상용직 대비)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6.9***	7.4***	2.2**	4.3***
자영업자	2.2***		2.9***	
무급가족종사자	3.5***		1.9*	
살입비경제활동				
주거점유형태(자택 거주 대비)				
자택 거주	1.1***	1.3***		
가구원수(4인 이상 대비)				
1인	4.7***	5.0***		
2인	2.3***	1.6**		
3인			-1.3***	-2.5***
계층의식(상류층 대비)				
중간층	-19.3***	-18.8***	-11.7***	-10.1***
하류층	-30.8***	-30.2***	-23.0***	-22.6***

주: 1) 분석모형(derivative probit)의 특성에 의해 표에 제시된 숫자는 각 변수의 한계효과 즉, 해당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응답 확률이 몇 % 높거나 낮았는지를 나타냄.

2) 통상적 수준에서 신뢰할 만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경우(유의수준 1%는 ***, 5%는 **, 10%는 *)로 표시했고, 유의수준이 낮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결과임)에만 숫자를 제시하였고, 비교대상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변수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음.

3)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의 거주지도 더미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6, 2015.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해 여성은 2006년 남성보다 18.9p% 낮은 긍정인식 비율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그 차이가 현저히 줄었다. 이는 교육과 노동 시장 성과, 사회활동 면에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가 60대 이상 고령자보다 세대 내 이동성을 낮게 평가했고 사회진출 시기가 아직 먼 10대가 가장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세대 내 이동성을 낙관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학력집단 간 차이는 2006년에 비해 2015년에 상당히 줄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주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낙관적이고,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 들어 상용직 근로자와의 차이가 없어졌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대 내 상향이동에 대해 다소 더 긍정적이다. 가구규모별로는 다인가구보다 소인가구, 특히 1인가구 가구원이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다. 중간층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하류층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세대 내 상향이동 가능성을 20-30%p 정도 낮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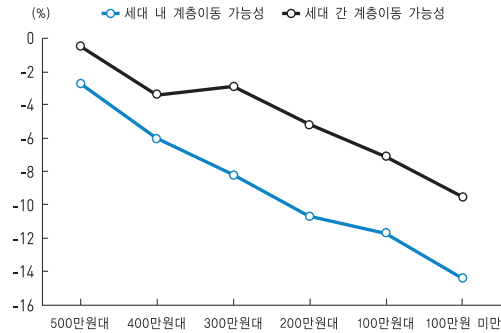
세대 간 이동성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폭이나마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인다.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에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 높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에 비해 이후 젊은 층에서 세대 간 이동성의 긍정인식 비율이 낮는데, 2015년에는 고령자와의

차이가 더 커졌고 10대도 고령자보다 긍정인식 비율이 낮아졌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세대 간 이동성을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학력별로 보면, 2006년에는 학력이 낮을수록 세대 간 상향이동 가능성을 낙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5년에는 초졸 이상과 중졸 이상 간의 차이만 남았을 뿐 중졸 이상 학력집단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사라졌다. 고용주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일관되게 낙관적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3인가구가 다른 가구들보다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긍정인식 비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3인가구는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된다.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세대 간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사실은 추가 출산 전망을 흐리게 한다. 계층의식과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보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중간층 귀속감을 가진 사람들과 하류층 귀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10~20%p 정도 덜 낙관적이다. 즉, 격차가 다음 세대에도 고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하위 계층일수록 강한 것이다.

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계층적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사실은 계층적 지위를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지표, 즉 가구 소득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XI-23]은 <표 XI-1>의 분석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 중 주관적 계층 변수만 같은 조사의 가구소득 변수로 바꾸어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이다.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소득수준 간에는

[그림 XI-23] 가구소득수준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확률의 차이, 2015



주: 1) 비교대상은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응답자이며, 성별, 가구주 여부, 연령대,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주거점유형태, 가구원수, 거주지를 통제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5.

뚜렷한 정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한 긍정인식 비율도 낮다.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을 비교대상으로 했을 때 긍정인식 비율은 500만 원대가 3%p, 400만 원대가 6%p, 300만 원대가 8%p, 200만 원대가 11%p, 100만 원대가 12%p, 그리고 100만 원 미만 소득집단이 14%p 정도 낮다. 세대 간 이동성의 경우에도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을 기준으로 500만 원대 소득집단은 긍정인식의 차이가 없지만 그 이하 소득집단들은 긍정인식 비율이 3~10%p 정도 낮다.

맺음말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계층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불평등은 노력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특히 최근에 더욱 심화된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은 '격차사회'를 넘어 '격차고정'이 우리에게 현실화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세대 내 계층이동은 물론 세대 간에도 계층이동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이 한창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해야 할 연령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사회이동성의 저하가 우리 사회의 재생산을 위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김석호 (서울대학교)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 대통령선거를 통해 드러난 동일 세대의 10년간 투표율 변화에서는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투표율도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 같은 추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1970년 이전 세대에서 먼저 태어난 세대일수록 어린 세대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대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한국인의 정치 태도와 행위에 대한 논의에서 꾸준히 다루어지는 주제는 지역투표와 세대투표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투표참여, 지지후보, 지지정당에 있어서의 지역 간 차이는 1987년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정착된 이후 최근까지 한국인의 정치행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투표가 두드러졌던 호남과 영남 모두에서 그 경향이 퇴조하고 오히려 40대 이하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 간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의 차이가 더 부각된 바 있다.

세대 간 정치행태의 차이는 세대 간 불통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이 한

계에 봉착하면서 청년층은 취업,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강의 기적 한 가운데에서 청춘을 바친 베이비부머 세대, 산업화 세대, 전쟁 세대 등 중·고령층은 젊은 세대의 어려움과 고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참여와 지지 후보 및 정당에 있어서의 세대 간 차이는 정치공학적 분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유불리 해석 이상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 사안들을 응축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 세대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세대효과가 다양한 영역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는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대효과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이 겪은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 때문에 다른 시기에 태어난 집단과는 다른 태도와 행위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효과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역할과 경험에 의해 태도와 행위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194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와 청년기에 IMF 경제위기에 노출되었던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가 보여주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세

대효과라고 한다면, 연령효과는 고령층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이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고령층의 보수적 성향이 전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것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 글은 선거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행태의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정치행태의 세대 간 차이를 투표참여와 지지후보(정당)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지적한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시계열 자료라 할 수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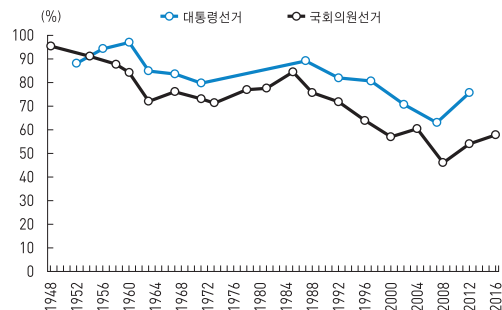
세대와 투표참여: 2003-2013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97.0%로 정점을 찍고 1971년 79.8%까지 하락한다.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중반 정치적 암흑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제13대 선거

에서 89.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다. 투표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제17대 선거에서 63.0%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 제18대 선거에서 75.8%로 반등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보다 낮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75-85%를 유지하다가 1985년 제12대 선거에서 84.6%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08년 제18대 선거에서 46.1%로 최저 투표율 기록을 경신한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2012년 제19대와 2016년 제20대 선거에서 각각 54.2%와 58.0%를 기록해 최저치였던 2008년보다 약 10%p 높아진다. 즉,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둘 모두 2000년대 중후반에 저점을 찍고 최근 반등하는 모양새다(그림 XI-24).

[그림 XI-24]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1948-2016



주: 1)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세대별 투표율과 연령대별 투표율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설사 그 자료가 패널자료가 아닐지라도 연령효과와 세대 효과를 분리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제공하는 선거 유형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과 시계열 횡단면 조사인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응답자가 직접 답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선거유형별로 살펴보는 이유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투표율이 선거유형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는 2000년 이후 2002년, 2007년, 2012년 세 번 치러졌는데, 세 번의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상승한다. 가령, 2002년 선거에서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57.9%였고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8.7%였다. 2012년 선거에서도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71.1%였고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80.9%였다.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 사이에는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2002년의 20대 전반은 2012년의 30대 전반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유권자들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분석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 세대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20대 전반과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57.9%와 55.2%였으며, 10년 뒤 이들이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해당 투표율은 각각 67.7%와 72.3%로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2002년 30대 전반과 30대

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64.3%와 70.8%였으며, 이들이 40대가 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75.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02년 40대의 투표율은 76.3%였으며, 이들이 50대가 된 2012년에는 투표율이 82.0%로 높아진다(표 XI-2). 요약하면,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을 통해 드러난 동일 세대의 10년간 투표율 변화에서는 거의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투표율도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 같은 추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매년 조사 직전에 시행되었던 전국선거(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표 XI-2〉 세대별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투표율, 2000-2016

	(%)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이상
대통령선거							
2002	57.9	55.2	64.3	70.8	76.3	83.7	78.7
2007	51.1	42.9	51.3	58.5	66.3	76.6	76.3
2012	71.1	65.7	67.7	72.3	75.6	82.0	80.9
국회의원선거							
2000	39.9	34.2	45.1	56.5	66.8	77.6	75.2
2004	46.0	43.3	53.2	59.8	66.0	74.8	71.5
2008	32.9	24.2	31.0	39.4	47.9	60.3	65.5
2012	45.4	37.9	41.8	49.1	52.6	62.4	68.6
2016	55.3	49.8	48.9	52.0	54.3	60.8	68.7
지방선거							
2002	36.3	27.0	34.5	44.8	56.2	70.0	72.5
2006	38.3	29.6	37.0	45.6	55.4	68.2	70.9
2010	45.8	37.1	41.9	50.0	55.0	64.1	69.3
2014	51.4	45.1	45.1	49.9	53.3	63.2	70.9

주: 1)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본 통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 결과로 실제 투표율과 다소 차이가 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서의 투표여부와 투표를 했다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했는가를 묻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해에 자료가 수집되었다더라도 그 사이에 전국선거가 없었다면 동일한 선거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조사에서는 2004년에 시행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공통적으로 질문한 바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여섯 번의 전국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에는 2002년, 2007년, 201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2008년, 2012년 국회의원선거가 포함되었다.

〈표 XI-3〉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질문에 포함된 여섯 번의 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을 세대별로 보여준다. 고령층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국회의원선거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며, 세 번의 대통령선거 중에서는 2012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다(표본수 50이하인 경우 제외). 대통령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세대 간 투표율의 차이가 더 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율에 비해 「한국종합사회조사」의 투표율이 보통 10~20%p 이상 높다. 이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응답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원에게 밝히기 싫거나 실제 투표를 했다고 착각하거나 등 다양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투표를 했다고 답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투표참여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투표참여가 활발하며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투표참여가 저조하다.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 전반적인 투표율이 높았던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선거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고 가장 낮은 세대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다. 특히, 19~24세 연령층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러한 세대 간 투표율의 차이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한편, 2004년과 2012년에 시행된 두 번의 국

〈표 XI-3〉 세대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참여율, 2002~201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2002	2007	2012	2004	2008	2012
1934년생 이전	88.9	80.9	81.6*	83.7	75.0	75.0
1935-1939년생	96.4	80.4	92.3*	89.3	85.5	80.4
1940-1944년생	93.2	83.1	94.6	80.8	88.3	85.1
1945-1949년생	93.7	76.0	96.8	91.3	80.2	83.0
1950-1954년생	81.7	68.8	95.7	85.1	83.2	78.7
1955-1959년생	88.0	76.4	95.1	83.5	73.9	73.0
1960-1964년생	86.1	68.3	86.8	85.2	68.7	72.2
1965-1969년생	85.5	63.3	93.8	84.3	76.0	70.5
1970-1974년생	81.1	55.1	89.8	74.9	64.2	67.2
1975-1979년생	67.2	43.4	91.3	75.4	50.0	68.5
1980-1984년생	61.1	45.1	84.3	75.3	47.6	56.0
1985-1989년생	N.A.	30.0	89.2	N.A.	45.1	56.2
1990년생 이후	N.A.	N.A.	74.6	N.A.	N.A.	54.1

주: 1) 각 셀의 표본수가 30~50이하인 경우는 *로 표시, 30미만인 셀은 N.A.로 표시함.

2) 참여율은 해당 시점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사회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회의원선거를 비교해 보면 투표참여에 있어서 세대 간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두 국회 의원선거에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투표율이 높는데, 이러한 고령층의 투표참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활발하다. 반면, 젊은 층의 투표참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조해진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적은 세대와 나이가 많은 세대 간 투표율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대와 정치적 성향: 2003-2013

〈표 XI-4〉은 2003-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로 파악한 세대별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

우선, 2003년과 비교해 2013년에 세대 간 정치 성향의 차이가 심해졌다. 표본수가 50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2003년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차이가 22.4%p였는데 2013년에는 그 차이가 26.6%p로 커졌다. 2003년에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1934년 이전 출생집단(53.2%)이고 가장 보수적이지 않은 세대는 1980-1984년생(30.8%)이다. 2013년에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1955-1959년생(46.3%)이고 가장 보수적이지 않은 세대는 1970-1974년생(19.7%)이다.

다음으로 고령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사실이 전 시기를 통해 드러난다. 특히,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정치적 보수성이 가장 강하다.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표 XI-4〉 세대별 보수적 정치 성향, 2003-201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1934년생 이전	53.2	44.0	36.1	44.1	34.9	39.1	44.4	58.6	46.7	37.4	65.8*
1935-1939년생	58.3*	47.7	43.5	34.4	25.4	39.2	40.4	51.5	44.3	45.1	34.2*
1940-1944년생	46.2	38.8	53.9	40.6	36.8	46.9	45.2	33.8	47.8	52.3	45.5
1945-1949년생	50.9	44.9	35.2	41.9	45.1	41.6	45.6	42.9	44.8	35.0	42.6
1950-1954년생	43.7	41.6	42.0	40.7	42.2	42.9	39.1	26.3	44.0	40.7	37.7
1955-1959년생	47.1	42.4	44.1	39.0	30.7	42.8	45.9	30.6	49.2	40.2	46.3
1960-1964년생	40.8	40.8	35.8	38.5	37.1	38.6	33.0	34.6	25.6	32.4	42.5
1965-1969년생	40.3	32.8	30.9	40.0	33.7	37.3	31.4	36.1	28.9	33.3	33.1
1970-1974년생	32.9	29.3	32.0	30.9	29.7	27.6	27.0	31.1	29.7	32.2	19.7
1975-1979년생	33.1	27.0	27.1	31.0	29.6	27.9	25.3	21.1	24.4	28.7	26.6
1980-1984년생	30.8	34.4	29.7	34.0	28.7	34.2	27.6	28.9	32.1	31.2	26.6
1985-1989년생	N.A.	25.0*	35.0*	23.9	22.5	34.2	29.8	27.7	24.7	25.6	30.4
1990년생 이후	N.A.	N.A.	N.A.	N.A.	N.A.	N.A.	18.4*	18.8	31.8	26.1	26.9

주: 1) 각 셀의 표본수가 30-500이하인 경우는 *로 표시, 30미만인 셀은 N.A.로 표시함

2) 통계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다소 보수적' 또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세대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보수적인 성향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50대 중반을 넘어서 2010년 이후에는 보수화되는 경향을 확연히 보여준다. 흔히 386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 중후반생은 윗세대보다는 덜 보수적이지만 그 바로 아래 세대인 1970년대생과 비교하면 더 보수적이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386세대가 정치 이념과 태도에서도 가장 진보적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이다. 간단히 말해, 386세대는 연령효과로 인해 보수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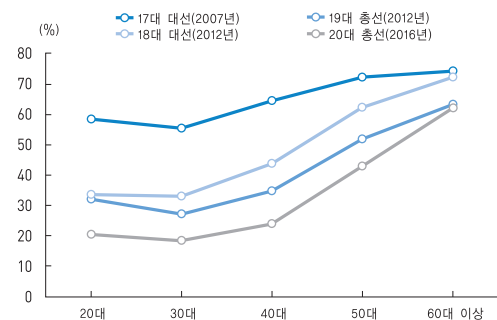
〈표 XI-4〉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1970년대생의 일관된 비보수적 성향이다. 1970-1974년생과 1975-1979년생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비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특히, 1970-1974년생은 지난 10여 년간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30% 정도로 일관되게 낮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에 해당하는 에코부머 세대, 즉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최근으로 오면서 1970년대에 출생한 세대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세대별 지지 후보 및 정당

먼저, 2016년 4월에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드러난 세대 간 지지 후보 및 정당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XI-25]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12년 제19대 국회

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 지난 10년간 네 번의 전국선거에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수집한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여기에서의 수치는 보수계열 후보나 정당 지지율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50대와 60대 이상 중·고령층의 보수계열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20-40대의 지지보다 높다. 가령,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는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20% 초반에 그치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보수정당 후보 투표 비율은 각각 43.0%와 62.2%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XI-25] 세대별 보수계열 후보 또는 정당 지지율, 2007년 대선-2016년 총선



출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 각 연도.

출구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지지 후보 및 정당의 차이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동일 세대의 지지율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40

대의 보수계열 후보(정당) 지지율이 64.5%였는데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50대가 된 이들의 보수계열 후보(정당) 지지율이 43.0%로 낮아졌다고 해서 이들이 보수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전반적인 투표율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선거에서 10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집한 출구조사 자료가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출구조사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정당(후보) 지지의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에 포함된 지지당 응답을 보수정당과 그 외의 정당으로 재구성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한 보수정당들(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미래희망연대,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친박연대 등)이 정치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표 XI-5〉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세 차례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지지했던 후보의 정당을 세대별로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과거 세대일수록 보수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경향의 심화는 국회의원선거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 더 두드러진다. 표본수가 50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1955-1959년생(54.5%)이고 가장 낮은 세대는 1975-1979년생

(22.2%)이며,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1940-1944년생(78.4%)이고 가장 낮은 세대는 1970-1974년생(34.6%)이다. 즉, 세대 간 보수정당 지지 격차가 2002년 32.3%p에서 2012년 43.8%p로 더 커졌다. 반면, 2004년과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 같은 보수정당 후보 지지의 세대 간 차이의 심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XI-5〉 세대별 보수정당 후보 지지율, 2002-201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2002	2007	2012	2004	2008	2012
1934년생 이전	53.1	78.3	85.3*	64.3	77.6*	71.6
1935-1939년생	63.2*	78.0	81.8*	66.7	72.1*	63.6
1940-1944년생	50.0*	83.6	78.4	63.0	67.2	69.6
1945-1949년생	51.2*	78.9	76.8	63.1	67.7	62.2
1950-1954년생	44.6	67.1	67.2	56.1	56.9	67.4
1955-1959년생	54.5	70.4	74.7	50.4	59.7	61.7
1960-1964년생	37.0	54.5	64.4	45.1	49.0	54.1
1965-1969년생	28.8	56.3	42.6	28.2	30.8	54.7
1970-1974년생	29.5	51.3	34.6	22.8	29.5	36.7
1975-1979년생	22.2	47.4	49.5	30.3	33.6	36.5
1980-1984년생	24.7	48.6	44.8	28.7	37.1	44.4
1985-1989년생	N.A.	46.9	35.5	24.1	38.8	30.2
1990년생 이후	N.A.	N.A.	37.8	N.A.	36.0*	40.0

주: 1) 각 셀의 표본수가 30-50이하인 경우는 *로 표시, 30미만인 셀은 N.A.로 표시함.

2) 지지율은 조사시점 기준 최근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사회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02년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 반면, 2007년과 2012년에는 보수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 같은 전반적 보수화 경향은 〈표 XI-5〉에서도 확인되는데, 최근 선거로 올수록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모든 세대에서 높아졌다. 특히 1950-1954년, 1955-1959년, 1960-1964년 세대의 강한 보수화가 눈길을 끄는데, 이들의 보수정당 후보 지지율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각각 44.6%, 54.5%, 37.0%였으나 2012년 대통령선거에는 각각 67.2%, 74.7%, 64.4%로 높아졌다. 앞서 살펴본 정치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이들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86세대라 할 수 있는 1965-1969년생의 경우에도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28.8%였으나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42.6%로 높아졌다.

물론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도 있다. 1970-1974년생과 1975-1979년생이 그 세대인데, 이들은 대체로 여섯 번의 선거 동안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세대에 속한다. 즉,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만 놓고

보면 연령효과가 뚜렷이 관찰되지만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에서는 그러한 연령효과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이 두 세대보다 어린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화 경향을 보인다.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당시 대부분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사회초년병이었을 그들이 윗 세대보다 더 보수화되었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여섯 번의 선거에서 드러난 연령 증가에 따른 보수화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세대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XI-5>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이미 보수화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반면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보수화 경향에서 벗어나 있다.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윗세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지만, 이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Korean Social Trends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2016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용어해설

I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만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 인구}}{\text{15-64세 인구}} \times 100$$

고령사회: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고령화지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수.

기대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노년부양인구비: 부양인구(15~64세) 100명당 피부양인구(65세 이상)의 수.

단카이 세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지칭함.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성비: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의 수.

연령집단별 출산율: 특정연도의 15~49세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해당 연령의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text{연령집단별출산율(\%)} = \frac{\text{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text{해당연령집단의 여자 인구}} \times 1,000$$

인구보너스 현상(인구배당효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것을 의미함.

인구절벽: 넓게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감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좁게는 소비의 주요 연령대인 40대 중후반 인구가 감소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함.

인구오너스 현상: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의미함.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의 수.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의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초저출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현상.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가진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초고령사회: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코호트: 특정의 경험(특히 연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체. 예컨대, 출생 코호트는 5년 혹은 10년 단위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됨. 특정 집단의 생애

주거나 건강상태 등을 종단적으로 추적할 수 없을 때 같은 코호트 집단을 통해 그 집단의 특성 변화를 추론할 수 있음.

학령인구: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할 적령기 인구를 의미함. 보통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21세 인구를 지칭하는데 각급 학령인구를 모두 합한 수를 전체 학령인구(6~21세)라 함.

II 가족과 가구

1세대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 친척).

1인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

기러기가족: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 생활하는 가족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임.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

노인단독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살고 있는 가구임.

다문화가족: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

분거가족: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

유배우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유배우 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 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중 부 또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III 건강

1차 보건의료: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기본적 의료를 말함. 최근에는 1차적인 접촉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로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함.

2주간 유병률: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 환자 보호자 등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병원인력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환자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간호사: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중의 하나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간호조무사: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않고, 의료법에 명시된 교육과정(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 학과, 학원의 간호 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

고위험음주: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인 음주.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건강 문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수명.

걷기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고혈압 유병률: 만 30세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 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된 혈당 수치.

국민의료비: 보건 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경상의료비와 보건 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비용.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길랑바렛 증후군: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마비성 질환.

당뇨병 유병률: 만 30세 이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임.

법정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준(25kg/m², 30kg/m² 등) 이상인 인구의 비율.

사망율: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수인성 감염병: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 매개되는 감염병.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신체활동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의 비율.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치사율: 어떤 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를 그 질환의 환자수로 나눈 것.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홍역: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함. 한번 걸린 후 회복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되어 다시는 걸리지 않음.

활동 간호인력: 면허·자격 소지자 중에서 실제 보건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의 비율.

IV 교육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의 수.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비형식교육: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사교육 참여율: 해당 학교급별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취학 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특성화고: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문화 등의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

평생학습 참여율: 만 25~64세 이상 성인인구 중 형식 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는 조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를 시행하게 됨.

형식교육: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을 말함.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프로그램.

V 노동

가치사슬: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

고용률: 만 15~64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노동생산성: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냄.

노동시장 이중구조(이중화, dualization):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회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퇴직, 재고용 의도가 없는 해고,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 해고, 합병·구조조정·폐업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등이 이에 해당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함.

사회보험: 국민의 생활불안(질병, 사고, 실직 등)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원리를 적용한 국가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포함됨.

상용근로자: 고용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임.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중위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영업이익: 매출액 등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임금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임시근로자: 고용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 기준의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VI 소득과 소비

가계부채 한계가구: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져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가구.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 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가계흑자비율(가계흑자율): 가계의 총 소득에서 소비 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을 뺀 금액을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나눈 값.

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가능한 소득을 말함.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소득은 일정한 소득을 말하고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말함.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나타낸 소득으로 화폐 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 지므로 시계열비교나 국제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명목소비: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나타낸 소비지출로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짐.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소득은 일정한 소득을 말하고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말함.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비금융자산: 일반적으로 자산은 비금융자산(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됨. 주식이나 채권, 예금, 신탁 등과 같은 금융자산과 달리 비금융자산은 부동산, 골동품, 우표, 금, 기념주화 등과 같은 실물 형태의 자산을 말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이나 자산 구입이 아닌 지출.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는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는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자물가지수: 도시가계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소비지출: 생계나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화폐소득, 즉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소득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됨.

실질소비: 실질소득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비지출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비는 줄어들게 됨.

엔겔의 법칙: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경제 법칙. 독일의 통계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엔겔(Ernst Engel)이 벨기에 노동자 가계조사를 통해 정립함.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 보조금(연금 등)과 사적 보조금을 합한 소득.

이차소득: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과 같은 일차소득 외의 소득.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얻은 이전소득(실업수당, 생활보조비, 연금 등)과 예상치 못한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에 의해 얻은 비경상 소득(퇴직금, 복권당첨금, 상금 등)이 포함됨.

재산소득: 가구 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 · 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등이 포함됨.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

VII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 문화시설로 구분됨.

빈 둥우리(empty nest) 시기: 자녀들을 결혼시켜 내보내고 부부만이 남아 있게 되는 시기로서 탈친기라고도 함.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금단과 내성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잠재적 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스마트폰 사용조절력 감소와 이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집단. 일반사용자군은 이용 목적에 맞게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있는 집단.

시간빈곤층: 전체 표본에서 나타나는 여가시간의 하위 40% (186분/1일)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여가시간을 갖는 사람들.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수면, 식사, 건강관리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필수시간과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돌봄, 이동 등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함. 여가시간에는 참여 및 봉사 활동, 교제 및 여가 활동, 기타 활동 등의 시간이 포함됨.

여가시간의 결핍(시간빈곤): 삶의 질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적절한 여가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각종 문화생활과 운동 스포츠 및 야외활동, 컴퓨터와 인터넷활동시간, 취미(취미를 위한 학습시간, 교양강좌시간), 독서와 음악감상, 그밖에 다양한 유흥적 활동(음주, 가무, 흡연 등).

오락문화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관입비, 휴가비 등 문화여가생활 지출을 말함.

VIII 주거와 교통

보증부월세: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월세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

보편적 이동권: 사회구성원 누구나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복지택시(바우처택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영업용 콜택시.

사글세: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자가주택의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임차가구의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자기점유율: 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비율.

주거점유형태: 거처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인지를 나타냄.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일반 가정에서 충전해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차세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는 등 기존의 일반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환경 자동차.

IX 환경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μm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아황산가스(SO₂):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km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함.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임.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됨.

질소산화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황산화물: 황(S)과 산소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해당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해당됨.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도로·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 속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 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 B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 C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 kcal임.

X 안전

강도율: 1,000시간당 산업재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

구속률: 법원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비율.

도수율: 100만 시간당 재해자가 나타난 수.

산업재해: 직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

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 외인사망의 3대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임.

인적 사고: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고로 시설물이나 기계기구의 비정상적 작동, 인간에 의한 오작동, 화학물질 또는 에너지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함.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임.

재산범죄: 절도(일반절도, 자동차 및 부품 정도, 주거침입 절도), 손괴(단순손괴, 주거침입손괴, 자동차손괴), 단순 주거침입 등을 포함함.

진폐: 외계에 존재하는 분진의 흡입으로 폐에 장애를 일으킨 상태.

특별법: 형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건 또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

폭력범죄: 협박·폭행·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 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이 포함됨.

XI 사회통합

공적연금: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공적연금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이 포함됨.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 부패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지수로 0-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을 의미함.

사적연금: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사적연금에는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운영주체인 개인연금이 포함됨.

사회이동성: 개인이 당대에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인 세대 내 이동성과 자녀가 부모가 속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인 세대 간 이동성으로 구분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된 행동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세대효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이 겪은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 때문에 다른 시기에 태어난 집단과는 다른 태도와 행위 특성을 갖게 되는 것.

연령효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역할과 경험에 의해 태도와 행위가 변하는 것.

주관적 웰빙: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가리킴.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차원에 걸쳐 측정함.

투표율: 유권자 전체에 대한 투표한 사람의 비율.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슬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2013	김현식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2013	송유진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2013	김정석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2014	계봉오/김두섭
	국내 인구가동의 특성과 유형	2014	이희연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2014	전광희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2015	계봉오/김두섭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2015	김주현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경혜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색	2012	이윤석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가족과 가구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세대관계의 변화	2013	한경혜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2013	차승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2014	한경혜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2014	한경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2014	홍승아
	미혼율 증가의 사회적 의미	2015	한경혜
	기능 저하 노인의 돌봄과 지원	2015	정경희
건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조병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2013	조성일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2013	김광기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013	장세진
	흡연을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2014	조홍준
	의약품 사용양상	2014	변진옥
	사회자본과 건강	2014	조병희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5	조병희
	대사증후군의 유병 실태와 사회적 비용	2015	조영태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현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경근

영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기초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경근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2013	김경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13	황여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3	황여정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2014	김경근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2014	황여정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2015	김성식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 실태	2015	채창균
	학생들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2015	황여정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권현지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금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2013	장지연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노동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2013	전병유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2014	김영옥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2014	권혜자
	노동시장의 질과 고용보호제도	2015	권현지
	경제위기와 이직자의 취업이행	2015	권혜자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승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승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정수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승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승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2013	김진영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2013	이정민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2013	홍석철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2014	홍기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2014	홍석철
	소득분위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15	유경원
	출생 코호트를 통해 본 소비지출의 변화	2015	이정민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섯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섯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문화와 여가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2011	서우석
	청소년 여가	2013	서우석
	생활체육 참여실태	2013	황선환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2013	조현성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2014	이훈/박정숙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2014	심미선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2015	서우석
	여가활동의 동반자	2015	윤소영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장수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2013	손경환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2013	정의철
	교통복지실태	2013	이상민
	전월세 시장의 변화	2014	정의철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2014	박천규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2014	김회경
	아파트 주거 확산의 실태와 전망	2015	전상인
	지역 간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2015	장수은/정동재
환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종호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환경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종호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체감환경, 정제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2013	조영탁
	화학물질 노출실태	2013	신용승
	미세먼지와 건강	2014	권호장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2014	박창석
	환경 불평등과 환경 복지	2015	김종호/추장민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실태	2015	신상철
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두용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2013	민수홍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2013	김지선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2014	김지선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2014	정지범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2015	민수홍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5	설재훈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 준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 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 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2013	한 준
	투표와 정치참여	2013	김석호
	노년층의 사회통합	2014	김지범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2014	박형민
	세대 간 격차의 수준	2015	한 준
	사회적 관용의 수준과 변화	2015	가상준
(복 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돌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책임자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정희 (통계개발원 사무관) 조은숙 (통계개발원 주무관) 김대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이상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계자료팀장)
연구간사	김월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상영 (통계개발원)

Korean Social Trends 2016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값 12,000원



9 772234 799203

ISSN 2234-7992